

※ 이 일지 자료집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및 진보정치연구소의 협조 아래 수행한 2005년도 연구 작업의 일환이며, 계속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한국 노동정치와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1차년도 연차보고서

※ 연구과제명 : 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 운동사 관련 체계적인 자료 수집·정리(D/B화)와 연구 (KRF-2005-000-BS0006)

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운동 일지 해설집(1985~2004)

※ 공동연구진

- 연구책임자 : 조현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정치학)
- 연구교수 : 전명혁(역사학) / 이광일(정치학) / 김보현(정치학)
- 공동연구원 : 조희연(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 사회학) / 오유석(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사회학)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2006년 6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조희연)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1차년도 연차보고서

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운동 일지자료집(1985~2004)

< 해설 >

연구과제명 : 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 운동사 관련 체계적인
자료 수집·정리(D/B화)와 연구
제 출 자 : 000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책임자: 000)
제출 일시 : 2006년 6월

범례

◇ 사건명

- 사건명은 주체와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표기함
- 조직명, 집회명은 < >, 성명서 등 자료는 「 」로 표기함

◇ 사건일자

- 시작연월일(YYYYMMDD)-종료연월일(YYYYMMDD)
- 하루에 종결된 사건인 경우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을 동일하게 표기함
- 연도-월-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니셜(연도=Y, 월=M, 일=D)로 대신 표기함
(예1) 연도는 모르고 해당 월일만 확인되는 경우 ⇒ "YYYY1021"
(예2) 월-일을 모르고 연도만 확인되는 경우 ⇒ "1989MMDD" 198710DD"

◇ 사건내용

- 노동정치/진보정당운동사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경우, 그리고 사건명 만으로는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해설을 붙임
- 사건의 발생배경, 개요, 영향, 관련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참고자료

- 도서인 경우 : 저자,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 잡지 / 간행물인 경우 : 저자, 「기사명」, □□간행물명□□ 발간호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 신문인 경우 : 신문명, 「기사명」, 발행일자(YYYYMMDD)
- 문서의 경우 : 작성자/생산기관명, 「문서명」, 발행일자(YYYYMMDD)

◇ 조직명 표기 해설 (가나다 순)

약어표기	공식명칭	약어표기	공식명칭
국민승리21	민주와진보를위한국민승리21	새정치	새정치준비모임
국민후보추진위	국민후보운동추진위원회	서노련	서울노동운동연합
국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서비협	서울지역비상학생협의회
국협	군정종식·단일화쟁취국민협의회	신당결성추진위	신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남노련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합	신지협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인노련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노정추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인노협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노진추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	인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노해동	노동자해방투쟁동맹	인준위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
민노당	민주노동당	전국노련	전국노동단체연합
민사협	민주개혁과사회진보를위한협의회	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연추	민중정당건설을위한민주연합추진위원회	전노삼민통	전국노동자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위원회
민정추	민중진영단일정당추진위원회	전노운협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노추	민중정당건설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민중당	민중당	전노협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민중대통령선본	민중대통령후보선거대책본부	전농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연대	민중후보추대와진보정당건설을위한민중연대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중의 당	민중의 당	전민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민중정당재건위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전빈련	전국민민운동연합
민정련	민중정치연합	제현의회	제현의회(CA) 그룹
민중회의	민중회의	진보련	진보정당결성을위한정치연합
민추위	민중정당결성추진위원회	진보정당준비모임	진보적대중정당건설을위한준비모임
민추협	민주화추진협의회	진보정당수입위	진보정당창당을위한수입위원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진보정당창추위	진보정당창당추진준비위원회
백선본	민중후보백기완선거운동본부	진보정치연합	진보정치연합
백추위	백기완선생대통령후보추대위원회	진정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노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청년진보당	청년진보당
사준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준비위원회	통추회의	범민주수권정당결성위한통합추진회의
사회당	사회당	통합민중당	통합민중당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원회	한겨레민주당	한겨레민주당
삼민동맹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새건추	새로운민중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한사노창준위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목 차

구로연대파업투쟁

(19850624-19850629)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19850825-19850825)

<서노련>, 기관지 「서노련 신문」 창간

(19850907-19850907)

<서노련> 민중덕 위원장 불법연행, 구속

(19850915-19850915)

<서노련> 민중덕 위원장 구속에 항의성명서 「정부는 터무니없이 구속한 민중덕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발표

(19850921-19850921)

<전국노동자 민중·민주·민족통일 헌법쟁취위원회(전노삼민통)> 결성

(19851005-19851005)

<고 전태일 동지 15주기 추도식 및 군부독재 타도와 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 쟁취 실천대회> 개최

(19851113-19851113)

<서노련>, 조직 산하에 <생활임금쟁취위원회> 구성

(19851118-19851118)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결성

(19860207-19860207)

<서노련>, <기노련> 등과 공동으로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86 임금인상투쟁전진대회> 개최

(19860310-19860310)

<인노련>, 인천, 부천지역 노동자 500여명과 <임금인상투쟁전진대회> 개최

(19860310-19860310)

<인노련>이 발족됨에 따라 「서노련 신문」 12호부터 「노동자 신문」으로 개편

(19860314-19860314)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 분신사망 및 노동자들의 항의

(19860317-19860427)

<서노련> 노동자들, 구로공단 소재 모세미용실 점거농성

(19860319-19860319)

<서노련>, <인노련> 노동자 박영진 장례식 경찰 봉쇄에 항의하며 전태일 기념관 농성
(19860322-19860322)

5.3 인천 사건

(19860503-19860503)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사건: 활동가 14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60504-19860506)

<서노련>, 「5.3 인천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 발표
(19860526-19860526)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합(남노련)> 결성
(198606DD-198606DD)

’86년 임금인상투쟁을 둘러싸고 <서노련> 계열과 <남노련> 계열 대립 / <서노련>, <인노련> 내부 노선 투쟁(‘조직개조론’과 ‘조직해소론’ 입장 대립)
(1986MMDD-1986MMDD)

<남노련> 교육부서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 활동가 연행, 구속
(198701DD-198701DD)

제현의회(CA-Constituent Assembly)그룹 사건
(19870203-19870203)

<제현의회(CA) 그룹> 사건 이후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결성
(198704DD-198704DD)

<남노련 지부대표자회의>(일명 도봉산 모임)에 참석한 지부대표 10명 구속
(19870426-19870426)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
(19870626-19870626)

노태우 민정당 대표, 「6.29 선언」 발표
(19870629-19870629)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에 대한 「성명서」 발표
(19870629-19870629)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의장, 대통령 불출마 선언 번복
(19870717-19870717)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결성, 「우리의 현실과 계획」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전국적 노동정치조직 결성 주장

(19870725-19870725)

<인민노련>, 기관지 「노동자의 길」 창간호 발행

(19870725-19870725)

<인민노련>, 원미동 성당에서 열린 <노동기본권쟁취대회> 참여

(19870726 -19870726)

<인민노련>, <민주헌법쟁취노동자공동위원회(민헌노위)> 기자회견 참여

(19870805-19870805)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에 입당

(19870808-19870808)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중앙집행위원회,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제안, 이를 중앙위원회에 회부

(198700909-19870909)

<민통련> 중앙위원회,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안’ 부결하고 후보단일화 문제에 적극개입하기로 결정

(19870916-19870916)

<민통련> 내 선봉그룹(민중정당 결성, 민중후보 지지그룹), 비판적지지 비판

(19870920-19870920)

<국본>, 야권후보단일화와 관련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 연석회의 개최

(19870921-19870921)

민주당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고문과의 대통령 후보단일화 회담 실패

(19870929-19870929)

<민통련> 의장단, 양 김씨 방문하여 후보단일화 촉구

(19871001-19871001)

<민통련>,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양 김씨 초청 정책질의

(19871005-19871005)

재야인사 「민주화를 위한 후보단일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표

(19871005-19871005)

<민통련> 내 선봉그룹, <선봉> 2호에서 “혁명적 민주주의자의 연합을 호소한다” 발표

(19871006-19871006)

<민통련> 중앙위원회,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 결정

(19871013-1987101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상임집행위원 연석회의, <민통련>의 김대중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입장 발표

(19871013-19871013)

김근태씨, 옥중메시지 발표

(19871016-19871016)

<인민노련>, 「10월 13일자 민통련의 김대중 지지선언은 명백한 정치적 과오이다」 발표

(19871018-19871018)

장기표씨, 홍성교도소 수감 중 「민통련 중앙위 ‘김대중 지지선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발표

(19871020-19871020)

<민주쟁취청년학생공동위원회 창립대회 및 공정선거보장을 위한 거국국민내각 쟁취 실천대회>

(19871025-19871025)

<민통련> 내 선봉그룹, <선봉> 3호에서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지지” 입장 주장

(19871027-19871027)

대한민국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19871027-19871027)

민주당 김대중 고문, 대통령 후보 출마와 신당창당 공식선언

(19871028-19871028)

평화민주당(총재 김대중) 창당발기인 대회

(19871030-19871030)

<인민노련> 대의원대회: 강령을 둘러싼 내부논쟁 및 분화

(198710DD-198710DD)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인준위)> 결성

(19871101-19871101)

후보단일화 촉구 서명파 의원(박찬중, 조순형, 홍사덕, 이철, 허경구) 소속정당 탈당

(19871106-19871106)

성균관대 중심으로 <경인지역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학생추진위원회> 결성식

(19871111-19871111)

<백기완 선생 대통령후보 임시추대위원회> 결성

(19871111-19871111)

<민중대표 대통령후보 전국추대위원회 발대식 및 백기완 선생 시국대강연회> 개최

(19871115-19871115)

<백기완선생 대통령후보추대 청년위원회>, 「김근태선배님께 드리는 글」 발표
(19871115-19871115)

<학살원흉 노태우 집권 분쇄를 위한 학생투쟁연합> 결성
(19871118-19871118)

<민통련>: <김대중 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19871120-19871120)

백기완 민통련 부의장,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
(19871123-19871123)

<수도권지역 노동자 선거대책위원회> 결성
(19871123-19871123)

<민통련>, 「백기완 선생의 대통령 출마에 관한 민통련의 입장」 발표
(19871124-19871124)

<민중대표 백기완 선생 선거운동 전국본부(백선본)> 발대식 개최
(19871125-19871125)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후보단일화 주장하며 <인천지역선거투쟁연합> 발족에 참여
(19871127-19871127)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서비협)>: <노태우 집권분쇄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 대회> 개최
(19871127-19871128)

<백선본>, 보라매공원에서 <시국대강연회> 개최
(19871129-19871129)

대학생들, 양 김씨 집과 평민·민주당사에서 후보단일화 촉구 농성
(19871201-19871202)

노동자 박응수, 야권후보 단일화 주장 분신
(19871205-19871205)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 쟁취 범국민결의대회> 개최
(19871206-19871206)

<단일화 촉구 비상국민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 명동성당 및 평민·민주당사 농성
(19871206-198712DD)

백기완 대통령 후보 TV 유세(2차)
19871208-19871208

<백선본> 외 13개 단체: 「민주세력의 대연대를 위한 우리의 요구」 발표
(19871210-19871210)

<전대협>: KBS별관 점거농성 사건
(19871211-19871211)

백기완 대통령 후보, 사퇴 의사 발표
(19871212-19871212)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항의농성 사건
(19871216-19871216)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결성
(198712DD-198712DD)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제13대 대선 부정의혹 제기 유인물 배포
(19871223-19871223)

<새정치추진모임> 결성
(19871230-19871230)

<신당추진지역협의회> 1차 회의
(19880104-19880104)

<범민주 정치세력 통합추진을 위한 준비모임>: 「범민주 정치세력의 통합을 제안하며」 발표
(19880115-19880115)

<민주국민회의(가칭) 결성준비위원회>: 「야권통합과 쇄신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 발표
(19880116-19880116)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새정치추진모임> 3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19880116-19880117)

<새정치추진모임>: 3단체 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신당결성추진위원회>에서 빠지기로 결정
(19880125-19880125)

<신지협> <민추> 통합하여 <신당결성추진위원회> 결성
(19880129-19880129)

<신당결성추진위원회>: <민중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19880129-19880129)

<민중의당(가칭)> 창당발기인 대회
(19880206-19880206)

<한겨레민주당> 창당발기인 대회 및 창당준비위 결성식
(19880217-19880217)

<한겨레민주당>: 민주당, 평민당 통합추진 대표들과의 회담 통해 통합원칙에 합의하고, 「통합신당의 원칙을 천명한다」 발표
(19880229-19880302)

<민중의 당> 창당
(19880306-19880306)

<한겨레민주당>: 「민주, 평민 양당에게 야권통합추진회의의 즉각 소집을 요구한다」 발표
(19880307-19880307)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인준위)> 해체
(19880308-19880308)

<서대협>: <야권통합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위원회> 발족
(19880311-19880311)

<한겨레민주당> 창당
(19880329-19880329)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다수파와 소수파(「선봉」 편집부)의 갈등과 소수파 분리선언
(19880401-19880401)

<한겨레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구성
(19880408-19880408)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중의 당>(16명 출마, 0.33% 득표, 당 해산), <한겨레민주당>(63명 출마, 1.4% 득표, 1석 진출)
(19880426-19880426)

<민중의 당>: 13대 총선 이후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로 전환
(98805DD-198805DD)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준비위원회(사노맹 준비위)> 결성: 백태웅, 박기평 등 참여
(9880601-19880601)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민중정당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발표
(1880603-19880603)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전노운협)> 결성 및 진보정당 건설논의
(9880607-1990MMDD)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체 건설논쟁: <민통련 강화론>과 <해소론>의 대립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 논의

(18806DD-1990MMDD)

<한겨레민주당> <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 <단일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880818-19880906)

<한겨레민주당>, <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 <진보정당결성을위한정치연합(진보정치연합)>으로 통합 선언

(19880914-19880914)

<진보정당결성을위한정치연합>: 「진보정치연합이 노동형제 여러분께 드리는 글 - 노동악법의 사슬을 끊고 민중해방의 선봉이 되자」 발표

(19881009-19881009)

<진보정당결성을위한정치연합>: 「진보정치연합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민주화의 출발점입니다」 발표

(19881023-19881023)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19890121-19890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진보정당 결성 논의

(1989MMDD-19910216)

<사노맹 준비위>, □□노동해방문학□□ 발간, 김사인, 임규찬 등 구속

(198904DD-199101DD)

<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 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 결성

(19890516-19890516)

<전민련> 지자체 합법정당 여부에 대한 소위 구성키로 결정

(19890529-19890529)

<전민련> 2차 대의원대회: 진보정당 창당하려는 조직과 성원은 직책을 사임하고 추진할 것을 결정

(19890926-19890926)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 <전민련> 탈퇴(전민련 1차 탈퇴파)

(19890928-19890928)

전민련 사표 간부와 민족과 세계연구소 소장 활동가 30명으로 <새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 개소

(19891004-19891004)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사건

(19891018-19891018)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8차 중앙위 창당 준비모임 구성을 위해 조직 해소 결의
(19891026-19891026)

<새정당 창당을 위한 연락 사무소>와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통합: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진보정당준비모임)> 발족
(19891110-19891110)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결성
(19891112-19891112)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시민공청회 「진보적 대중정당 왜 필요한가」 개최
(19891120-19891120)

<합법정치 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결성
(19900115-19900115)

사노맹, <사회주의 학생연구소> 설립
(199001DD-199001DD)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19900122-19900122)

<진보정치연합> 대구지부 압수수색
(19900130-19900130)

<진보정치연합> 울산지부 간부 영장
(19900207-19900207)

<노동계급> 조직사건
(19900212-19900212)

<합법정치 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1차 활동보고서 배포
(19900215-1990MMDD)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진보정당정치학교 2월 시민강좌-“전노협 결성과 현단계 노동운동의 과제”
(19900221-19900221)

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등 <전민련> 탈퇴(전민련 2차 탈퇴파)
(19900303-19900303)

<전민련> 백기완, 박형규, 계훈제, 이소선 고문, 민중의 정당 결성 촉구 기자회견
(19900312-19900312)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결성 공식 제안
(19900320-19900320)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민연추> 동참 선언
(19900321-19900321)

<민연추> 1차 준비회의
(19900326-19900326)

<민연추> 지지노동자 대표회의
(19900326-19900326)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표자 회의> 개최
(19900401-19900402)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 추진위원회(전노추) 준비위원회> 결성
(19900411-19900411)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결성대회 예비회의
(19900411-19900411)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결성
(19900413-19900413)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 추진위원회(전노추) 준비위원회> 제2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19900424-19900424)

<삼민동맹> 사건
(19900425-19900425)

<민연추>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00426-19900426)

<민연추> 비상시국대강연회 직후 이부영 씨 야권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제기
(19900512-19900512)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제3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19900516-19900516)

<민연추>, 6인소위의 조정안 수용을 위해 5·28 비상상임위 사전모임 개최
(19900528-19900528)

이부영, 고영구, 박계동, 제정구 등 야권통합파 14명, <민연추> 사퇴
(19900529-19900529)

<민연추>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로의 전환결정 기자회견
(19900530-19900531)

<민연추> 상임위원회, '민중당'을 가칭당명으로 결정
(19900611-19900618)

<민중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19900621-19900621)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조직책 심사위원 확정
(19900625-19900625)

민연추 탈퇴 야권통합파, <범민주 수권정당 결성을 위한 통합추진회의>(통추회의) 발족
(19900628-19900628)

<민중정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결성: 위원장 김문수, 집행위원장 유인철 선출, 이후
<민중당(가칭) 창당준위원회>에 결합
(19900630-19900630)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범민주세력 연대촉구, 노태우 정권 퇴진 촉구
(19900702-19900702)

<전노운협> 1기 2차 중앙위원회 개최: 정당참여방침 관련 논쟁 속에 휴회
(19900712-19900712)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국회의원 총사퇴 촉구 민중당사 농성
(19900714-19900717)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1차 조직책 신청마감, 54개지역 56명 신청
(19900719-19900719)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위원회
(19900719-19900719)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전국 49개 지구당에 대한 1차 조직책 명단 발표
(19900730-19900730)

사노맹,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설립
(199008DD-199101DD)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남북교류에 대한 기자회견. 30명으로 방북대표단 구성
(19900818-19900818)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민주교수 해임 철회 촉구성명 발표
(19900831-19900831)

<전노운협>, 휴회한 1기 2차 중앙위원회 속개
(19900901-19900901)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전민련> 평화협정 체결 기대 성명 발표
(19900902-19900902)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조직책 임명
(19900903-19900910)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중앙위원회, 55명의 조직책 임명, 창당일정 합의
(19900918-19900918)

<사노맹> 활동가 1차 검거, 중간 지도부 한정덕 등 3명 구속
(19900919-19900919)

<사노맹> 활동가 2차 검거, 중앙위원 남진현 구속
(19901001-19901001)

<민중당(가칭) 창당대회 준비위원회> 발족, 창당대회 일정 확정
(19901008-19901008)

국가안전기획부, 민중당 사업상황 보고해 온 사노맹 조직원 1명 구속
(19901008-19901008)

<민중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민중당 강령시안 토론회 개최
(19901018-19901018)

국가안전기획부,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19901030-19901030)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19901101-19901105)

<전노운협> 내 반대파, '전국적인 대중사업지원체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3파에 반대하는 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준비위원회> 발족 결의
(19901102-19901102)

<민중당(가칭)> 거제지구당위원장등 2명 구속
(19901103-19901103)

<민중당> 창당대회 개최
(19901110-19901110)

<전국노동단체연합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발족취지문 발표 및 공동대표 선출
(19901221-19901221)

<민중당> 제3차(임시) 중앙위원회
(19901227-19901227)

민중당 대표 연두 기자회견, 야권 연합공천을 통해 반민자전선 촉구
(19910112-19910112)

<민중당> 수서특혜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 범국민적 진상조사기구 제안
(19910206-19910302)

민중당 조직책 3명 추가, 방북신청
(19910222-19910223)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 남진현 무기징역 구형
(19910228-19910228)

민중당, 재야단체 등 반민자 대책위 결성
(19910307-19910307)

민중당 제5차 (임시) 중앙위원회: 수서비리사건 항의, 기초의회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19910308-19910310)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 구속
(19910312-1991031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현정덕 징역 8년 선고
(19910315-19910315)

민중당 후원회 창립총회
(19910323-19910323)

민중당 상임집행위, 광역의회 선거에서 야권과의 연합공천 추진하기로 결정
(19910401-19910401)

민중당 제6차 임시 중앙위원회
(19910408-19910408)

민중당, 지방선거법 개정청원
(19910418-19910418)

민중당, 조직책 추가임명
(19910418-19910418)

‘인천지역 신민, 민주, 민중당, 재야’, 광역후보 단일화에 합의
(19910425-19910425)

민중당 광역후보 공천
(19910425-19910425)

<민중당>, 강경대씨 타살사건 관련 농성돌입

(19910502-19910502)

<전국노련> 성명서 발표: 노태우 정권 타도, 반민주악법 철폐, 수배조치 해제, 민중폭압기구 해체, 재벌위주 경제정책 철폐 등 요구

(19910523-19910523)

민중당 간부 민중당 간부 김병태, 정금채, 임석순 등 7명 구속,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인진상 규명 요구 시위 주도혐의

(19910524-19910524)

민중당 「전국 좌파지구당 실무자회의」 개최

(19910528-19910528)

민중당 「전국 좌파지구당 실무자회의」 2차 회의

(19910531-19910531)

민중당 광역후보 추가 공천

(19910605-19910605)

민중당, 각 지구당위원장에게 「당면과제에 대한 임무」 명의를 문건 발송

(19910611-19910611)

민중당 장영호 후보 등록무효 통고

(19910613-19910613)

민중당, 강원도청의 유권자 성향보고서 관련 강원도지사 고발

(19910614-19910614)

광역의회선거: 민중당 0.75% 획득(총 42명 출마, 출마지역 평균 13.6% 득표, 1명 당선)

(19910620-19910620)

민중당 이우재 대표 기자회견담회, “진보적 단일야당 결성” 촉구

(19910627-19910627)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핵심전위조직인 <애국동맹> 결성사건

(199107DD-199107DD)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창준위)> 결성, 위원장 주대환 선출

(199107DD-199107DD)

「민중당 개혁추진위 구성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

(19910702-19910702)

민중당 제9차 중앙위원회

(19910705-19910706)

민중당, 제3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19910708-19910708)

「민중당 개혁을 위한 지구당 위원장 간담회」 개최
(19910713-19910713)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결성: 전노연합의 독자정당건설론자들이 탈퇴하여 결성
(19910714-19910714)

민중당, 개혁추진위 관련 6명 제명
(19910715-19910715)

민중당, 제3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19910718-19910718)

민중당, <당 발전위원회> 구성
(19910722-19910722)

민중당 노원을 지구당 비상 당원회의
(19910723-19910723)

오세철 교수 등 민중당 교수위원 4명, <민중당 개혁추진위> 관련자 제명에 반발하여 탈당
(19910724-19910724)

민중당, 「지역감정에 기초한 정치구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9910725-19910725)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박노해 사형 구형
(19910819-19910819)

민중당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 「UN동시가입 이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19910821-19910821)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그룹(제파PD)> 사건
(19910826-19910826)

민중당, 민주대연합 결의 “독자성 견지·제한적 연대”
(19910910-19900910)

민중당, 「전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드리는 민중당의 긴급제안서-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로 나아가자」 발표
(19910912-19910912)

<전국노련>,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3자 연석회의)’ 제안
(199110DD-199110DD)

민중당 중앙위원회, 중앙상집위원회: 향후 진로결정, 민주적 진보정당 유지·강화
(19910917-19910917)

민중당, 선거정치제도개혁을 위한 농성
(19911028-19911101)

민중당, 14대 총선 백 여명 공천 추진
(19911109-19911109)

<국제사회주의자들(IS)> 결성 사건
(19911110-19911110)

사노맹 출범 2주년을 맞아 노동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발표
(19911110-19911110)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기본 일정 합의
(19911111-19911111)

<노정추>, 추진위원 서명작업 시작
(19911115-19911115)

민중당 창당 1주년 기념 시국 강연회
(19911116-19911116)

민중당, 청와대서 노태우씨와 면담
(19911118-19911118)

<민중회의 준비모임>, 「전국노련, 민중당, 민중회의간의 연석회의에 대한 민중회의 준비모임의 태도」 발표
(19911120-19911120)

민중회의 준비모임, <민중회의> 결성 제안
(19911120-19911120)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결성대회: 추진위원장에 오세철 교수 선출
(19911128-19911128)

<민중회의 추진위>,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92총선투쟁방침” 시국토론회 개최
(19911205-19911205)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 발족식
(19911215-19911215)

<노정추>, <한국노동당(가칭)>을 창당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9911216-19911216)

<전국노련>, 노정추 결성에 즈음하여 「노동자정당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성명 발표
(19911217-19911217)

노동자정당건설 서울추진위원회 발족
(19911219-19911219)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1차회의 결정사항” 인준
(19911226-19911226)

<민중당>, <노정추> 통합 합의
(19911230-19911230)

<민중회의 추진위원회>-<노정추> 회담
(199112DD-199202DD)

노정추, 「민중운동 정치역량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한 제안」 발표
(19920106-19920106)

민중당 제14대 총선후보 50명 발표
(19920106-19920106)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결성대회> 일정 확정
(19920106-19920106)

<새로운 민중정당 건설추진 준비위원회(새건추) 전국대표자회의> 발족
(19920111-19920111)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사건
(19920111-19920428)

<전노협> 4차 중앙위원회, 노정추 활동과 관련한 입장 결정
(19920114-19920114)

<민중당 중앙위>, 노정추와의 통합에 대한 기존 상집안 제출
(19920116-19920116)

<노정추>, 「한국노동당(가칭) 탄압을 중단하라!!」 발표
(19920118-19920118)

<전국노련>, 「합법적인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 <노정추> 주
대환 위원장, 전성 조직부장, 민영창 총무부장 등 주요 간부연행과 관련한 항의 성명서
(19920118-19920118)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민중당 등에 민중후보추대위 구성 제안
(19920118-19920118)

<한국노동당(가칭)> 발기인대회
(19920119-19920119)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민중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 공식제안 및 기자간담회
(199201DD-199201DD)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결성대회> 2월 9일로 연기
(199201DD-199201DD)

<민중당>과 <한국노동당 창준위>,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교섭 마무리, <통합민중당> 창당 기자회견문 발표
(19920207-19920207)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19920209-19920209)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민정추)>, 「민중회의와의 통합결렬 및 민중진영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중회의와의 통합결렬에 대하여 노동자, 민중동지들에게 보내는 사과문」 발표
(19920214-19920214)

민중당, 제14대 총선에 51명 공천
(19920215-19920215)

민중당 선거본부 발족
(19920219-19920219)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민정추)> 결성대회
(19920222-19920222)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사건 관련자들의 탄원서 제출
(19920224-19920224)

<민중당> 제14대 총선 11명 추가공천
(19920225-19920225)

민중당, 국가보안법 폐지 등 총선공약 발표
(19920227-19920227)

민중당 3명 추가공천
(19920227-19920227)

민중당 전국구 공천
(19920305-19920305)

제14대 총선: 민중당 전국득표 1.5%
(19920324 -19910324)

<민정추>, 제14대 총선에 8명 출마

(19920324-19920324)

<전국연합 노동자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 기자회견: 「민자당의 파렴치한 부정선거와 공권력 투입 및 불법 연행·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9920327-19920327)

<민정추> 제4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총선평가와 진보이념정당의 건설 필요성 제기

(19920330-199203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중당 등록취소

(19920330-19920330)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민중당 조직해체안을 다수결로 결의

(19920405-19920405)

민중당 제15차, 16차 중앙위원회 당 진로 놓고 논쟁,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로 전환 결정

(19920408-19920415)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결성: 대표 최윤 선출

(19920415-19920415)

이우재, 이재오, 장기표 등 민중당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 민중당 해체를 선언하는 광고문 게재

(1990415-19920415)

이우재, 이재오, 장기표 등 (구)민중당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 결성

(19920421-19920421)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대통령선거 대응방침 결정

(19920421-19920421)

<민정추>, 총선평가 및 민중운동진영의 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19920422-19920422)

<전국노련>, 「총액임금제 분쇄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선봉에서」 라는 투쟁결의문 발표: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이 주도하여 민중정부를 수립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해방 앞당기자는 내용

(19920426-19920426)

<전국노련> 환경남 공동의장, 「민중운동진영에 드리는 제안」 발표

(19920426-19920426)

안기부,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 등 조직원 39명 검거 발표

(19920429-19920429)

<민중후보 추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연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19920430-19920430)

<민정추> 제4차 전국대표자회의: 창당 계획 논의, <창당기획팀> 구성
(19920504-19920504)

<민정추> 제5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8월 창준위 결성, 10월 창당 결의
(19920512-19920513)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민중정당건설에 대한 결정사항
(19920523-19920524)

<진정추>, <전노연합>, <전국노련> 3단체 정책토론회: 「대통령 선거 시기 노동운동의 통일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19920608-19920608)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와 민중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연대 준비모임> 발족 선언, 오세철, 김진균, 김철수 등 각계인사 99명 기자회견
(19920609-19920609)

<진정추>(최윤), <민정추>(김철수), <민중회의 준비위원회>(오세철), <전국노련>(한경남) 4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19920610-19920610)

<민정추>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 개최, 창당계획 논의
(19920619-19920622)

전국노련 제13차 대표자회의, 대선대응과 진보정당 건설방침 결정
(19920623-19920623)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 대통령 선거와 민주정부 수립방안 토론회 개최
(19920624-19920624)

<진정추>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
(19920627-19920628)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제4차 중앙위원회, <민중정당건설소위원회> 구성 결정
(19920630-19920630)

<진정추>, <민정추>,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전국노련> 4개 단체 대표자회의 개최,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 결성
(19920702-19920703)

<민중연대>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19920706-19920706)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민중연대)> 결성대회
(19920708-19920708)

<진정추>, 강령기초소위원회 구성
(19920813-19920813)

<민중적 통일방안 마련과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개최
(19920816-19920816)

민주개혁정치모임 출범
(19920820-19920820)

<민정추> 제7차 대표자회의
(19920821-19920822)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18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19920824-19920824)

김낙중 (전)민중당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20825-19920825)

<민중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19920826-19920826)

<전국연합> 중앙위원회 “가입단체 대통령선거 활동 금지” 결정
(19920828-19920828)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4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20904-19920904)

<진정추> 제23차 상집회의에서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와 창당추진기구 구성 결의
(19920916-19920916)

<민중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대통령 선거 준비 본격화
(19920917-19920917)

<민중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대통령선거 공동기획단 구성과 창당추진기구 발족합의, 후보추대 일정 합의
(19920923-19920923)

<민중연대 대선 공동기획단> 전체회의 개최
(19920925-19920925)

<민정추> 제8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사회당 추진위>로의 전화 결정
(19920925-19920926)

민중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전국 체단체 연석회의 개최
(19920930-19920930)

<사회당 추진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창당과 대선방침에 대한 논의
(19921003-19921003)

<사회당 추진위원회> 출범
(19921004-19921004)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
(19921005-19921005)

<사노맹>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 사형 구형
(19921006-19921006)

전국연합, 제14대 대통령선거방침 결정
(19921010-19921010)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선거대책본부> 결성대회
(19921012-19921012)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한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입장」 발표
(19921013-19921013)

사노맹 조직국장 정명섭 무기징역, 은수미, 이은경, 김기수, 박홍순 등 중앙위원들 15년에서 12년의 중형을 구형
(19921013-19921013)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5차 중앙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 대선방침에 대한 토론
(19921014-19921014)

<전국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1992년 대선투쟁방침 결정
(19921016-19921016)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19921025-19921025)

<사회당 추진위>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21028-19921028)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혁사노)> 건설: 1991년 5월 결성된 <노동자권력 쟁취를 위한 국제사회주의자 일동'그룹(일동그룹)>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이 가운데 현장노동자의 조직화를 중시하는 분파가 분리하여 결성
(199210DD-199210DD)

민중대통령후보 선출대회: 백기완씨 선출
(19921101-19921101)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19921103-19921103)

<민중정치실현을 실천적으로 염원하는 교수모임>, 「대통령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민중정치실현 전망을 열자」 발표
(19921103-19921103)

<민중대통령후보 백기완 선거운동본부>,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내각제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19921126-19921126)

<사회당 추진위> 제4차 중앙위원회
(19921127-19921127)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연합·민주당의 합의사항 발표문」 발표
(19921202-19921202)

<사회당 추진위>, 「사회주의 합법화를 위한 선언서」 서명 작업 시작
(19921206-19921206)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1216-19921216)

<백선본> 중앙선거대책위 제4차 회의: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원회> 결성
(19921228-19921228)

<사회당 추진위> 제5차 임시 중앙위 개최
(19930102-19930103)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원회> 활동 및 해산
(19930105-19930316)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 제2차 회의
(19930108-19930108)

권두영 전 민중당 고문 옥중 자살
(19930114-19930114)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원회> 제5차 회의: 「진보정당건설에 관련한 오세철 수입위원의 안」 토론
(19930128-19930128)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 일정 및 준비사항 점검
(19930203-19930203)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임위> 제6차 회의: 노회찬 위원이 제출한 「통합조직 건설에 관한 안」 토론
(19930204-19930204)

김낙중씨 사형구형
(19930211-19930211)

<사회당 추진위> 제6차 중앙위원회: 두 개의 창당 방침 제출
(19930212-19930212)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임위원회> 9차 회의
(19930220-19930220)

<민중회의> 제2기 1차 대의원대회
(19930306-19930306)

사회당 중앙위원회, 오세철 수임위원 합의(안) 지지
(19930312-19930312)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규약개정
(19930314-19930314)

<민중회의> 제2기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통합안 승인과 민중회의 해소결의
(19930411-19930411)

<사회당 추진위> 제2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중정치연합>으로의 발전적인 해소 결의안 채택
(19930516-19930516)

<민중회의>, <사회당 추진위>: <민중정치연합>으로 통합, 출범식
(19930516-19930516)

<민중정치연합>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30521-19930521)

<민중정치연합>, 「진보진영의 진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9930525-19930525)

사노맹 중앙위원회 재건 사건
(199306DD-199306DD)

<민중정치연합> 제2차 중앙위원회: '93년도 하반기 사업기조 확정
(19930708-19930708)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발표
(19930813-19930813)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노동관계법 연기를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발표
(19930825-19930825)

<민중정치연합> 제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19931106-19931107)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준) 대의원대회
(19931113-19931114)

<민중정치연합> 제1기 제4차 중앙위원회
(19931203-19941203)

<민중정치연합>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좌파연대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
(19940302-19940302)

진정한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단체 공동기자회견
(19940304-19940304)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19940403-19940403)

<민중정치연합>, 「94년 하반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9940624-19940624)

<진보지식인연대> 발족
(19941019-19941019)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진정추>와의 통합문제 논의
(19950114-19950115)

<민중정치연합> 제3기 정기 대의원대회
(19950401-19950402)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창립3주년 기념식 및 제4기 대의원대회
(19950402-19950402)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3기 제1차 중앙위원회
(19940412-19940412)

<민중정치연합> 제3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19950520-19950520)

제1대 지방선거
(19950627-19950627)

<민중정치연합> 제3기 5차 정기 중앙위원회: 지방선거 평가

(19950710-19950710)

<민중정치연합> 여주·안산지부 회원 7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재건 관련 구속
(19950712-19950712)

<민중정치연합> 제3기 6차 정기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선출
(19950818-19950818)

<민중정치연합> 제3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중정치연합 해산대회
(19950923-19950923)

<진보정치연합> 창립대회: <민중정치연합> 내 통합파와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진보정치연합>을 출범
(19950924-19950924)

<진보정치연합> 창립 대의원대회
(19950929-19950929)

<진보정치연합> 공동대표 노회찬, 개혁신당 준비위에 참여
(19951009-19951009)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전노운협)> 사건
(19951101-19951101)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19951111-19951111)

인천 노진추 준비모임 출범: 민중정치연합과 진정추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들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
추진위원회(노진추)> 활동 준비
(19951120-19951120)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재건 관련 구속
(19951121-19951121)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준비모임 지역대표자회의(1차-4차)
(19951123-1995122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해소
(19951203-19951203)

서울 노진추 준비모임 출범
(19951216-19951216)

<노진추> 제6차 지역대표자 회의
(19951228-19951228)

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가칭), <새로운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합동노동자 정치강좌>
(19960228-19960320)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사건
(19961007-19961008)

<진보정치연합> 제2기 1차 중앙위원회
(19961121-19961121)

<전국연합> 6기 대의원대회: 1997년 대선방침 결정
(19970222-19970222)

민주노총 2기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결정
(19970327-19970327)

전국연합 6기 임시대의원대회, 1997년 대선방침 결정
(19970614-19970614)

국민후보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 모임 구성
(19970614-19970614)

민주노총, 전국연합 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 논의
(19970626-19970626)

<진보정치연합> 2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방침 결정
(19970706-19970706)

<민주노총> 2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결정
(19970724-19970724)

국민후보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사회 각계 원로회의: 1997년 8월 5일부터 주 1, 2회씩 진행
(19970805-199709DD)

<민주노총>, <전국연합>, 국민후보운동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사회단체 설명회
(19970807-19970807)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 발족(대표 오세철): 정치세력화를 제도권정치진출로 이해하거나 노동자민중의 조직화를 지구당 그림그리기로 인식하는 국민후보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출발지점을 노동자민중의투쟁전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
(19970816-19970816)

<국민승리21 결성과 국민후보 추천을 위한 선언자 대회>
(19970818-19970818)

<국민승리21 추진위 국민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결과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기로 결정

(19970901-19970901)

전국연합 중앙위원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

(19970904-19970904)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후보 추대 결정

(19970905-19970905)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 출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추대

(19970907-19970907)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대경연합) 중앙위원회 : 대경연합 대선방침을 결정

(19970909-19970909)

국민승리21 제1차 운영위원회: 중앙본부 인선 및 조직체계 정비

(19970919-19970919)

국민승리21 제2차 운영위원회: 조직확대방안 논의, 본조직 결성 및 선거대책본부 구성 논의

(19970929-19970929)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19970929-19970929)

국민승리(21), 정치연대(준),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교수 모임 합의문 발표

(19971009-19971009)

국민승리21(준)집행위원회, 「정치연대(준)의 국민승리21 참여문제에 대하여」

(19971013-19971013)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 「합의문과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 입장에 대한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의 입장」 발표

(19971016-19971016)

국민승리21 준비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

(19971022-19971022)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선거대책기구인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결성

(19971026-19971026)

<국민승리21> 1차 정책토론회(종로성당) / 주제 : 사회복지예산 20%확보는 이상인가-군축과 사회복지

(19971030-19971030)

<국민승리21> 정책자문교수단 발족식

(19971031-19971031)

<국민승리21> 이창복 상임대표, 이영희 부분부장 지역순회 및 간담회
(19971104-19971108)

<국민승리21> 여성위원회 발족식
(19971106-19971106)

<국민승리21> 10대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
(19971110-19971110)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특별기자회견: 「30대 재벌총수 퇴진 촉구, 일자리지키기 범국민운동 선언」
(19971202-19971202)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교수유세단 유세
(19971212-19971212)

<국민승리21> 여성 1천인 선언운동: 1,071명이 참여
(199712DD-199712DD)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1218-19971218)

<국민승리21> 중앙위원회, 선거대책본부 체계에서 정치조직으로 전환 결정
(19980221-19980221)

<국민승리21>, 「김대중정부의 마구잡이식 연행을 규탄한다-국민승리21 간부 연행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
(19980511-19980511)

<국민승리21> 지방선거후보단 기자회견: 「주민복지 고용안정 실업극복을 위한 기자회견」 후보 56명 발표
(19980518-19980518)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노동자진보정당 건설 적극 지원방침 결정
(19980520-19980520)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제2대 지방선거에서 추천후보 51명 중 22명 당선
(19980604-19980604)

<청년진보당(준)> 현대자동차 투쟁 관련 성명서
(19980819-19980819)

<청년진보당> 창당대회 개최
(19981129-19981129)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제1차 원탁회의: 각계 인사 331명 참가.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 각계각층과 국민

에게 드리는 제안문 채택
(19990125-19990125)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구로구을 재선거 출마 확정
(19990211-1999021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 결의
(19990309-19990310)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제2차 원탁회의: 각계 인사 250여명 참가. <진보정당창당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및 민주진보운동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16명으로 준비위원 선임
(19990314-19990314)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
(19990326-19990326)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2차 회의
(19990401-19990401)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
(19990403-19990403)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결성
(19990418-19990418)

2차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대회
(19990613-19990613)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
(19990618-19990618)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안양·군포·의왕 지역 추진모임,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안양·군포·의왕지역 추진위원회 결성식
(19990709-19990709)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4차 운영위원회: 발기인대회 8월말로 연기
(19990712-19990712)

<노동자의 힘(준)> 결성
(19990808-19990808)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결정
(19990823-19990823)

<진보정당창당추진 발기인대회>: 정당명칭 '민주노동당'으로 확정

(19990829-19990829)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최근의 신당 움직임과 근본적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19990907-19990907)

민주노동당 상임집행위원회, 당면투쟁 대응할 3개 대책팀 출범
(19990908-19990908)

민주노동당 주요간부 장기농성장 격려방문
(19990916-19990918)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1차 중앙위원회: 2000년 1월 중으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기로 결정
(19991008-19991008)

민주노동당 창당기획단 제1차 회의
(19991016-19991016)

민주노동당 후보 이영순씨,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
(19991028-19991028)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 선포식> 서울 여의도 SK빌딩 앞에서 개최
(19991119-19991119)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준위>, 신노선 채택
(19991203-19991203)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국회의원 299명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19991210-19991210)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갖기로 결정
(19991221-19991221)

민주노동당 서울 성북갑과 강북을 지구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수도권, 대전, 울산, 부산 등에서 21개 지구당 창당
(20000116-20000126)

민주노동총 대의원대회, 4.13총선 앞두고 정치방침 결정
(20000118-20000118)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권영길 대표 선출
(20000130-20000130)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총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2표 도입 거리캠페인
(20000207-20000207)

민주노동당, 청와대에 <개정선거법>에 대한 거부권 촉구하는 서한 전달
(20000214-20000214)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선거법 빈부불평등 조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며 단식농성 돌입
(20000215-20000223)

민주노동당, 개정선거법 헌법소원 제출
(20000216-20000216)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단식농성 해제 및 경남 창원 출마선언
(20000223-20000223)

민주노동당, 9명의 총선후보자 확정
(20000228-20000229)

민주노동당, 16대 총선 선거대책기구 구성
(20000303-20000303)

청년진보당 소속 회원들 <세계여성의 날>맞아 호주제 폐지 집회
(20000308-20000308)

민주노동당, 제16대 총선 24대 일반공약 발표
(20000317-20000317)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115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00326-20000326)

제16대 총선: 민주노동당 출마지역 평균 13.1% 득표 / 선관위, 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 등록 취소
(20000413-20000418)

청년진보당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제16대 총선 결과에 따른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더 큰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20000419-20000419)

민주노동당 당지도부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20000422-200005DD)

민주노동당 제4차 중앙위원회: '당의 외연확대 통한 재창당' 기조확인, 5월 1일 '창당준비위 선관위등록' 결정
(20000428-20000428)

민주노동당, "총선득표 2% 미달 등록취소는 위헌"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00510-20000510)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원회: 전국집행위원 12명 선출, 주요당직자 인선

(20000512-20000512)

민주노동당 제3차 임시당대회 성원미달로 6.11로 당대회 소집 연기

(20000520-20000520)

민주노동당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의

(20000530-20000530)

6.8 보궐선거

(20000608-20000608)

민주노동당 6·11 임시당대회

(20000611-20000611)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20000615-2000MMDD)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제정당대표 회담' 제안

(20000703-20000703)

민주노동당,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통일 정세 :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20000704-20000704)

민주노동당, 금감위에 금융지주회사방안 문제점 질의서 전달

(20000712-20000712)

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 '재창당 기획위원회' 구성 결정

(20000721-20000721)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 정책위 산하 통일방안 작성 소위 확대 보강

(20000915-20000915)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결성

(20000926-20000926)

민주노동당 청년위, 운영위원 전원 사퇴

(20000927-20000927)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

(20001010-20001010)

민주노동당, 북측의 노동당 창당 55돌 기념행사 초청에 응하기로 하고 권영길 대표 등 6명의대표단 방북신청서 통일부에 제출

(20001005-20001005)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정례협의회, 전농 등 4단체 간담회 갖기로 결정

(20001117-20001117)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청회

(20001120-20001120)

민주노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국순회간담회: 지역조직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20001128-20001128)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첫 공식회의

(20001203-20001203)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경제정책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

(20001207-20001207)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정기 당대회 2월 24-25일 개최하기로 결정

(20010108-20010108)

민주노동당, 국고보조금 지급취소 행정소송

(20010129-20010129)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서울대에서 ‘3일간의 토론광장’

(20010208-20010210)

민주노동당 창당1주년 기념대회

(20010225-20010225)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당원들, 서울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에서 “미국은 전쟁 무기 강매말라” 기자회견

(20010306-20010306)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 상가임대차 이어 이자제한법 제정운동 본격화

(20010308-20010308)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면연대 등 10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 제출

(20010327-20010327)

민주노동당 제2차 중앙위원회: 제창당추진위원장 박순보 부대표, 기관지 위원장 조영건 고문 만장일치 선출

(20010417-20010417)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20010418-20010418)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추진위원회 결성, 추진위원장에 최규엽 남부지부위원장

(20010419-20010419)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 1차 회의: 추진위원 14명 명단 확정
(20010511-20010511)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준) 결성: 준비위원장 이용대 중앙연수원부원장
(20010512-20010512)

민주노동당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 강력한 정치투쟁으로 민주노총 업호기로 결정
(20010525-20010525)

민주노동당,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참가
(20010614-20010616)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공식출범, 초대지부장에 노회찬
(20010707-20010707)

민주노동당 3차중앙위원회, 김대중정권 범국민저항운동 조직
(20010725-20010725)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 등 16명 김포공항에서 연행
(20010821-20010821)

민주노동당, '종업원 경영참가법' 입법청원
(20010829-20010829)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출범
(20011006-20011006)

민주노동당 선거기탁금 헌법소원 제출
(20011005-20011005)

<노동자의 힘> 제7차 총회에서 '준비모임'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힘'을 공식 명칭으로 하여 새롭게 출범
(20011013-20011013)

민주노동당, 중소기업청장 선거법위반 고발
(20011023-20011023)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과 공동토론회
(20011114-20011114)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여성위원회 공식 출범
(20011209-20011209)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헌법소원
(20011210-20011220)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원회: 사회당과 통합추진, 예비경선제 실시, 정기당대회 일자 결정
(20011212-20011212)

민주노동당 당상무집행위: 김우중 체포, 단병호 등 석방, 쌀값보장, 미군용산기지 철거를 위한 광역시
도부지부장 동시 천막농성 결정
(20020111-20020111)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2002년 지방선거 정치방침 결정
(20020115-20020115)

<노동자의 힘>, 민주노총에게 98년 정치방침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
(200201DD-200201DD)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 「반조선노동당 노선에 대한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의 입장」 발표
(20020222-20020222)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2002년 양대선거 승리 위한 범국민추진기구”건설하기로 결정
(20020304-20020304)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 출범: 위원장에 임수태 당선
(20020307-20020307)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식출범
(20020311-20020311)

민주노동당 2002년도 정기 당대회 개최: 권영길 대표, 노회찬 사무총장 선출
(20020316-20020316)

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
(20020428-20020428)

민주노동당, 사회당과의 상집연석회의 무산
(20020507-20020507)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임수태 지부장 확정
(20020509-20020509)

민주노동당 제3대 지방선거 공동공약 초안 마련
(20020517-20020517)

제3대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218명 출마,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1(광역비례 9인 포함) 등 총 45명
당선
(20020613-20020613)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최우선 추진키로
(20020624-20020624)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당선자 연수

(20020627-20020628)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진보진영 대선 예비경선 가능성 타진키로

(20020628-20020629)

민주노동당, 범진보진영 원탁회의 추진

(20020704-20020704)

민주노동당, 열성당원 전진대회 개최

(20020713-20020714)

민주노동당 8·8재보선 출마 후보 3명 '5대 공동공약' 발표

(20020724-20020724)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대선 출마 선언

(20020809-20020809)

<2002년 대선승리와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 구성 실패

(20020830-20020830)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명운동 돌입

(20020902-200211DD)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대선후보로 선출

(20020908-20020908)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발족

(20020912-20090912)

2002년 하반기 전국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2002 대선 공동선거대책본부(공선본) 건설을 위한 논의

(20020914-20021023)

민주노동당 중앙선대위 발족, 한국사회 총체적 개혁 위한 4대 개혁 선언

(20021007-20021007)

전국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5차 예비회의 개최: 참여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전국연합,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20021019-20021019)

전국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6차 예비회의 개최: 참여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전국연합,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사실상 공투본 구성 결렬

(20021023-20021023)

민주노동당, 울산 중구 보궐선거에 천병태 울산중구지구당 위원장 출마

(20021030-20021031)

민주노동당 광역비례의원, 노동관련 3대법안 철회 공동성명 발표

(20021031-20021031)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60여 주요 민중사회단체에 공동선거운동본부 제안

(20021107-20021107)

제16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8%(98만명) 획득

(20021219-20021219)

민주노동당 연두기자회견: 민주노동당을 보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2004년에는 원내진출 목표

(20030109-20030109)

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 2003년도 정기 당대회 3월 1일 개최 결정

(20030118-20030118)

민주노동당 정기대의원대회: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 당원소환제, 국회의원 비례 후보 당원 직선, 여성할당 50% 이상 등의 당헌 개정

(20030301-20030301)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에서 북한 사민당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만남

(20030302-20030302)

민주노동당, 파병동의안 위헌 소송

(20030322-20030322)

민주노동당 4대 민생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20030418-20030418)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권리 완전쟁취 추진단> 결성

(20030507-20030507)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 시작

(20030522-20030522)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20030603-20030603)

민주노동당,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위한 신용회복법 입법청원

(20030605-20030605)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위원회(가칭) 건설준비모임> 개최

(20030620-20030620)

민주노동당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 돌입

(20030620-20030620)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여성정치학교

(20030726-20030727)

민주노동당,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에 이문옥 본부장 등 평양방문

(20030814-20030817)

민주노동당 강태운 고문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 발표

(20030818-20030818)

민주노동당, 학교급식운동 본격화

(20030903-20030903)

민주노동당 파병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 주장

(20030917-20030917)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전농 정치협상 합의문」 체결(2003년 4차 중앙위원회 통과)

20031015-20031015

민주노동당 제4차 중앙위원회: 지도체제 전면개편 및 당헌 개정안 마련

(20031023-20031023)

2003년 민주노동당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전농 합의문 인준, 지도집행체제 개편

(20031101-20031101)

전농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 통한 정치세력화 결정

(20031104-20031104)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근본적 정치개혁 서울지역 1천인 선언

(20031106-20031106)

민주노동당 '3선연임 아웃제'를 포함하는 정치개혁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20031111-20031111)

민주노동당,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20대 정치개혁안 요구

(20031117-20031117)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 당, 중앙선거대책위 구성, 전당적 총선체제 전환

(20031218-20031218)

전농 1백 여명의 집단 입당자 선언대회

(20031223-20031223)

민주노동당, <17대 총선을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20040105-20040105)

전여농,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106-20040106)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신년 기자회견: 교섭단체 구성, 한국사회개혁 대장정 선언

(20040127-20040127)

민주노동당 창당 4주년 기념행사

(20040130-20040130)

민주노동당, 정치관계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회 앞 노숙농성

(200402DD-200402DD)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농, 민주노동당 총선후보 5명 사면복권 촉구

(20040215-20040215)

민주노동당 “파병 찬성의원 ICC 전범 제소” 결의

(20040215-20040215)

민주노동당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비례대표 전환’과 ‘총선출마 예정자 5명의 사면복권’ 요구하며 국회앞
철야농성과 1인 시위

(20040217-20040219)

민주노동당, 전농, 민주노총과 정책협의회 개최

(20040219-20040219)

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

(20040220-20040220)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 4.15총선 공조를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에 합의

(20040220-20040220)

민주노동당 ‘정개협 5당 대표 긴급회담’ 제의

(20040225-20040225)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등록 마감

(20040227-20040301)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발표

(20040303-20040303)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청문회

(20040308-20040309)

민주노동당 38개 핵심 선거공약 발표

(20040311-20040311)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확정

(20040315-20040315)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법소원 청구

(20040318-20040318)

민주노총, 전빈련, 전농, 민주노동당 <공동선거운동본부> 발족식

(20040330-20040330)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지지 공식선언

(20040330-20040330)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20040401-20040401)

법조인 89명, 민주노동당지지 선언

(20040407-20040407)

영화인 226명,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20040407-20040407)

여성노동자 3,500여명,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20040408-20040408)

교수 323인 학생대표자 314인,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20040409-20040409)

성적소수자들,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20040412-20040412)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노동당 13.1% 득표(비례후보 8명, 지역구 2명 당선)

(20040415-20040415)

구로연대파업투쟁

1. 사건일자 19850624-19850629

2. 사건내용

- 1980년대 중반 구로지역은 대부분 업체가 수출을 위한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던 곳으로 대부분의 공장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리직과의 차별 대우 등이 극심하였다. 대우어패럴의 경우 정상근무 10시간에 항상 1일 2~8시간의 잔업 혹은 철야를 함으로써 월 평균 80여 시간, 심지어 110시간의 초과노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들 사업장에 노조 결성을 가져왔으며 그 시기는 84년 6~7월경이었다. 이들은 비슷한 근로조건과 노조결성 시기 등으로 인해 조합 간부는 물론 조합원간의 연대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와 연대를 강화해 왔으며 85년 임금인상 투쟁 시 상호교류를 통해 이러한 연대는 강화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6월 22일 오전 11시 경찰이 대우어패럴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김준용 위원장, 강명자 사무국장, 추재숙 여성부장 등 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4월의 임금인상 투쟁 때 파업농성을 주도하며 노동쟁의조정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들 모두를 구속하고 조합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두환 정권이 노동운동을 다시 강력하게 탄압하려는 신호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조합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위원장 연행 소식을 전해 듣고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은 즉각 작업을 중단한 후 1백여 명이 총무과로 몰려가 고발 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조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효성물산 노조(1984. 7. 14. 노조설립)의 아프리 숙박교육에 가리봉전자(1984. 6. 8. 노조설립), 선일섬유(1984. 6. 11. 노조설립), 효성물산 조합원 10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 다음 날인 6월 23일 효성물산, 선일섬유, 가리봉전자, 세진전자, 청계피복 노조 등의 노조위원장과 대우어패럴 노조의 간부가 회합하였고 노조간부들을 포함한 긴급확대회의 등이 진행되어, 이 자리에서 각 노조는 6월 24일 긴급조합원 총회를 열고 동맹파업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여타 민주노조들도 가능한 방식으로 이 연대투쟁에 참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 6월 24일 오전 8시 경 대우어패럴 노동자 350여명이 파업을 시작한 것을 신호로 오후 2시 효성물산 노조원 4백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였고 같은 시간 가리봉전자 노조원 5백여 명, 선일섬유 노조원 70여 명 등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구속된 김준용 위원장 등 노조간부의 석방과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노동악법 폐지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회사 측은 단전과 단수 조치를 단행했으며 경찰은 이들 공장 일대를 철통같이 경계하였다. 이에 공단 일대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다.
- 6월 25일 남성전기 조합원 3백여 명이 오후에 농성을 벌이고 세진전자 노조원 250여 명, 립코리아 1백여 명이 지지 철야농성을 하는 등 연대투쟁은 7개 업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학생 및 재야의 지지도 이어졌다. 즉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민통련) 등 22개 단체에서 지지 농성이 있었고 6월 26일 오후에는 서울대생 2명이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대우어패럴 맞은 편 협동봉제 공장에 올라가 지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비롯해 학생들의 지지 시위가 이어진 것이다. 경찰들의 공포 분위기 조성파 음식물 차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탈진과 실신 그리고 병원후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우어패럴 농성시위대는 100여명으로 줄어들고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는 보복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자진해산했다.

- 6월 28일에는 부흥사노조원 120여명이 연대파업에 돌입했으나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한 관리자와 남성사원들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해 80여명이 강제사직서를 쓰는 등의 탄압을 받았다. 대우어패럴에서는 노사간 협상이 6월 28일 있었으나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회사가 거절함으로써 30분 만에 결렬되기도 했다. 마침내 6월 29일 회사측이 동원한 폭력배와 사복경찰이 대우어패럴 농성장에 투입되어 농성을 강제해산시켰다.
- 6일간의 구로지역 연대파업은 구속 43명, 불구속 입건 38명, 구류 47명, 그리고 7백여 명이 해고 및 강제사직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구로연대투쟁은 기존의 소그룹주의, 씨클주의 노동운동의 한계를 실천적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지역노동운동론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노동운동을 단지 경제적인 요구에 국한시켜 왔던 기존의 운동노선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의 본령이 정치투쟁임을 선언하며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실천적 계기가 되었다.

3. 참고자료

- 김용기, 박승옥 엮음, □□한국노동운동논쟁사-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학사, 1989, pp.199
- 서울노동운동연합 엮음, □□선봉에 서서-6월노동자연대투쟁기록□□, 돌베개, 1986.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1. 사건일자 19850825-19850825

2. 사건내용

- 1985년 6월 구로연대파업 이후 지역노동자 소그룹들 간에 정치투쟁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중정치조직(MPO)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자연대투쟁연합>(대우어패럴,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부흥사, 청계피복 등 대우어패럴연대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결성),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1985년 4월 경인지역 노동운동가들이 결성),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구민추)>(구로지역의 성원제강, 한국음향 등) 등 4개조직의 연합으로 <서울노동운동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 1985년 8월 25일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선언/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에 민종덕, 부위원장에 이육순, 사무국장에 이봉우가 선출되었다.

- 이후 <서노련>의 활동은 ‘삼민헌법 쟁취’, ‘생활임금쟁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삼민헌법 쟁취’는 1985년 10월 5일 여타 노동운동단체들과 연합하여 결성한 <전국노동자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쟁취’는 1985년 11월 18일 조직 산하에 구성된 <생활임금쟁취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 <자료> 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선언(1985. 8. 25.)

우리는 오늘 노동자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진정한 주인이며, 노동자가 억압받지 않는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의 궁극적 과제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철저히 유린되어 왔다. 특히 80년 광주민중의 민주화투쟁을 짓밟고 올라선 군사독재정권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독점재벌과 결탁하여 ‘농산물수입정책’과 ‘임금동결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70년대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선배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통하여 생존권요구투쟁을 전개해왔으나 개별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통해서만 독재정권의 폭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우리들은 노동악법의 태두리를 과감히 벗어나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복구하였으며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와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연합’을 결성하여 연대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우어패럴을 중심으로 한 6월 노동자연대정치투쟁은 우리 노동자들이 각성하여 단결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어떠한 합법적 민주노조도 용납하지 않는 현재의 탄압상황 아래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조직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노동대중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였다.

이에 우리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의 결성을 통하여 모든 민중·민주운동 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이 땅의 일천만 노동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리들이 나아갈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3. 참고자료

- 김용기, 박승옥 엮음, □□한국노동운동논쟁사-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화사, 1989, pp.185-186
- 서울노동운동연합 엮음, □□선봉에 서서-6월노동자연대투쟁기록□□, 돌베개, 1986.

<서노련>, 기관지 「서노련 신문」 창간

1. 사건일자 19850907-19850907

2. 사건내용

- 서노련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기존 관제언론이 가진 자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결국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진실을 알리기보다 거짓을 유포하고, 대중을 주인으로 만들기보

다 노예로 만든다고 보았다. 이에 서노련은 민중을 주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지 서노련신문을 창간하였다.

3. 참고자료

- 서울노동운동연합, 「서노련신문」 창간호(1985. 9. 7.), p.2

<서노련> 민중덕 위원장 불법연행, 구속
(19850915-19850915)

<서노련> 민중덕 위원장 구속에 항의성명서 「정부는 터무니없이 구속한 민중덕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발표

1. 사건일자 19850921-19850921

2. 사건내용

- 서노련은 <4.12 청계노조합법성쟁취대회> 주도를 이유로 1985년 9월 15일 서노련 민중덕 위원장이 연행, 구속된 데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자료> 「성명서: 정부는 터무니없이 구속한 민중덕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1985. 9. 21.)

서노련이 대내외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민주화투쟁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려는 지금 저들 한 줌도 안되는 독재정권은 탄압의 마수를 뻗어 우리의 위원장 민중덕 동지를 구속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지난 9월 15일 새벽 자택에서 불법연행해 가더니 급기야 때지난 4.12 청계노조합법성쟁취대회건을 들추어내어 전격 구속조치한 것이다.

또한 이옥순 부위원장을 유언비어 날조죄와 불법유인물 제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류 7일을 선고하여 유치장에 가두었다. 게다가 서노련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지난 6월 연대투쟁(구로연대파업)으로 불법구속된 노동자들의 공판에서 저들의 불법재판을 지켜 볼 것을 만민에게 호소하자 공개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졸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서노련이 과거 청계노조의 과감한 투쟁을 조직적으로 흡수하였고 6월 연대 정치투쟁의 빛나는 성과를 이어받아 노동운동의 참다운 과제를 수행해 나갈 새로운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자 이에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현 독재정권은 제5공화국 역사를 압수, 수색, 절도, 연행, 감금, 구류, 구속, 폭력으로 점철시켜 왔으며, 최근 들어 장기집권의 음험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민중민주화운동에 대한 갖가지 악랄한 탄압으로 민중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광주민중항

쟁과 지난 6월의 연대정치투쟁 등에서 보았듯이 민주화투쟁에 있어 노동자의 주체적이고 과감한 힘은 아무리 약탈하게 탄압한다고 결코 꺾일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제 우리 서울노련은 노동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를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1천만 노동자의 선봉에 서서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서울노련 나아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一. 불법연행 구속시킨 민중덕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 一. 모든 구속노동자,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 一. 민중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一. 현 정권은 장기집권욕망을 포기하고 즉각 민중민주제 개헌을 실시하라.

3. 참고자료

- 서울노동운동연합, 「정부는 터무니없이 구속한 민중덕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1985. 9. 21.)

<전국노동자 민중·민주·민족통일 헌법쟁취위원회(전노삼민통)> 결성

1. 사건일자 19851005-19851005

2. 사건내용

- 1985년 10월 5일 <서노련> <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인노협)>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 <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안양3권위)> 등 4단체가 결합하여 <전국노동자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위원회(전노삼민통)>을 결성하였다.
- <전노삼민통>은 이들 각 단체들은 “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의 쟁취를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보다 강력하게 힘을 뭉쳐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노삼민통>을 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날 선언문에서 “현 정권이 장기집권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대통령 바꾸기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는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도 우리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는 민중·민주·민족통일 헌법의 쟁취만이 진정한 우리의 나아갈 길”임을 주장하였다.

3. 참고자료

- 서울노동운동연합, 「서노련 신문」 3호(1985. 10. 9.)

<고 전태일 동지 15주기 추도식 및 군부독재 타도와 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 쟁취 실천대회> 개최

(19851113-19851113)

<서노련>, 조직 산하에 <생활임금쟁취위원회> 구성

1. 사건일자 19851118-19851118

2. 사건내용

- <자료> 생활임금제 쟁취를 우리의 선언(1985. 11. 18.)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월1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가난의 고통을 겪어져 왔습니다. 허나 정부는 내년에도 우리의 임금을 동결시킬 생각만 하고 또 기업주는 광범위한 실업을 무기로 우리의 임금을 더욱 깎아내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가난의 고통을 참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곳곳한 단결로 정부와 기업주의 임금동결정책을 깨뜨리고 평균 20% 이상의 임금을 인상한 대우어패럴 등 민주노조들의 쾌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서울노련에서는 각 사업장의 임금인상투쟁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자 지난 18일 「생활임금쟁취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뭉칩시다. 서울노련의 깃발 아래!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결성

1. 사건일자 19860207-19860207

2. 사건내용

-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창립 이후 지역 노동운동조직의 건설이 일반적 과제로 받아들여져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소모임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투쟁위원회나 대중정치조직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 <성남노동자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 <인천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인천3권위)> 등이었다.
- 1986년 2월 7일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인노협)>이 <서울노동자복지협의회(노협)>와 관계를 정리하고, <인천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인천3권위)>와 연합하여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을 결성하였다.

3. 참고자료

-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창립선언문」(1986. 2. 7.)

<서노련>, <기노련> 등과 공동으로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86 임금인상 투쟁전진대회> 개최

(19860310-19860310)

<인노련>, 인천, 부천지역 노동자 500여명과 <임금인상투쟁전진대회> 개최

(19860310-19860310)

<인노련>이 발족됨에 따라 「서노련 신문」 12호부터 「노동자 신문」으로 개편

(19860314-19860314)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 분신사망 및 노동자들의 항의

1. 사건일자 19860317-19860427

2. 사건내용

- 1986년 봄 신흥정밀 노동자들은 부당한 근로조건을 철폐하고 일당 3,080원인 초임을 4,2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사업주(조춘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박영진이 분신을 통해 저항하다 3월 18일 새벽 사망하였다.

- 분신하기까지의 경과(출처: 「노동자 신문」 특보, 1986. 3. 20.)
 - 3월 7일, 10일, 11일: 박영진 동지를 비롯한 수명의 노동자들이 “일당 4,200원 쟁취”, “잔업 철야 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하였다.
 - 3월 14일: 회사는 (위 활동에 참여한) 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박영진 동지는 출근 정치 당했다.
 - 3월 15일: 남부서 잡새들이 동지들을 찾아 와 심한 폭행을 가했다.
 - 3월 17일: 회사는 동지들의 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 반으로 옮겨 버렸다.
 - 1시 15분: 8명의 동지들은 식당을 점거하여 100여 동료 앞에서 유인물을 낭독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사장의 똥개 관리자들이 각목을 들고 농성동지들을 해산시키려 하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관리자들은 분말소화기를 쏘고 모래를 던지며 들이닥쳤고 이 때 박영진 동지는 난로 석유를 옷에 뿌리며 맞섰다.
 - 2시 10분: 박영진 동지를 비롯한 5명이 “일당 4,200원 쟁취하자”, “잔업 철야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2층 베란다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 2시 20분: 관리자와 전경 30여명이 진압하러 옥상에 올라오자 10여 분간 대치하며 동지들은 접근하면 투신하겠다고 경고했다.
- 2시 35분: 박영진 동지가 베란다에 올라서서 열까지 쉘 동안 물러가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가지고 있던 성명서에 불을 붙여들고 열까지 세웠으나 관리자와 전경들이 물러나지 않자 몸에 불을 당겼다. 4명의 동지들이 불을 끄려 하였으나 관리자와 전경들이 달려 들러 동지들을 연행하였고 그 동안 박영진 동지는 불이 붙은 채 10분간이나 방치되었다. 그후 강남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8일 새벽 3시 15분경 박영진 동지는 끝내 숨을 거뒀다.
- 이후 박영진 분신사망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농성이 이어졌고, 장례식을 둘러싸고도 노동자들과 경찰 간에 격한 충돌이 일어났다.
- 1986. 3. 19. 11명의 노동자들(정해란, 정귀란, 박말희 등), 구로공단 모세미용실 점거하고 “생활임금 쟁취”, “구속자 석방”, “박영진 동지 살려내라” 농성
- 1986. 3. 22-25. <서노련> <인노련> 노동자들, 경찰의 신흥정밀 분신노동자 박영진 장례식 봉쇄에 항의하며 전태일 기념관 농성(19명 구속, 19명 불구속 입건, 32명 구류)
- 1986. 4. 27. <서노련> <인노련> 및 기타 노동운동단체 주최로 모란공원에서 박영진 열사 장례식

3. 참고자료

- 서울노동운동연합, 「노동자신문」 특보(1986. 3. 20.), 투쟁속보(1986. 3. 25.), 제13호(1986. 4. 2.),

<서노련> 노동자들, 구로공단 소재 모세미용실 점거농성

1. 사건일자 19860319-19860319

2. 사건내용

- 1986년 3월 19일, 박영진 열사 분신에 항의하며 정해란 등 서노련 소속 노동자 11명이 구로공단 오거리가 내려다보이는 모세미용실을 점거하여 '생활 임금 쟁취'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전개했으나 경찰에 의해 모두 진압, 연행되었다.

2. 참고자료

- 성공회대 사이버 자료관, <http://www.demos.or.kr>

<서노련>, <인노련> 노동자 박영진 장례식 경찰 봉쇄에 항의하며 전태일 기념관 농성
(19860322-19860322)

5.3 인천 사건

1. 사건일자 19860503-19860503

2. 사건내용

- 1985년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헌논의는 1986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불가방침을 밝히면서 민주화운동세력의 투쟁을 야기시켰다. 1986년 2월 4일 서울대에 15개대학 1천여명이 모여 '파쇼헌법철폐투쟁 및 개헌서명운동추진본부결성식'을 개최하였고 2월12일 제1야당이던 신민당과 김영삼, 김대중씨가 공동의장으로 있던 민주협(民推協)이 1985년 2.12총선 1주년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3월5일에는 민통련(23개단체)과 민주인사 303인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 선언' 발표하면서 이에 가세하였다.
- 3월 11일 신민당은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발로 '개헌헌관식대회'를 추진하여 3월30일 광주대회에는 30여만 명의 시민이 집결하였으며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 또한 잇달았다. 이에 4월 30일 전두환정권은 청와대 3당대표회동에서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민중운동진영은 이러한 청와대 합의를 신뢰하지 않았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가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를 열자 이를 계기로 인천 주안동 시민회관 앞에 학생과 재야단체, 노동자 등 민중운동, 민주화운동세력 1만5천여 명이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평, 주안 일대를 점거하고 '미제축출 파쇼타도'를 내걸고 반미반독재투쟁을 벌이며 여야간의 타협에 의한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동원 하여 이 집회의 성격을 '좌경용공세력의 체제전복적인 극렬폭력투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통일운동운동연합, 서울노동운동연합 등이 해산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었다.

3. 참고자료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3, 녹두, 1993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쟁취와 인권□□, 1986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사건: 활동가 14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 사건일자 19860504-19860506

2. 사건내용

- 서노련은 “노동3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탄압하는 폭압적인 정치상황에서는 노

동운동도 경제투쟁을 넘어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노동운동은 하나의 부문운동이 아니라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만 노동자들을 조직하려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과 투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 대중조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즉 서노련은 이전의 조합주의적인 활동과 달리 정치적 노동운동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를 위해 서노련은 서노련신문을 발간하면서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조합 결성 지원활동, 그리고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86년 3월의 가리봉동 모세미용실 점거 시위, 86년 4월의 전태일기념관 농성, 86년 5월 구로공단 일대 노동절 시위 등)등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였다.

- 이러한 목표와 활동 때문에 서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공안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었는데, 조직이 결성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민중덕이 구속되고, 이어 이옥순이 공개 수배되었다. 서노련사건은 이러한 탄압의 결정판으로 이로 인해 다수의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 관련자: 민중덕(서노련 위원장·청계피복노조위원장), 김문수(지도위원), 유인혜, 윤현숙, 이은홍(만화가), 박정애, 김순천, 김진태, 손세환, 송재섭, 유시주, 최한배, 서혜경, 노정래 등

3. 참고자료

- 민가협, 민족문제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 서울노동운동연합, 「노동자신문」 제15호(1986. 5. 24.)

<서노련>, 「5.3 인천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 발표

1. 사건일자 19860526-19860526

2. 사건내용

- <자료> 「5.3 인천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91986. 5. 26.)

1. 5.3 인천 민중집회에서 우리 노동자는 무엇을 주장하였는가?

80년 5월 미국을 등에 업고 이 땅을 피바다로 물들이며 등장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억압과 착취의 굴레에 신음하던 민중의 분노는 마침내 5.3 인천집회에서 불기둥처럼 솟구쳐 올랐다. (생략)

2. ‘서노련’은 군사독재정권 타도의 최선봉에서 투쟁해 왔다.(생략)

3. 우리 노동자에게 신민당은 무엇이었는가?

최근 신민당은 김대중, 김영삼씨의 회동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들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을 천명하였다. 연이어 총재단과 내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인천사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5월 3일 당일 연행구속된 서노련 관계자와 그 가족들까지 출두시켜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다.

우리 '서울노동운동연합'은 신민당의 이러한 제의와 태도표명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은 물론 노동운동에 적극 개입하여 싸우고, 농가부채 탕감과 양곡정책을 시정하며, 학생들의 전방입소 문제를 수렴하며,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하여 투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계층에 대하여 신민당의 투쟁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구체적 공약에 대해, 1천만 노동자와 전 민중을 대표하여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 '서노련'은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미국놈과 군사독재정권과 가진놈들을 타파하려는 노동자의 해방투쟁에 동참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누구를 막론하고 동지로 생각하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최근의 급변한 신민당의 태도변화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둘 것이 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눈에 비친 신민당의 모습은 동지였던가 적이었던가? 1천만 노동자의 처참한 가난과 생존에 대하여 침묵하고 가진놈들의 탐욕을 채워주느라 혈안이 된 군사독재정권의 무차별 해고와 폭행과 구속, 고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노동자와 학생은 폭력사용은 절제해야 한다(이민우)"며 마치 우리 노동자가 폭력과 혼란의 주범인양 거짓선전을 한 자가 누구였던가? 우리 노동자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국놈에게 아양떨며 군사독재정권과 타협하여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개헌집회를 연기시킨 자들은 누구였던가? 특히 인천집회시 군사정권의 사냥개 우두머리인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한반도에 말뚝박은 미대사관관리와 이민우 총재가 만나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시킨 집회 연기 발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단호한 투쟁과 애국학생들의 반미반독재 분신투쟁을 불순폭력세력으로 몰아붙인 민국련 회동의 주역은 누구였던가? 노동자에 대한 군사독재의 공공연한 폭행과 무장폭력과 구속, 고문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우리 노동자의 최소한의 평화적 정당방위 행위를 두고 "폭력을 쓰는 자는 동지가 아니다(김영삼)"고 나불대는 놈은 누구였던가?

흡혈귀 미국놈의 조종에 따라 전두환 살인정권과 야합하여 이원집정제를 음모하는 집단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존엄하게 묻는 바이다. (생략)

4. '서노련'은 신민당에 대하여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번 신민당의 공식청명이 노동자에 대한 기만과 형식치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서노련'은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면서 실천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 1) 신민당은 5.3 인천민중집회에 참석한 5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에 대하여 무차별하게 가해진 경찰폭력을 상세하게 밝혀라.(생략)
- 2) 노동자와 함께 하려면 민중을 학살하고 노동자, 농민의 피땀을 빼는 미국놈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식기자회견을 통하여 명백히 입장을 밝혀라. 또한 은밀하게 진행돼온 이원집정제 음모를 살살히 폭로하라.
- 3) '서노련' 활동가에 대한 불법납치 고문의 진상을 밝히고 고문의 원흉, 국군보안사령관 중장 이종구를 국회에 출석시켜 서노련과 대질시키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라. 또한 구속된 노동자와 학생, 민주시민 전원을 즉각 석방시켜라.
- 4) 노동자와 애국학생을 탄압하는, 한낱 정권안보법에 지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라.
- 5) 진정으로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과 애국학생을 위한다면 바로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되는 삼민헌법을 지지하라. 이를 실천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삼민헌법쟁취 및 5.3

인천집회 폭력 진상규명 국민대토론회 집회'를 '서노련'과 공동개최할 것을 강력히 제의한다. 단 우리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라.

우리 노동자는 신민당이 이 민족의 해방과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지에 힘찬 격려를 보냈고 동시에 국민의 공당으로서 자신이 천명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할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제의한 5가지 사항에 대하여 6월 5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5. 노동자의 투쟁 속에 승리의 깃발은 펴진다.(생략)

3. 참고자료

- 서울노동운동연합, 「5.3 인천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1986. 5. 26.)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합(남노련)> 결성

1. 사건일자 198606DD-198606DD

2. 사건내용

- 1985년 6월 구로연대투쟁을 계기로 결성된 <서울노동운동연합>의 활동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노련>이 취한 선도적 정치투쟁에 대해 그것이 대중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대중정치조직(MPO)'이라는 <서노련>의 조직방향에 대해서도 대중조직의 중요성, 즉 노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가진 그룹이 형성되었다. 즉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보다 대중적인 경제투쟁, 또 그 기초로서 보다 대중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노동운동의 당면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86년 봄의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국노동자임금인상공동투쟁위원회(전노임투)>를 출범시켰다. "최저생계비 일당 7,000원 쟁취"를 주요 슬로건으로 한 이들의 활동은 그 대중적 토대의 부족으로 인해 곧 중단되었고, 이어 지역적 토대를 갖춘 <구로·영등포 지역 임금투쟁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 활동의 결과가 1986년 6월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 <남노련>의 조직형태는 당시의 탄압적 상황으로 비공개형태를 취했으나, 사업장 단위로 노조 결성 및 임금투쟁의 과정에서, 개헌투쟁 과정에서 1986년 10월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민헌노투)>를 구성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도 수행했다. 이후 <민헌노투>는 다른 노동운동세력들과 연대하여 <민중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민민노투)>로 흡수된다.
- 주요관련자
- 유용화, 최규엽, 김영진, 이재형, 조석현, 서원기, 최동규, 이재권 등

3. 참고자료

- 민가협, 민족문제운동연구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86년 임금인상투쟁을 둘러싸고 <서노련> 계열과 <남노련> 계열 대립 <서노련>, <인노련> 내부노선 투쟁('조직개조론'과 '조직해소론' 입장 대립)

1. 사건일자 1986MMDD-1986MMDD

2. 사건내용

- 1985-6년 당시 노동운동 정치조직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 말하자면, <서노련> <인노련>(대중정치조직)을 중심으로 그 좌측에 <제현의회그룹>(전위정당)이, 우측에 <남노련>(노조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서노련>과 <인노련>은 노동조합 및 경제투쟁의 의의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면서 노동자계급의 대중정치조직(MPO)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서노련, 인노련의 입장을 비판하며 전국적 전위정당 건설을 주장한 것이 <제현의회그룹(CA그룹)>이었다.
- 서노련, 인노련은 출범 당시 맑스-레닌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상이론적, 조직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균열을 노정하기 시작하였다. 구로, 영등포, 성수, 안양 등지에서는 <서노련><인노련>의 노선이 노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 하에 노조 결성을 노동운동의 당면목표로 보아야 한다는 서노련, 인노련에 대립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이들은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합(남노련)>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은 <서노련>의 경인지역에 대한 지도력 요구, <서노련>을 중심으로 한 전위적 성격의 전국노동자조직 건설 제안을 패권주의적이고 자기조직중심적인 것으로 비판하였다.
- 1986년 임금인상투쟁에서의 노동운동 내부갈등
- <서노련> <인노련> 중심의 <전국임금인상투쟁위원회>: 「서노련신문」을 통해 선전
- <남노련> 및 경인지역 그룹, <기노련> 등이 참여한 <전국노동자임금인상투쟁위원회>: 기관지 「선봉」, 「횃불」을 통해 선전
- 그러나 이들 조직들은 노동대중조직들과의 결합이 취약했던 관계로 자신들의 노선을 대중투쟁을 통해 실천적으로 검증받을 수 없었고, 대중조직으로부터의 격리는 결과적으로 1986년 구로공단 내 신흥정밀, 대한광학, 협진양행, 나우정밀 등을 포함하여 총 276건의 노동쟁의 가운데 대부분의 가업장이 임금인상 투쟁에 실패하고 조직의 와해, 활동가들의 연행 및 해고를 낳았다.
- <서노련> <인노련>의 내부갈등 및 와해
- 대중정치조직의 의의는 인정하면서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조하자는 입장(개조론)
- 대중정치조직 자체가 잘못된 운동조직이므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해소론)
- 새로운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정립하지 못한 채 내부의 각 분파로 갈라지면서 <인노련>이 먼저 해체되고 <서노련>도 와해된다.

3. 참고자료

- 김용기, 박승욱 엮음, □□한국노동운동논쟁사-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화사, 1989,

<남노련> 교육부서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 활동가 연행, 구속

1. 사건일자 198701DD-198701DD

2. 사건내용

- <남노련>은 조직의 기초로서 구로, 영등포, 신도림, 여성사업장, 그리고 북부지역에 공장하부위원회를 두어 단위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간의 조직적 결합을 시도하였다. 한편 노동운동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가 교육부서로 만들어졌다. <노해사>는 교육 외에도 조직의 방향성 정립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조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노해사>는 약 17기에 걸쳐, 매기마다 6-7명씩, 3개월여의 기간동안 철학, 경제학, 각국의 노동운동사, 한국노동운동사,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활동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현실적 의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해내고 그러한 공동의 문제의식이 노동운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 1987년 1월 <노해사>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 구속 이후 조직의 지도부가 대거 수배상태에 놓이게 되자, <남노련>은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3. 참고자료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1970-80년대 주요노동조합 설명자료집」, pp.126-127

제현의회(CA-Constituent Assembly)그룹 사건

1. 사건일자 19870203-19870203

2. 사건내용

- 1986년 11월 20일 안기부의 수사 착수 이후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87년 2월 3일 '제현의회그룹사건'을 발표했다. 검찰조사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레닌의 혁명이론을 그대로 한국사회변혁이론으로 옮겨놓은 '강령초안' 등을 작성, 지도지침으로 삼으면서 당면한 시기의 투쟁목표를 '제현의회'소집투쟁으로 설정하고, 30여건의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 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의 발표에 따르면 1986년 5월경부터 최민, 김철수, 윤성구, 민병두 등 과거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 그룹),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사건 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레닌의 혁명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강령초안'을 작성하는 등 '제현의회 그룹' 결성을 준비해오다 1986년 8월 9일 민족민주혁명(NDR)을 통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본격 출범시키고 당면한 시기의 투쟁목표를 '제현의회 소집투쟁'으로 설정하여 이를 위한 시위선동 및 정치신문 제작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여 '제현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건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재판기록이 조작된 것이라(특히 반국가단체구성.가입과 관련하여)고 주장했다.

- 이들이 제작한 주요 문헌으로는 '혁명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일명 '기수', 1986),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가'(일명 '진군', 1986) 등이 있다. 제헌의회 그룹의 대표적인 일명 기수와 진군에 따르면 제헌의회 소집론은 "프롤레타리아트 해계모니 하에 민중의 봉기를 통한 파쇼와 제국주의 축출한 후 임시혁명정부의 수립과 함께 제헌의회를 소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CA그룹에 의해 공식화된 NDR론은 CA의 자체분화와 더불어, NL주사파와 PD파의 득세에 밀려 고전하다가 CA계열의 후신인 혁노맹과 사노맹에 의해 재건되어 1990년 초 가장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당국의 검거에 의해 와해되었다.

○ 주요 관련자

이름	소속	선고형량	직책
최민	서울대 78	징역자격정지7년	CT 및 CO 위원
김성식	서울대 77	징역자격정지5년	CT 위원, LT2위원장
윤성구	서울대 78	징역자격정지6년	CT 위원, 사무국장
민병두	성대 78	징역자격정지5년	CT 위원, LT1위원장
강석령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5년	LT 위원, 학생운동지도책
김현호	성대 79	징역자격정지2년	LT 위원, 재정담당
김찬	성대 77	집행유예	CT 사무국원
김철수	서울대 75	징역자격정지5년	CO 위원
유강근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4년	CO 위원, 자료실장
이선희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3년	CO 위원, 제국주의문제소위원회
한승권	서울대 81	징역자격정지1년6월	CO 산하 강령기초위원
이호균	서울대 78	징역자격정지2년	CO 산하 번역실장
차호정	서울대 79	징역자격정지1년6월	CO 산하 번역실원
김옥수	외대 81	집행유예	CO 산하 번역실원
하윤숙	서울대 79	집행유예	CO 산하 번역실원

* 참고: 제헌의회는 씨.티.(CT: Central Tower)'와 사상적 지도부인 '씨.오.(CO: Centrl Organ)'를 중앙기관으로 결성하였으며, 8월 초순 씨.티. 산하에 지방위원회(LT: Local Tower)를, 씨.오. 산하에 강령기초소위원회, 제국주의문제소위원회, 자료실 등을 조직하고, 책임자를 결정함.

3. 인용자료

-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 사상계 편집부, □□항소이유서: 80년대를 꿰뚫는 양심수 10인의 외침□□, 1988
- 유동렬, 「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1996
- 제헌의회그룹 사건관련자 가족 엮음, □□민중민주주의를 향하여: 제헌의회그룹 사건기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8, pp.17-25 참조
-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1988
- 편집부,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 관련 판결문

-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4부 1987. 7. 20. 선고, 87고합254, 271 병합 판결(피고인 최민, 김성식)
-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1987. 11. 11. 선고, 87노2851 판결(최민, 김성식)
-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3부 1987. 7. 20. 선고, 87고합270 판결(피고인 김철수, 유강근, 이선희, 한승권)
-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1987. 11. 19. 선고, 87노2857 판결(피고인 김철수, 유강근, 이선희, 한승권)
-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2부 1987. 7. 20. 선고, 87고합277, 269 병합 판결(피고인 윤성구, 민병두, 김찬, 강석령, 김현호)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1987. 11. 17. 선고, 87노2852 판결(피고인 윤성구, 민병두, 강석령)

<제헌의회(CA) 그룹> 사건 이후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결성

1. 사건일자 198704DD-198704DD

2. 사건내용

- 제헌의회 조직은 1986년 말경부터 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조직적으로 붕괴되는데, 1차 제헌의회의 중간지도부- 1차에서는 중앙지도부가 아니었음-가 1차조직의 중앙지도부가 구속된 후 조직을 재건하면서 2차 제헌의회조직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들은 1987년 4월 경 정식으로 '신중앙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조직명을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조직의 지도부는 박종운, 김정일 등이었다. 이 조직이 중심이 되면서 독자후보전술이 전개된다.(조희연, 1993: 176-177)
- 그런데 대선투쟁과정에서 당면정세에 대한 판단 및 전략전술적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의 결과로 노동자해방투쟁동맹 그룹은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립된다.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의 다수파는 주로 조직국 성원으로 구성되었고, 소수파는 주로 편집국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노해동에서는 「선봉」이라는 비합법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편집국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선봉」 편집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3. 인용자료

-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주의혁명 지하조직의 활동전모 보조자료□□, 1991.
- 유동렬, □□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1988

<남노련 지부대표자회의>(일명 도봉산 모임)에 참석한 지부대표 10명 구속

1. 사건일자 19870426-19870426

2. 사건내용

- 1986년 6월 이후 <남노련>은 조직, 교육, 선전, 투쟁의 각 단위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전체 조직의 성격, 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자체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격이 활동가조직에 가깝다는 인식 하에 향후의 조직방향을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두 갈래로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 하에 대중조직준비위원회(대중조직)와 정치신문팀(전위조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당국의 탄압대상이 되어 전자는 ‘전국노동자조직추진위원회’ 사건으로, 후자는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 이후 1987년 3월의 열성자 대회에 이르기까지 조직정비에 고심하던 지도부는 조직위상의 문제, 당시 확산되고 있었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선을 대회에 회부하게 된다. 대회는 조직의 30여명의 기간활동가들 모임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과거 <남노련> 조직이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혼재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조직을 활동가 체계로 재편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조직의 운영방안에 관해 각 지부의 대표자로 회의를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그것이 1987년 4월 26일 열린 일명 ‘도봉산 모임’인데, 이 모임에 참가한 지부대표 10명이 일거에 연행되었다.
- 이후 11월 최규엽, 이재형 등의 연행, 1988년 5월 조석현의 구속으로 <남노련>은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참고자료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1970-80년대 주요노동조합 설명자료집」, pp.126-127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

1. 사건일자 19870626-19870626

2. 사건내용

- 1985년 6.24 구로연대투쟁, 5.3 인천투쟁, 한미은행 점거농성 등을 담당했던 정치조직인 <서노련> <인노련>은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내부분열로 1986년 하반기 해체 상태에 들어간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노동자정치조직의 부재로 인해 개별적인 투쟁 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의 투쟁일정과 방식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실감하고, ‘노동자의 조직적 진출과 확실한 정치적 입장의 천명’, ‘일관적인 투쟁계획, 지도’를 요청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1987년 6월 26일 부평대로의 투쟁 현장에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결성되었다. 인민노련의 핵심은 86년 5월 경에 조직된 비합법 조직인 <인천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이었다. 이것이 87년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살인강간고문정권타도투쟁위원회’로 외연을 확대하게 되고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대중운동과의 결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민노련>으로 발전된다.

○ 주요관련자: 노회찬, 정태윤, 최봉근 등

○ <자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강령(1987. 6. 26.)

IV.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부천지역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인노련은 파쇼정권에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계급·계층 및 정치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특히 전민중의 정치적 통일조직을 형성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V.

1.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며, 모든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아무런 제약없이 누려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정당의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정당법 등의 악법은 폐지, 개정되어야 한다.
3. 연장근로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켜 8시간 노동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적 이유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은 금지되어야 한다.
4. 최저임금제는 작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5.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6. 취업 및 그 지속, 인사관계, 임금 등에 있어 성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7. 공영택아소를 충분히 설치하여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며, 산전산후 총 6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8.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몰아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9. 정당한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외국 농축산물 도입을 억제하며 농가부채를 일소하여야 한다. 또한 소작제도, 농지임대차, 비농민의 토지소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10. 영세상인, 도시빈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1.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의 피땀을 가로채고 민족경제를 팔아먹어 온 독점재벌은 해체되고, 기간산업은 국유화되어야 한다.
12. 직접투자, 또는 차관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수탈해 온 일체의 제국주의 자본은 몰수, 국유화되어야 한다.
13.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14. 의료보장제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15. 건물 개·보수 비용만을 부담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를 완전 일소하여야 한다.
16.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모든 반민주적 악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리는 유보조건 없이 전면 보장되어

야 한다.

17.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전투경찰 등 살인, 고문, 폭행, 불법연행, 감금을 일삼아온 반민주적 억압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18. 민중을 억압·착취하고 고문, 강간, 살인을 일삼아 온 범죄자들과 그 협조자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재산몰수, 처벌, 재교육되어야 하고, 구속된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주인사와 양심범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19. 마일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조약 및 협정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 하에서 모든 국가들과 자주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20. 미제가 강탈해간 군사작전권은 반환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핵기지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즉각 철수, 폐기되어야 한다.
21. 남북한 상호불가침 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비축소가 신속히 이루어져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22. 북한과 더불어 연방정부를 수립하여 평화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확보해나가고 완전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한다.

3. 참고자료

- 이진경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민주주의 진영의 사상과 실천□□, 소나무, 1991, pp.179-181
- 문화방송시사교양국, □□이제는 말할 수 있다-한국의 진보 3부작, 2005

노태우 민정당 대표, 「6.29 선언」 발표

1. 사건일자 19870629-19870629

2. 사건내용

- 1987년 4월 13일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무시한 전두환정권이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각계의 민주화요구가 증폭되었다. 5월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연초에 있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전두환 정권에 대한 대중의 이반은 더욱 심화되었다.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군부독재타도와 직선제개헌을 요구하였다.
- 6월10일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 대회'를 열었으며, 전국에서 약 40여만 명이 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6월 18일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신음하던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최루탄 추방대회'가 열려, 수십만 시민의 호응으로 경찰은 진압을 포기해야만 했다.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6월 29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선언 내용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 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한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복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과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사태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주재 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 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복을 위하여 책임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라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당대표 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87년 6월 30일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에 대한 「성명서」 발표

1. 사건일자 19870629-19870629

2. 사건내용

- <자료>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에 대한 성명서」(1987. 6. 29.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제의한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 시국수습 6개항의 발표를 보고,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정부, 여당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오로지 민주화를 위하여 온몸으로 싸워온 전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 여당은 시국수습 6개항의 제안을 말로써만이 아니라 즉각 실천에 옮김으로써 국민에게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등 실천 가능한 사항은 지체함이 없이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시국수습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온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제 민주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으며 국민운동본부는 위대한 민주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3. 참고자료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에 대한 성명서」(1987. 6. 19.)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공동의장, 대통령 불출마 선언 번복
(19870717-19870717)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결성, 「우리의 현실과 계획」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전국적 노동정치조직 결성 주장

1. 사건일자 19870725-19870725

2. 사건내용

- 1987. 7. 25.
 - <서노련>과 <인노련>의 와해 이후 노동운동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정치조직의 부재 속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노동자 당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계급의 전국적인 정치조직 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의 현실과 계획」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민족통일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민중권력 수립이라는 ‘삼민’의 정치적 계획과 이의 조직적 담보인 ‘전노련’ 계획을 제출.
- 1987. 11.~1988. 10.
 - 기관지 「노동자의 깃발」을 발간·배포하면서 지역단위의 조직화 및 선전활동
- 1988. 10.
 -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창립대회, 강령과 규약 확정

3. 참고자료

○ 「우리의 현실과 계획」(1987. 7. 25.) 【7-31】

○ 창간사 “전국적인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을 호소하며”(「노동자의 깃발」 1호, 1987. 11. 15)
- <삼민동맹> 결성의 목적과 주요사업, 기관지 「노동자의 깃발」의 의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글.

- 주요 내용 발췌

- “모든 사회주의자와 선진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자 당과 민중의 통일전선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사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막중한 사업은 노동자계급의 전국적인 정치조직(전국노동자연맹)을 건설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공공연한 정치적 진출을 도모하는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정치조직(전노련)의 활동을 통해서, 모든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전체민중과 연대하여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대치하여 투쟁하며 민중의 새로운 권력을 준비해 나아가는 속에서 노동자계급을 실질적인 민중의 정치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것, 공통이 실천을 매개함으로써 노동자 당의 사상적 준비와 통일을 기하는 것. 노동자 당과 민중의 통일전선의 제반 사상적 및 물질적 토대와 활동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이러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일환으로써, 우리 삼민동맹은 본 신문 “노동자의 깃발”을 통해, 첫째, 동맹의 정치적 입장과 계획을 더욱 명확히 하여 정파로서의 모습을 현실화 시키면서 노동자 당의 사상적 준비, 특히 그 대중적 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둘째, 전국노동자연맹 및 각 지역 노동자연맹의 건설과 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하며 그 활동의 구체적 방침들을 밝혀나감으로써 노동운동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며, 셋째, 타계급·계층에 대해 공통의 억압자-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공동의 투쟁을 제기하고 호소해나감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전체민중의 정치적 지도자로 훈련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신문의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의 선진부대, 7.8월 노동자투쟁의 선진투사들에게로 향해진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민중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민중권력의 수립’이라는 삼민의 이념과 강령을 선전하고, 노동자계급과 전체민중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정치권력의 본질, 그 제도와 억압기구들에 대해 그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나갈 것이다.”

○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계급의 선택”(「노동자의 깃발」 2호, 1987. 12. 6)

- <삼민동맹>의 1987년 대선에서의 정치전략과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글.

- 주요 내용 발췌

-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오랜 군부독재정권의 폭압 끝에, 지난 6월의 민주화투쟁과 7,8월 노동자투쟁의 연장선 위에서 치루어지는 선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동자계급에게도 이번 선거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독자후보를 내세워 단지 민중의 요구를 선전선동하기만 하면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부르조아 정치인들의 결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후보단일화만을 외쳐대서는 안될 것이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선거를 통한 민주적 변혁의 문제를 후보문제로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며, 투표행위 밖에 허용되지 않은 민중에게 투표에 대한 구체적 행동방침을 주지 못해서도 안될 것이다.”
- “선거를 포함하여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될 일정 시기까지의 정세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 하에서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는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정치조직 건설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 하에 현실적으로 당선가능한

후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정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요구를” 지지하기 때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요구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한 정치적 조건의 형성, 다시 말해 정치적 자유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그 개선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정치세력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계급적 요구를 확정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민주적 권리 요구 또는 정치적 자유의 내용)를 정식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양김씨의) 공약은 노동자계급과 전체민중의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공약상의 차이는 노동자와 민중이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즉 누가 당선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활동의 조건이 개선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차별성을 갖는다.”
-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치적 조건의 변화를 위해 선택(김대중에게 지지표를!)하는데 주저하지 말자! 우리의 계급적 요구를 분명히 하여 그것을 노동자계급에게 그리고 전체민중에게 적극 선전·선동하자!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계급과 전체민중의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이후 활동방향”(「노동자의 깃발」 8호, 1988. 5. 22)

- “이러한(전국적 노동자정치조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정치권 내에서의 야당활동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경향. 이미 실패로 입증된 민중정당을 붙잡고 늘어지려는 경향도 단호히 비판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만능주의. 활동의 중심을 노동운동에 굳게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노조활동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이와 반대로 모든 합법적 활동을 방기하고 음모적 조직에만 매달리는 경향. 넷째, 끊임없이 우리의 과제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절충주의적 경향. 인민노련 처럼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키려는 계획 없이 민중정당도 필요하고 정치조직도 필요하고 노동조합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끝없이 늘어놓으면서 견해의 차이를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해로운 경향이다.”
- “선거시기의 주장을 전략전술로 심오하게 이론체계화하려는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노동운동대열을 굳건하게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우리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도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인민노련>, 기관지 「노동자의 길」 창간호 발행

(19870725-19870725)

<인민노련>, 원미동 성당에서 열린 <노동기본권쟁취대회> 참여

(19870726 -19870726)

<인민노련>, <민주헌법쟁취노동자공동위원회(민헌노위)> 기자회견 참여
(19870805-19870805)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에 입당
(19870808-19870808)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중앙집행위원회,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제안, 이를 중앙위원회에 회부
(198700909-19870909)

<민통련> 중앙위원회,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안’ 부결하고 후보단일화 문제에 적극개입하기로 결정
(19870916-19870916)

<민통련> 내 선봉그룹(민중정당 결성, 민중후보 지지그룹), 비판적지지 비판

1. 사건일자 19870920-19870920

2. 사건내용

- 「선봉」의 창간시점 및 내용을 살펴볼 때, <민통련>이 김대중 씨 지지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민통련 내부에는 ‘선거를 통한 민간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세력과 ‘진보적 민중정당 결성’을 주장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87년 대선에서의 ‘독자적 민중후보 전술’이 민통련의 김대중씨 지지 결정에 따른 조직 내 비판세력의 단순한 반작용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대중과 김영삼의 후보단일화 문제는 그다지 「선봉」 그룹의 관심사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민통련과 대중들이 단일화문제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민통련, 투쟁의 전열을 새롭게 다지다 : 임시총회를 통한 임원개편과 강령채택」(「선봉」 창간호, 1987. 9. 20)
- (생략) 민통련은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기완씨, 김병곤씨 등 일부에서는 다가올 선거에 대비하여 기층 민중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낼 진보적 민중정당의 모태로서 민통련을 위치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현재의 민통련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민중운동권의 역량을 강화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내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략) 민통련 내의 진보적 민중정당 결성운동은 자본가와 구별되는 민중의 정치적 대변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민주당의 기만성을 넘어서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입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를 적극 지지·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민통련이 군부독재정권과 비타협적으로 싸울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선거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군부독재 종식,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개량주의자들의 연합과는 별도로 군부독재를 완전히 타도할 것을 천명하는 혁명적 민중주의자 연합진영의 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그에 필요한 실제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3. 참고자료

- 「선봉」 창간호(1987. 9. 20.)

<국본>, 야권후보단일화와 관련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 연석회의 개최
(19870921-19870921)

민주당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고문과의 대통령 후보단일화 회담 실패
(19870929-19870929)

<민통련> 의장단, 양 김씨 방문하여 후보단일화 촉구
(19871001-19871001)

<민통련>,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양 김씨 초청 정책질의

1. 사건일자 19871005-19871005

2. 사건내용

- 1987년 9월 9일 민통련 중앙집행위원회는 김대중씨를 비판적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하고 이 문제를 중앙위원회에 회부했다. 1주일후인 9월 16일에 소집된 중앙위원회는 내부합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제안을 일단 부결하고 대신 후보단일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의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위임했다. 9월 26일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통령후보의 민주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 10월 1-2일 양 일간에는 의장단이 두 김씨

를 방문하고 단일화를 위한 양보를 주장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합의에 의한 단일화 전망이 어두워지자 민통련 내부에서는 두 김씨가 제시하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민통련 노선에 보다 접근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 10월 5일 두 김씨를 각각 따로 초청하여 민주화에 대한 구상을 물은 정책세미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대중씨 후보추천에 하나의 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 양 김씨에 대한 민통련 정책질의 내용

- 1) 후보단일화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 최근 언론에서는 신당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후보단일화가 안 될 경우 용퇴할 생각은 있는지?

김영삼: 후보단일화 문제는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꼭 돼야하고 될 것이다. ... 김고문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고 4과전이 되는 상황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29일 김고문에게 그 말을 물어봤다.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김대중: 민주당은 동교, 상도 양쪽의 세가 똑같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몰아낼 수 있게 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간 다든지 신당 만든다든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 작년 11월에 건국대 사건이 났다. 나는 그때 그 사태를 거의 5.17 재현으로 봤다. 김영삼 총재도 없고해서(서독방문 중) 전두환씨에게 직선제만 한다면, 직선제하면 김대중이 된다고 겁을 먹으니 내가 안하겠다, 내가 이랬던 것이다. ... 그런데 금년 사면복권된 후 다시한번 대통령 나갈 의사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막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전체의 의사인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총재에게 함께 전국을 돌자, 그래서 전국민 앞에서 우리가 같이 호소하고 지지를 요구하면 야당봄도 일어나고 정치주도권도 잡고 또 단일후보하는데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도 했다. 그런데 거절을 했다. ... 건국대 사태때 불출마선언을 했더니 당시 서독에서 김총재가 김대중씨는 나이도 나보다 다섯 살 위고 사면복권되면 김대중씨가 나가도록 그렇게 권했는데 앞으로 이 태도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 ... 김총재를 만났는데 양보를 할텐데 굳이 지지하지 않아 안되겠다라고 말을 했다. ... 내가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다. 만일 군대의 눈치를 보면 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김총재는 정권을 잡으면 군을 딱 잡겠다고 했다. 그 때까지는 달래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나와 많은 견해차이가 났다. ... 국민적 지지는 유세를 통해서 국민에게 받아야 한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전국을 돌며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왜 지금 하려하지 않느냐, 내 말대로 8~9월 전국을 돌았으면 이미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난 입장일 것이다. ... 적어도 나는 노태우씨가 당선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노태우씨가 당선되는 것을 용서할만큼 이것에 매달려있지는 않겠다. 결국 김영삼, 김대중이는 국민앞에, 후보 등록 전이든 후이든 심판을 받아서 국민의 압력이 둘 중의 하나는 몰아붙인다. 그때는 내가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나한테 와서 그만두라고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노태우를 당

선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천번을 사퇴해야지.

3. 참고자료

- □□말□□ 16호(1987년 11월 1일 발행)

재야인사 「민주화를 위한 후보단일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표

1. 사건일자 19871005-19871005

2. 사건내용

- 함석헌, 김관석, 박세경, 강희남, 지선, 조남기, 안병우, 조용술, 은명기, 이태영, 이우정, 문동환, 고은, 박용길, 박영숙, 이소선, 이문영, 탁희준, 성래운, 명노근, 장을병, 고영근, 예춘호, 송기숙, 김병길, 한승헌, 김상근, 임기준, 최성목, 홍성현, 금영균, 박종기, 김재열, 조승혁, 윤응오, 문정식, 정규오, 조경대, 김호현, 조철현, 남재희, 이소라, 전계량, 강문규, 김용복 등

<민통련> 내 선봉그룹, <선봉> 2호에서 “혁명적 민주주의자의 연합을 호소한다” 발표

(19871006-19871006)

<민통련> 중앙위원회,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 결정

1. 사건일자 19871013-19871013

2. 사건내용

- <민통련> 중앙위원회는 1987년 10월 5일 김영삼, 김대중씨에 대한 정책질의 이후, 10월 13일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의장단의 직접접촉과 두 김씨 초청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확인한 끝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김대중씨를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 민통련의 이러한 결정에는 두 김씨의 후보단일화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는 현실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막판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져 단일화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민통련으로서 가능한 한 조기에 자기노선에 보다 가까운 특정인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내부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자의 입장을 약화시켜 대세에 수렴되도록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영삼씨에 대해 민통련은 “역대의 독재정권에 맞서 헌신적인 투쟁을 해온 김영삼 총재의 경륜과 각오를 소홀히 평가하지 않

는다”고 전제한 뒤 “두 김씨 합의에 의한 후보단일화가 이상적이겠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김영삼씨가 양보하는 방향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 협력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 민통련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의 일부는 민통련의 결정이 특정정파를 지지함으로써 운동의 원칙과 대의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활동공간을 축소시키고 선거라는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군부독재 타도를 위한 연합전선에 모든 힘을 집결시켜야 하는 때에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것은 이 전선을 분열시키고 결국은 와해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민족·민주운동의 목표가 특정인물을 통해 달성된다고 보는 것은 스스로 운동을 포기하는 오류이며 운동은 전체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는 식의 선택은 리는 위험하다고 본다. 게다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김씨에게 계급적, 정책적인 차별성은 없다는 게 그들의 시각이다. 설혹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선의 단일화라는 최고명제에 우선할 수는 정대로 없다고 주장한다.
- 또 다른 반대자들은 민통련의 결정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단체 대표들의 투표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대표들이 각 단체의 진지한 내부토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가지고 나간 진정한 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특정인에 대한 지지에 동의하고 있지만 민통련의 결정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비판하는 세력도 많다.(□□말□□ 16호)
- 민통련은 후보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 즉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민통련은 제도야당과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인 일부 상층지도부를 중심으로 성급한 ‘비판적지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운동 내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민통련은 연합운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파 내지는 보수야당의 외곽단체 정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리고 민통련 내부에서도 사회적 명망성을 얻고 있던 소수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각양각색의 정치적 입장과 이를 따르는 본부 주요조직의 패권주의적 지도방식은 조직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박상병, 1997, p.71)

3. 참고자료

- □□말□□ 16호((1987년 11월 1일 발행)
- 박상병,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상임집행위원 연석회의, <민통련>의 김대중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19871013-19871013

2. 사건내용

- 민통련이 김대중씨 후보추천을 발표한 10월 13일, <국본>은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후보 단일화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현 시점에서 국

민운동본부 차원의 측정후보지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두 김씨에게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되 거국중립내각 등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순수재야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말□□ 16호((1987년 11월 1일 발행)

김근태씨, 옥중메시지 발표

(19871016-19871016)

<인민노련>, 「10월 13일자 민통련의 김대중 지지선언은 명백한 정치적 과오이다」 발표

1. 사건일자 19871018-19871018

2. 사건내용

- 「10월 13일자 민통련의 김대중 지지선언은 명백한 정치적 과오이다」(1987. 10. 18.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생략) 우리는 민통련의 10월 13일 김대중 지지선언을 명백한 정치적 과오로 규정하며 이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촉구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3. ... 그런데 문제는 민통련이 군사파쇼세력의 재집권음모를 저지시키기 위해 부르조아 야당과 단결하고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데에만 몰두하여 민족민주운동과 대중의 자발적 진출을 결합시켜야 할 보다 주요한 임무를 잊거나 방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무엇이 주된 것이며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흐려있다. 민통련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남한사회 모순해결의 유일하게 올바른 방향 즉 혁명적인 개조에 대하여 대중적인 선전을 강화하고 그런 관점에서 자유주의 부르조아당의 불철저성을 폭로하고 나아가 민통련의 정당화 내지 민통련의 산하단체로서 민중정당의 창건을 추진하며 독자적 후보를 내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모두 전 민중에게 분명한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서 민족민주운동이 존재함을 알리고 그 가장 올바른 지도노선과 정책을 밝히며 대중의 지지 신뢰를 획득하여 대중을 민족민주운동의 주위로 결집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민통련은 10월 13일 선언에서, “6.29선언 이래 민중민주운동권이 후보단일화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문제 등 일상적 투쟁을 소홀히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고유의 운동을 보다 철저히 펴나가기로 결의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후보단일화문제에 몰두한 것이 잘못

이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민생문제 등 일상적 투쟁을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의 핵심은 아니다. 즉 일시적 시기가 아닌 지금에 있어서 민족민주운동의 대표적 기관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를 잊고 있었던 것, 또는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민통련의 더 큰 과오인 것이다.

4. 민통련의 10월 13일 선언은 최근 김영삼의 우익군부에 대한 투항적 굴복과 민중에 대한 배신적 언행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가장 잘못된, 졸렬한 방법이다. 김영삼의 배반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엄중히 경고하고 비판하여야 하며 그것을 김대중에 대한 지지로 대신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김대중과 김영삼의 차이는 실로 사소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등 자유주의 부르조아당과 민족민주운동과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민통련은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을 잊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우리는 86년 4월말 5.3투쟁을 앞두고 김대중이 민국련 회의에서 반미용공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여 결과적으로 군사과쇼가 5.3투쟁을 대대적으로 역선전하는 것을 도왔으며, 올해 2월에는 소위 삼비주의를 김영삼씨와 더불어 제창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7,8월 투쟁의 시기에 그가 보여준 애매한 태도는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9.26 연대 집회에서 굳이 노동해방의 깃발을 내리게 하였던 것은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한 그의 정책과 사상은 근본적으로 부르조아 자유주의와 개량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민족해방의 이념 및 혁명적 민중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즉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이라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며 설사 그가 진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독자성, 그 독자성을 기초로 한 역량의 강화를 유보해 가면서까지 그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이 다른 당파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 정치는 기본적으로 세력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 이러한 민통련의 지위, 그 역사적 임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월 13일 김대중 지지선언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조금씩 김대중 지지선언을 하여 스스로 김대중의 일 지지세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은 커다란 정치적 과오이며 전술로서는 아주 졸렬한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 김영삼에 조건을 제시하여 양자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주장을 옹호 지지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며, 그러면서 동시에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반군독전선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하고 고차적인 전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후보단일화에 한정시켜서 보더라도 조기에 김대중 지지를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어떤 적절한 시기에 민족민주운동전체를 대신하여 당당히 후보단일화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볼 때 민통련은 분명히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6. ... 우리는 민통련에 대해 먼저 10월 13일의 김대중 지지선언을 번복,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근간의 전술과 노선의 근본적인 오류를 각성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통련에 대한 우리의 지지, 신뢰와 기대는 철회되지 않을 수 없다.

3, 참고자료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정세와 실천」 2호(1987. 10. 29.)

장기표씨, 홍성교도소 수감 중 「민통련 중앙위 ‘김대중 지지선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19871020-19871020

2. 사건내용

- 「민통련 중앙위 “김대중 지지 선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홍성교도소에서, 장기표, 1987. 10. 20)

(생략) 지난 6월 이후 100여 일 동안 우리운동은 민중의 본질적 요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다. ... 민주운동세력은 ‘선거혁명’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군부독재정권의 기만성과 음모를 폭로 규탄하는 현실적 투쟁을 방기함으로써 ... 군부독재정권의 재집권 음모에 결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민통련 중앙위의 ‘김대중 지지선언’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보다 더 큰 반민중적 배신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한 투쟁적 오류는 또한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생략)

3. 민통련의 중앙위원회에서의 김대중 지지 선언의 문제

1) 상황인식의 오류

(생략)

ㄹ) 후보단일화는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특정한 지지는 오히려 단일화를 방해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부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만약에 이번 민통련의 김대중 지지 선언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한 노력으로서 표현된 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이 지지 성명이 단일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저해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진실로 이런 판단에 기초했다면 이는 민통련의 정치적 무능력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ㄱ) 설사 특정한 지지자가 필요했다 하여도, 특정한 지지성명의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바른 지지의 방법은 양 김씨에 대한 민중민주운동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반군부독재투쟁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기여할 수 있는가), 후보문제를 둘러싼 양 김씨의 대립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이 민주화투쟁에서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인물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는 특정한 지지는 내분을 가속화시켰을 뿐이다.(생략)

3. 참고자료

- 장기표, 「민통련 중앙위 “김대중 지지 선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홍성교도소에서, 1987. 10. 20)

<민주쟁취청년학생공동위원회 창립대회 및 공정선거보장을 위한 거국국민내각 쟁취 실천대회>

1. 사건일자 19871025-19871025

2. 사건내용

- 1987년 10월 25일 고려대 운동장에서 <민주쟁취청년학생공동위원회 창립대회 및 공정선거보장을 위한 거국국민내각 쟁취 실천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1987년 대선 시기 <후보 단일화를 위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천명하고 선거 투쟁에 임하기 위해 전대협, 서대협 등이 주축이 되어 <민주쟁취청년학생공동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민통련> 내 선봉그룹, <선봉> 3호에서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지지” 입장 주장

1. 사건일자 19871027-19871027

2. 사건내용

- “민중정당 결성과 민중후보로 혁명의 그날 앞당기자”(「선봉」 3호, 1987. 10. 27.)
- I.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정치적 의미 (생략) 국민운동본부는 선거를 통하여 민선민간정부를 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는 통일민주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나섰고, 민통련과 노동운동권 내의 기회주의적 분파들조차 민선민간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민중세력에게 유리하므로 김대중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여타의 혁명적 진영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생략)
- II. 당면 선거에 임하는 혁명적 민주주의자의 전술적 기초 (생략) 우리는 현 정세 하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를 통하여 무언가 ‘민주주의 비슷한 것이라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환상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전 민중에 대한 정치적 계몽사업’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거에 참가하여 군사파쇼권력과 의 흥정을 통해 민중의 혁명적 요구를 중도하차시키려는 일체의 기회주의적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모든 민주세력과 민중의 힘을 군사파쇼 타도투쟁, 미제국주의 축출투쟁으로 모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생략)
- III.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술적 대응 우리는 당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노동자와 민중진영이 지향해 나아가 할 투쟁방향은 민중의 입장을 대변할 대통령후보를 추천하고, 민중의 입장을 대통령선거와 향후 국회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제기할 민중정당을 창설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우리가 추천하는 대통령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포함하는 민족민주투쟁에 앞장 설 사람이며, 대통령이 되든 되지 못하든 민중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조직화를 불러일으키며 그리하여

군사파쇼와 미제국주의를 일소할 혁명투쟁 역량을 드높이는데 봉사할 사람어야 한다. 만약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민중진영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리 없지만, 민중을 배신하는 행동을 목격하면서도 무조건 그들을 지지하는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대안은 ‘민중의 정당, 민중의 후보추천’이어야 한다. ... 개량주의적인 민주당의 기만책동과 구별되는 민중의 정당을 건설하려는 <민중정당 결성 준비위원회>를 시급히 띄우자! 그리고 이러한 작업과 아울러 민중의 입장을 대변할 대통령후보를 추대하자! ... 우리는 오히려 현재 대통령후보로 출마해야 할 사람은 ‘선거로 혁명이 돼?’라고 힘있게 반문하면서 민중의 단결된 투쟁을 호소하는 백기완 선생이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민주정부수립’ ‘군사독재타도’를 외치시는 문익환 목사와 같은 분이라고 본다.

3. 참고자료

- 선봉 편집부, 「민중정당 결성과 민중후보로 혁명의 그날 앞당기자」(「선봉」 3호, 1987. 10. 27.)

대한민국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19871027-19871027)

민주당 김대중 고문, 대통령 후보 출마와 신당창당 공식선언

(19871028-19871028)

평화민주당(총재 김대중) 창당발기인 대회

(19871030-19871030)

<인민노련> 대의원대회: 강령을 둘러싼 내부논쟁 및 분화

1. 사건일자 198710DD-198710DD

2. 사건내용

- <인민노련>은 한국사회의 성격, 정세인식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두개의 세력(‘주사파’와 ‘비주사파’)이 결합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조직결성 이후에도 조직의 위상, 투쟁방침 등으로 둘러싸고 내부논쟁을 거듭해왔다. 강령을 둘러싼 내부 노선투쟁 과정에서 ‘정치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인민노련>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사파는 그것을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과 동렬의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 반면, 비주사파는 전위조직과

대중조직의 중간쯤에 위치하면서 전위조직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전위조직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명확해졌다.

- 창립 3개월 후 열린 1987년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장시간의 토론 끝에 정치조직(전위조직)이라는 자기규정과 민주민주정부 수립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비주사파의 정치노선이 강령개정 기본방향으로 채택되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9. 실험보험제도, 노동자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재해노동자, 퇴직노동자, 기타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12. 직접투자, 또는 차관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 수탈해 온 일체의 제국주의 자본은 몰수, 국유화되어야 한다.(삭제)19. “미·일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미국, 일본 등”으로 수정하고 기존 강령의 19, 20항 통합.(수정)20. 기존 강령의 21항을 수정하고, “또한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며, 더 이상 국내외 독점자본가와 일부 정치군인의 이익을 위해 분단상황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 추가.(수정)22. 북한과 더불어 연방정부를 수립하여 평화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확보해나가고 완전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한다.(삭제) |
|--|

3. 참고자료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정세와 실천」 3호(1987. 11. 20.)
- 이진경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인준위)> 결성

1. 사건일자 19871101-19871101

2. 사건내용

- 1987년 10월 <인민노련> 대의원대회에서 강령을 둘러싼 내부논쟁 과정에서 비주사파 그룹의 입장이 채택되자, 인민노련 내부 주사파 그룹은 인민노련을 탈퇴하여 1987년 11월 1일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인준위)>를 결성하였다.
-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의 새로운 출발에 임하여」(1987. 11. 1)

1. 우리는 왜 인노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는가

위대한 민중항전의 함성이 드높던 날 투쟁 속에 탄생한 인노련은, 오늘 새롭게 자기변신을 해나가야 할 엄중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상적 경향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간 인노련 내에서는 탄생을 선포한지 불과 며칠 만에(6.29 조치 이후), 인노련이 자신의 조직대오를 지도핵심의 결사체로 꾸려 이 시기 모든 노동자 조직운동의 지도조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정치적 대중조직으로서의 발전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주장으

로 나뉘어 효과적인 실천을 조직 전개하기 어려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양자간의 차이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고 각 부서에서는 통일적인 대중적 실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노련이란 이제 지역 내 선진노동자들의 광범한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에는 어려운 조직이 되었으며, 이제 새롭게 자기변신을 혁신적으로 꾀하지 않으면 안되는 낡은 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2차 대회를 통하여 더욱더 확연해졌습니다.

(1) 경과: 기실 인노련은 그 출발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 꾸려야 할 조직이 어떤 조직이며, 그 활동은 어떤 원칙에 입각하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크나 큰 인식의 차이를 안고서 인노련은 출발했습니다. 앞서 우리들의 기존 인노련 사업평가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인노련의 출발은 87년의 시점이 대중투쟁의 급격한 고양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당면 정세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범국민적인 반독재 민주연합전선의 결성과 연전에 참여할 노동대중의 정치투쟁단체의 창립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기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대중의 정치투쟁단체 즉 정치적 대중조직이라는 규정 속에서도 인노련은 내외적으로 인노련과 노조를 비롯한 각종 대중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인노련은 장차 어떤 조직으로 발전할 것인가, 인노련의 활동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과 담당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노련의 활동은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입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애매한 인식에 기초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자 정치투쟁의 시급성, 그 투쟁주체를 묶어세우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노련의 출발을 재촉하였고, 때문에 인노련은 당연 그 창립과정에서부터 격렬한 전투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과 아의 투쟁 속에서 전체 아군의 단결의 정도가 급격히 고양된 올해 상반기에 인노련은 앞서의 투쟁체로서의 자기규정만 가지고도 별 어려움없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범국민적인 위대한 항전이었던 6월투쟁기간동안 인노련은 적지않은 전과를 거두고 투쟁체로서의 자기위치를 잡아가기 시작했으며, 6월투쟁의 최고도의 고양점이었던 6.20에는 드디어 전투 속에 그 탄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투쟁이 한계적이거나 중대한 몇 가지 성과를 거두고 이제 그 투쟁의 열기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결속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아직 사상의지적으로나 조직적으로도 통일성이 굳건히 담보되지 못한 각개각층의 구국운동조직들은 뒷걸음치기 시작한 적에게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며 한층 더 투쟁을 고양시켜 나가기느라 투쟁의 깃발을 내리고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은 인노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이 지나고 7,8월이 되면 당연 인노련은 투쟁을 전과들을 다져서 대중조직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제 노급의 위대한 진출을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노급의 자주적 투쟁을 일으켜 세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노련 내에서는 각종의 분열된 행동이 속출하고 인노련의 항방과 임무를 놓고 각종의 사상이론적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7,8월 낮을 잃은 각 구국운동 조직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우리 1천만 노동대중은 생존권과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 시기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일으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노련은 대오내의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그 투쟁에 동참하여 떨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7,8월 위대한 노급의 자주적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될수록 인노련 내에서는 심각한 사상이론적 차이는 깊어가고 7,8월 투쟁이 한걸음 그 전진의 속도를 늦추게 되자 그 차이는 전면화되고 제반조직활동의 표면에 등

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론적 차이는 아직 명백한 실천에 입각한 각기 상이한 입장의 재검토 및 재평가가 전제가 된 연후의 입장의 차이이기 보다는, 어느 한쪽이 자신의 주관주의적 정세관과 조직론을 강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그 차이의 구체적 내용은 후술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일보전진하는 인노련, 투쟁 속에 성숙된 선진노동대중을 대오 내에 광범하게 인입하고 그들 대중에 입각한 그들의 자신의 자주적인 투쟁을 추동해내는 인노련의 상을 확연히 정립해야 할 시점에 인노련내의 사투는 주관주의적 사상이 전면에서 드러나고 그에 입각한 사상적 혼란을 거듭하면서 대중을 대오 내에 끌어들이지도 가장 바른 선전선동을 수행하지도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노련은 반미반독재투쟁을 대중적으로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대오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인천지역의 모든 활동가(대중)의 효과적인 사업의 통일성, 패기 있는 사업발전을 이루게 하는 데에 심대한 장애로 되었으며, 이제는 이를 철저히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을 다지지 않는다면 실로 엄청난 후과를 치를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장애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그 과정으로 되었던 것이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굳건한 혁명적 사업작풍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사상의지적 통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마치 콩밭에서 감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대회의 준비과정이나 대회를 통하여서도 그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회까지의 경과가 말해주는 바 결과는 분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통일된 조직활동도 수행하기 힘들며 오히려 상호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입각하여 각자 자신이 믿는 사상이론에 따라 대중 속에서 실천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우리 운동은 몇가지 큰 사상이론적 갈래에 따라 우선 비슷한 사상이론적 경향을 가진 제반 실천단위들이 계통적으로 결합하면서 점차 그 통일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인천이 아닌 수도권의 다른 지역이라도 우선 비슷한 사상이론적 경향을 지닌 각 단위들이 같은 지역 내의 심대한 사상이론적 차이를 가지는 단위보다도 선차적으로 통일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2) 우리의 결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한 사상적 혼란을 안고 한 묶음 아래 사업을 단일하게 전개해 나가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호의 차이의 확인이나 통일화 작업을 논투 속에서만 혹은 논투 위주로 찾아나갈 때, 대중은 더욱 더 심대한 사상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다시금 대반격을 시도하는 적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제 상호는 각자 자신의 사상이론에 입각하여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중에 대한 헌신적인 실천, 각자의 원칙에 입각한 대적투쟁을 전개함에 의해서만 진실로 그의 타당성 및 생활력은 입증되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통일을 모색하는 가장 올바르고 유일한 방침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린 판단의 근거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인노련)는 지금 시기 어떠한 조직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며 그 현실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견의 차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한 조직은 제반 운동조직들을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조직, 중심조직이라고 합니

다. ... 그 조직의 성격은 '지금 시기 지도핵심의 단일한 조직체'이며 모든 서클적 분산형태를 극복하고 그 상위에서 그들을 묶어세우고(해체를 통해), 전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대중에 대해 공공연한 정치활동을 조직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장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시기에 그 조직형태는 반합법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입장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중대한 몇 가지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전위조직의 발전의 전망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구국운동이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 구심적 전위조직을 내와야 한다는 것은 벌써 몇 해 전부터 제기되었던 우리 운동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심적인 전위조직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위조직답게, 자체로 자유자재로 약술지도를 수행하며, 어떠한 적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도 자신의 역량을 보존하며, 오히려 대오를 장성강화시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지도핵심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의 결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ㄱ)사상의지적 통일을 확고히 하고 ㄴ)대중에 깊게 뿌리내리며 ㄷ)60여년 우리 혁명사에서 그 생활력이 입증된 혁명적 전통을 알차게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직운동이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는 가장 혁명적인 길 중의 하나가 전위조직을 통일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대중투쟁의 성숙 속에서 전위조직 건설의 전망이 한층 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위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지도핵심의 즉각적인 결집 혹은 예비적인 조직적 구심을 성급히 형성시키려는 모든 견해에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운동현실은 앞서 지적한 '전위조직 건설의 원칙'상 모든 조건이 아직도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몇 개의 분파가 그 이론실천적 차이를 심각히 노정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운동의 전위적 통일의 기운도 아직은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 이 분파적 난립의 심각한 양상은 각 분파나 각 실천그룹의 지도핵심을 한 조직틀에 묶어 민주집중제에 따라 실천해보자고 하여 해결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 다음으로 앞서 제시한 중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의 오류는 지금시기 대중조직의 발전적 요청을 파악할 때 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기초하고 있기 보다는 자신들의 주관적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시기 대중조직의 발전은 반미반독재 투쟁을 더욱더 통일적으로 분명히 수행하기 위한 노동자의 대동단결을 절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반합법적인 정치적 대중조직으로의 발전적 요청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아직 구심적 전위조직을 통일적으로 내오는 사업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노동자계급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드높이기 위한 노동대중의 정치조직 건설에 대한 요구입니다.

[...]

둘째: 우리는 조직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심각한 차이 뿐 아니라 정치노선상에서도 심대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노련을 중심조직 혹은 지도조직으로 보는 견해'는 그 사상적 뿌리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협애한 계급이기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정치노선상에 있어서는 주관주의적 전략전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동지들은 노급의 당면혁명에 대한 사상을 민족해방운동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마치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적용해야할 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전연 극복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최근에 들어서서는 노련의 각 부서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심대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

(3) 독립의 과정과 반성해야 할 점

대회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상호간의 차이 및 그 실천적 의의, 앞으로의 향방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장시간에 걸친 기존의 사업평가에서 시각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노련이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상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와 곤혹스러운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서 제기한 '인노련을 지도핵심체'로 규정하는 동지들이 이미 대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사천리로 자신의 입장을 표결을 통하여 관철시켰습니다. 해산안은 부결되고 인노련을 공투의 장으로 성격전환시키자는 논의도 묵살되었습니다. 대중조직적 지향을 갖고 출발한 노련을 진위적 지향의 노련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규약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치노선도 그 동지들의 주장에 따라 강령 개정으로 반영되고 하반기 사업방침도 그러하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도 인노련이 이제 이 차이가 난 양 그룹이 공존하여 발전하는 대중투쟁의 요청에 부응하고 대중조직으로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기에는 낡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탈퇴 이외의 길밖에 선택의 길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동지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시켜 표결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을 때 그것은 곧 사실상 조직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 동지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제반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피엠오가 우리 운동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조직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참된 자세로 새 출발의 대오에 주어진 의식을 가지고 동참합시다. 우리의 독립은 곧 발전입니다.

3. 참고자료

-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의 새로운 출발에 임하여」 (1987. 11. 1)

후보단일화 촉구 서명파 의원(박찬중, 조순형, 홍사덕, 이철, 허경구) 소속정당 탈당

(19871106-19871106)

성균관대 중심으로 <경인지역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 학생추진위원회> 결성식

(19871111-19871111)

<백기완 선생 대통령후보 임시추대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871111-19871111

2. 사건내용

- 1987년 11월 11일 오후 7시 백기완 선생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민중결의대회가 1천 5백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개최되었다.
- 먼저 추대위 임시위원장 이애주 교수의 인사경과보고가 있었고, 제1부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경인지역민민학련>, <제3세대당> 등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
- 그리고 이어 2부에서 백기완 선생 후보추대 노동자위원회,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민주가족위원회, 카톨릭청년학생위원회의 결성보고 및 참여선언이 있었다.
- 대회 종료 후 각 부문별 임시위원장들은 임시연락사무실에 모여 백기완 선생의 사면 복권 등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농성할 것을 결의하고 민중미술협의회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중대표 대통령후보 전국추대위원회 발대식 및 백기완 선생 시국대강연회> 개최

1. 사건일자 19871115-19871115

2. 사건내용

- (구)서울고 자리에서 <민중대표 대통령후보 전국추대위원회> 개최. 전국추대위원장 이애주(서울대 교수) 선출.

<백기완선생 대통령후보추대 청년위원회>, 「김근태선배님께 드리는 글」 발표 (19871115-19871115)

<학살원흉 노태우 집권 분쇄를 위한 학생투쟁연합> 결성

1. 사건일자 19871118-19871118

2. 사건내용

- 민통련과 전대협의 '비판적 지지론'을 반대하고 후보단일화론을 주창한 서울대, 외대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17개 대학 대표자들, 건국대에서 <학살원흉 노태우 집권 분쇄를 위한 학생투쟁연합> 결성.

<민통련>: <김대중 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871120-19871120

2. 사건내용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은 각계인사 3,000여명과 함께 <김대중 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백기완 민통련 부의장,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
(19871123-19871123)

<수도권지역 노동자 선거대책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871123-19871123

2. 사건내용

- 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기존 보수정치세력에 대응하여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옹호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노련>, <경수노련>, <인민노련>, <서준위>, <인준위> 등이 연대하여 <수도권지역 노동자 선거대책위원회> 결성.

<민통련>, 「백기완 선생의 대통령 출마에 관한 민통련의 입장」 발표
(19871124-19871124)

<민중대표 백기완 선생 선거운동 전국본부(백선본)> 발대식 개최

1. 사건일자 19871125-19871125

2. 사건내용

- 동국대에서 <민중대표 백기완 선생 선거운동 전국본부(백선본)> 발대식 개최.
- 백기완씨는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문 발표.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후보단일화 주장하며 <인천지역선거투쟁연합> 발족에 참여

1. 사건일자 19871127-19871127

2. 사건내용

-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참가한 <인천지역선거투쟁연합>이 단일화를 표방하며 발족.

<서울지역 비상학생협의회(서비협)>: <노태우 집권분쇄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 개최

1. 사건일자 19871127-19871128

2. 사건내용

- <서비협> 17개 대학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노태우 집권분쇄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 개최.

<백선본>, 보라매공원에서 <시국대강연회> 개최
(19871129-19871129)

대학생들, 양 김씨 집과 평민·민주당사에서 후보단일화 촉구 농성

1. 사건일자 19871201-19871202

2. 사건내용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청년학생들, 양 김씨의 집과 평민·민주당에서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노동자 박응수, 야권후보 단일화 주장 분신

1. 사건일자 19871205-19871205

2. 사건내용

- 노동자 박응수, 야권후보 단일화를 외치며 분신 자결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 쟁취 범국민결의대회> 개최

1. 사건일자 19871206-19871206

2. 사건내용

- 30만여 군중이 집결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 쟁취 범국민결의대회>개최.

<단일화 촉구 비상국민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 명동성당 및 평민·민주당사 농성

(19871206-198712DD)

백기완 대통령 후보 TV 유세(2차)

1. 사건일자 19871208-19871208

2. 사건내용

- 「군정을 끝장내야 우리가 산다」(TV 연설문)

난 오늘 노태우씨에게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도대체 노태우씨가 쓰는 그 정치자금 어디서 난거요? 출처를 대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 오늘의 선거판을 망쳐 놓느냐 하고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이니 노태우씨는 마땅히 그 선거자금의 출처와 그 총액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한테 경고합니다. 재벌 되시는 여러분! 재벌들이 부정해서 돈벌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좌우지간 그건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노태우씨에게 돈을 대준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민주연립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내 살살이 조사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작정이니, 내 경고 해드립니다. 절대로 정부여당에 정치자금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한테 경고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애국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 자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째서 한 정권의 사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민중들의 열망이 모든 국민을 위해서 집약되는 이 찰나에, 국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양심을 발휘해서 절대로 한 정권에 앞장선 노 후보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니다.

또 이번 선거판에 미국한테 경고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큰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적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독재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노태우씨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환경을 만든다고 할 것이면, 미국이 한반도에 들이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민족, 양심세력의 전면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청와대 저거 원부입니다. 저거를 대통령이 사는 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비록 가난하지만 도시락에 깎두기라도 넣고 가서 먹고 노는 민중의 놀이터, 놀이마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 나랍니까? 국민여러분의 나라인데 사실상 여러분을 억압하는 독재세력, 고등관료들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싸그리 고치고 청산을 해가지고, 정말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백선본> 외 13개 단체: 「민주세력의 대연대를 위한 우리의 요구」 발표

1. 사건일자 19871210-19871210

2. 사건내용

○ 「민주세력의 대연대를 위한 우리의 요구」(1987. 12. 10.)

1. 비상정치협상회의에 임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아래 사항을 새로이 출범하는 민주정부의 기본과제로 수락해야 한다. 가. 독재잔재의 철저한 청산, 나. 민중생존권의 완전한 보장, 다. 민족자주권의 확립, 라. 평화적 민족통일의 추진
2. 양 당의 두 총재는 국민의 여망인 범민주세력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민중세력과 함께 민주연립(연합)정부 수립의 방안에 합의하여 범민주세력의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 합의하여야 한다. 민주연립(연합)정부 수립에 대한 대강의 원칙이 선다면, 양당과 범민중 세력 3자간에 민주연립(연합)정부 수립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실질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3. 이를 위해 양 당은 단결하여, 함께 노태우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국민과 함께 나서 총력을 다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또한 집권에 급급하여 반민주세력과 야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협상참가후보들은 이상의 3개항을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

3. 참고자료

○ 백선본 외 13개 단체, 「민주세력의 대연대를 위한 우리의 요구」(1987. 12. 10.)

<전대협>: KBS별관 점거농성 사건

1. 사건일자 19871211-19871211

2. 사건내용

- 전대협 소속 대학생 KBS별관 점거농성 사건. 정화려(한양대 총학생회 기획부장) 등이 12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KBS의 편파보도에 항의하여 별관을 점거 농성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백기완 대통령 후보, 사퇴 의사 발표

1. 사건일자 19871212-19871212

2. 사건내용

- 독자출마한 민중후보 백기완후보는 군정종식이 시대의 대의임을 분명히 하고 양김씨에게 단일화를 촉구하였다. 민주당 김영삼후보는 이를 승락하였으나 평민당 김대중후보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단일화가 무산되었고 이에 백기완후보는 대학로에서 개최된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쟁취를 위한 국민총궐기대회>에서 민주대연립 시도 좌절을 밝히며 후보 사퇴를 발표하였다.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항의농성 사건

1. 사건일자 19871216-1987121

2. 사건내용

-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갑구 투표도중 부정투표함 밀반출사건이 일어나 시민과 학생 수천명이 투표장소인 구로구청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사건. 투표가 한창 진행중이던 이날 오전 11시경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측이 부정투표함을 식빵상자에 감춰 밀반출하던 중 한 아주머니의 제보로 이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 오후 1시 30분경 투표위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청 3층의 선관위 사무실로 몰려간 시민, 학생들에 의해 투표함 1개, 붓뚜껍 60개, 새 인주 70개, 정당대리인 도장, 인주가 묻어 있는 장갑 6 쥘레, 백지투표용지 1,506매가 발견되고 붓뚜껍에서 인주가 선명하게 붙어나와 방금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5천여명의 시민, 학생들은 문제된 투표함의 공개개봉을 요구하는 한편 오후 4시경 부정투표에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 이후 연일 수천명의 학생, 시민이 몰려들어 '부정선거규탄대회' 등을 열며 밤샘 농성을 하자 정부당국은 18일 오전 6시경 4천여명의 무장경찰을 투입,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며 전면 진압 작전을 개시, 2시간여 만에 1,034명의 농성자를 연행하고 그중 208명을 대통령선거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방화 등으로 구속했다.
- 이날 2천여 농성자들의 최루 거점이었던 5층 옥상은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양원태 씨 등은 건물에서 추락,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심한 구타와 직격최루탄에 의한

부상자, 전신화상자가 속출했다.

- 구로구청부정투표사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대한 전두환정권의 무자비한 진압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으나 선거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야권과 민주세력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채 파묻혀졌지만 이후 노태우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준 사건으로 기억된다.
- 관련자
- 서울대생 양원태 등 다수의 부상자 발생.

3. 참고자료

- 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피해자가족협의회,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투쟁 백서□□(I), 1988.1.17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8712DD-198712DD

2. 사건내용

- <백선본> 실무세력, <전국농민협회> <전국기독교청년협의회>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서울노련)>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등이 연대하여 결성. 위원장은 <백선본> 그룹의 정태윤이 맡음.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제13대 대선 부정의혹 제기 유인물 배포

1. 사건일자 19871223-19871223

2. 사건내용

- 「부정선거, 부정집권 군사독재 타도하자!!」

국민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어 18일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 <구로구청 농성사건>을 아십니까? 투표마감시간 전인 6시가 되기 이전에 투표소를 빠져나가는 경찰차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에 의해 발각된, 사과 껌깍으로 위장된 4개의 부정투표함! 이는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만천하에 드러내어준 결정적인 증거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1만 여 명에 가까운 서울 시민들, 특히 구로지역의 시민들은 즉각 항의농성에 들어갔고, 주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노태우의 부정 집권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투쟁을 벌여나갔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은 자신들의 부정선거 책동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온갖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엄연한 부정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날조하여 전 관계언론을 통해 보도하도록 했고, 사과상자로 위장했던 것을 조금 더 빨리 개표하기 위

해 신고 나가던 중이었노라고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로 은폐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태에 아랑곳없이 농성투쟁 시민들의 결의가 더욱 솟구쳐 오르고 전국적으로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군사독재는 선거기간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숨겨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어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강제진압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8일 오전 6시 10분부터 시작된 저들의 폭력진압은 말 그대로 구로구청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랄탄과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실신한 사람들을 30분 동안이나 쇠파이프와 군화발로 짓이기고 두들겨 패는 만행으로 100여명이 넘는 부상자를 속출시키면서 농성시민의 정당한 투쟁을 강제해산 시켰던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은 폭력진압만으로는 자신의 부정선거범죄를 감출 수가 없고, 오히려 의혹만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뻔뻔스럽게도 ‘유언비어날조’ 운운하는 흑색선전을 대대적으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08명을 구속시키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구로구청 부정개표함 발각사건이 허위이고 날조라니!!! 16일 오후부터 18일 아침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하나 빠짐없이 지켜보았던 구로지역 주민들에 가서 이 말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군사독재정권의 부정선거책동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로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군사독재정권의 부정선거책동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저질러진 엄청난 폭력에 치를 떨면서 군사독재를 때려 부셔야 한다는 절규만이 울려나올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날조라고 한다면, 군사독재는 무엇이 두려워 정부투표함을 공개적으로 현장에서 개봉하는 것을 거부했겠으며 지금도 인근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경찰을 동원 구로일대를 공포분위기로 만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옛 속담처럼 <구로구청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전국 수 백개의 투표장에서 발각되었던 각종의 부정선거사태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며 더구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현 정권의 조직적인 선거부정책동이었음을 똑똑히 알려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선거 날 훨씬 전부터 저들이 얼마나 엄청난 부정선거책동을 저질러왔는가를 집집마다 뿌러지는 금품과 선물세트, 관제언론과 심지어 국민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노태우 집권을 음으로 양으로 강요해왔던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았던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모든 행정체계와 이들의 통제 하에 있는 언론들, 그리고 국고와 재벌들의 막대한 금력-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선거책동과 이것만으로는 모자라 개표 때까지 조작과 부정을 자행하여,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광주학살원흉 노태우가 당선되도록 만든 현 군사 독재정권과는 더 이상 그 어떠한 합의나 협약도 필요 없으며 오직 힘만이 필요하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명동성당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부정선거 자행하는 군사독재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이 명확한 이상,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찬 투쟁으로 군사독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 이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군사독재를 타도하는 투쟁을 누가, 어떻게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 민중진영이 제시했던 민주연립정부 수립협정을 통한 전 민주세력의 단결이라는 방안을 끝내 거부하고 자신들의 집권야욕에만 매달렸던 그래서 노태우의 당선에 분명히 일조했던 보수야당의 양 김씨에게 이 임무를 또 다시 맡겨야 하겠습니까? 부정선거로 노태우가 당선된 지금도 말로만 <군사독재타도투쟁>을 외칠 뿐이지 군사독재정권의 경찰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하는 국민들의 뒤에 처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김대중)라거나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번

에 못 이룬 군정종식을 이루겠다(김영삼씨)”라면서 노태우의 집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투쟁의 대열에서 발을 빼려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양 김씨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가장 피해받고 고통받아 이들을 없애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우리 민중이 바로 주체가 되어 나서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킬 수 없음을 똑똑히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양 김씨에게 우리들의 운명을 다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나섭시다! 양 김씨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전체 민중진영이 하나의 독자적인 진영으로 결집하고 이 위에 모든 민주 세력을 연대시켜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합시다! 나아가 우리 민중이 중심이 되어 군사독재타도투쟁에 나서는 모든 민주세력을 함께 참여시키는 임시연립정부를 수립하여 찬란한 민중시대를 앞당깁시다!

1. 부정선거, 주정집권 군사독재 타도하자!
 2. 양 김씨는 사죄하고 군사독재타도투쟁에 즉각 동참하라
 3. 군사독재타도하고 임시연립정부 수립하자!
- (1987년 12월 23일 민중후보 선거운동본부 및 민중정당 결성 추진위원회)

<새정치추진모임> 결성

1. 사건일자 19871230-19871230
2. 사건내용
 - 1987년 12월 30일 제정구, 유인태, 최열 등이 반군사독재 연합전선을 주도하기 위한 대중정당을 목표로 <새정치추진모임> 결성. 1960-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인사들이 모여 만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이 주축이 됨.

<신당추진지역협의회> 1차 회의

1. 사건일자 19880104-19880104
2. 사건내용
3. 참고자료
 -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대동단결로 단일정당 건설하자”(1988. 1. 11.)

<범민주 정치세력 통합추진을 위한 준비모임>: 「범민주 정치세력의 통합을 제안하며」 발표

1. 사건일자 19880115-19880115

2. 사건내용

○ 「범민주 정치세력의 통합을 제안하며」

우리 민주세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싸워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좌절된 데 대하여 깊은 반성과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다. 군부독재와의 싸움에서 민주세력이 단결을 이루지 못할 때 결코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세력은 암울한 오늘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소한 견해 차이를 떨쳐버리고 대동단결하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우리는 군부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제야당을 군소정당화하여 분열통치하려는 보수연합구도를 파탄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군부독재세력간의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여 민주대연합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국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배반한 채 부정선거로 권력을 차지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군부독재정권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민정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군부독재정권 종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3. 우리는 기회주의적,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인 기존 정당으로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할 수 없으며 광주민중항쟁의 해결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 및 조국의 평화통일 등 시대적 과제를 결코 실현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당정치가 국민의 지지를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진정한 민주화의 요체는 국민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 믿는다. 지난 40여년 동안 독재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우리 국민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해온 우리 민주세력은 온 국민과 함께 올바른 정치질서를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5. 우리는 모든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범민주 세력 통합 추진협의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은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거듭 호소한다.(1988. 1. 15. 범민주 정치세력 통합추진을 위한 준비모임)

<민주국민회의(가칭) 결성준비위원회>: 「야권통합과 쇄신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 발표

1. 사건일자 19880116-19880116

2. 사건내용

○ 「야권통합과 쇄신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의 견해」

양 김씨가 주도해온 보수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온 국민의 열화같은 후보단일화 요구를 끝내 외면한 채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기 짝이 없는 동시 출마의 도박을 강행함으로써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던 군정종식의 희망을 무산시켜버린 어이없는 범죄적 과오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분열에 주된 책임이 있는 세력이 그 죄가를 뉘우치고 자숙과 인책의 빛을 보이기는커녕 또 다시 아전인수격으로 ‘국민과 재야의 지지’를 내세우면서 명분 없는 분당사태의 고착화와 자파세력의 유지에만 급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보수야권은 군부독재 세력과의 또 하나의 결전장인 총선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적전분열의 난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및 신당 추진세력을 포함한 범민주세력의 모든 정당, 정파가 이번 총선거를 통하여 현 집권 세력의 비대화와 일단 장기집권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아래 일치단결하여 반독재연합전선을 결성하는 것만이 실추된 국민적 신당을 회복하고 빈사상태에 바진 민주화의 희망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활로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야권통합과 쇄신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수야당은 분당 이전의 통합야당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던 통일민주당의 분당사태와 그에 잇따른 평화민주당의 창당은 양 김씨의 동시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한갓 책략이었을 뿐 아무런 대의명분이 없는 반국민적, 반역사적 과오였음이 이미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위 분당사태는 원칙적으로 백지화되어야 하고 보수야당은 분당 이전의 통합야당으로 무조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 양 김씨는 단일화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양 김씨는 동시출마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저버린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야당 지도자의 지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통합야당은 또 다시 양 김씨의 독단과 전횡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저한 민주방식에 의하여 운영되어야만 한다.

3. 분열주동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야권을 분열시키고 양 김씨의 동시출마와 상호비방, 적대행위를 부추기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한 세력 중 그 과오를 반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야권통합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

4. 신진민주세력의 대폭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통합 야권은 신진민주세력의 대폭적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체질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구 야당세력과 신당 추진세력 사이에는 이 같은 정신에 입각한 통합 또는 연합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범 민주세력의 각 정당,정파는 이상의 4대 원칙에 따라 야권의 통합과 쇄신을 이룩하고 총선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야권통합 협상회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1988년 1월 16일. 민주국민회의(가칭) 결성준비위원회 / 계훈제(전 민통련 부의장), 박형규(목사, 전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홍성우(변호사, 전 국협실행위원장), 조영래(변호사, 전 국협대변인), 정호경(신부, 가농전국기도신부), 김동완(목사, 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우재(한국농어촌사회문제연구소장), 이재오(서울민중연합의장, 전 서울민통련 의장), 정성현(가농 사무국장), 명진(스님, 개운사 주지)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새정치추진모임> 3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1. 사건일자 19880116-19880117

2. 사건내용

-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새정치추진모임>은 1988년 1월 16일 대표자 회담을 통해 민중운동권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분열되어 나타나는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사소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중운동의 단일정당을 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1월 16일 3단체는 민중정당의 성격, 임무 등에 합의했고 이를 문건화했다.
- 1월 17일은 문건소위에서 작성한 문안을 검토하고 민중정당 결성과과정에서 신당의 구성을 담당할 기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1. 명칭: 당명은 공모에 의하여 결정한다. 임시명칭은 <신당결성추진위원회>로 한다.
 2. 임무: 합의한 인물로 공식적인 창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공식적인 준비위원회를 뒷받침할 실무적 준비를 갖추는 것.
각계각층 민주인사에 대한 영입교섭.
공청회·토론회 등 정치집회의 개최.
현실정치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
 3. 시기: 준비위원회 구성까지.
 4. 구성: (비율) 신추위1, 민추위1, 새정치1
 5. 준비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구성원칙
 - 범주: 1. 본 3단체 2. 그 밖에 본정당 결성에 동의하는 조직 및 개인들로 합의한 원칙에 부합되는 단체 및 개인
 - 원칙: 1. 지금까지 새 정당을 추진해온 3단체와 합의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이 참여할 의사를 가진 개인 및 조직은 가능한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 애국적 청년학생, 양심적 재야인사,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등의 범주로 통합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구성비의 원칙: 지역 10, 민추 5, 새정치5, 기타 10이내

3. 참고자료

-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새정치추진모임, 「단일정당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1988. 1. 16.)
- 「민중의 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인천지부 보고서」(1988. 2. 2.)

<새정치추진모임>: 3단체 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신당결성

추진위원회>에서 빠지기로 결정

1. 사건일자 19880118-19880118

2. 사건내용

- <새정치추진모임>은 내부 회의결과를 보고하면서, 16, 17일 회의결과대로 진행할 경우 민중정당론만 관철되면서 참여의 폭이 제한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추진모임의 구도는 <새정치>가 중심이 되어 타부분을 흡수통합하고 분열된 재야까지도 당을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는 내부의 입장차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16, 17일의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였다. 1)16일 합의된 사항은 3자의 내부적(비밀)사항으로 한다. 2)민주대연합을 위한 신당결성을 추진한다. 3)17일 결성한 추진위는 3자협의기구로 바꾸어 3자내부에 국한하고 대외적 추진은 <새정치>에 위임한다.
- 하지만 <신지협>과 <민추>는 <새정치>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표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신지협>과 <민추>는 3자가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합의사항에 양자 모두 동의함을 결의하였다. 2)<민추>와 <신지협> 양자는 <새정치모임>측의 제안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합의하였다. 3)<신지협>과 <민추>는 기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새정치모임>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3단체연석회의는 무산되고, <신지협>과 <민추> 중심으로 <신당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의 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인천지부 보고서」, (1988. 2. 2.)

<신지협> <민추> 통합하여 <신당결성추진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880125-19880125

2. 사건내용

- 1988년 1월 25일 오전 9시 기독교회관 100주년 기념관에서 새로운 대중정당의 결성을 추진해온 <신당추진지역협의회>와 <민중정당결성추진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여타 인사들을 영입하여 <신당결성추진위원회>로 출범하였다. 두 단체와 <새정치추진모임>이 1988년 1월 16일 대표자회담을 통해 민중운동의 단일정당을 결성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으나 <새정치추진모임>이 통합기구에 빠진 상태로 2개 단체가 통합하여 <민중정당결성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기자회견문 「4천만 국민여러분께 민중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건설을 알립니다」

3. 참고자료

- 「민중의 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인천지부 보고서」(1988. 2. 2.)

<신당결성추진위원회>: <민중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880129-19880129

2. 사건내용

- 1988년 1월 25일 <신당추진지역협의회> <민중정당결성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결성된 <신당결성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1월 29일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민중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작업에 들어감.
- 새로이 결성된 <민중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에는 정태윤이 선출됨.

<민중의당(가칭)> 창당발기인 대회

1. 사건일자 19880206-19880206

2. 사건내용

- '민중의 당'은 발기인 279명 등 2천여 시민,학생이 모인 가운데 동숭동 대학로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어 정태윤씨를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한겨레민주당> 창당발기인 대회 및 창당준비위 결성식

1. 사건일자 19880217-19880217

2. 사건내용

- 종로구 청진동 삼송빌딩 9층 강당에서 280명의 발기인명단을 발표하고 <한겨레민주당 창당발기인 대회 및 창당준비위 결성식> 개최. 준비위원장에 예춘호 선출.

<한겨레민주당>: 민주당, 평민당 통합추진 대표들과의 회담 통해 통합원칙에 합의하고, 「통합신당의 원칙을 천명한다」 발표

1. 사건일자 19880229-19880302

2. 사건내용

○ 1988년 2월 29일 <한겨레민주당>은 야당 통합추진대표들과의 회담을 통해 야권통합에 합의. 1988년 3월 2일 <한겨레민주당>의 통합원칙을 담은 내용을 □□동아일보□□에 게재함.

○ 「새 정치시대를 여는 민주, 민족, 대중정당! 한겨레민주당-통합신당의 원칙을 천명한다」

1. 우리는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한겨레민주당(약칭 한겨레당)을 출범시켰다. 우리는 또한 군부독재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고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범민주정치세력의 대통합을 당면한 정치목표로 정하고, 통합신당운동을 전개해왔다. 우리는 누차 민주·평민 양당에게 두 당만의 통합은 구태의연한 과거로의 복귀에 다름아닌 야합이며, 양당과 재야정치세력을 포함한 범민주세력의 대통합만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통합임을 강조해왔다.

2. 이에 우리는 지난 29일 민주, 평민 양당의 통합추진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통합원칙에 합의하고, 그 원칙하에 현재 진행중인 통합신당 창당작업에 함께 참여키로 했다. (1) 민주대연합의 원칙 : 새 정당은 민주, 평민 양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인 한겨레당의 3자결합에 의해 결성되며, 양당은 한겨레당의 균형있는 독자적 참여폭을 보장한다. (2) 체질개선의 원칙 : 두 김씨는 정치 일선에서 퇴진하고, 분당 및 대통령선거 패배의 주요책임자들은 자숙하며,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대거 영입한다. (3) 민주 정당의 원칙 : 더 이상 계파적 도당정치가 존속되어서는 안 되며, 새 정당은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정당임을 당헌, 당규상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규정한다.

3. 그러나 양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바,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나눠먹기식의 통합협상상태에 각별히 경계하면서, 만의 하나 양당이 재야정치 세력의 통합동참을 호도하여 구색맞추기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기만으로 변질시킨다면 우리는 이러한 야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이러한 보수야합과 맞서 일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988. 3. 2. 한겨레 민주당)

<민중의 당> 창당

1. 사건일자 19880306-19880306

2. 사건내용

- <신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및 <‘민중의 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준비과정
- 1988. 1. 16.-17. <신당추진지역협의회(신지협)>,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민추위)>, <새정치추진모임> 3단체 1, 2차 연석회의. <신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 결성 합의.
- * <새정치준비모임>(1987. 12. 30. 결성, 제정구, 유인태, 최열 등): 1960-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인사들이 모여 만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이 중심. 반군사독재연합전선을 주도하기 위한 대중정당을 목표로 함.
- * <민중정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정태윤): 백기완 선거운동 주도 실무세력, 전국농민협회, EYC(전국기독청년협의회),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등.
- * <신당추진지역협의회>
- 1988. 1. 18. <새정치준비모임>의 합의문에 대한 이의제기로 <새정치준비모임>은 탈퇴.

- 1988. 1. 25. <신지협>과 <민추위> 다수와 통합으로 <신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신추위)> 출범. 종로구 기독교회관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 「4천만 국민여러분께 민중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건설을 알립니다」
- 1988. 1. 29.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민중의 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준비위원장 정태운.
- 1988. 2. 3. <민중의 당> 창당발기인 대회
- 1988. 2. 4.-2. 25. <민중의 당> 지구당 창당
- o 1988. 3. 6. <민중의 당> 창당. 최고대표위원 정태운, 공동대표위원 송경평 등.

<한겨레민주당>: 「민주, 평민 양당에게 야권통합추진회의의 즉각 소집을 요구한다」 발표

1. 사건일자 19880307-19880307

2. 사건내용

- o 「민주, 평민 양당에게 야권통합추진회의의 즉각 소집을 요구한다」(1988. 3. 7.)
 1. 한겨레 민주당은 지난 4일 민주, 평민 양당과 야권통합추진회의를 열고 두 김씨의 정치일선 퇴진을 양해하고 5일 상호 양당의 소선거구제 단일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키로 하는 등 야권통합의 주요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양당은 그 후 이러한 합의사항을 실현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통합전망 자체를 혼미 속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국민을 없이 여기는 구정치적 작태이며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라는 역사적 명제 앞에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사리, 당략적 기만임을 폭로하면서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
 3. 우리는 따라서 양당에 야권통합추진회의를 즉각 속개해 위기에 처한 야권통합작업의 난국을 타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아울러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통합신당의 모습이 민주대연합의 체질개선한 민주당이란 통합 3원칙에 기초한 정당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양당에 재차 통합에의 진지성과 실천적 자세를 촉구한다.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인준위)> 해체

1. 사건일자 19880308-19880308

2. 사건내용

- o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의 해체를 알려드리며」(1988. 3. 8.)

[...] 인준위는 1988년 3월 8일 자신의 발전적인 해체를 결의하였습니다. 그간 인준위는 나름대로 책임감과 의욕을 갖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

역노동운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측면도 있었지만 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점,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노동대중과의 결합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해내기 위해 인준위는 자신을 해체하고 노동대중 속에 들어가 노동대중과 함께 운동을 조직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인준위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르러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자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대중과 깊게 결합하지 못한 점, 노동대중의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점, 활동을 함께 함에 있어서 견결하고 철저하지 못했던 점, 특히 인준위의 활동을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동지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반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간 인준위의 활동이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에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었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커다란 공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를 해체하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간 함께 해온 인준위 동지들은 노동대중과 동고동락하며 이 나라 민중과 민족의 행복을 위한 한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인준위는 해체하지만 인준위에서 활동했던 여러 동지들의 살아나가는 모습, 싸워나가는 모습을 여전히 지켜보아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지와 단체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동지적 애정을 보냅니다.

3. 참고자료

-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의 해체를 알려드리며」 (1988. 3. 8.)

<서대협>: <야권통합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위원회> 발족

1. 사건일자 19880311-19880311

2. 사건내용

- 우상호, 허인회, 함운경, 이남주 등 <야권통합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위원회> 결성.

<한겨레민주당> 창당

1. 사건일자 19880329-19880329

2. 사건내용

- 상임대표위원 예춘호, 대표위원 조순형, 장을병, 제정구 등 선출.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다수파와 소수파(「선봉」 편집부)의 갈등과 소수파 분리선언

1. 사건일자 19880401-19880401

2. 사건내용

- 1987년 4월경 결성된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은 대선투쟁과정에서 당면정세에 대한 판단 및 전략전술적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의 결과로 노동자해방투쟁동맹 그룹은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립된다, <노해동>의 다수파는 주로 조직국 성원으로 구성되었고, 소수파는 주로 편집국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노해동에서는 「선봉」이라는 비합법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편집국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선봉」 편집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1988년 4월 민중집권과 민중주도적 추구를 강조하던 소수파가 노해동으로부터 분리된다.(조희연, 1993:135-136) 이때 잔류한 다수파 역시도 내부에 상이한 의견그룹 간에 논쟁을 통하여 대립하나 일정한 의견의 수렴을 보게 된다. 이 다수파는 대중운동 속으로 산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1988년 말에 스스로를 해체하게 된다. 해소그룹이 발간한 팜플렛이 「우리는 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폐기하는가」였다.
- 1988년 소수파는 '사회주의를 명확히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 결성'을 목표로 <노해동>으로부터 분리하여 <사회주의노동자동맹출범준비위>를 결성하게 된다(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 준비위), 이들은 1988년 6월 조직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사노맹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사노맹 준비위의 당면임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사노맹의 조직사상적 기본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3. 참고자료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1988

<한겨레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구성
(19880408-19880408)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중의 당>(16명 출마, 0.33% 득표, 당 해산),
<한겨레민주당>(63명 출마, 1.4% 득표, 1석 진출)

1. 사건일자 19880426-19880426

2. 사건내용

-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중의 당>(16명 출마, 0.33% 득표, 당 해산), <한겨레민주당>(63명출마, 1.4% 득표, 1석 진출)

<민중의 당>: 13대 총선 이후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로 전환

1. 사건일자 198805DD-198805DD

2. 사건내용

- 16개 지부 4개 연락소, 2,300여명 회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준비위원회(사노맹 준비위)> 결성: 백태웅, 박기평 등 참여

1. 사건일자 19880601-19880601

2. 사건내용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준비위원회>는 1988년 4월 1일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으로부터 소수파가 분리선언을 하고, 1988년 6월 1일 「사노맹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준비위의 당면임무」(일명 TASK)라는 창립취지문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사노맹 준비위>는 그 후 1년 7개월에 이르는 기간을 통하여 사노맹 건설을 준비한다.
- <사노맹 준비위>는 지옥훈련 및 조직훈련을 통해 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확보에 주력하여 1988년 6월부터 10월경까지 중앙 및 지방의 핵심 조직원 50여명이 사상교육, 체력단련, 무술습득을 거친다. 당초 분리선언 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88년 9월 1일을 기해 사노맹을 출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사노맹의 발족은 1년여가 늦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사노맹 준비위>는 「선봉」 편집국 소속활동가들이 대부분의 구성원들로 참여했고 지방조직에서는 주로 안양성남지역과 인천서울지역 등 수도권 위원회 소속성원들과 영남위원회 성원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89년 말 사노맹 출범까지 <사노맹 준비위>는 중앙조직에서 기존에 조직국 업무로 통합되어 있던 업무가 대폭 분화되어 사무국과 연락국이 분화 신설되었고 외곽조직으로 노동문학사와 노동자대학, 민주주의학생연맹 등도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파견망이 제한된 범위에서 구축된다, 즉 전국회의, 전농, 노동자대학, 전민련과 대중단체(예컨대 종교단체)등에 파견망을 확대한다. 한편 출범을 앞두고 초기의 지역위원회체계를 시위원회체계로 지역조직을 분화시켜냈다. 이 시위원회는 서울, 인천, 경기, 마창, 울산, 포항, 부산, 대구, 구미 및 기타 시 수임자로 구성된다. 물론 9개 지역위원회가 모두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지역 대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위의 구성과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노맹은 준비위를 거쳐 1989년 11월 노동자 대회에서 정식출범을 갖게 된다.(조희연, 1993:314-323)

3. 참고자료

-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주의혁명 지하조직의 활동전모 보조자료』, 1991.
- 유동렬, 「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 「민중정당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발표

1. 사건일자 19880603-19880603

2. 사건내용

- <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 「민중정당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민중정당재건축추진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발표.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전노운협)> 결성 및 진보정당 건설논의

1. 사건일자 19880607-1990MMDD

2. 사건내용

1) <전노운협> 결성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는 1987년 7, 8, 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증되는 군부독재와 자본가 측의 폭력적 노동운동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박종만추모사업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전태일기념사업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카톨릭노동사목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카톨릭노동청년회,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등),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경기남부·수원노동자연합, 경남노동자협의회 등 노동운동단체가 모여 1988년 6월 7일에 결성하였다.
- 전노운협을 결성하는 데는 87년부터 형성되는 노동운동의 세 가지 흐름이 바탕이 되었다.
 - 하나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노동자위원회」(국본노위)의 결성과 활동이다. 국본노위는 7, 8, 9월 노동자대투쟁과 그 이후 노동운동탄압에 공동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활동이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 다음은 대통령 선거 시기의 수도권지역 중심의 「노동자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활동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수도권노동운동협의회」의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선대위 활동을 토대로 전국적 노동운동의 결집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현실적 요구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은 88년초 현대엔진투쟁을 계기로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전국공대협) 결성에 참여하고 다시 그 이후 결성된 전국노운협으로 해소되었다.
 - 셋째로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 데 가장 주요한 흐름이 되었던 것으로서 88년 2월 현대엔진노동자투쟁을 계기로 발전된 부분이다. 이것은 현대엔진투쟁을 통한 구체적, 실천적

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전까지의 흐름과 경험을 하나로 모아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현대엔진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자 3월 5일 전국노동운동단체 대표자회의가 울산에서 열렸고 이 회의에서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현대엔진 투쟁을 지원 지지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공대협은 4월 2~3일 전국적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계급의 당면한 요구와 전국적 구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대협의 형태로는 그 이후 임금인상투쟁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요구를 하나로 집결시켜 낼 수 없게 되어 추진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6월 7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전국공대협을 보다 조직적이고 상설적인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하여 전국공대협을 해체하고 전국노운협을 결성하였다.

- 1988년 결성 이후 전노운협은 88년 8월 전국적 대중신문을 지향하는 「노동자신문」을 창간, 발행하며 여러 가지 공동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7월 10일 마산에서 열린 '노동운동탄압분쇄 및 노동악법 개정촉구, 노동부장관퇴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7월 17일에는 인천에서 수도권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마산에서 '직장 폭력 단추방 및 구속노동자석방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하반기에는 전국의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들과 연대 하에 노동법개정투쟁을 준비하고 이끌어갔다.
- 또한 각계각층과의 연대사업을 벌임으로써 통일전선사업을 벌였는데 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중운동연합건설을 위한 논의에 적극 개입하였다. 이 시기에 전노운협은 민족민주운동의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을 제안하고 담보상태에 빠져 있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출범하는데 기여하였다.
- 그러나 전노운협은 진보정당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건설 지지세력과 정당건설 반대세력으로 나뉘어 참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사업방식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당건설 지지세력들이 전노운협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노운협의 대중적 영향력은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결국 전노협건설 때와 달리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건설과정에서는 거의 배제, 무력화되기에 이르렀다.

2)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진보정당건설 논의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이하 전노운협)에서의 정당건설을 위한 논의 또한 전노운협 자체의 조직발전전망을 둘러싼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 그것은 전노운협 제18차 대표자회의에서 두 개의 안으로 제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선진노동자조직론(이하 선노론)으로 이 제안은 전노운협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적 노동운동을 지속시키면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선진 노조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민중민주운동진영의 통일전선적 조직체, 즉 전민련에서 전노운협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현장역량을 강화하면서 전노운협을 정파를 배제한 선진노동자조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정당건설 문제와 관련, 대체로 '역량미약론', '시기상조론' 등으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합법정당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되었다.
- 이에 대해 전노운협과 전노협 건설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던 인민노련 등으로 대표되는 정당건설 지지세력들은 전노운협을 공동투쟁을 위한 협의체로 한정하고 다만 그 활동의 성과는 당건설의 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노운협은 노동자정

당의 과도적 위상을 가질 수 없으며 당의 건설은 별도의 경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정당건설을 지지하였다.

- 이러한 조직노선 상의 대립은 급기야 90년 9월 전노연합 2차 중앙위원회에서 선노론자들이 ‘비판적 지지파’, ‘노연합해소파’ 등과 연합하여 정당건설론자들의 요구를 배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자신들의 정치 및 조직노선을 관철시킴으로써 결국 조직의 분리로 이어졌다. 이 와중에서 정당건설론자들 또한 ‘상설공투체’로서 전노연합의 역할이 마감되었다는 인식을 심화시켜 나갔다. 이들은 이른바 ‘양날개론’에 입각, 당시 노동운동의 조직구도를 노동조합의 전국조직 건설, 그것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전위정당 모색, 그리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 및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과 이를 가로막는 극도의 정치적 억압 및 소외라는 현실 간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 대안으로서 합법정당 건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미 전노협이 건설되었고 이제 전민련 탈퇴그룹 등에 의해 민중정당 건설이 일정에 올라 있는 만큼, 노조를 지원하고 정치적 임무도 수행해야 하는 과도조직으로서 전노연합의 위상과 존재 의의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 결국 전노연합 2차 중앙위원회의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정당건설론자들은 11월3일 전노연합으로부터 ‘분리’를 공식 선언하였고 이후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이하 전국노련)을 조직하였다. 이들 정당건설론자들은 제2기 전민련 대의원대회에서의 정당결성 부결과정이 평민당의 민중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결정은 87년 10월13일 민통련의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선언’의 재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제2기 전민련 대의원대회에서의 소부르주아 우파의 소부르주아 좌파에 대한 승리는 결국 부르주아지의(그 한 분파인 평민당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승리라고 인식하였다.
- 전노연합 안에서의 정당건설추진세력의 분리는 전민련 내부 논의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것은 이들이 실제 대중적 토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의 분리는 전민련 안에서 전노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비판적 지지론’을 강화시키면서 그것의 우경화를 조장하였다.

3. 참고자료

- 3파연합과 투쟁하는 중앙위원일동. 1990, “선노련-비지파-전노협해소파의 기회주의적 연합에 대한 우리의 견해”.
- 김철순. 1991, “전민련 제2기 대의원대회의 역사적 의의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책전환”, □□사회주의자의 실천□□1, 일빛.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 “합법적 민중정당에 대하여”, □□정세와 실천□□5호
- 정기평. 1990,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회의의 진로에 대한 모색”, □□노동운동□□1-2 합본호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체 건설논쟁: <민통련 강화론>과 <해소론>의 대립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 논의

1. 사건일자 198806DD-1990MMDD

2. 사건내용

- <전민련>은 1987년 12월 대선에서의 분열과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체 변혁운동의 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그 건설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의 기존 성과를 '계승'하여 1989년 1월, 8개 부문단체와 12개 지역단체 등 총 26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의 상설연합조직이자 민족민주변혁의 정치적 구심으로서의 전민련은 그 목표를 민중해방과 진정한 자유·평등사회의 실현으로, 당면과제를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 등으로 설정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선언, 목표와 달리 전민련은 상설적인 정치적 구심체로서의 자신의 위상과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것은 그 안에 구조적인 한계를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핵심은 전민련이 그 성과를 계승한다고 공언한 민통련과 국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타협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운동세력들 사이의 타협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타협이 일관된 원칙 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민통련, 국본 등은 대선을 경과하면서 민중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단순한 선거전술의 오류가 아닌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과와 한계는 그와 같은 변화된 조건 속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었다. 즉 민통련과 국본의 성과는 노동자, 민중 등 모든 계급과 계층을 망라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지도부', '투쟁의 전선체'로서의 위상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미 이러한 위상은 12월 대선을 계기로 재야민중운동이 분열되면서 그 수명의 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그들의 과거 위상과 성격을 호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 민통련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관적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국본은 '6.29협약(pact)'을 추종하며 공정선거운동으로 방향을 틀어 김영삼,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자기역할을 충분히 수행치 못했다. 즉 민통련의 경우, 첫째, 과학적 정치노선과 조직적 발전전망의 부재로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둘째, 성장하는 민중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대통령선거투쟁에서 일부 상층에 의해 성급하게 '비관적 지지'를 함으로써 조직을 하나의 정파 내지 '보수야당의 외곽단체' 정도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국본 또한 노동자, 농민 등 기층조직과의 결합이 부족했고 자유주의 정치세력들, 그들과 친밀성을 강화시켜 온 재야명망가들이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대중투쟁을 능동적으로 지도할 수 없었다. 특히 국본은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보다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야권후보 단일화문제를 중심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원은 아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들을 고려할 때, 그 조직들의 성과를 승계한다는 것은 곧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이미 화석화되기 시작한 민통련, 국본 등의 발상과 행태를 추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것이었다.
- 이러한 점에 유의하며 전민련의 건설과정을 살펴보자. 87년 12월 대선을 거친 이후 민통련은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민통련의 개조, 강화를 통해 새로운 통합운동조직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것은 나름의 근거 위에서 제시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첫째, 87년 대선 시기의 '전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파들을 헤쳐 모이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통일일

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 둘째, 노동, 농민운동 등 기층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은 중요한 운동의 성과이지만, 아직 그들의 수준이 전체 운동을 주도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질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민통련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기층운동 등을 통합하여 공동의 투쟁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민통련은 자신들의 발상과는 다른, 질적으로 상이한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체(이하 민운연)를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조직형식주의’, ‘조급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민통련이 ‘입장의 통일’이 난망하다고 했을 때,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체의 건설과정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통련과 ‘입장’을 같이하는 세력들이 민통련을 중심으로 하여 ‘민운연’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 이와 달리 12월대선 시기 ‘비판적 지지’에 반대하여 민통련을 탈퇴하거나 그에 거리를 두었던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서울지역민중운동연합준비위원회(서울민운연준비위)는 새로운 민족민주운동연합체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민통련은 명망가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성장한 기층의 대중운동을 지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민중운동의 새로운 연합체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민통련 ‘확대강화론’을 “창조적 분열론”이라고 명명하면서 비판하였다.

즉, 자유주의적이고 명망가적인 70년대식 재야운동에 뿌리를 둔 운동의 흐름이 8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민중운동에 대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그 공백을 대체할 새로운 지도력 또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질적으로 새로운 민운연 조직의 탄생은 쉽지 않았다. 이것이 딜레마였다. 당시 상황은 85년 민통련 창립 당시 조직운동의 원칙을 강조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와 명망가 중심의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사이에 존재하였던 이견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과거 민통련의 결성과정에서 노출된 ‘상이한 정세인식’이나 ‘조직이기주의 경향’이 아니라 질적으로 상이한 이념과 운동노선 사이의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한 딜레마가 민통련, 국본 등의 한계를 반성, 계승하고 그것을 재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 이념과 노선에 근거하여 운동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이 우선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민통련 초기 제안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 하지만 87년 12월 대선을 매개로 한 신군부의 재집권, 이른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분열과 분화에 따른 미약한 정치적 역량은 이것을 현실적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여 88년 1월 이후 6개월 동안이나 진행된 민중운동조직 건설 논의는 민통련의 입장 발표와 이에 대한 반비판 속에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전노운협의 절충안 제의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7월2일 2차 준비소위원회에서 전노운협은 첫째, 민운연 준비모임은 서클협의체에 불과하며 대중적 실천과 유리된 몇몇 대표자단체의 논의였다는 점, 둘째, 그 준비과정에서 각 제안자들이 분파적 경향을 노정하였다는 점, 셋째, 민운연이 민중적인 기초, 즉 노동(勞農)의 조직적인 기초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편집부, 1990: 212-213). 이에 따라 전노운협은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 지역과 부문의 통일, 단결수준을 높여갈 실천 방침의 마련, 88년 상반기 사안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동투쟁위원회들(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서울민주투쟁연합, 반민정당총선투쟁 민주연합, 광주범국민진상조위원회 등)의 한계 극복을 기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

안하였다.

- “1. 한시적 과도적 성격을 갖되 제 투쟁을 포괄, 수립해내는 상설공동투쟁체로서 최소한의 집행기구를 갖는 협의적 수준에서 출발하고 연대의 범위는 민족민주운동을 최대한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단 위의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제 투쟁을 조종해내는 상설연락기구를 고려할 수 있다.
- 2. 구성은 개별단체 참여를 지양하고 부문별, 지역별 연합 또는 협의체 형태로 참여하도록 한다.
- 3. 그간의 민운연 준비소위는 해소하고 상설공동투쟁체 내에 논의를 수렴해 내는 특위, 또는 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천과 논의를 결합해 나가도록 한다”

전노운협의 이러한 제안은 각 조직으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고 7월11일 대전 가톨릭농민회에서 열린 전국민운연준비소위원회 3차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로 귀결되는데, 이 합의 내용은 이후 일정한 수정을 거치며 전민련 건설의 골격이 되었다.

“첫째, 상설공투체로 한다.

둘째,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학생단체를 참여시킨다.

넷째, 지역별, 부문별 협의체, 또는 연합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지역과 부문은 개별단체의 참여도 가능하다.

다섯째, 개별인사는 고문단,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전국민운연준비소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일곱째, 참여단체의 성격은 민민운동(민족민주운동)단체로 한다.”

전노운협의 이러한 제안을 매개로 한 민운연 건설 논의는 한편으로 여소야대의 상황과 맞물린 전두환·이순자구속투쟁의 진전, 각계각층 대중운동의 성장 등 주객관적인 정세 변화에 고무받으면서 88년 9월 이후 상설공투체가 아닌, 혹은 그것을 매개로 한 발전이 아닌, 바로 장기적 전망을 갖는 통합운동체를 건설하자는 발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 다른 한편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노태우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유보에서 보이듯 군부를 봉쇄하며 개혁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보수대연합 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면서 보수야당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민중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결집해 낼 ‘정치적 조직’의 건설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 등이 통합운동체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민운연 건설 논의과정에서 그 동안 자기조직의 확대강화에 무게중심을 두어 왔던 민통련이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며 인식의 변화를 보인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즉, 88년 전반기를 경과하며 대선패배의 책임 문제 등으로 대립되어 왔던 조직들의 반목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민통련 또한 객관적으로 자신의 지도력이 한계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렇게 민통련의 해소와 새로운 통합운동체의 건설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논의는 급물살을 타 9월2일 7차 회의에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과 민중정당채건추진위원회가 참관한 가운데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전민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9월30일에는 전민협추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간담회, 부문운동별 간담회 등이 전국적

으로 개최되면서 전민련 건설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2월22일 14차 회의에서 전민협결성대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89년 1월21일 전민련이 발족하게 되었다.

3. 참고자료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상설공투체 구성에 대한 제안-가칭 범민주투쟁연합」, 1988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중운동건설에 대한 민통련의 입장」,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자료편□□, 1989
- 서울지역 민중운동연합준비위원회, 「민통련은 ‘창조적 분열론’을 즉각 철회하라!」, 1989
- 이범영, 「전민련 강화하고 민주연합 건설하자」, 《말》 1990. 11월호.
- 이재화, 「민통련·국본의 위상 및 활동평가」, □□한국사회 통일전선 논쟁□□, 죽산, 1990

<한겨레민주당>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단일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사건일자 19880818-19880906

2. 사건내용

- 1988년 8월 18일, 9월 6일 2차에 걸쳐 종로성당에서 <단일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공청회>가 <한겨레민주당>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림.
- 1차 공청회: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 진보정당>
 1. 사회 : 이우재(농어촌사회문제연구소 소장)
 2. 한국사회의 성격과 진보정당 (김진균 서울대 교수)
 3. 민족민주운동과 진보정당 (황인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
 4. 현 시기 새로운 진보정당의 위상과 역할 (정태운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위원장)
 5. 총선시기 진보정당의 활동과 평가 (유초하 충북대 교수)
- 2차 공청회: <각계각층에서 바라본 진보정당>
진보정당의 역할과 현 시기 국민대중의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최재현 서강대 교수)

3. 참고자료

- 「한겨레민주당/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한겨레민주당>,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진보정당결성을위한정치연합(진보정치연합)>으로 통합 선언

1. 사건일자 19880914-19880914

2. 사건내용

○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을 결성하며」

우리는 오늘 분단체제와 독점체제의 억압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 땅의 민중들이 참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을 결성한다. 이는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모든 선열들의 정신과 87년 6월의 민주화투쟁과 7~9월의 노동자투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민족사에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민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함이다.

오늘 이 “진보정치연합”에 참여하는 일 주체들인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는 그 동안에 분열과 대립으로 인하여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 “진보정치연합”을 밑거름으로 해서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 모든 민주인사들을 결집시켜 진정으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 땅의 사천만 민중은 해방이후 지속된 독재체제의 억압아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강요된 무관심과 구조적 소외 속에서 고통 받아 왔다. 그러나 87년의 눈부신 투쟁을 통해 민중의 의식과 조직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선거에서의 분열과 패배의 책임을 준열히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4·26총선에서의 눈물겨운 반독재투쟁 끝에 여소야대국회를 마련해주었으나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채 안일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들은, 8년 동안이나 포악한 독재정치를 자행했던 장본인들은 소환, 처벌하고 다시는 부정부패와 이권탄압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전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아랑곳 않고 지엽말단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또한 민족의 통일과 자주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이 기회주의적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림픽을 방자하여 평화구역 선포와 정치중단에 합의함으로써 민중의 생존권투쟁조차 탄압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민중을 우롱하는 40여 년 간에 걸친 보수정치의 틀을 깨고 민중의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대변하여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할 진보정당의 결성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오늘 결성된 <진보정치연합>은 이러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에 하나의 주체로 참여할 것이며 이 일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롭게 건설될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기업인, 양심적 지식인 들을 기반으로 하고 각계각층의 애국적인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외세와 독점의 횡포에 대항하여 싸워나가면서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것이다.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제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토지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농산물가격 문제 등에 있어서 철저히 농민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다. 도시빈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제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통일운동을 벌어나갈 것이다. 특히 민족의 자주권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 유의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국제관계의 법이나 조약은 개폐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당은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대의를 높이하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적 정당으로, 국민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하는 대중정당으로 굳건히 발전해나갈 것이다. 민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적인 애국적인 국민들이여! 진보정당의 대의아래 총 단결하여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

의의 새 나라, 새 시대를 건설해 나갑시다!
(1988. 9. 14/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

<진보정당결성을위한정치연합>: 「진보정치연합이 노동형제 여러분께 드리는 글 - 노동악법의 사슬을 끊고 민중해방의 선봉이 되자」 발표
(19881009-19881009)

<진보정당결성을위한정치연합>: 「진보정치연합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민주화의 출발점입니다」 발표
(19881023-19881023)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1. 사건일자 19890121-19890121

2. 사건내용

- 1987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분열했던 재야운동세력은 1988년 이후 다시 힘을 결집해 1989년 1월21일 민족민주세력의 통일전선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발족시켰다. 전민련에는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회 등 지역운동단체 12개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등 부문운동단체 8개 등 20개 단체가 주축이 되고, 개별운동단체 약 200개가 참여하였다

3. 참고자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진보정당 결성 논의

1. 사건일자 1989MMDD-19910216

2. 사건내용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의 해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진보정당건설을 둘러싼 사안이었다. 이것은 전민련 건설과정에서 향후 전민련의 조직의 전망과 관련하여 이미 제기된 바 있었고 89년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의는 단지 전민련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민련의 최대 주주였던 전노운협 등 노동운동진영에서의 논의와 맞물려 증폭되었다.

- 무엇보다 이 사안이 민중운동진영을 압도했던 것은 80년대 이후 민중운동권의 관심사였던 민중운동세력,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 수준에서의 독자성 확립이라는 문제의식과 ‘민주대연합론’ 사이에 형성된 긴장 때문이었다. 크게 보아 전자는 민중민주주의계열에 의해 대변되었으며, 후자는 민족해방계열에 의해 옹호되었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계열은 진보정당건설에 적극적이었고, 민족해방계열은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거나 수동적이었다. 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통련 안에서 ‘비판적 지지’를 둘러싸고 표면화되었던 갈등이 민중정당건설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매개로 다시 재점화된 것이었다.
- ‘견해 I’로 불리운 「전민련과 합법정치전술」이라는 문건에서 최초로 제안된 반대 진영의 논리는 정당 건설의 시기, 경로, 의회 및 선거공간 활용, 정세, 주체역량, 합법정당 내부의 불일치, 전민련과 합법정당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민련의 조직적 강화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내부에 정치위원회를 두어 ‘선택적 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정치전술을 구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옹호세력은 ‘견해 II’로도 불리운 「현재의 정치정세와 새로운 합법정당 결성의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통해 김대중, 김영삼을 포함한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이들의 계급적 한계, 기존 지역당 구조의 극복, 새로운 대체세력에 대한 대중의 요구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진보정당건설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물론 처음에 이들은 전략단위로서의 전민련의 위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긴장은 순조로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러한 긴장은 전민련 내부의 논의를 경과하면서 오히려 증폭되었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당추진론자들이 전민련을 탈퇴하게 되었다. 그 1차 탈퇴는 전민련 2차 정기 중앙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정당결성 불가방침 때문이었다.
 - “1)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전민련의 강화를 위한 방침수립과 합법정당 건설추진문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제출되었고 이 논의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와 조직노선을 둘러싼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 2) 합법정당 건설을 둘러싼 전민련 내외의 주객관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전민련이 합법정당추진 여부에 대해 가부간 공식적 결정을 내리고자 할 경우 조직 내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애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3) 이러한 주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합법정당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 내 성원들은 그 직을 사임하고 추진하며, 합법정당건설 여부에 대해 전민련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찬반을 분립시키거나 표결처리하지 않는다.”
- 이 결정으로 전민련 안에서 합법진보정당건설이 어렵게 되자 9월26일 이를 추진하던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이 탈퇴하여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민통련 등 재야운동에서 대중적 명망성과 함께, 실질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비록 양적으로는 소수였지만 이들의 탈퇴는 전민련의 위상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1차 탈퇴 이후 진보정당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다소 소강상태로 진행되었으나, 90년 1월 3당합당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이것은 공안정국과 3당합당의 와중에서 의미 있는 정치투쟁의 구심체로서 활동하지 못했던 전민련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1990년 2월 19일, 20일 이틀간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가 열려

- 4개의 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98년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즉 단순히 합법진보정당건설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의 차원을 넘어 이미 살펴본 바대로 전민련 결성과정에서부터 긴장관계를 보였던 상이한 운동세력들의 이념, 정치노선, 조직노선 등이 개입되면서 전민련의 위상과 성격, 자유주의 좌파 정치세력(평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문제로 구체화되면서, 확대되었다. 그것은 첫째, 이미 살펴본 ‘견해 I’이 정교화된 것으로 전민련을 모태로 한 통일전선의 강화, 제도 야당을 포함한 ‘범민주단일당’ 혹은 ‘연합적 단일전선’을 건설하자는 안, 둘째, 위 ‘견해 II’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준비모임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건설을 전민련이 적극 지원, 지지해야 한다는 안, 셋째, 통일전선체로서의 전민련은 민족민주운동권의 일부가 어떤 정당을 결성하든 반대하지 않으나 동시에 전민련, 혹은 민족민주운동은 전체의 이름으로 그 결성을 결의하거나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안 등 세 안으로 구분되었다.
- 그런데 다른 한편 이 과정은 전민련 내부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정당건설을 둘러싼 대립점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각 정치세력들이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민련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사업에 관한 전민련의 입장”이라는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2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자 하였다.

- “1) 전민련은 민족민주세력의 제도권 정당활동에 대하여 현 정세 속에서 그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그 추진세력과 적극 연대, 협력하여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간다.
 - 2) 그 정당 활동의 방향, 성격, 경로 등은 추진 주체의 사항으로 한다(제안자: 중앙집행위원회)”(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90: 264).
- 그렇지만 이 안의 대의원대회 상정은 회원단체와 일부 중앙집행위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회순통과’ 절차 과정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독자적 민중정당건설안”과 사실상 중앙집행위원회 안과 동일한 ‘수정안’ 등 두 건이 다시 제출되어 표결에 붙여졌으나 이 또한 제적의원 2/3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다. 즉 전자는 재석대의원 438명 가운데 찬성 103표, 반대 219표, 기권 93표로 재석대의원 3/2인 292표에 미달하여 부결되었고, 후자는 재석대의원 431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196표, 기권 67표로 재석대의원 3/2인 288표에 미달 부결되었다. 이에 2차로 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등이 전민련을 탈퇴, 이미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이던 1차 탈퇴파들과 결합하여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이하 민연추)를 출범시킴으로써 결국 진보정당건설에 참여하였던 세력들 대부분은 전민련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3. 참고자료

- 김근태. 1990, “전민련 대의원대회이후의 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전략”, □□정세연구□□9호.
- 김장한. 1990, “통일전선과 합법정당”, □□정세연구□□ 11호.
- 김철규. 1990, “민주대연합과 민주연합당”, □□정세연구□□ 12호.
- 김철순. 1991, “전민련 제2기 대의원대회의 역사적 의의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책전환”, □□사회주의자의 실천□□1, 일빛.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국민운동본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평가서(I)-자료편□□.

- _____ . 1990, “전민련 제2기 대의원대회 참관기-전민련 제2기 대의원대회의 의의와 교훈”, □□정세연구□□ 8호.
- 박상병. 1997,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인렬, 1990, “민중당 건설하고 국민연합 강화하자”, □□말□□ 11월호.
- 이광일. 2001, “민주화이행,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의 위상 그리고 해계모니”, □□진보평론□□ 9호.
- _____. 2005, “87년 대선과 민주화운동”. □□기억과 전망□□ 가을호.
- 이범영. 1990, “전민련 강화하고 민주연합 건설하자”, □□말□□ 11월호.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 “합법적 민중정당에 대하여”, □□정세와 실천□□5호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89a,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대회□□
- _____. 1989b, □□제2차 정기중앙위원회자료집□□.
- _____. 1990, □□제2기 대의원대회 · 1차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 _____. 1991a, □□제3기 대의원대회 및 1차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 _____. 1991b, □□현 시기 노동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하여□□.
- 전민련 정책기획실. 1991, “제3기 전민련 2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해설”, 「전민련신문」 34호.
- 정치분과. 1991, “90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91년 전망”, □□정세연구□□17호

<사노맹 준비위>, □□노동해방문학□□ 발간, 김사인, 임규찬 등 구속

1. 사건일자 198904DD-199101DD

2. 사건내용

- □□월간 노동해방문학□□은 박노해와 조정환 등이 준비한 <□□노동해방문학□□창간준비위원회(창준위)>를 통해 만들어졌다. 1988년 12월 신촌 사무실에서 약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문학사 창립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김사인을 발행인으로 선출하고 백무산, 정인화, 정남영, 임규찬, 임홍배, 조정환 등을 포함한 편집위원회가 꾸러졌다. □□월간 노동해방문학□□은 1989년 4월에 창간호를 냈다. 그러나 창간호와 5월호를 낸 이후 5월 26일 김사인 발행인과 임규찬 편집국장의 연행과 구속, 원고압수, 인쇄처에 대한 압력 등 당시 노태우정권의 탄압을 받게 된다. 거의 모든 사원의 구속 혹은 수배, 정간과 복간 등으로 통권 10권을 발행하였다.(대산문화, 2002)
- □□월간 노동해방문학□□은 CA의 후신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입장과 노선을 대변한 월간 노동잡지였다. 먼저 □□노동해방문학□□은 사노맹의 정치선전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해방문학은 발행인 밑에 실질적으로 내용적 지도를 담보하는 상임기획위원장이 있고 그 산하에 편집국과 사무국, 영업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었다. 사노맹은 편집국의 지도아래 상임기획위원장(사노맹 조직원)이 운영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노동해방문학□□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독자적인 기관이며 프랙션이 파견되어 지도하는 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조희연, 1993:

320)

- 사노맹은 핵심활동가들이 이 잡지에 기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치노선과 당면 투쟁방침 등을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노동해방문학□□은 사노맹의 대변지라는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치평론, 문예비평, 투쟁 수기, 투쟁취재기, 시, 소설, 생활글, 원전탐구 등을 함께 실었으며 특히 당시 민주노조들의 투쟁상황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어쨌든 정파적·이념적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노동해방문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다양함과 현장성으로 인해 사노맹에 동의하지 않은 많은 노동운동가, 현장활동가, 학생운동가들도 애독했던 잡지였다고 하겠다.
- 노동문학사 창립대회 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진보적 시인들(백무산, 정인화, 강형철, 김명환, 이재무, 조태진, 이원규, 표광소, 이강혁 등)과 작가들(김하경, 이남희, 김한수, 최인석, 정지아 등)이, 문학예술연구회에서 맑스주의 미학자, 평론가, 연구자들(정남영, 임홍배, 이강은, 임규찬, 서경석, 손지태, 정나원, 임수근 등)이, 대학의 진보적 문예활동가들(장민성, 오은주, 김민수, 윤동수 등)이, 민문련과 민미협 혹은 지역예술조직에서 진보적 예술활동가들(김신명, 조미아, 정진영, 이성욱, 이태직, 양동혁 등)이 결합되었다. 창간예고 홍보물과 신문에 실린 창간예고 광고를 보고 결합하러 온 활동가들 혹은 <혁명적 사회주의 그룹>, <노동계급> 그룹 혹은 다른 정파그룹에서 파견된 사람들도 있었다.(자율평론 15호, 2006.1.13)

3. 참고자료

- 경향신문사, □□실록민주화운동 63. 노동과 문학□□(2004. 7. 12.)
- <http://www.laborsbook.org/>
- □□자율평론□□ 15호
- 조정환, 「진보적 사회를 향한 금지된 열정, 월간 노동해방문학의 탄생」, 웹진 □□대산문화□□ 7호(2002년)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 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 결성

1. 사건일자 19890516-19890516

2. 사건내용

- 1989년 5월 16일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에 모여 전국 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민주주의학생연맹(서민학련) 발대식을 가진 10여개대의 학생 4백여명은 집회를 마친 오후 4시 50분쯤부터 교문앞으로 나가 화염병과 돌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집회에서 ‘동의대사태 후 전대협이 비폭력평화시위방침을 발표한 것은 파쇼폭력정권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적 투쟁마저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운동권내 소수파인 ‘통일민주학생연맹(통민학련)’, ‘민주화학생연합(민학련)’ 소속 학생들로 두 조직을 통합, 기존학생운동을 주도해온 전대

협의 노선에서 벗어나 반합법적인 투쟁을 이끌어갈 전민학련을 결성키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89. 5.17)

- <사노맹 준비위> 시기에 있어서 사노맹의 외곽조직이었던 ‘통일민주학생연맹’은 학내 기반이 주로 서울의 일부 대학이었고 그 내실이 약했던 데 반하여, 89년초 사노맹이 일대 전환 이후 본격적인 외부 조직사업을 하는 시기의 학생 외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 민주주의학생연맹의 경우에는 상당한 조직적 기반을 서울권의 대학에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1993:271)
- 서울지역 학생연맹은 90년 5월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통상 민주주의학생연맹 JSDL)로 확대되었는데, 학생회가 대중자치조직의 고유한 위상과 역할은 가지고 있으나 대중적 정치투쟁의 활성화를 이루는데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므로, 일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쟁을 기동력 있게 담보하고 학생회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진보적 학생대중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1989년 5월에 결성되었다.(조희연,1990:271)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민학련은 서울대 등 전국 45개 대학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 3학년 이상의 공식 조직원은 400-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된다. (국가안전기획부, 1991:29,42)
- 전민학련은 1991년 2월 신당 전철역에서 조직원 200여명을 동원하여 민중공화국 수립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화염병투척 시위를 전개한 바 있고, 91년 3월 신민당 보라매 정치집회에 300여명을 동원하여 보수야합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 이후 도로점거 투쟁, 야간 화염병 시위 등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전민학련은 사노맹과 함께 고등학생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시도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 고등학생 정치활동을 위한 공동실천위를 구성하기도 하였다.(조희연,1993:277, 국가안전기획부, 1991:24-27)
- 사노맹과 민학련의 조직적 지도·피지도 관계를 보면 사노맹 중앙지도부에서 민학련 지도부에 대한 파견망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학생운동 파견망은 민학련 중앙지도부를 지도했다고 한다.

3. 참고자료

-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주의혁명 지하조직의 활동전모 보조자료』, 1991.
-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조희연, 죽산, 1990,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전민련> 지자체 합법정당 여부에 대한 소위 구성기로 결정

(19890529-19890529)

<전민련> 2차 대의원대회(진보정당 창당하려는 조직과 성원은 직책을 사임하고 추진)

(19890926-19890926)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 <전민련> 탈퇴(전민련 1차 탈퇴파)
(19890928-19890928)

전민련 사표 간부와 민족과 세계연구소 소장 활동가 30명으로 <새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개소
(19891004-19891004)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사건

1. 사건일자 19891018-19891018

2. 사건내용

- <인민노련> 사건은 1989년 10월 18일 관련자 17명이 연행, 구속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 요원들에 의해 영장없이 강제연행되어 20일간의 밀실수사를 받았으며, 이어 12월에는 4명이 추가로 구속되어 총 구속자는 21명이 되었다. 1차 구속사태 후 구속자 가족은 물론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등의 대중조직에서 <인민노련> 탄압의 부당성을 외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심 재판 때는 김진균 교수 등 교수 147명과 권호경 목사 등 85명이 “소수 독점재벌의 손에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부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 많은 폐해가 야기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한 <인민노련>의 활동은 정당한 일면이 있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이 활동을 지지했다. 구속자들은 1, 2심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인민노련> 활동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적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최후진술」,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조직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사건관련자 : 오동렬(총무부장, 상임집행위원장, 대중공업사), 윤철호(교육선전부장, 서흥(주)), 노병직(중앙위원), 노회찬(조직국장, 대림보일러, 금화공업사), 정종주, 최병국(대림통상), 이현영, 최건섭(태을금속), 이면재, 김진희(한비산업), 권우철, 신동수, 이태주(대흥공업사), 김용숙, 최남기(경동산업), 김창덕, 김혜인(삼기전자), 심은남(삼기전자)

3. 참고자료

- 이진경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민주주의 진영의 사상과 실천□□, 소나무, 1991, pp.167-246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8차 중앙위 창당 준비모임 구성을 위해 조

직 해소 결의

(19891026-19891026)

<새정당 창당을 위한 연락 사무소>와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통합: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진보정당준비모임)> 발족

1. 사건일자 19891110-19891110

2. 사건내용

-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연합>(1988년 9월 14일,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와 <한겨레민주당>이 민중정당 건설을 위해 통합하여 결성)과 <새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 연락사무소>(1989년 10월 4일, <전민련>을 탈퇴한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 전민련 핵심인사들이 민중정당 건설의 주체들을 결집하기 위해 설치)가 통합하여 결성하였다.
- 대표 이우재, 집행위원장 조춘구, 대변인 박계동, 기획실장 정문화, 정책실장 정태윤, 조직국장 장기표, 선전국장 이석원, 사무국장 원혜영 등의 본부 조직체계를 갖추고 15개 지역준비모임을 건설하여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 전개.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11. 10.)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결성

1. 사건일자 19891112-19891112

2. 사건내용

-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독자후보파의 한 분파를 형성했던 CA계열의 <노동자해방 투쟁동맹(노해동)>에 속해 있던 핵심 활동가들은 대선 투쟁과정에서 당면정세에 대한 판단 및 전략전술적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의 결과 노해동은 1988년 4월경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립하였다. 이 가운데 민중집권과 민중주도성의 목적의식적 추구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소수파가 재결집하여 결성한 것이 바로 사노맹이다.
- 소수파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준비위)>(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 준비위’)를 결성하여 사노맹 건설을 본격화하였고 1989년 11월 12일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 조직을 공식화하였다.(□□말□□ 54호, 1990.12)
- 사노맹은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 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국 규모의 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노동인권회관 편, 1990, pp79) 그러나 1992년 4월 29일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이 구속됨으로써 사노맹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사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할 시인 박노해는 그 전해 3월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박노해가 사노맹 안에서 맡은 직책은 중앙상임위원이었다. 6.25 전쟁이후 남한에서 만들어진 최대의 자생적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라고 국가안전기획부가 평가한 사노맹은 공안당국의 5차에 걸친 수사(1990-95년)로 조직지도부가 와해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노맹 재건위」를 구축하여 활동한 바 있다. 사노맹 재건위는 1993년부터 조직 보호를 위해 「사추위」(사회당 추진위)라는 반(半) 공개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의 합법화를 모색하는 등 전형적인 합법, 비합법투쟁을 전개하였다. 사추위는 PD계의 민중회의와 통합하여 「민정련」(민중정치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사노맹은 학원계 산하조직으로 전국 45개 대학에 「민학련」(민중정치연합)을 결성 각종 시위를 주도하였고 전국적 조직인 「진민학련」(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 JDSL)을 결성하고 빛나는 길(1991.4)라는 기관지를 발행한 바 있다. 또한 전국 70여개의 공장에 조직원을 파견하여 '공장혁명소조'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산실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설립하기도 했고, 노동문학사를 설립하여 '노동해방문학'이라는 합법형식의 월간잡지를 발행하여 소의 노동해방문학과 박노해 신드롬을 조성하기도 했다.(유동렬, 1996:151-153)

- 사노맹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300여명에 총 구형량은 500년에 이르는 해방이후 최대의 조직사건으로 평가된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198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박노해, 백태웅을 마지막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그 후 1999년 3월 1 일자로 사노맹 사건 관련 구속자들은 잔형 면제의 특별 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3. 인용자료

-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주의혁명 지하조직의 활동전모 보조자료』, 1991.
- 김선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연도미상 / 「조선일보」, 1991. 3.13 / 「조선일보」, 1992. 5.16
-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노동인권회관 편, 1990
- □□말□□ 54호, 1990.12
- 유동렬, 「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 이광일, “한국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운동-민주적 실천과 역사적 회생”, 조희연 편, □□국가 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1) 1990. 9. 19. 현정덕(중앙위원) 등 3명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990. 10. 중순경까지 18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 10. 30. 사노맹은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하조직으로서 노동계, 학원, 종교계, 청년운동단체에서 1,600여명이 활동해 왔으며 당시 40명을 구속했고 150명을 추적·수배 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노맹에 대한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당시 구속된 사람은 남진현(중앙위원), 이명애, 현정덕(연락국장), 정은희, 이수한, 전금숙, 장오영, 이귀영, 황성록, 전광철, 정종혁, 심재섭, 최영준, 정현민, 조정래, 정은미, 장해숙, 윤경수, 김옥현, 정미화, 이동기, 차무정, 전해룡, 유경중, 최병규, 한두석, 윤진환, 권종길, 전인현, 박강태, 서상덕, 이동균, 김은미, 이성주, 공인현, 이덕기, 이성철, 이우철, 박형민, 임준, 최성철, 이영자, 정주용, 양봉안, 이중섭 등이다. 핵심지도자인 박기평(필명 박노해), 김진주 부부가 1991. 3. 구속되었다. 박기평에 대하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노동운동단위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선수, <http://www.yangsimu.or.kr> 연도미상)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시민공청회 「진보적 대중정당 왜 필요한가」 개최

1. 사건일자 19891120-19891120

2. 사건내용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은 1989년 11월 20일 오후 7시에 명동 YMCA 대강당에서 「진보적 대중정당, 왜 필요한가」라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 강연회에서는 고성국(당시 고려대강사, 정치학)씨가 “오늘의 정치상황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필요성”이라는 강연을 하였고, 장기표(당시 준비모임 기획책임간사)인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격과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합법정치 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결성

1. 사건일자 19900115-19900115

2. 사건내용

1990년 1월 15일 인천지역 내 6개 노동운동단체가 참여하여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을 결성하고 집행체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결성 초기의 주된 사업은 노동자모임의 결성 취지 및 목적을 노동자에게 널리 알리고 노동자 모임 사업을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확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3. 참고자료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결성 보고서」

사노맹, <사회주의 학생연구소> 설립

1. 사건일자 199001DD-199001DD

2. 사건내용

- 사노맹은 학생운동 방계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적 지도를 위하여 사회주의 학생운동 연구소를 만들어 이를 통하여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에 대하여 전략전술적 지침을 내리고 정치적 지도를 행하였다. 1990년 1월 중앙위원 백태웅, 남진현을 중심으로 하여 사

노맹과 유사한 이념적 기초 위에서 활동하는 ‘선진적 학생정치조직’으로서의 민주주의 학생연맹에 대하여 조직적 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학생연구소이다. 사회주의 학생운동연구소는 <새벽바람>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였다. 새벽바람은 1990년 1월 편집부가 구성된 후, 2월 15일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이 기관지는 학생운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학생운동 활동가들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학생운동권의 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다.

3. 참고자료

-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주의혁명 지하조직의 활동전모 보조자료』, 1991.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1. 사건일자 19900122-19900122

2. 사건내용

-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전국 3,300여개 공장에서 파업투쟁이 전개되었고 1,300여개의 신규노조가 만들어지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수호와 기본권확보를 위한 대중적 열망이 증폭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토대가 확충되었다. 예기치 못했던 1987년 대투쟁에 속수무책이었던 자본과 정권은 1988년 12월 노태우 정권의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기점으로 이념적, 제도적, 물리적 측면에서 총체적 탄압을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민주노조진영에서는 탄압대응을 위한 전국적 연대조직건설이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전노협건설은 그 자체가 민주노동운동 말살정책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투쟁과정이었다.
- 하지만 노동자들은 과거와 같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대한 지역수준의 자연발생적 연대조직(지노협)의 건설과 노동법 개정투쟁, 공동 임금인상 투쟁 등을 매개로 한 전국적 투쟁과정을 통해 조합원대중의 초보적 계급의식, 정치의식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40여 년간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서 노동자위에 군림해 온 어용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한국노총에 대한 대중적 불신 제고와 맞물려 있었다. 또한 당시 노동운동가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의 적극적인 결함으로 전국조직건설의 필요성과 그것의 조직 및 투쟁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지원, 지도가 가능해졌다.
-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7년 말 4,103개이던 노조 수가 89년에는 7,883개로 늘어났고, 조직 노동자 규모도 89년 말 1백93만명을 넘어서 87년의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런 양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성과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우선 1987년 12월 14일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의 결성을 필두로 전국 총 15지역에서 지역조직이 결성되었다. 또한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연구, 전문기술노동조합 협의회(연전노협),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노련) 등 업종노조협의회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8년 8월에는 지역별, 업종별 조직을 망라하고 전노연합이 결합되어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그해 11월에는 전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대오가 결집하여 “천만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악법 철폐”를 내건 전국노동자대회가 치러졌다. 노동법 개정투쟁은 조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중대한 결실을 거두었다. 공동 투쟁을 통해 전국적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88년 12월22일에 민주노조운동 세력을 총망라한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가 결성됐다.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비롯한 17개의 지역노조협의회, 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 등 4개의 업종협의회가 참여하고, 전교조·병원노련·언론노련 등 7개의 업종노련과 전노연합이 참관단체로 등록한 전국회의는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의 건설’을 1차적 과제로 선언했다.
- 이를 기점으로 그간 물밑에서 논의되던, ‘한국노총과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전국조직 건설’이 본격화됐다. 전국회의는 지역노조협의회 현황과 문제점, 조직 결성의 경로, 한국노총과의 관계, 참여범위 등을 놓고 1년여 간의 논의와 준비를 거친 뒤 89년 12월17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단병호)를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전국조직건설을 반대하는 ‘한국노총개조론’이라는 장애를 넘어야 했다.
-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낮 12시 40분 수원의 성균관대 자연과학대캠퍼스 강당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대회가 열리고 초대위원장으로 단병호를 선출했다. 마침 보수세력이 3당 합당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노협 창립대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원천봉쇄를 삼엄하게 펼치고 있는 속에서 전노협은 백골단과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그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하였다. 출범 당시 전노협은 마창노련 등 14개 지역조직과 연전노협, 병노련 등 2개 업종조직 600여 노조 193,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업종회의와 대기업노조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전노협은 공안정국 속에서 가속화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국가권력과 자본의 탄압을 홀로 뚫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참고자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논장, 2003

<진보정치연합> 대구지부 압수수색

1. 사건일자 19900130-19900130

2. 사건내용

- 대구 서부경찰서는 1990년 1월 30일 오전11시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시 서구 비산동 진보정치연합 대구시 지부(지부장 김현근) 사무실을 수색하고 컴퓨터디스크 23점과 유인물·서적 등 1백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사무국장 김옥현(29)씨를 임의동행,조사를 한 뒤 오후7시께 풀어줬다. 진보정치연합 대구·경북시도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3월말께 치러질 대구 서구 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압수해 갔다”며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사전포석”이라고 비난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0년 2월 1일자

<진보정치연합> 울산지부 간부 영장

1. 사건일자 19900207-19900207

2. 사건내용

- 경남도경 공안2분실은 6일 진보정치연합 울산지부 전 사무국장 장석교(27·일명 장석진·서울 중랑구 상봉1동 257-5·성균관대 신방3 제적)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울산시 중구 성남동 장씨의 자취방에서 <역사인식의 길잡이>(동녘) 등 서적 2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0년 2월 7일자

<노동계급> 조직사건

1. 사건일자 19900212-19900212

2. 사건내용

- 인민노련, 삼민동맹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인 사상으로 수용하면서 89년 5월 □□노동계급□□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의 사상적 통일성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에 근거한 반제반독점 민주민주주의변혁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비합법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였다. 당시 이들의 활동을 추동했던 것은 여느 노동운동세력들과 마찬가지로 87년 이후 지속된 노동대중들의 자발적 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진전이었다.
- 그런데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자생적 투쟁이 운동의 대중성 확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지만, 그것이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사회변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없는 한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특히 이 그룹은 노동계급 단결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상, 이론의 통일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그룹은 당시 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 노동운동의 자생성 극복을 방해하였던 가장 심각한 이론을 ‘주체주의자들’로 파악하였다.

“우리 운동이 가까스로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무기를 접어들려는 그 순간에, 맑스-레닌주

의 이론과 국제혁명의 경험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과 선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에...맑스-레닌주의에 “외래사상”이라는 딱지를 붙여 애써 외면하고 대중의 자생성을 “대중의 자주성”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면서 노동운동이 과학적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다.”(“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위하여”, □□노동계급□□ 창간호(1989.5.28), p.4)

- 따라서 이들은 맑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소비에트정치경제학의 성과, 소련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되었던 이른바 제3세계를 둘러싼 사회구성체논쟁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수용하여 한국사회의 토대로서의 신식민지(또는 종속적)국가독점자본주의, 그 상부구조로서의 신식민지파시즘론, 민중민주주의변혁론(PDR론) 등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면서 주사파가 옹호하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식민지하청파시즘론, 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론)에 대해 체계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과 과학□□이라는 대중이론지를 통해 세칭 ‘주사파들’과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입론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노동계급그룹’ 또한 90년 2월12일 주요 활동가들이 공안기관에 검거됨으로써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 조직은 민중민주운동진영 가운데 현장대중기반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민중혁명 선동 혐의로 박태호 등 2명 구속, 10명 수배

3. 참고자료

- 이진경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 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합법정치 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1차 활동보고서 배포

1. 사건일자 19900215-1990MMDD

2. 사건내용

- 1990년 2월 15일 <합법정치 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은 그간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1차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국 각 지역으로 발송하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전주, 태백, 거제등과 접촉면을 확대하여 나갔으며 여타의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을 조직한다. 여기에서 <노동자모임>은 “합법적 민중민주 대중정당은 선진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유력한 무기”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자모임>이 “민중민주정당 사업에 있어 노동자계급의 견해를 관철시켜 나가고 실현시켜 나갈 조직적 주체”라고 자신을 선언한다.

3. 참고자료

-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결성보고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진보정당정치학교 2월 시민강좌
-“전노협 결성과 현단계 노동운동의 과제”

1. 사건일자 19900221-19900221

2. 사건내용

-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은 1990년 2월 21일 신철영(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조특위장)씨를 강사로 초청해, “전노협 결성과 현단계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보정당정치학교 2월 시민강좌를 진행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진보정당정치학교 2월 시민강좌 “전노협 결성과 현단계 노동운동의 과제” 강의노트」(1990. 2. 21.)

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등 <전민련> 탈퇴(전민련 2차 탈퇴파)
(19900303-19900303)

<전민련> 백기완, 박형규, 계훈제, 이소선 고문, 민중의 정당 결성 촉구 기자회견

1. 사건일자 19900312-19900312

2. 사건내용

- 백기완, 박형규, 계훈제, 이소선 등은 1990년 3월 12일 통일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민련 고문직 사퇴와 함께 민중의 정당 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결성 공식 제안

1. 사건일자 19900320-19900320

2. 사건내용

- 전민련 고문단의 성명 직후 그간 전민련에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던 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진보정당 준비모임>의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구)한겨레민주당의 제정구, 유인태 씨 등이 모여 정치세력화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각 계의 지도급 인사들의 지지, 동참 의사가 확인되어 1990년 3월 20일 변호사 회관에서 이부영, 홍성우, 고영구, 백낙청 씨를 비롯한 각계 16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 추진위>의 결성을 제안하였다.

- 이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민연추는 4월혁명 이래 축적된 민주화운동 역량을 결집,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위해 야당 및 모든 민주세력과 제휴 협력 연합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연추> 결성을 제안한 16인 인사명단
 - 재야: 이부영 이재오(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여익구(전 전민련 민주쟁취위원장)
 - 변호사: 홍성우 조준희 고영구
 - 학계: 백낙청(서울대) 안병직(서울대) 오세철(연세대) 김윤수(영남대)
 - 여성계: 박순경(목원대교수) 이효재(이화여대교수)
 - 문화예술계: 김규동(시인) 신경림(시인) 주재환(미술평론가)
 - 언론계: 김정남(전 평화신문 논설위원)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0년 3월 20일자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민연추> 동참 선언

1. 사건일자 19900321-19900321

2. 사건내용

- 1989년 9월 26일 전민련 2차 중앙위원회에서 합법정당에 관한 안건 통과이후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대표 이우재)>이 1990년 3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연추> 결성사업에 함께 나설 것을 발표하였다.
-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결성 제안에 대한 <진보정당 준비모임>의 입장」(1990. 3. 21.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87년 6월항쟁 이래 이 땅의 민중들은 그간의 정치적 각성을 바탕으로 가히 눈부신 조직적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사의 추세도 화해와 개방을 지향하면서 소수 엘리트 정치로부터 민중의 정치시대로 확고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보정당 준비모임’은 이 땅의 온민중이 주인되는 희망찬 통일조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되어온 민중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하며, 그 강력한 대안으로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정당 건설을 제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의는 확대된 민중역량이 발전된 결집양식을 요구하는데 기초하고 있으며,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탄압을 가중해가는 민자당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3월 12일 전민련 고문단의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 선언에 이어 3월 20일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여성,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그리고 전민련 인사들이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결성을 제안한데 대해 제7차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이땅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온 각계각층 대표들이 발표한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결성 제안은 전민련 고문단, 진보정당 준비모임의 그 동안의 입장과 노력에 완전히 부합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환영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2.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의 결성은 민중의 정당 건설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인한다.

3. 민연추 입장에 동의하는 단체·개인을 막라한 모든 민주세력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지지·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민연추> 1차 준비회의

1. 사건일자 19900326-19900326

2. 사건내용

- 1990년 3월 26일, 변호사회관에서 각계 대표 69인이 모여 <민연추> 1차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결성대회까지의 사업을 담당할 준비회의 운영체계 및 상임위원 구성을 확정하였고 4월 중순까지 민연추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날 선출된 17인의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홍성우, 고영구, 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오세철, 주재환, 김정남, 이호응,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정태운, 제정구, 유인태, 지은희, 정수일 등이다. 이후 노동, 농민 지역을 대표하는 약간 명을 보선하기로 하여 손병선, 최병욱 씨를 보선하였다.

<민연추> 지지노동자 대표회의

1. 사건일자 19900326-19900326

2. 사건내용

- 민연추 지지 노동자 대표회의를 통해 <민중의 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 노동자세력을 서명작업으로 가시화하고 각 지역의 노동자 모임 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아가 전국 노동자 추진위의 성격과 임무, 조직형태를 모색,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 서명운동의 전개
<민중의 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결성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들에게 노동자들의 합법정당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를 조직한다. 1, 2차에 걸친 ‘민중의 정당’결성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서울, 인천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125개 노조와 91명의 전현직 노조위원장, 225명의 노조 간부 등 1,219명의 지지와 참여를 확인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결성보고서」(1990. 4. 11.)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표자 회의> 개최

1. 사건일자 19900401-19900402

2. 사건내용

-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표자 회의>가 1990년 4월 1일-2일 서울 진보 정당 준비모임 본부에서 서울, 인천, 부천, 성남, 태백, 포항, 전북, 거제, 부산, 구미 지역의 대표 및 김문수, 서기화, 장기표, 정태운, 김철수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1차 서명운동에 대한 결과보고 및 1차 서명작업의 결과에 기초한 2차 서명계획을 결정하였다. 또한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그를 위해 우선은 준비모임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 4월 11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결성보고서」(1990. 4. 11.)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 추진위원회(전노추) 준비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900411-19900411

2. 사건내용

- 1990년 4월 11일 오후 7시 서울, 인천, 태백, 부산, 구미, 포항, 거제, 부천, 전주, 울산, 대구, 성남 지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전노추 준비모임 구성문제, 기자회견문제 등의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체로서 <전노추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임시 대표에 김문수, 상임위원에 김문수, 유인열 그리고 중앙위원에 수도권지역에서 신보연(인천), 정운환(태백), 영남권에 백무산(울산), 최영(대구) 등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추진위원 61명을 확정하고 4월 12일 민연추 준비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 회의에서는 민연추와 전노추와의 위상, 관계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던 바, 전노추는 민연추 내의 구성 부문 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서 노동자위원

회를 먼저 건설하거나 혹은 지역 민연추를 결성한 뒤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결성보고서」(1990. 4. 11.)

<민연추> 결성대회 예비회의

1. 사건일자 19900411-19900411

2. 사건내용

- 민연추 상임위원회는 1990년 4월 13일 결성대회를 개최기로 결의하였으나 결성에 앞서 이미 참여를 결정한 각 지역·부문의 대표급 인사 67인에게 정강, 규약, 사업계획, 재정계획 시안 및 결성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민주적 의사 수렴을 하기 위해 간담회 성격의 예비회의를 가졌다. 4월 11일 민연추 준비회의 사무실에서 열린 예비회의에는 41명이 참여하여 각 사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사항을 각 지역·부문의 추진위원에게 보고하여 추진위원 및 지역·부문의 대중들의 결성대회 참여 열기를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결성

1. 사건일자 19900413-19900413

2. 사건내용

- 결성까지의 경과

1990년 3월 12일 백기완, 계훈제, 박형규, 이소선 등 전민련 고문 4인이 민중민주정당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2차 전민련 대의원대회에서 합법정당 건설안이 부결되어 전민련을 탈퇴한 이부영과 홍성우, 고영구, 백낙청 등 각계인사 16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결성을 제안했다. 3월 21일 진보정당 준비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연합추진위원회 결성사업에 동참할 것을 발표하였다.

- 결성대회

<민중의 정당 결성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는 1990년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447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대회를 가졌다. <민연추>는 이날 대회의 결성선언문을 통해 “민연추 결성선언은 정치적 들러리에 불과하던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민연추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중소기업인 여성 청년학생등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민중의 정당건설을

추진하고 야당 및 모든 민주세력과 제휴 연대 연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회에서 △3~5인의 공동대표 △75인 내외의 중앙위 △25인 내외의 상임위와 집행위원장을 두는 <규약>과 자주 민주 통일 복지 등 4대이념 아래 「반외세 반독재 자주민주 정부수립」 등의 <10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공동대표로는 백기완 전 전민련고문, 이우재 진보정당 준비모임 대표 등을 선출했고, 집행위원장에는 이부영 전 전민련 상임의장이 선임되었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 추진위원회(전노추) 준비위원회> 제2차 전국회의 개최

1. 사건일자 19900424-19900424

2. 사건내용

- 1990년 4월 24일 민연추 본부사무실에서 전노추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2차 전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정당건설의 기초와 방향 2)전노추 위상 및 조직방침 3)인선확정 4)민주연합에 대한 태도 5)기관지 사업 등에 대한 안건이 토론되었다.

3. 참고자료

- 「전노추 준비모임 제2차 전국회의 회의록」

<삼민동맹> 사건

1. 사건일자 19900425-19900425

2. 사건내용

-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일명 삼민동맹) 또한 서노련의 와해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건설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믿었던 경수지역의 소그룹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신(新)삼민동맹’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던 이들은 서노련이나 인천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서노련의 와해 이후 흩어져 있던 노동운동활동가 사이의 연결망 확보, 각 사업장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는 한편, 노동운동의 과학적 이론정립을 목표로 강령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관지로 □□노동자의 깃발□□을 발간, 배포하면서 우선 지역단위에서 조직의 토대와 체계를 세운 후 88년 10월에 창립대회를 열고 정식으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정치조직인 ‘삼민동맹’을 결성하였다.

- 86년 이후 서노련, 인노련의 사상통일의 불철저함과 대비되어 이른바 하나의 일관된 사상이론체계로 선전되었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 특히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노동운동에도 영향력을 미쳐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노동운동 내적으로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이른바 ‘주사파계열’은 서인노련의 분해과정에서 보여지듯 사상이론적인 문제제기를 지도그룹의 권위로 제압하고자 하는 행태를 관료주의로 비판하면서 파시스트권력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대응하여 산개론(散開論)을 주장하였고 이른바 전위조직의 건설은 대중운동의 역량강화 이후로 미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즉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중조직의 강화였다.
- 이에 대해 삼민동맹은 인민노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무장시키고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사회변혁의 방도에 대한 이론적 준비를 갖추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스스로를 변혁의 조직으로 결집시키는 것과 더불어 크고 작은 일상적 요구들을 제기하며 독재정권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 특히 이들은 서인노련이 주장하였던 삼민혁명론을 옹호,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의 길로 나서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를 지탱시켜 주는 군사독재정권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통일된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즉 ‘과학적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와 민중의 권력수립만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당면목표를 추진할 노동자정치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조직활동 또한 90년 4월 25일 17명의 조직원이 연행, 구속되고 이후 조직원들이 추가 구속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사건관련자
 - 구자욱, 김소영, 김용기, 김인선, 김중성, 김진국, 김진태, 김태진, 박운배, 서재석, 신남희, 신준수, 이명학, 이강석, 임해규, 하승창, 황순현 등.

3. 참고자료

- 이진경 외,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 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민연추>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00426-19900426)

<민연추> 비상시국대강연회 직후 이부영 씨 야권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상

임위에 제기

1. 사건일자 19900512-19900512

2. 사건내용

○ 민연추 시국강연회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는 1990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단공원에서 학생 시민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의 난국 어떻게 타결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국대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백기완, 고영구(민연추공동대표), 이부영(민연추집행위원장), 제정구(진보정치연합대표) 등이 참석했고 이수호(국민연합집행위원장)은 불참했다.

<민연추>는 이날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5·9대회때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는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며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은 민자당정권이 아니라 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민중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연추 집행위원장인 이부영씨는 상임위에 ‘야권통합과 민연추’란 문건을 제출하면서 야권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3. 참고자료

○ □□세계일보□□ 1990년 5월 13일자

<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준비모임> 제3차 전국대표자회의
(19900516-19900516)

<민연추>, 6인소위의 조정안 수용을 위해 5·28 비상상임위 사전모임 개최

1. 사건일자 19900528-19900528

2. 사건내용

○ 1990년 5월 12일 이부영씨의 야권통합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 이후 5월 19일 긴급상임위에서 야권통합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었다. 상임위의 압도적 다수는 ‘선 주체형성 후 연합’ 입장을 취하였다. 5·30 제2차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인소위를 구성하였다. ‘6인소위’는 장기표, 조춘구, 이재오, 여익구, 제정구, 유인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6인소위의 조정안은 1) 6월부터 지부건설에 매진한다. 주요 간부는 전원 의무적으로 지부건설 사업에 나선다. 2) 상임위원회 산하에 야권통합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3) 6월중에 중앙위를 개최하여 창준위의 전화문제 및 야권통합 문제를 논의 결정한다. (단 6월까지 창준위로 전화하는 데 내용적으로 합의한다. 단서조항은 대외비로 한다)이었다.

- 하지만 6인소위의 조정안 수용을 위해 5·28 비상상임위 사전모임이 열렸지만 조정안의 3항 중 단서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진행하다 결국 결렬되었다. <독자창당파>는 5·30 2차 중앙위원회에서 6월중에 창준위로 전화를 할 것을 합의하고 다시 6월중에 3차 중앙위를 개최, 공식적으로 창준위로의 전화를 대외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데 반하여, <야권통합파>는 2차 중앙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3차 중앙위에서 검토,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부영, 고영구, 박계동, 제정구 등 야권통합파 14명, <민연추> 사퇴

1. 사건일자 19900529-19900529

2. 사건내용

- 1990년 5월 29일 저녁 민연추 확대간부회의(국장급까지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독자창당파가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수정안의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창준위로 전환하고 야권통합 추진전담기구를 상임위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권통합파가 거부함으로써 결렬되었다. 이날 야권통합파는 3인을 보내 사표를 제출하고, 비상상임위의 불참을 통보하였다. 간부 14인 (고영구, 홍성우, 이부영, 여익구, 제정구, 유인태, 최병욱, 박계동, 이호웅, 유남선, 정성현, 김도연, 고영하, 김부겸)과 실무급 간사 16인(김민석, 고진하, 정태근, 이성호 등), 상임중앙위원 20여명(윤치영, 장재철 씨등)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 당시 보도 내용

재야권의 정당건설을 주도해온 <민중정당결성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민연추)>는 이부영 집행위원장 등 간부 14명이 29일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법야권 통합 등에 나설 것을 선언함으로써 출범 46일 만에 사실상 양분됐다.

이들 간부들은 사퇴의 변을 통해 “지금은 민주세력이 대동단결, 통합야당건설을 통해 민자당의 장기집권오묘를 막아야 하는데도 민연추의 내부이견이 심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앞으로 제3세력으로서 교착상태에 빠진 평민·민주(가칭) 양당의 통합논의에 촉매제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민연추의 내분사태는 야권통합을 둘러싼 평민당과 민주당(가칭)간의 내홍이 재야권에 파장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야권통합논의의 주도권 경쟁과 관련지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평민·민주당(가칭)은 통합논의에 있어 재야를 포함한 3자협상원칙에 합의,재야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문제는 이들 선통합파가 과연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야권에서 대표권을 인정받고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단일협상안을 만들 수 있느냐는데 있다. 이들이 대표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민당이 재야의 협상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전민련은 물론 해어진 민연추를 포함해 각계대표들이 총망라된 범야 통합기구를 만들어야 하나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고 있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비록 통합안이 마련된다해도 민연추 사퇴인사들은 대부분 한겨레민주당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세대교체를 외친바 있고, 전민련은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비판적 지지론자들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어 특정인의 거취문제를 우회하고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선을 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민연추일각에서는 집단 사퇴배후에 민주당과 1대 1통합협상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평민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장기표 이우재씨 등 민연추 선창당파는 그간 “제도정치권의 내부 협상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며 민중이익대변을 위한 독자정당결성을 주장해온 반면, 이부영씨등 선통합파는 “제도권정당과 재야를 포함한 범민주수권정당 결성을 위해 대중운동을 통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민연추는 야권통합파의 사퇴와 관계없이 6월중에 창준위로 전환한 뒤 통합파 창당작업을 병행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연추의 분열사태는 통합문제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다. 재야정당의 지지기반과 방향 등을 놓고 내부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선통합파들은 국민대중을 기반으로 한 지지세력 확대를 주장한 반면 「진보정당준비모임」 창립멤버인 선창당파측은 재야정당의 색깔론을 강조하면서 지지기반을 「민중」에 둘 것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지난 대구보선에서 3당야합과 민생문제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민중후보의 득표율이 매우 저조하자 13대총선경험이 있는 한겨레민주당출신을 중심으로 동요가 일어났고 선통합 주장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그 당시 일부인사들은 지난해 10월 진보정치연합을 해산하고 진보정당준비모임에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3당통합 이후 민주당창당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민연추측은 선통합파들의 속사정은 당체제가 갖춰지면 진보정당에 몸담았다는 사실이 향후 그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전력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애초부터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접목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민연추의 분열은 재야권에 있어 「군력」과 「정치」간 상호관계 설정과 재야의 재편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90년 5월 30일자

<민연추>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로의 전환 결정 기자회견

1. 사건일자 19900530-19900531

2. 사건내용

-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는 1990년 5월 30일 14시 30분부터 민연추 사무실에서 56명의 중앙위원(재적 중앙위원 88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전환”을 비롯한 주요 조직방침과 정치방침을 결정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야권통합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채택하고 민중정당 건설이야말로 민주연합 실현의 대전제임을 확인하였다.
- 1990년 5월 31일자로 발행된 <국민에게 드리는 글 - 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로의 전환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2차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민연추는 1990년 6월 안으로 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2. 14인의 간부는 사퇴했지만 더 많은 민중이 동참하고 있다.
 3. 중앙위원회는 '야권통합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채택하고 민중정당 건설이야말로 민주연합실천의 대전제임을 재확인한다.
 4. 우리는 평민, 민주 등 체민주세력에게 <내각제개헌저지와 민자당 해체를 위한 6대도시 시국강연회>를 6월중에 평민, 민주, 민연추, 국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5. 우리는 민중이 민중정당 창당의 주체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민중시대를 향한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 야권통합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로의 전화를 반대한 고영구, 이부영, 박계동, 제정구 등 14인이 탈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 절대다수(재석위원 56명중, 찬성 55명, 반대 1명)의 결의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 6월 이내에 창당준비위원회로 전화하고 9월 이내에 창당한다.
 - 14인의 사퇴서를 수리한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민연추> 상임위원회, '민중당'을 가칭당명으로 결정

1. 사건일자 19900611-19900618

2. 사건내용

- <민연추> 제2차 중앙위원회로부터 창당발기인대회를 위임받은 상임위원회는 1990년 6월 11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공모된 당명 중 '민중당'을 가칭당명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창당발기인대회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창당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장에 이우재, 집행위원장에 조춘구, 집행부위원장에 손병선을 임명하였다. 산하에 기획소위, 언론대책소위, 동원교섭소위, 홍보준비소위, 부작배포소위, 대선관위 업무소위, 현장진행소위 등을 설치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민중정당 창당에 동의하는 노동운동 등 각계각층의 968명의 발기인을 확보하였다.
- 상임위원회는 또한 6월 18일 제3차 중앙위원회에 창당발기인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현 중앙위원 62명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승인받았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민중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1. 사건일자 19900621-19900621

2. 사건내용

- 민연추 2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1990년 6월 21일 서울 YWCA회관에서 각계각층 발기인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당 창준위 간부로는 공동위원장 이우재, 김상기, 정강정책위원장 장기표, 사무처장 이재오, 조직위원장 조춘구 대변인 정문화 등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창당체제로 전화되었다. 창준위 결성과 더불어 <민중정당건설 전국 노동자추진위원회>, <민중정당건설 전국 학생추진위원회>, <민중정당건설 전국 교수추진위원회> 등이 적극 결합하였다.
- 발기인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의 규약을 심의, 결정하여 이우재, 김상기를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백기완, 권처홍을 상임고문으로 하는 63명의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창당준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고 산하에 조직책임사소위, 정강정책기초위원회, 당헌당규기초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인권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한다.
- 민중당(가칭) 창당 6대원칙, 즉 1) 민중주체의 원칙 2) 민주쟁취의 원칙 3) 민권수호의 원칙 4) 민주세력 연합주도의 원칙 5) 민중재정확립의 원칙 6) 진취적 당풍확립의 원칙이 확정되었다.
- 민중당은 6월 22일부터 조직책 신청을 접수, 7월 23일 70개 지역구의 조직책을 임명한 뒤 지구당창당대회를 거쳐 10월20일쯤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강진군, 완도군 지구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9. 19)

민중당(가칭), 조직책 심사위원 확정

1. 사건일자 19900625-19900625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은 1990년 6월 25일 이우재(위원장) 장기표 이재오 조춘구 김문수 정수일 정태운 7명을 지구당 조직책심사위원으로 확정했다.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90년 6월 25일자

민연추 탈퇴 야권통합파, <범민주 수권정당 결성을 위한 통합추진회의>(통추

회의) 발족

1. 사건일자 19900628-19900628

2. 사건내용

- <민연추> 야권통합과는 1990년 5월 31일 “다가올 권력재편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자당의 내각제개편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민중정당을 꾸리는 것보다 민주세력의 총집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 민연추 내 독자정당과와 방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5·31 민연추 탈퇴과 간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중에서) 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 야권통합운동을 추진해온 재야의 각계 및 지역 인사 133명은 1990년 6월 28일 상오 9시 서울 중구 태평로소재 프레스센터 19층 소회건실에서 <범민주 통합 수권정당 촉구를 위한 추진회의(통추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각계 인사들은 지난 6월 초순부터 수차에 걸친 준비모임을 갖고, 야권통합과 수권정당 촉구를 위한 추진운동의 기구를 발족시킬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6월 27일 오후 2시 각계 및 지역의 추진인사 80여명이 참석하여 기구발족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갖고, <범민주통합수권정당 촉구를 위한 추진회의>를 발족시켰다.

<민중정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결성. 위원장 김문수, 집행위원장 유인렬 선출, 이후 <민중당(가칭) 창당준위원회>에 결합
(19900630-19900630)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범민주세력 연대촉구, 노 정권 퇴진 촉구

1. 사건일자 19900702-19900702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의 이우재 위원장은 1990년 7월 2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불법전용사건으로 인해 87년의 대통령선거가 전면적인 부정선거였음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평민당과 민주당은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민주세력과 연대해 노태우정권퇴진 촉구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서교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87년 부정선거진상조사및 공개 ▲내각제개헌음모 중지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구조 개편안 철회 ▲국가보안법·노동법 등 악법철폐를 촉구했다.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90년 7월 2일자

<전노연합> 1기 2차 중앙위원회 개최

1. 사건일자 19900712-19900712

2. 사건내용

- <민중정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활동을 하는 전노연합 중앙위원 2명에 대한 자격 문제가 제기됨. 중앙위원 의결권을 제한하고 파견 조직에서 중앙위원을 교체할 것을 통과시킴. 휴회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국회의원 총사퇴 촉구 민중당사 농성

1. 사건일자 19900714-19900717

2. 사건내용

- 가칭 민중당 창당준비위원들은 1990년 7월 14일 현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독재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금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하고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요구를 관철키 위해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자당이 유신독재나 5공 독재시절의 국회모습을 재연하며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 등 반민주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평민 민주당은 한계가 드러난 무기력한 원내 활동과 독재정권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국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 국회를 해산, 온 국민과 함께 반민주당투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민자당의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7월 14일부터 서교동 당사에서 농성을 해온 민중당(가칭)은 17일 오전 농성을 해산하고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0년 7월 14일자, 1990년 7월 17일자

<민중당(가칭)> 1차 조직책 신청마감, 54개지역 56명 신청

1. 사건일자 19900719-19900719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은 1990년 7월 18일 1차 지구당 조직책 신청을 받은 결과 54개 지역구에

56명이 신청했다면서 조직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재·김상기 공동위원장은 각각 마포읍과 대구북구에 신청했으며 △장기표 동작갑 △정문화 동대문갑 △조춘구 도봉갑 △김문수 구로갑 △지은희 과천·시흥 △박용일 송파을 △정문화 동대문갑 △정태운 구로을 △오세철 노원갑 △김영규 인천북구갑 등에 각각 신청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0년 7월 19일자

민중당(가칭) 제1차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00719-19900719

2. 사건내용

- 1990년 7월 19일의 제2차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을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으로, 발기인은 창당준비위원으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제2차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차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로 개편됐으며 제1차 중앙위원회는 조직책 임명권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민중당(가칭) 전국 49개 지구당에 대한 1차 조직책 명단 발표

1. 사건일자 19900730-19900730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은 1990년 7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국 49개 지구당에 대한 1차 조직책 명단을 확정, 발표하였다. ◇서울 ▲성동갑 김철수 ▲성동병 유윤석 ▲동대문갑 정문화 ▲도봉갑 조춘구 ▲노원갑 오세철 ▲은평갑 안희대 ▲은평을 이재오 ▲마포을 이우재 ▲구로갑 김문수 ▲구로을 정태운 ▲동작갑 장기표 ▲송파갑 나강수 ▲송파을 박용일 ▲양천갑 이석원 ◇부산 부산진갑 손병선 ▲부산진을 김영수 ◇대구 ▲중 박방희 ▲서갑 김현근 ▲북 김상기 ◇인천 ▲중구 서기환 ▲남갑 안영근 ▲남동 박귀현 ▲북갑 김영규 ▲북을 송경평 ▲서 김중룡 ◇광주 ▲서울 김결 ◇경기 ▲성남을 임동현 ▲광명 유인열 ▲안양갑 송운학 ▲부천중 이병현 ▲안산 웅진 이사백 ▲과천 시흥 지은희 ▲오산 화성 김장희 ▲평택 정수일 ◇강원 ▲춘천 최윤 ▲정선 정운환 ◇전남 ▲강진 완도 장영근 ◇경북 ▲안동시 김석현 ▲포항 김병구 ▲김천 김룡 이대화 ▲구미 조근내 ▲영

주 영풍 차무정 ▲안동군 김신화 ▲영양 봉화 권영목 ▲예천 김희대 ▲울진 정일순 ◇
경남 ▲울산중 정병문 ▲마산갑 김우용 ▲거제 이민구

3. 참고자료

- □□조선일보□□ 1990년 7월 30일자

사노맹,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설립

1. 사건일자 199008DD-199101DD

2. 사건내용

- <사노맹> 중앙위원 백태웅은 황주석, 조국 등 대학원 및 인텔리출신의 전문 연구역량을 갖는 소수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한다. 사과원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사노맹의 선전선동활동의 자료개발 및 노동계급의 당 강령작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구축 작업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판단된다.
- 이 조직은 1990년 5월 준비위원회 명의의 내부 제안문을 제출하였으며, 사과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8월 8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990년 11월 창립제안서를 배포하게 된다. 그 후 1991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며 1991년 6월에 재개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과원은 사상투쟁, 이론투쟁의 영역에서 전위당 건설을 위한 사노맹의 투쟁에 복무하는 외곽조직이라 할 수 있다. 사노맹의 공식적인 표현에 따르면 사과원은 독자적인 연구단체로서 일종의 연구자 전위조직일 뿐 아니라, 사노맹의 조직원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며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과원에서는 이론 투쟁의 일환으로 1991년 5월 <우리사상>이라는 이론투쟁 잡지를 발간한 바 있다. (조희연 1993: 324-325)

3. 참고자료

-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주의혁명 지하조직의 활동전모 보조자료』, 1991.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남북교류에 대한 기자회견. 30명으로 방북 대표단 구성

1. 사건일시 19900818-19900818

2. 사건내용

○ 「남북교류에 관한 민중당 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서문)

은 국민의 관심과 이산가족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민족대교류>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민중당은 노태우 정권의 7.20제약이 민중투쟁이 고양되자 이를 희석화시키기기 위해 제안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제안이 민중투쟁의 성과임을 확인하고 해방45년주년을 맞는 금년에 통일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8.13~8.17 기간중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 중에 남북당국이 그동안 제의해왔던 각종 제안, 즉 남한의 7.7선언, 북한의 90년 김일성주석의 신년사, 7.20제안 등이 오로지 정치선전의 효과만을 노린 것임을 확인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남북한 당국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말미암아 7천만 민족은 다시한번 실망과 좌절을 겪었음을 지적하면서 남북한 당국이 보인 태도를 비판하고 남북교류에 대한 민중당의 입장을 밝힌다.

(1990.8. 18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 민중당(가칭)의 이우재 창당준비위공동위원장은 18일 오전 서교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및 정부관계자로 「민족통일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남북 정당간 교류 △남북한 TV및 라디오자유시청 △남북 이산가족의 정기상봉을 촉구했다.

3. 참고자료

- □□국민일보□□ 1990년 8월 18일자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민주교수 해임 철회 촉구성명 발표

1. 사건일자 19900831-19900831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은 1990년 8월 30일 최근 ‘민주교수’들에 대한 해임사태 등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덕성여대 성낙돈 교수와 상지대 교수 12명, 부산대 교수 2명은 모두 학원 및 사회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교수들로 이들에 대한 해임과 교수협의회 탈퇴각서 제출 요구 등은 교수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열한 보복적 인사조치”라고 비난했다. 민중당은 “교수들의 해임은 학원민주화운동을 탄압하려는 가증스러운 음모”라며 “현 정권과 대학당국은 해임 등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0년 8월 31일자

<전노운협>, 휴회한 1기 2차 중앙위원회 속개

1. 사건일자 19900901-19900901

2. 사건내용

- 1990년 7월 13일 휴회한 <전노운협> 1기 2차 중앙위원회가 1990년 9월 1일 속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노운협의 정당사업에 대한 규율 건이 재논의되었는데, 특정 정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혹은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노운협의 내부 규율로 회의록에 남긴다는 전제 하에 중앙위원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정당에서 상근(상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안(1안)과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안(2안)이 제출되었으며, 표결로 1안이 채택되었다.

<민중당(가칭)>, <전민련> 평화협정 체결 기대 성명 발표

1. 사건일자 19900902-19900902

2. 사건내용

- 정문화 민중당(가칭) 대변인은 1990년 9월 1일 오는 4일부터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남북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다방면의 교류는 물론 군비축소·평화협정 체결 등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에도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민련도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불가침선언 채택, 외국군철수, 상호군축, 한반도 핵철폐 등 실질적인 긴장완화 일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0년 9월 2일자

<민중당(가칭)> 제2차 조직책 임명

1. 사건일자 19900903-19900910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은 1990년 9월 3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직책심사소위의 2차 조직책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1차 조직책 임명에 이어 추가로 6개 지역에 조직책을 임명할 것을 결정하였다.
- 민중당(가칭)은 1990년 9월 10일 간부회의를 열어 6개 지구당 조직책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임명했다. ▲대구서을=이윤기 ▲강원 춘성-양구-인제=김운용 ▲충북 청원=한기달 ▲충북 보은-옥천-영동=이재영 ▲경북 청송-영덕=이무호 ▲경남 진해-의창=손성기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 □□조선일보□□ 1990년 9월 12일자

<민중당(가칭)> 제2차 중앙위원회, 55명의 조직책 임명, 창당일정 합의

1. 사건일자 19900918-19900918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 제2차 중앙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조직책 선임결과를 인준함으로써 지구당 조직책은 총 55명이 되었다. 그리고 조직책은 당연히 중앙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22명의 중앙위원 보선을 결의하였다. 또한 제2차 중앙위원회는 중앙당 창당대회 일자를 11월 10일로 결정하고 중앙당 창당을 위한 지구당 창당일정을 협의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사노맹> 활동가 1차 검거, 중간 지도부 현정덕 등 3명 구속 (19900919-19900919)

<사노맹> 활동가 2차 검거, 중앙위원 남진현 구속 (19901001-19901001)

<민중당(가칭) 창당대회 준비위원회> 발족, 창당대회 일정 확정

1. 사건일자 19901008-19901008

2. 사건내용

- 민중당 중앙당 창당대회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0년 10월 8일 중앙당 창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준비위원장에 이우재 창당준비위원장, 집행위원장에 이재오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산하에 종합기획위, 언론대책소위, 홍보물준비소위, 홍보물 부착·배포 소위, 동원소위, 교섭소위, 선관위 업무소위, 대회장 지휘소위, 재정소위를 설치하여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민중당(가칭)은 1990년 10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창당대회를 오는 11월10일 하오 3시 삼성동 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국가안전기획부, 민중당 사업상황 보고해 온 사노맹 조직원 1명 구속

1. 사건일자 19901008-19901008

2. 사건내용

-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년 10월 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 가입한 뒤 민중당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노맹 사조직에 보고해온 민중당 인천 남동구지구당 창당준비위 사무장 이성수씨(27)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가입 등)혐의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88년 8월 사노맹에 가입, 사노맹 소속 김경훈(가명)으로부터 민중당에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2월부터 민중당 창당준비위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중당 사업진행상황 및 시행계획과 인천지역 노동운동현황 등을 매달 보고해 왔다는 것. 안기부는 이에 앞서 지난6일 사노맹 관련자인 남진현씨(27·서울대 무기재료과 3년제적)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지난달 19일 이후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사람이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0년 10월 8일자

<민중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민중당 강령시안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01018-19901018

2. 사건내용

- 민중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주최로 1990년 10월 18일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민중당 강령시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1. 사건일자 19901030-19901030

2. 사건내용

- 안기부 제1차장 김영수, TV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01101-19901105

2. 사건내용

- 1990년 11월 1일-11월 5일에 연이어 개최된 민중당(가칭) 제3차 중앙위원회에는 중앙당 창당대회준비과정 및 각 지구당 창당경과가 보고되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해 각 지구당 수행할 역할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될 안건들, 즉 당 강령과 당헌의 초안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민중당 창당대회 자료집」(1990. 11. 10.)

<전노우협> 내 반대파, '전국적인 대중사업지원체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3파에 반대하는 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준비위원회> 발족 결의 (19901102-19901102)

<민중당(가칭)> 거제지구당위원장등 2명 구속

1. 사건일자 19901103-19901103

2. 사건내용

- 경남도경公安분실은 3일 민중당(가칭) 거제지구당 위원장 이민구(35)씨와 사무국장 박동철(34)씨를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경남 장승포시 장승포동 486-1 지구당사무실에서 지난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거제지역 노동자 2백여 명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 등을 교육했고 지난 87년부터 올 6월까지 24차례 삼성조선·대우조선·옥포공영 등 사업장의 파업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2일 밤11시5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지구당사무실을 수색해 <민중의 바다> 등 40여권의 책과 유인물·당원명부·내부문건 등 3백여 점을 압수했다.

- 한편 민중당(가칭)은 이 사건과 관련, 3일 성명을 내고 “이 사태는 민중당 중앙당 창당을 방해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사전봉쇄 하려는 불법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0년 11월 4일자

<민중당> 창당대회 개최

1. 사건일자 19901110-19901110

2. 사건내용

-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0년 11월 10일 오후 3시, 삼성동 종합전시장에서 대의원과 당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당 창당전당대회>를 열고 정식출범하였다. 상임대표위원으로는 이우재(창당준비위 상임대표), 대표위원으로는 김상기(경북대 교수)·김낙중을 각각 선출하였고, 고문 백기완, 사무총장 이재오, 정책위원장 장기표, 기획조정실장 정태윤, 대외협력위원장 조춘구, 대변인 정문화, 제1노동위원장 김문수, 제2노동위원장 신철영, 정치연수원장 지은희, 교수위원장 오세철 등을 임명하였다.
- 민중당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야합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정치사를 바로잡아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력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민중당의 앞날을 방해하려는 국내외의 반민중적 세력의 탄압을 뚫고 찬란한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민중과 함께 나아가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0년 11월 10일자

<전국노동단체연합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발족취지문 발표 및 공동대표 선출

1. 사건일자 19901221-19901221

2. 사건내용

- 1990년 12월 21일 우리노동문제연구원에서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구미노동상담소 등 4 단체를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단체연합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공동대표로 한경남(우리노동문제연구원장), 정금채(안양노동상담소장)가 선출되었다.
- <전국노동단체연합 준비위원회> 발족취지문 발표: 전환기 노동운동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로 복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결집하였으며, 노동조합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그의 실현, 정치의식화사업, 민중연대사업에 힘쓸 것을 천명하였다.

<민중당> 제3차(임시)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01227-19901227

2. 사건내용

- 민중당 제3차(임시) 중앙위원회는 1991년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지자제 선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앙당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문건 <지방의회선거에 대한 민중당의 대응방침과 향후의 사업방향>, <지방의회선거 대응을 위한 정치적 방침>(중앙-기조-13, 14)을 검토한 후 중앙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고, <지방의회선거에 관한 민중당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운문과 보완을 전제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선거 대응방침을 결정하였다.
 - 가.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 민중당은 적극 참여한다.
 - 나. 91년 1월부터 지방자치선거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체제로 돌입한다.
 - 다. 민중적 대의가 훼손 안 되도록 과정상에서 유의하는 범위에서 야당에 연합공천을 제의하고, 교섭단을 구성, 실질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 라. 민중운동진영에 지방자치선거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 마.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적극 보도한다.
 - 바. 1.10이전, 지구당별로 회의하여 각 지구당에서 반드시 출마자를 뽑고 동시에 지구당위원장도 적극 출마하는 방향으로 결의하도록 한다.
- 또한 민중당 제3차(임시) 중앙위원회는 지방자치선거에 관련, 임시상집(90.12.17)에서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당규11호 <지방자치단체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부분수정하여 통과하였다.

민중당 대표 연두 기자회견, 야권 연합공천을 통해 반민자전선 촉구

1. 사건일자 19910112-19910112

2. 사건내용

- 민중당의 이우재 상임대표와 김낙중 김상기 공동대표는 1990년 1월 12일 서교동 당사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선거에서 반 민자연합전선을 강화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제선거에서의 연합공천을 평민·민주 양당에 공식제안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평민·민주·민중 야권3당 사무총장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대표는 또 “지자제선거가 불법·타락선거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여야당 법조계 종교계 시민운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망국적 금권타락 선거타락을 위한 범 국민감시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각정 당 및 사회단체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 연합공천을 통해 보수와 진보세력간 선거연합과 정치연합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91년 1월 12일자

<민중당> 수서특혜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 범국민적 진상조사기구 제안

1. 사건일자 19910206-19910302

2. 사건내용

- 민중당 토지주거대책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1991년 2월 6일 오전 9시, 특혜관련 감사가 실시되는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부패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시위.
- 1991년 2월 18일 수서특혜분양 사건 관련 범국민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제안.
- 1991년 2월 19일 수서특혜분양 사건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 민중당의 이우재 상임대표는 19일 수서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홍성철 김종인 이연택 이승윤씨 등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청와대 간부와 정부고위인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또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 △13대국회의 자진 해산 △노태우 정권퇴진 등을 요구했다. 민중당은 이날부터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중앙당과 각 지구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민중당(상임대표 이우재)은 1991년 3월2일 오후 3시 파고다공원에서 당원과 학생 시민 등 1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특혜 은폐조작 부패정권 규탄대회」를 가진 후 을지로입구역까지 30여 분 간 가두행진을 벌였다. 민중당은 이날 대회에서 『수서비리의 본질은 청와대 행정부 여-야당 독점재벌이 빚어낸 유례없는 구조적 범죄』라며 『비리의 주범을 색출,치단할 때까지 지방자치제선거 등 정부의 정치일정을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또 계훈제씨-강희남 목사 등 재야인사 4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벌이는 도중 이 집회에 참석한 민중당 상임고문 백기완씨는 특별검사제를 도입, 수서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난 후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또 광주-전남민주연합(공동의장 명노근) 등 광주지역 재야단체 인사 및 시민 2백여 명도 이날 오후 1시40분쯤 광주시 동구 충장로 화니백화점 앞에 모여 「수서비리 진상규명촉구 시민대회」를 갖고 1km쯤 떨어진 광주공원 앞 다리까지 50여 분간 가두시위를 벌였다.

3. 참고자료

- □□국민일보□□ 1991년 2월 19일자

- □□조선일보□□ 1991년 3월 2일자

민중당 조직책 3명 추가, 방북신청

1. 사건일자 19910222-19910223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22일 지구당 조직책 3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서울 동대문갑 안희대(민중당 장애인 복지위원장) △대전중 김명식(전 대전·충남국민연합 대변인) △강원도 태백시 배진(광산노동자협의회 의장)
- 민중당은 23일 오전 북한의 조선로동당 등이 남한의 정당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통일원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중당은 이와 함께 북한의 정당 들앞으로 보내는 중앙위원회 명의의 서한을 통일원에 맡겼다. 민중당의 방북대표단은 김낙중 공동대표 손병선 조국통일위원장 조춘구 대외협력위원장 정문화 대변인 등이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2월 23일자
- □□동아일보□□ 1991년 2월 23일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 남진현 무기징역 구형 (19910228-19910228)

민중당, 재야단체 등 반민자 대책위 결성

1. 사건일자 19910307-19910307

2. 사건내용

- 민중당 구로갑,을지구당 국민연합구로지부 노동인권회관 등 구로지역의 21개 정당 사회 단체는 7일 밤 9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 희망의 집에서 <반민자당지방의회선거 구로 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식을 갖고 “현정부가 지자체조기분리선거의 실시를 통해 「수서비리」 은폐조작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결성식에는 소속단체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당 구로지구당 정태윤 위원장등 3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와 민자당이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의의를 지닌 지자체를 「수서비리」 의 진화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해 반민자당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오는 9일 공대위운영위를 열

어 조기분리선거실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기초의회의원선거에 공동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불참해 「수서비리」 규탄운동을 벌인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1년 3월 8일자

민중당 제5차 (임시) 중앙위원회: 수서비리사건 항의, 기초의회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1. 사건일자 19910308-19910310

2. 사건내용

- <보고사항> 1. 수서특혜 은폐조작 관련 투쟁경과 보고 2. 당 재정 보고 3. 기타 <토의안건> 1. 지방의회 선거 조기 분리 실시에 따른 당의 대응에 관한 건.
- 민중당의 이우재 상임대표는 1991년 3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시군구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불참한다고 밝히면서 “노태우정권은 분노에 찬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수서비리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어 평민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적 이해를 떠나 노정권의 정국구도를 거들게 될 기초의회선거 참여를 철회하고 노정권퇴진투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민중당은 3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군자새마을금고 2층 강당에서 안산 용진지구당주최로 「수서부정규탄 및 노정권퇴진대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각지구당별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정치집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기초의회선거 실시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1년 3월 9일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 구속
(19910312-1991031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현정덕 징역 8년 선고
(19910315-19910315)

민중당 후원회 창립총회

1. 사건일자 19910323-19910323

2. 사건내용

- 1991년 3월 23일 민중당 중앙당사에서 민중당 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민중당 상임대표인 이우재씨가 “오늘 민중당 후원회를 창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동지적 연대감을 전합니다. 민중당이 창당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당은 심각한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중개정 확립이라는 창당 원칙에 입각하여 당원대중이 내는 당비와 민중당을 사랑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바라는 후원자들의 비록 작지만 깨끗한 성금으로만 사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민중개정 확립의 창당원칙을 견지하여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 민중이 주인되는 참민주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대중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중당 후원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민중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지와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 이후 회원들의 호선으로 추천된 권오창 회원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임시의장에 선출하였다. 또한 윤영수 회원이 낭독한 창립취지문을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정관작성 기초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최영남 회원이 발표한 후, 조목별 검토, 그 내용 중 정관 제12조(구성) 중 운영위원의 수,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제16조(회장, 부회장) 중 부회장 선임관련 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조정하여 민중당 후원회 정관을 최종 확정하였다.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5인 등 후원회 임원을 선출하기로 되었으나 부회장 2인은 후원회 조직을 확대한 후에 보선키로 하고 부회장 3인만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권두영 회원이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민중당 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회원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여 후원회장으로 선출된 권두영 회장이 성기상, 최영남, 김종신 3인을 부회장으로 추천하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또한 회계책임자로는 최영남 부회장을 지명하였다. 회장단의 논의를 거쳐 권두영회장이 18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하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인하였다. 운영위원-권두영, 성기상, 최영남, 김종대, 도강호, 권오창, 장영수, 염철성, 유제향, 천영초, 윤영수, 유인렬, 정태윤, 이원주, 김영준, 이석원, 조무하, 김종신. 그리고 민중당 후원회 사업안으로 <친목회>와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중당 상임집행위, 광역의회 선거에서 야권과의 연합공천 추진하기로 결정

1. 사건일자 19910401-19910401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1년 4월 1일 오후 상임집행위를 열어 이우재 상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사제 대책위를 구성하고 오는 6월 실시될 광역의회 선거에서 평민당, 민주당 및 재야-

시민 단체와의 연합공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중당은 이와 함께 광역선거에서 교수
법조인 여성재야인사 등 전문직업인 및 신진 인사들을 우선 공천키로 하고 영입작업에
착수했다.

3. 참고자료

- □□조선일보□□ 1991년 4월 2일자

민중당 제6차(임시)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10408-19910408

2. 사건내용

- <보고사항> 1. 중앙집행위원 보선에 관한 건, 2. 중앙위원 보선에 관한 건,
- <토의사항> 1. 당규재정에 관한 건, 당에 국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일을 담당할 실무국이 없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 당 관련 자료 요청 및 스웨덴 사민당
초청 등의 해외업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
행할 실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당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2. 광역의회선거에 대한 당의 기본 대응방침 3. 기타안건

민중당, 지방선거법 개정청원

1. 사건일자 19910418-19910418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1년 4월 18일 지방의회의원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
는 내용의 지방의회선거법개정 청원을 국회에 냈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1년 4월 18일자

민중당, 조직책 추가임명

1. 사건일자 19910418-19910418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1년 4월 18일 지구당조직책 4명의 추가임명을 발표했다.△부산 금정 권현주 △과천·시흥 박재영 △안성 김해영 △산청·함양 박호근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4월 19일자

‘인천지역 신민, 민주, 민중당, 재야’, 광역후보 단일화에 합의

1. 사건일자 19910425-19910425

2. 사건내용

- 신민·민주·민중당 및 재야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 광역의회 범민주야권 단일후보추천위원회>는 1991년 4월 25일 이 지역 야당과 재야가 합의해 광역의회선거에 단일후보를 내기로 최종 확정했다. 박영숙 신민당 최고위원, 명화섭 민주당 인천시의회의원 선거대책본부장과 인천지역 재야대표 임석구 목사, 임명방 교수(인하대) 등 7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 인천시 중구 향동 올림포스호텔 8층 연회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발표했다.
- 이들은 지난 1월31일 신민당(당시 평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재야(민중당 포함)가 각기 똑같은 지분으로 야권단일후보를 낸다는 원칙에 합의했었으나, 그 동안 해당 지역구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다가 이날 27개 광역의회 지역구를 각 정파가 9개씩 맡고 이들의 구체적 지역구까지 결정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지역에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광역의회 선거에서 민자당과 야당연합의 1 대 1 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범민주야권 단일후보 추천위원회는 “인천 범민주세력은 민자당의 독주를 막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범민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야 쪽 몫 중 2개 선거구를 민중당 쪽에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현재 재야 쪽 추천으로 확정된 광역의회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구 3선거구=염재형(57·부민동물병원장) △남동구 2선거구=신맹순(49·도서출판 ‘우리교육’ 대표) △북구을 7선거구=문병호(32·변호사) △북구갑 2선거구=최용규(35·변호사)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4월 26일자

민중당 광역후보 공천

1. 사건일자 19910425-19910425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1년 4월 25일 광역의회 후보자 33명을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했다.
- 서울 ▲성동3선거구 김철수 ▲성동8 유윤석 ▲성동9 최재섭 ▲도봉2 최봉영 ▲은평4 장영수 ▲은평5 정청자 ▲은평6 노영희 ▲구로8 박한석 ▲동작2 김성식
- 대구 ▲서2 석원호 ▲서4 장명숙 ▲수성1 이윤석 ▲달서4 이종수
- 인천 ▲남5 안영근 ▲서2 김종용
- 광주 ▲서 강성욱
- 대전 ▲중1 김경식 ▲중 박영순
- 경기 ▲안양갑1 안상일 ▲부천중4 이병현 ▲광명1 정은교 ▲성남을6 임동현 ▲화성3 김장희 ▲과천·시흥2 박재영 ▲안성 김해영
- 경북 ▲구미3 윤상규 ▲영양·봉화 권영목
- 경남 ▲마산갑 김현준 이재영
- 강원 ▲춘천1 하광윤 ▲춘천2 윤용병 ▲태백2 임중엽
- 전남 ▲순천 김남준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91년 4월 26일자

<민중당>, 강경대씨 타살사건 관련 농성돌입

1. 사건일자 19910502-19910502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1년 5월 2일 오후 강경대씨 타살사건 등 시국과 관련, 집행위원과 지구당 위원장 40여 명이 노태우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교동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씨 타살사건과 관련, 안응모 전 내무장관과 이종국 치안본부장, 김원환 서울시경국장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5월 3일자

<전국노련> 성명서 발표: 노태우 정권 타도, 반민주악법 철폐, 수배조치 해제, 민중폭압기구 해체, 재벌위주 경제정책 철폐 등 요구 (19910523-19910523)

민중당 간부 민중당 간부 김병태, 정금채, 임석순 등 7명 구속, 박창수 한진중

공업 노조위원장 사인진상규명 요구 시위 주도혐의

1. 사건일자 19910524-19910524

2. 사건내용

- 수원지검은 1991년 5월 23일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투신자살사건과 관련, 안양시 안양병원 주변에서 시위를 주도한 김병태씨(25·민중당 안양갑 지구당 대외연대사업부장)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박씨가 사망한 뒤 박씨의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안양·수원·부천 등지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한 국민연합 경기 남부 본부의장 정금채씨(41)와 경기 남부노련의장 임석순씨(35)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3. 참고자료

- □□서울신문□□ 1991년 5월 24일자

민중당 「전국 좌파지구당 실무자회의」 개최

1. 사건일자 19910528-19910528

2. 사건내용

- 장소 : 민중당 노원을 사무실
- 참가 : 인천남동구, 성동, 노원, 구로갑-을, 동대문, 광명, 정선, 고대 청학위

민중당 「전국 좌파지구당 실무자회의」 2차 회의

1. 사건일자 19910531-19910531

2. 사건내용

- 참가 : 노원, 성동, 구로갑, 동대문, 광명, 전주, 대전, 인천북갑, 광주, 정선, 송실대, 고대, 명지대 청학위
- 결의사항
(1) 민중당 개혁추진회의 구성 결의 (2) 당면한 활동으로 a. 민중당의 활동과 노선에 대한 총평가 b. 장기표의 사회평론 대담 및 정대윤의 말지 기고에 대한 반박문건 작성 c. 장기표, 김낙중에 대한 징계동의안 제출 d. 전당대회 소집을 위한 대의원 규정안 작성하여 광역선거 후에 [전국열성자대회] 준비하기로 결정. / 주도세력 : 노원을 지구당 실무자들(김길오, 최혁 등)이 오세철 교수등의 지원 하에 주도함.
- 주요 회의 내용

(1) 민중당 개혁과 임시전당대회소집에 관한 건

참석자는 현재 민중당 지도부의 핵심이 야권통합을 현실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실제적인 정치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의 현실에 대하여 이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중권력 수립이라는 민중정당운동의 대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민중당이 그 진로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데에 인식을 함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당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의 재편과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임시전당대회소집의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였다.

(2)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내 각 부문, 개인의 공동행동 촉구에 관한 건

민중당의 전면적인 개혁과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이해를 일치하는 교수위, 노동위, 청학위, 지구당 위원장 및 실무자 등 당내 모든 부문과 개인의 공동행동과 이를 뒷받침할 단일한 조직적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민중당 개혁을 위한 제반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당내 모든 부문과 개인에게 제한하기로 하였다.

(3)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실무자회의> 구성에 관한 건

참석자는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내 각 부문 및 개인의 공동행동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올바른 민중정당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실무로 봉사해온 담당 실무자들이 공동행동의 조직적 주체로서 참여하고 그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민중당 개혁을 위한 당 실무자회의>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민중당 광역후보 추가 공천

1. 사건일자 19910605-19910605

2. 사건내용

○ 신민·민주·민중당은 5일 광역의회선거 추가공천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신민당(7명)

◇서울 ▲관악5 이재진(51·지구당간부) ▲ " 6 백삼철(35·한국경제연) ▲ " 7 박순규(38·건대 박사과정) ◇경기 ▲의왕3 임승원(45·사업) ◇충북 ▲청주1 임현택(38·전 연청간부) ◇전남 ▲무안2 이동신(50·전당료) ◇경북 ▲금릉1 배기화(46·회사대표)

－ 민주당(15명)

◇서울 ▲용산1 서정호(45·지구당간부) ▲송동9 유인호(52·정당간부) ▲서대문3 문태섭(33·회사대표) ▲구로3 김중래(56·지구당간부) ▲영등포3 전홍기(39·정당간부) ◇부산 ▲중3 백남도(53·회사대표) ▲사하2 황대봉(36·목사) ◇대구 ▲동4 심정석(38·농원대표) ◇경기 ▲구리1 이재수(49·서예가) ◇강원 ▲춘천3 이병길(35·전도농민회간부) ▲원주시1 송두식(41·회사대표) ▲홍천1 김광룡(32·의사) ▲인제2 심성흠(34·농업) ◇충남 ▲보령2 이문규(36·정당인) ◇경북 ▲봉화1 이대홍(48·향군회장)

－ 민중당

◇경기 ▲부천 중4 유영식(39·지구당간부) ◇전북 ▲이리2 최갑선(35·지구당간부)

3. 참고자료

○ □□한국일보□□ 1991년 6월 6일자

민중당, 각 지구당위원장에게 「당면과제에 대한 임무」 명의의 문건 발송

1. 사건일자 19910611-19910611

2. 사건내용

○ 당면과제에 대한 임무

1. 당의 당면과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해드립니다.
2. 최근 <당 개혁 추진을 위한 실무자회의> 명의의 정채미상의 문건이 당내에 유포되어 당면 사업 수행에 동요와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당은 선거가 끝난 이후 6.20이후 이에 대한 경위와 진상을 조사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며, 당 발전에 관한 어떤 의견이든지 이때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충분히 논의,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4. 끝으로 지구당위원장들께서는 동요와 차질없이 당면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구당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장영호 후보 등록무효 통고

1. 사건일자 19910613-19910613

2. 사건내용

-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991년 6월 13일 서울 구로구 6선거구 민중당 장영호(41) 후보가 실형을 선고받아 공민권 제한기간 중임을 밝혀내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등록이 무효라며 서울 구로을구 선관위에 통보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6월 14일자

민중당, 강원도청의 유권자 성향보고서 관련 강원도지사 고발

1. 사건일자 19910614-19910614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4일 강원도청의 유권자 성향 등 분석보고서 작성과문과 관련, 춘천지구당 최

윤 위원장 명의로 한석용 강원도지사를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경북·구미 제3선거구 전역에서 민주당 윤상규 후보의 선거벽보가 오물로 훼손되고 찢기는 사태가 발생해 진상조사단(단장 김종길 구미시 지구당위원장)을 구성해 범인색출에 나서는 한편 검찰과 선관위에 각각 고발과 적극수사를 촉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6월 15일자

민주당, 광역의회선거 참여(총 42명 출마, 출마지역 평균 13.6% 득표, 1명 당선) 0.75% 획득
(19910620-19910620)

민주당 이우재 대표 기자간담회, “진보적 단일야당 결성” 촉구

1. 사건일자 19910627-19910627

2. 사건내용

- 민주당의 이우재 상임대표는 1991년 6월 26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과 신민·민주당 및 재야의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총결집하자”고 제의하였다, 신민·민주당의 통합논의에 대응하는 진보적 단일야당 결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91년 6월 27일자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핵심전위조직인 <애국동맹> 결성사건

1. 사건일자 199107DD-199107DD

2. 사건내용

- 최호경(민주당 성남을 사무국장)이 간첩단에 포섭되면서 90년말 경 주사과 조직원 241명을 결성한 <95년위원회>를 흡수,재편하여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핵심전위조직인 <애국동맹> 결성.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창준위)> 결성, 위원장 주대환 선출

1. 사건일자 199107DD-199107DD

2. 사건내용

- 1991년 7월 민중민주계열의 비합법 노동정당 조직체 가운데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노동계급> 등 세 조직을 중심으로 이른바 '3파연합'이 형성되어, 서면으로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창준위)>를 결성. 이후 '계룡산 모임'을 통해 이를 확인함. 위원장 주대환 선출. 1991년 12월 3일 자체 해산 결의.
- 관련자
- 주대환, 이용선, 전성, 황광우, 이상민, 최경식, 윤영상, 민영창, 이영이, 안명균, 조진태, 조근래, 신지호, 김종관, 이상귀, 한승주, 김영식 등

「민중당 개혁추진위 구성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 (19910702-19910702)

민중당 제9차 중앙위원회 (19910705-19910706)

민중당, 제3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1. 사건일자 19910708-19910708

2. 사건내용

- 참석자 : 이우재, 김낙중, 손병선, 이재오, 이원주, 정태윤, 유인렬, 장기표, 김문수, 신철영, 노영희, 박용일, 지은희 (권두영)
- 보고사항
- (1) 제9차 중앙위원회의 집단 참관인 중 당원 아닌 자가 끼여 있었음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 (2) 지은희 정치연수원장 당무 복귀
- 안건사항
- (1) 제9차 중앙위원회 후속처리

- (2) 소위 <실무자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징계논의
- (3) 대전 지구당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
- (4)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정치체도의 개혁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
- (5) 통일문제에 관한 정세변화의 상황 평가 및 당의 대응방책에 관한 논의

「민중당 개혁을 위한 지구당 위원장 간담회」 개최

1. 사건일자 19910713-19910713

2. 사건내용

- 1991년 7월 2일 민중당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드러난 당내의 이견은 개혁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민중당 위기의 원인

- (1) 지도부(구체적으로 상집)의 지도력 부재
- (2) 이념의 혼란 - 당 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
- (3) 당내 민주주의의 취약

2. 위기 해소방안

- (1) 지도력 부재 해소방안 -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전당대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전면 개편해야한다 라고 합의.
- (2) 이념의 혼란 극복방안 - 당이념에 위배된 발언이나 행동을 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기위에 제소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당 강령을 개정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다.
- (3)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 당강령과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내 분파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 당내 관료주의의 타파, 하부로부터의 의견수렴구조 강화.

3. <당개혁 실무자회의>에 대한 입장

실무자회의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감하지만 대의원규정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의견제출 통로가 마련되었고 당 개혁을 위한 지구당 위원장 모임에 개별 흡수되어 활동할 수 있으므로 실무자회의는 해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결성: 전노운협의 독자정당건설론자들이 탈퇴하여 결성

1. 사건일자 19910714-19910714

2. 사건내용

- 1990. 11. 2.
- <전국적인 대중사업지원체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차례의 대표자 모

- 임, 6차례의 추진위 모임을 통해 <전국노련 준비위> 발족을 결의함.
- 1990. 12. 21.
 - <우리노동문제연구원>에서 <전국노동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구미노동상담소 등 15개 단체를 포함, 약 70여명이 참석.
 - 공동대표 선출: 한경남(우리노동문제연구원), 정금채(안양노동상담소장)
- 1991. 6. 11
 - 대표자회의를 창립준비위원회로 전환, 창준위는 새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구성.
- 1991. 7. 1.
 - 최종대표자회의에서 규약 및 사업평가, 하반기 사업계획 시안 검토
 - 1991년 7월 14일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전국노동단체연합> 창립. 총 27개 단체.
 - 회원단체: 26개 단체
 - . 서울권역(6)-우리노동문제연구원, 동부지역민주노동자연합,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 서울노동자학교, 노동자종합학교, 구로노동자연합,
 - . 인천권역(2)-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인천민중연합노동위원회
 - . 부천권역(2)-부천민중교육연구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 . 경기남부권역(3)-안양노동상담소, 수원노동교육연구소, 안산노동자의 집
 - . 성남권역(3)-성남열린터, 성남노동자의 집, 김윤기기념사업회
 - . 강원권역(3)-광산노동자협의회, 원주노동운동연합, 춘천노동상담소
 - . 중부권역(1)-충남민주노동자연합
 - . 영남권역(3)-구미노동상담소, 마창노동교육연구소, 대구노동자학교
 - . 전남권역(3)-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전남동부지역노동자협의회, 여수민주노동자연합
 - 참관단체: 1개단체- 가톨릭노동사목회

민중당, 개혁추진위 관련 6명 제명

1. 사건일자 19910715-19910715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1년 7월 15일 상임집행위를 열어 「당 개혁추진위 구성을 위한 실무자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홍균, 최혁, 김길오, 김정하, 한승인, 김선식 등 당원 6명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들과 함께 실무자 회의를 주도한 오세철 교수위원장, 김경식 대전 중구지구당 위원장도 조만간 징계키로 했으며, 실무자회의에 참여한 나머지 당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7월 16일자

민중당, 제3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1. 사건일자 19910718-19910718

2. 사건내용

- 참석자: 이우재, 김낙중, 이재오, 장기표, 정태윤, 노영희, 신철영, 김문수, 유인렬, 이원주
- 안건
- (1) 선거구제에 대하여
 - 민중당의 안 : 기본 선거구는 현행 소선거구에서 중, 대선구로 전환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고 이를 정당투표제에 의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한다.
- (2) 김경식 대전중구 지구당위원장 징계에 대하여
 - 김경식 위원장에 자격정지 6개월(직위해제)
- (3) 실무자회의 6명의 제명 결정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및 경위에 대하여
 - 보도 내용중 오보가 있고(오세철 위원장 징계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한겨레신문 등 해설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사가 과도하게 해석하여 기사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 (4) 이론기관지 창간에 대하여
 - 이론지의 창간 취지는 모두 동감하나, 역량의 문제가 있으므로 “노동자”와 조정을 거쳐 월요일 제38차 상집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함.
- (5) 민중당 전체 하계 연수회 계획 수정의견
 - 8월 23일부터 25일까지로 2박 3일.
- (6) 신임 대변인 임명의 건 : 정태윤 기초실장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

민중당, <당 발전위원회> 구성

1. 사건일자 19910722-19910722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22일 진보세력의 결집과 조직강화를 위해 당발전위원회(위원장 김낙중 대표)를 구성했다. 당발전위원회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시민연대회의의 등 시민단체, 전노협,전농 등 민주단체와의 공동대응방안을 찾고 당체제 정비 등 당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7월 23일자

민중당 노원을 지구당 비상 당원회의

1. 사건일자 19910723-19910723

2. 사건내용

○ 「7월 23일 비상 당원회의 보고서」

수신 : 민중당 노원을 지구당 당원 동지 전원

발신 : 민중당 노원을 지구당 사무국

민중당 노원을 지구당의 활동을 열렬한 지지의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신문보도로 민중당 내의 당권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보도된 대로 개혁파의 요구는 당 이념의 바른 해석과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을 지구당의 위원장이신 오세철 교수와 우리 지구당 상근 당원 동지들이 이 개혁파의 선두에서 싸워 온 것도 보도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보도들은 철저히 당권파의 생각을 옹기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개혁파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악의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당의 동지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세철 교수는 민교협 창설의 주도 인물로서 내내 깨끗한 선비의 자세로 민중의 편에 철저히 서서 투쟁해 온 분입니다. 또 상근 동지들은 그러한 오세철 교수의 자세를 존경하여 그분의 뜻을 실무로서 돕기 위해 노원을 지구당에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신문이 보도한 것과 같이 CA(제헌의회그룹) 계열의 동지는 없습니다. 오세철 교수와 상근 당원 동지들은 모두 민중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합법 정치활동의 영역에서 해 나가기 위해 민중당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민중당의 제3의 보수야당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권파는 이런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비판의 핵심 세력인 노원을 지구당의 상근 당원들을 다섯 명이나 한꺼번에 제명하였습니다. 이 제명 결정이 결국 개혁투쟁의 중심인물인 오세철 교수를 겨누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명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철 교수는 민중당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일에 나서고자 민중당을 탈당하였습니다. 7월 23일(화)의 비상 당원회의에서 이 결심을 밝히시고 7월 24일(수)에 중앙당에 탈당 신고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각 언론사에 탈당성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7월 23일 당원회의에서 염철성 부위원장의 한 명의 동지가 오세철 위원장의 탈당을 반대하고 당원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근 동지 전원과 지하철 노조 대의원들의 대부분을 포함한 10여명의 동지가 오세철 교수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원 회의 등으로 지구당에 나오시던 15명의 당원 동지들이 집단적 탈당을 위한 탈당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해 놓고 있는 5명의 상근당원들을 제외하고 15장의 탈당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당원으로 등록해 놓고 있는 103명의 당원 동지들 중 나머지 80여명 당원들에게 이러한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고 공동 행동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의의 집행으로 여기에 오세철 교수의 <당원동지에게 드리는 글>과 탈당신고서 용지를 보냅니다. 오세철 교수를 비롯하여 민중당 개혁 투쟁에 나섰던 노원을 지구당의 동지들은 다른 당내외의 동지들과 협력하여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이 시대의 과제에 더욱 철저하게 봉사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민중당 노원을 지

구당 사무실은 그 새로운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오세철 교수는 가칭 “노원 민중의 집”을 잠정적인 사무실의 명칭으로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노원을 지구당 차원에서 해 오던 모든 지역활동이 이 새로운 활동으로 모두 이관될 것입니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모든 동지들에게 곧 정식으로 새로운 정치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사는 입회 권유문과 입회 원서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어찌 되었든 동지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대의에 더욱 철저하게 임하려는 노력이라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여름 더욱 건강하십시오. / 1991년 7월 26일 사무국장 김정하

오세철 교수 등 민중당 교수위원 4명, <개혁추진위> 관련자 제명에 반발하여 탈당

1. 사건일자 19910724-19910724

2. 사건내용

- 민중당의 오세철 노원을 지구당 위원장(연세대 교수) 등 교수위원 4명이 7월 24일 당내 좌파세력인 「실무자회의」를 주도했던 급진파 6명을 제명시킨 데 반발, 탈당했다.

3. 참고자료

- □□세계일보□□ 1991년 7월 25일

민중당, 「지역감정에 기초한 정치구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10725-19910725

2. 사건내용

- <토론회 개최 취지> 한국정치의 파행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주의야말로 한국정치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최대의 요인이라 하겠다.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투표전략을 세움에 있어 제일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그 지역에 호남인, 영남인이 각각 몇 %인가 하는 것이 될 정도로 지역주의는 현실정치에 가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지역주의(지역감정)를 정권유지 내지는 집권연장의 최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주의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집권세력에게 있지만 현재의 지역당 구조에 안주하고 있는 야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정상화는 물론 민주화도 민중운동의 발전도 지역간의 균형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그래서 민중당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정치구조를 극복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제7차 정책 토론회 자료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박노해 사형 구형
(19910819-19910819)

민중당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 「UN동시가입 이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10821-19910821

2. 사건내용

1. 주제 : UN 동시가입 이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2. 1991년 8월 21일 (수) 오후 3시
3. 장소 : 여성백인회관 강당(6층)
4. 주제발표 : 박종화(한신대)/ 정재문(민자당 국제위원장)/ 조순승(신민당 국제외교위원
장)/ 박찬중(민주당 부총재)/ 김낙중(민중당 공동대표)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그룹(제파PD)> 사건

1. 사건일자 19910826-19910826

2. 사건내용

- 1991년 1월 경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활동가들이 사회주의사회건설을 목표로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그룹>을 결성한 뒤 구로공단 등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학습을 실시하고 5월투쟁 이후 각종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19명이 검거되어 이 가운데 중앙위원 박성인 등 13명이 구속됨.

3. 참고자료

민중당, 민주대연합 결의 “독자성 견지·제한적 연대”

1. 사건일자 19910910-19900910

2. 사건내용

민중당은 1991년 9월 10일 상임집행위원회회의를 열어 신민·민주당의 통합은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통합야당과 민주대연합을 이룰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야당과 당을 함께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민중당의 독자기반을 구축하면서 다음 총선때 연합공천 또는 정당연합 형식으로 제한적 연대를 하기로 했다.

정태운 대변인은 “신민·민주당측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제의도 없었다”면서 “민주화 투쟁의 관점에서는 민중당도 통합신당에 합류해야 하지만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9월 11일

민중당, 「전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드리는 민중당의 긴급제안서-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로 나아가자」 발표

1. 사건일자 19910912-19910912

2. 사건내용

- 「전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드리는 민중당의 긴급제안서-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로 나아가자」

우리는 모든 진보세력, 민족민주운동의 동지들에게 우리의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천적인 회답을 주실 것을 요청한다. 소련사태로 특징되는 세계적 격변, 그리고 보수야권의 통합이라는 국내 정치정세의 변화는 이 땅의 모든 진보역량에게 새로운 운동구도를 세우야 한다는 일대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총결집을 통하여 92~93년을 맞는 결전 태세를 새롭게 정비, 강화할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건설 중인 <상설연합>과 함께 모든 진보세력이 힘을 합하여 <민중정당을 새롭게>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 민중당은 이 새 민중정당의 건설이 민중운동 진영의 전체적 동의와 참여 속에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참여하려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 제안에 대한 동지들의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나아가 각 단체에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공통의 인식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인이나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중, 민주진영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 1991. 9. 12. 민중당 중앙 상임집행위원회

<전국노련>,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3자 연석회의)’ 제안 (199110DD-199110DD)

민중당 중앙위원회, 중앙상집위원회: 향후 진로결정, 민주적 진보정당 유지·강화

1. 사건일자 19910917-19910917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1년 9월 17일 중앙위원회와 중앙상집위원회를 열어 통합야당 출범에 따른 당 진로를 논의해 “민주당과는 민주화 실현의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도 아끼지 않는다”는 단서 아래 민주적 진보정당을 유지·강화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9월 19일자

민중당, 선거정치제도개혁을 위한 농성

1. 사건일자 19911028-19911101

2. 사건내용

피선거권 회복·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민중당은 1991년 10월 28일 정치자금법 개정, 양심수 석방 및 당 관계자들의 선거권 회복 등을 촉구하고 이날부터 3일간 모든 당직자들이 시한부 농성과 거리홍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우재 민중당 대표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정치협상은 금권정치·사당정치 타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각 정당에 공정히 배분하고 △선거 비용은 개인부담제를 폐지하여 완전한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구속됐던 민주인사들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합법 정당을 지향하는 민중당조차 이재오 사무총장 등 40여명이 규제에 묶여 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진보세력의 건전한 육성과 민주적 선거를 떠드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며 구속된 민중당 간부 16명 등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시국사범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1년 10월 29일자

민중당 14대 총선 백 여명 공천 추진

1. 사건일자 19911109-19911109

2. 사건내용

1991년 11월 10일로 창당 1주년을 맞는 민중당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14대 총선에 1백 여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30억원의 기금모금과 △중앙위원(87명) 전원의 총선출마 및 조직책공모 등을 통한 외부인사영입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또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시도, 총선에서 범민주단일후보를 내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고 민주당측과 재차 교섭을 시도하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선거준비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1년 11월 9일자

<국제사회주의자들(IS)> 결성 사건

1. 사건일자 19911110-19911110

2. 사건내용

- 트로츠키 사회주의 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

사노맹 출범 2주년을 맞아 노동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발표 (19911110-19911110)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기본 일정 합의

1. 사건일자 19911111-19911111

2. 사건내용

- 1991년 11월 11일 서울의 주대환, 인천의 이용선, 경기남부의 전성, 대구의 민영창, 전국노동단체연합의 김의수 등이 모여 이제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을 창당할 시점이라는 데 대해 공감하고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기본일정을 합의했다.

<노정추>, 추진위원 서명작업 시작

1. 사건일자 19911115-19911115

2. 사건내용

- <동지가 노동자 정당의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목의 추진위원회 결성제안문을 작성하여 1991년 11월 15일부터 서명작업을 시작했다. 서명은 전노협 산하의 노동조합 위원장들, 대공장의 노조지도자들, 전국노련 산하의 상담소, 교육기관의 대표를 비롯한 각 지역의 노동운동가들, 기타 노동운동에 종사해온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결과 불과 한달 만에 전국 주요 공업지역을 포괄하는 21개 지역에서 240여명의 지도자들이 노동자정당 건설의 대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민중당 창당 1주년 기념 시국 강연회

1. 사건일자 19911116-19911116

2. 사건내용

- 민중당 동작구 갑지구당은 민중당 창당 1주년 기념 시국강연회 “한국정치의 미래, 이렇게 열어가자”는 제목으로 민중당 정책위원장이자 동작구 갑 지구당 위원장인 장기표가 강연을 하였다.

민중당, 청와대서 노태우씨와 면담

1. 사건일자 19911118-19911118

2. 사건내용

구속자 석방 요구에 “검토 후 조치” 밝혀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중당의 이우재 상임공동대표,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원장 등 3명과 만나 선거공영제 실시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노대통령과 이상임대표 일행의 면담은 현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진보정당의 대표를 만난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혁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중당의 출범이 우리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혀 민중당이 제도권 정당임을 인정했다.

노대통령은 정치현안과 관련,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제, 『아울러 비례대표제

도입 및 정치자금의 배분문제는 개선하도록 민자당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정부관계부처에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국내외 여건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하고 민중당이 시대의 조류와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당노선을 정립해야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민중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대결정치를 지양,여야 공존원칙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이 요구되며 국민통합과 새 정치를 이루어 나가야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정치자금의 원외정당배분 △민중당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총독표율에 의한 정당별 비례대표제 도입 △구속자 석방 등 5개항을 요청했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1년 11월 18일자

<민중회의 준비모임>, 「전국노련, 민중당, 민중회의간의 연석회의에 대한 민중회의 준비모임의 태도」 발표

1. 사건일자 19911120-19911120

2. 사건내용

- 「전국노련, 민중당, 민중회의간의 연석회의에 대한 민중회의 준비모임의 태도」
- 1991년 10월경부터 전국노련에 의해 제기되어 온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3자 연석회의)가 지난 11월 13일 민중당, 민중회의, 전국노련의 각 3인씩의 대표자가 참석한 속에서 첫 정책토론모임을 가짐으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민중회의 준비모임으로서는 기존부터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진영의 총결집을 주창해왔던 바이므로 이러한 3자연석회의 제안은 민중회의 준비모임의 의도와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3자연석회의에서 다음의 사항이 결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 3자연석회의의 합의된 결과로 만들어질 기구의 명칭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한다.
- 연석회의에는 민중회의, 민중당, 전국노련 등이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참여하며 각 지역과 부문의 단체의 참여를 추동한다.
- 연석회의는 향후 민중민주노선에 철저히 기초하여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통일된 민중투쟁을 전개하는 틀이며 총선대응은 그 주요한 부분이다.
- 연석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중당의 당론이 된 “민주당과의 연합공천 추진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선거방침과 관련한 모든 것은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 총선대응의 기본은 전면적으로 민중의 독자후보를 내세우는 것이다.
- 총선 이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민중정당을 건설하며 연석회의가 이후 새로운 민중정당의 건설을 주도할 수임기구가 되도록 한다.

- 새롭게 건설될 민중정당은 연석회의의 발전된 모습으로 건설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민중당은 지금까지의 우경화된 모습을 자기비판하며 당을 해소한 후 새 정당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는 되도록 이후 건설될 민중정당의 틀로 진행하며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진전의 계기가 될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독자적 민중후보를 추대해야 한다.
- 이상의 내용은 연석회의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담당할 주체대오로 건설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11월 13일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민중당의 연합공천 추진결정 철회와 당면 총선에서의 전면적인 민중의 독자후보추대, 그리고 대선에서의 민중후보의 추대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이 불분명하게 처리된 반면 정당건설의 시기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였던 바 민중회의 준비모임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필수적 전제인 이상의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확고한 합의 속에서 정당건설의 시기가 논의되는 것이 타당한 진행임을 주장한다. / 1991년 11월 20일 민중회의 준비모임.

민중회의 준비모임, <민중회의> 결성 제안

1. 사건일자 19911120-19911120

2. 사건내용

- 「민중의 정치조직, “민중회의” 결성을 제안한다」
- 민중권력을 향한 변혁투쟁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써 시작한다. 87년 대통령선거 때의 독자후보 전술을 계기로 재건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노선은 그 후 민중의 당과 진보정치연합, 민중당 등의 실천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대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민중당 지도부의 우경노선은 창당 이래 민중당을 계속적으로 ‘민중노선’에서 이탈시켜왔다. 민중정당운동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광범위하게 고조되고 있다. 92년을 앞두고 지배세력의 보수대연합 체제 안착기도를 분쇄하고 민중권력 수립투쟁의 유력한 진지들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의 대오를 정비할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 시기에 보수 야당에 투항하는 ‘민주대연합’ 노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실은 ‘민중노선’의 정치일정을 구현할 새로운 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중진영의 각 지역, 각 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향한 다양한 흐름과 문제제기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의 결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 민중회의를 제안하는 이유이다.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 1991. 11. 20. 민중회의 준비모임

3. 참고자료

- 민중회의 준비모임, 「민중회의 결성제안서」(1991. 11. 20.)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결성대회: 추진위원장에 오세철 교수 선출

1. 사건일자 19911128-19911128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추진위>는 1991년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소재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무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지고 「결성선언」을 공포하였다. 추진위원 및 참관인 80여명이 참가하였고, 추진위원장으로 오세철 교수를 선출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추진위원회 지역부문 대표자 간담회 자료집」(1992. 1. 25.)

<민중회의 추진위>,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92총선투쟁방침” 시국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11205-19911205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추진위원회>는 임박한 총선에 대한 민중진영의 올바른 대선방안을 모색하고 민중진영의 단일한 총선대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주최로 2000여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시국대토론회를 고려대 이공대 대강당에서 가졌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추진위원회 지역부문 대표자 간담회 자료집」(1992. 1. 25.)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 발족식

1. 사건일자 19911215-19911215

2. 사건내용

-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0여개 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241명의 노동조합 지도자와 노동운동가, 농민, 도시서민 등이 모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3. 참고자료

- 「민중당 관악(을) 지구당 창당대회 자료집」(1992. 3. 1.)

<노정추>, <한국노동당(가칭)>을 창당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 사건일자 19911216-19911216

2. 사건내용

- 1991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 장로회 선교교육원 제1회의실에서 박종현 광주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정은 서울 노동조합협의회 부의장, 황선진 인천민중연합의장, 소순삼 대우조선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부의장, 주대환 한국노동당(가칭)건설추진위원장 등 7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1992년 2월 초순 <한국노동당>(가칭)을 창당하기로 선언했다.

<전국노련>, 노정추 결성에 즈음하여 「노동자정당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성명 발표

1. 사건일자 19911217-19911217

2. 사건내용

- <전국노련>은 1991년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노동자가 진정 주체가 되어 기필코 민중권력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 분산되어 있는 각 정파와 정치조직 등 모든 민중운동세력이 합류하는 노동자정당이 되어야 함,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이 함께 할 것” 등을 강조.

노동자정당건설 서울추진위원회 발족

1. 사건일자 19911219-19911219

2. 사건내용

- 전국추진위원회 결성 이후 노동자정당 건설의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정당 건설 서울추진위원회 결성.

3. 참고자료

- 「민중당 관악(을) 지구당 창당대회 자료집」(1992. 3. 1.)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1차회의 결정사

항” 인준

1. 사건일자 19911226-19911226

2. 사건내용

- 민중회의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타조직과의 연대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산하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민중당, 노정추와의 합법주의, 개량주의적 경향과 구별되는 과학적 민주노선 진영의 단일한 정치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새건추, 인천민정추, 노동계 일부가 통합, 민중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중앙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차회의 결정사항을 심의, 통과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지역부문 대표자 간담회 자료집」(1992. 1. 25.)

<민중당>, <노정추> 통합 합의

1. 사건일자 19911230-19911230

2. 사건내용

- <민중당>과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노정추)>는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통합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민중당과 노정추 양측 실무대표 6명은 30일 접촉을 갖고 노정추의 창당발기인대회 직후인 1월말 쯤 양측이 결합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였다. 민중당의 정태윤대변인은 이와 관련, “노정추의 실체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이들과의 결합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국민일보」 1992년 1월 1일자

<민중회의 추진위원회>-<노정추> 회담

1. 사건일자 199112DD-199202DD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추진위원회>는 총선에 대응하는 범독자후보진영의 단일한 조직적 대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중당>, <노정추>와의 공동행동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

하기 위하여 노정추와의 대표 및 실무회담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졌다. 그러나 공동대응의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양자의 견해 차이가 확인되었고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 민중당과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노정추)가 통합을 위한 협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민중당과 노정추의 3인 통합실무협상대표들은 5일과 6일 잇따라 접촉을 갖고 1월중 당대당 통합을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 후 당명에 관해서는 민중당측이 총선 때까지 「민중당」 당명을 쓸 것을 주장한 반면 노정추측은 「한국 노동당」으로 할 것을 주장, 의견이 엇갈려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양측은 두 차례 접촉에서 통합 후 3개월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 완전경선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되 그 이전까지는 공동대표제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하는 데에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추측은 6일 접촉에서 작년 말 민중당을 탈당한 민중회의 그룹도 통합신당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노정추측은 오는 19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민중당은 7일 노정추측과 경합될 가능성이 없는 50여개 지역의 공천자를 1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추진위원회 지역부문 대표자 간담회 자료집」(1992. 1. 25.)
- □□동아일보□□ 1992년 1월 6일자

노정추, 「민중운동 정치역량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한 제안」 발표

1. 사건일자 19920106-19920106

2. 사건내용

- 노정추는 민중당과의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1월13일까지 회신을 요구하는 「민중운동 정치역량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한 제안□□」을 내놓으면서 당대당 통합을 제안.
- 제안 내용은, 첫째,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명은 한국노동당으로 하며 둘째, 통합 후 3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완전한 경선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대표제로서 임시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것임

3. 참고 자료

- 노정추, 「민중운동 정치역량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한 제안□□」(1992.12.6)
- “민중당, 노정추 통합 어디까지 왔나”, □□말□□(1992. 2.)

민중당 총선후보 50명 발표

1. 사건일자 19920106-19920106

2. 사건내용

민중당은 6일 14대 총선에 출마할 1차 당후보 내정자 5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어 이달 말께 옛 혁신계인사를 포함한 추가공천자를 발표해 14대 총선에 모두 1백여 명의 후보를 출마시킬 방침이다.

1차 공천에는 이우재 상임대표(서울 구로을), 장기표 정책위원장(동작갑), 이재오 사무총장(은평을), 정태운 대변인(구로병) 등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직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민중당은 7일 낮 이 대표의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14대 총선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중당은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와의 통합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추가공천 발표 때 양쪽의 지분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후보내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10)=△성동갑 김철수 △성동병 유윤석 △구로을 이우재 △은평갑 노영희 △은평을 이재오 △동작갑 장기표 △구로갑 김문수 △구로병 정태운 △서대문갑 지은희 △서초을 손병선

◇부산(2)=△부산진을 김영수 △금정 권현주

◇대구(4)=△서갑 김현근 △서을 장명숙 △동갑 이윤석 △달서갑 이종수

◇인천(4)=△중동 이원주 △남동 박귀현 △서 김종용 △북을 송경평

◇광주(1)=△서울 김결

◇경기(9)=△안양갑 송운학 △부천중갑 신철영 △부천중을 이병현 △안산·용진 이두백 △광명 유인열 △성남을 임동현 △구리 박수천 △시흥군포 박재영 △수원권선갑 이관돌

◇충북(1)=△청원군 한기달

◇전북(2)=△전주을 이진일 △이리 최갑선

◇전남(2)=△순천 김남준 △강진·완도 장영근

◇경남(2)=△마산을 임수태 △울산동 최봉수

◇경북(9)=△포항 김병구 △구미 김종길 △영주·영풍 정승만 △안동시 김성현 △안동군 김선택 △영양·봉화 권영일 △예천 김휘대 △청송·영덕 이무호 △울진 황윤길

◇강원(4)=△춘천 최윤 △정선 정운환 △태백 배진 △춘성·인제·양구 하광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2년 1월 7일자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결성대회> 일정 확정

1. 사건일자 19920106-19920106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새로운 민중정당건설추진 준비위원회(새건추)>, <인천 민정추>, 노동계 일부가 통합되는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결성대회>를 1월 25일 열기로 하였다. 아울러 총선에 대응하는 범독자후보진영의 단일한 대오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추진위원회 지역부문 대표자 간담회 자료집」(1992. 1. 25.)

<새로운 민중정당 건설추진 준비위원회(새건추) 전국대표자회의> 발족

1. 사건일자 19920111-19920111

2. 사건내용

- 1992년 1월 11일 종로구 소재 한일관에서 <새로운 민중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의 전국대표자회의가 개최됨.

3. 참고자료

- 「새로운 민중정당 건설추진 준비위원회 전국대표자 회의」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사건

1. 사건일자 19920111-19920428

2. 사건내용

-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활동과 관련해 1992년 1월 11일 위원장 주대환, 사무국장 민영창, 대외협력부장 이용선, 조직부장 전성 등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일 구인회, 이상민, 최정익, 여을환, 정광필, 임영탁 등 구속, 4월 28일 신형록, 송은하, 이호성, 이지연, 한삼현, 이정태 등을 구속한 사건임.

<전노협> 4차 중앙위원회, 노정추 활동과 관련한 입장 결정

1. 사건일자 19920114-19920114

2. 사건내용

- 전노협 중앙위위원회는 노정추 활동과 관련하여 첫째, 전노협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지 않으며, 둘째, 전노협 임원의 경우 직함사용을 자제하며, 셋째, 전노협의 임원은 정당참여시 대외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공공연한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결정.

3. 참고자료

- 「전노협 4차 중앙위원회 회의록」(1992.1.14)

<민중당 중앙위>, 노정추와의 통합에 대한 기존 상집안 제출

1. 사건일자 19920116-19920116

2. 사건내용

당명은 <민중당>으로 총선에 대응하고 총선 후 다시 논의한다. 지도체제는 현재의 대표체제로 하고 상집위원은 공동배분할 수 있다. 회의 시작부터 분납금 미납자에 대한 표결권, 발언권 제한문제를 민중당 상집에서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회의진행이 되지 못하고 노정추측 중앙위원의 퇴장으로 회의 유회.

<노정추>, 「한국노동당(가칭) 탄압을 중단하라!!」 발표

1. 사건일자 19920118-19920118

2. 사건내용

- 「한국노동당(가칭)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15일 전국 20여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241명의 지도자와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이하 노정추)를 결성하였다. 정치적 무권리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노정추의 결성에 환호하였다. 태백의 광산노동자에서 거제의 대우조선 노동자들까지도 노동자정당 결성의 열기는 달아올랐으며 노정추는 순식간에 전국 27개부를 꾸리고 4천명이 넘는 창당발기인을 모았다. 그리하여 노정추는 1월 19일 한국노동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잠재해 있던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적 욕구를 하나로 결집하여 합법적인 노동자정당의 창당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노정추의 주요간부에 대한 강제납치, 불법감금, 편법적인 구속수사를 자행함으로써 역대 독재정권의 구시대적인 탄압행각을 또 다시 시작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1월 10일과 11일 총무부장 민영창씨(구속)와 선전부원 여을환씨를 폭력적으로 연행한데 이어 17일 또 다시 주대환 추진위원장, 전성 조직부장, 이용선 대외협력부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우리 노정추는 창당발기인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정추의 핵심간부의 대거 연행사태를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진보세력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언까지 한 마당에 현 정권이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일말의 정당성도 사라진 국가보안법의 망령으로 가하고 있는 한국노동당(가칭)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우리는 일천만 노동자의 굳센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된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제정당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현 정권의 한국노동당 창당방해 책동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이다. 1. 정부는 합법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한국노동당(가칭) 창당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3. 경찰청은 연행된 주대환 위원장과 집행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 1992년 1월 18일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전국노련>, 「합법적인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 <노정추> 주대환 위원장, 전성 조직부장, 민영창 총무부장 등 주요 간부연행과 관련한 항의 성명서
(19920118-19920118)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민중당 등에 민중후보추대위 구성 제안

1. 사건일자 19920118-19920118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추진위원회>(위원장 오세철 연세대교수)는 1992년 1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4대 총선에서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민중후보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자고 민중당과 노동자정당건설 추진위에 제의했다. 민중회의는 이와 함께 ▲오세철 위원장(서울 노원을) ▲김광수 민중회의 집행위원장(은평을) ▲김철수 민중회의 사무처장(성동갑) ▲박귀현 인천민중회의 대표(인천남동) ▲김영규 인하대교수(인천 북구갑) ▲우희정 택시노조위원장(충남 논산) ▲김창용 부산시민연합 상임위원(부산지역) ▲박성수 부산해양대교수() ▲최갑선 민중당지구당위원장(전북 이리)등 9명의 총선출마자를 발표했다.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92년 1월 19일자

<한국노동당(가칭)> 발기인대회

1. 사건일자 19920119-19920119

2. 사건내용

- <한국노동당(가칭)> 발기인대회(한노당추진위) 29개 지부, 3520명의 발기인. 주대환 위원장 외 ‘한노당’ 지도부 구속. 이날 대회에는 창당발기인 3,000여명, 참관인 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대회에서는 발기취지문 채택, 창당준비위원장 및 부위원장, 창당준비위원의 선출이 있었다. 발기취지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국유화한다. 2. 재벌의 해체는 시대적 요구이다. 3. 대재적인 군비축소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이루어야 한다. 4.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5. 농산물 수입 개방을 막고 농업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루어내야 한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는 주대환 추진위원장이, 부위원장단은 류민용 서울노정추위원장(서울노련 공동의장, 관노협위원장), 황선진 인천노정추위원장(인천민중연합회장), 전희식 전노협 대공장 특위위원, 이학용 마산 창원 노정추위원장, 정봉희 광주 노정추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민중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 공식제안 및 기자간담회

1. 사건일자 199201DD-199201DD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추진위원회>는 범 독자후보진영의 3분립 현실에 기초하여 총선에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민중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안)」을 민중당, 노정추, 민중진영 제 단체에 공식 제안하였다. 더불어 과학적 민중노선진영의 단일한 정치조직으로 출범할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민중회의의 총선대응 방침, 민중회의의 후보단 1차 발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추진위원회 지역부문 대표자 간담회 자료집」(1992. 1. 25.)

<민중회의 추진위원회 결성대회> 2월 9일로 연기

1. 사건일자 199201DD-1992)1DD

2. 사건내용

- 1992년 1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결성대회를 장소문제 등 준비일정과 지역 준비상황에 맞추어 2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추진위원회 지역부문 대표자 간담회 자료집」(1992. 1. 25.)

<민중당>과 <한국노동당 창준위>,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교섭 마무리, <통합민중당> 창당 기자회견문 발표

1. 사건일자 19920207-19920207

2. 사건내용

- 1992년 1월 19일 <한국노동당(가칭)> 발기인대회 이후부터 통합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15차례의 협상 끝에 1992년 2월 7일 양측 대표들은 합동기자회견에서 “당명은 민중당으로 하고 지도체제도 민중당의 현3인공동대표제를 유지하되 총선 후 2개월내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한국노동당으로의 당명변경과 새로운 지도부 구성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통합을 선언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신입회원 1차 교육자료집」(1993. 5. 15.)
- □□세계일보□□ 1992년 2월 8일자
- “한국노동당은 왜 민중당과 통합했나”, □□월간 길□□(1992. 3.), pp.202-205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920209-19920209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추진위>는 <민중연합>,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민중정치연구소>, <전국연합> 일부, <새로운 민중정당건설 추진위원회> 일부,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 인천민중회의(인천 민정추)>, <대전민중정치연구소> 등과의 통합을 통해 1992년 2월 9일 <민중회의 준비위원회>로 결성되었다.
- 이를 통해 <민중회의 준비위>는 전국 각 지역에 20여개의 지역본부, 지부 또는 연락소를 포괄하게 되었다. <민중회의 준비위> 결성 현장에서 <민중진영 독자정당 지지와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학생선거투쟁연합>의 전국조직을 결성하는 집회가 있었고, 양자의 연합집회가 <민중회의 준비위> 결성대회 제2부의 형식으로 열렸다. <민중회의 준비위>는 <민중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의 구성을 제의한 바 있고 <전국학생선투련>은 그 제안을 받아 <민중진영 단일선거연합> 건설을 양자의 연대로 추진할 것을 제의했으며, 이에 <민중회의 준비위>는 <선투련>의 전국조직이 실질화하는 대로 <단일선거연합>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요 간부는 오세철 구 민중당 교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청련에서 활동하

던 이우성 사무처장, 구 민중당 국제분과에서 활동하던 최형록 기관지 위원장, 박정구 대변인 등이다.

3. 참고자료

- □□월간 길□□(1992. 9.), p.66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민정추)>, 「민중회의와의 통합결렬 및 민중진영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중회의와의 통합결렬에 대하여 노동자, 민중동지들에게 보내는 사과문」 발표

1. 사건일자 19920214-19920214

2. 사건내용

- 「민중회의와의 통합결렬 및 민중진영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민중진영 단일정당> 지향을 <민중회의와의 통합>과 맞바꿀 수는 없다.

2. 통합결렬의 원인과 그 책임을 묻는다.

(1) 통합의 배경과 그 기본정신

(2) 통합결렬의 원인이 된 민중회의의 입장변화

(3) 민중회의는 통합결렬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민중회의의 잘못된 노선을 비판한다.

(1) 민중회의는 어떤 조직인가

(2) 무책임하고 무력한 총선대선 대응방침

(3) 민중통일전선운동과 개량주의에 대한 잘못된 관점

(4) 노동해방운동의 조직적 결집에 끼치는 위대한 영향

4. 민중진영 단일정당 운동의 객관적 조건변화와 향후 진로

(1) 민중진영 단일정당 운동의 객관적 조건변화

(2) 민중진영 총선대책기구협의회 형성을 제안한다.

(3) 2월 23일 개최될 <민생과탄 부패척결과 민중주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투쟁 결의대회>

5. 맺음말.

민중당, 제14대 총선에 51명 공천

1. 사건일자 19920215-19920215

2. 사건내용

민중당은 1992년 2월 15일 제14대 총선에 출마할 공천자 51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서울◁

△성동갑=김철수 △성동병=유윤석 △은평을=이재오 △구로을=이우재 △영등포을=나덕주
△동작갑=장기표 △관악을=유민용

▷부산◁

△부산진을=김영수 △북을=윤도혁 △해운대=이동환 △금정=김용규

▷대구◁

△서갑=김현근 △남=윤해일 △북=권형우

▷인천◁

△중-동=이원주 △남동=박귀현 △북갑=전희식 △북을=송경평 △서=황선진

▷광주◁

△동=황광우 △서갑=정봉희 △서울=김결 △북을=정용식 △광산=조진태

▷경기◁

△수원권선갑=이판돌 △성남-중원-분당=임동현 △안양갑=송운학 △부천중갑=신철영 △부
천중을=임동엽 △광명=유인열 △안산-옹진=전성 △과천-의왕=김장식 △시흥-군포=박재영
△미금-남양주=전광표 △이천=전후근

▷강원◁

△춘천=최윤 △원주=이정구 △정선=정원환 △태백=배진

▷충북◁

△청주을=이효식 △충주-중원=유재호 △청원=한기달

▷전북◁

△전주 완산=이진일

▷경북◁

△안동시=김성현 △영양-봉화=권영일 △예천=김휘대 △청송-영덕=이무호 △울진=황윤길

▷경남◁

△창원을=이학룡 △울산중=이상도 △마산을=임수태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2년 2월 15일자

민중당 선거본부 발족

1. 사건일자 19920219-19920219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선거
대책위원장에는 이우재 상임대표, 부위원장에는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원장, 황선
진 기조실장이, 선대본부장에는 김낙중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2년 2월 19일자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민정추)> 결성대회

1. 사건일자 19920222-19920222

2. 사건내용

- 1992년 2월 22일 동국대 증강당에서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 결성대회가 열려 공식출범했다. <민정추>는 16개 지부와 6개 지부준비모임을 갖고 있으며, 공식회원은 350여명. 「민중의 나라」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들 중 상당수가 사노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간부로는 위원장 김철수(전 민중당 성동갑지구당 위원장), 사무처장 이재호(전 전국연합 투쟁기획부장), 편집국장 송병희 등이 있다.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 □□월간 길□□(1992. 9.), p.67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사건 관련자들의 탄원서 제출

1. 사건일자 19920224-19920224

2. 사건내용

-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주대환, 전성, 이용선, 민영창 등이 구속되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
- 그 내용을 보면, 비합법전위조직노선 폐기, 폭력혁명노선 부정, 프롤레타리아독재 폐기 등을 확인하면서 검찰에 구속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

3. 참고 자료

- 탄원서(1992.2.24)

<민중당> 제14대 총선 11명 추가공천

1. 사건일자 19920225-19920225

2. 사건내용

민중당은 1992년 2월 2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어 11명을 추가공천하고 1차공천자 가운데 미복권상태인 2명을 바꿨다. 이로써 민중당의 공천자는 모두 66명이 됐다.

◇서울 △구로병 김경은(50·지구당위원장) △동대문갑 홍종완(56·민주사회연합 조직간사)
◇대구 △북을 서성하(32·대구시지부 노동정책연구소장) ◇경기 △이천 장홍석(32·지구당위원장) △오산·화성 박용준(33·지구당위원장) △고양 이찬의(59·민사연 정책위원) ◇충남 △서산·태안 이원근(58·전 사회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전북 △군산 김중철(36·지구당위원장) ◇전남 △고흥 김범태(39·지구당위원장) △곡성·구례 심연식(52·민사연 활동) ◇경북 △구미 윤상규(32·경북도의회 선거 출마) ◇경남 △장승포·거제 장대현(31·대우조선 직원) △창녕 김정수(60·12·13대 국회의원 출마)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2년 2월 26일자

민중당, 국가보안법 폐지 등 총선공약 발표

1. 사건일자 19920227-19920227

2. 사건내용

- 민중당은 1992년 2월 27일 이우재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군과 민방위제도폐지와 군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14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재벌해체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 투기토지 환수,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국가보안법폐지, 안기부 국군기무사 경찰의 정치개입과 대국민사찰금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2년 2월 27일자

민중당 3명 추가공천

1. 사건일자 19920227-19920227

2. 사건내용

민중당은 1992년 2월 27일 공천자 3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발표했다. ▲전북 이리 손인범(36·지구당위원장) ▲대전 대덕 선재규(37·지구당위원장) ▲경남 남해-하동 박종선(65·지구당위원장)

3. 참고자료

○ □□조선일보□□ 1992년 2월 28일자

민중당 전국구 공천

1. 사건일자 19920305-19920305

2. 사건내용

민중당은 1992년 3월 5일 제14대 총선에 내세울 전국구 후보 5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①김낙중(58·대표위원·고려대졸) ②지은희(46·여성위원장·이화여대졸) ③김문수(42·노동위원장·서울대중퇴) ④정태윤(39·대변인·서울대졸) ⑤손병선(53·조국통일위원장·부산대중퇴)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2년 3월 6일자

제14대 총선, 민중당 전국득표 1.5%

1. 사건일자 19920324 -19910324

2. 사건내용

○ 민중당 후보 51명이 14대 총선 출마. 전국득표 312,666명 1.5%(출마지역 평균 6.45%), 법적해산.

1) 민중당 14대 총선 공천자 명단(51명)

시·도	지역구	후보자	학력	주요 경력	득표율
서울	성동구 갑	김철수		(현) 지구당 위원장,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4.80%
	성동구 병	유윤석	85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80년 건국대 비상학생대표, 중소기업 및 민중경제연구소장, (현) 지구당위원장	3.32%
	은평구 을	이재오	중앙대 졸업, 72년 고려대 대학원 졸업	89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10년간 교직생활 (현) 민중당 사무총장	17.23%

	구로구 을	이우재	62년 서울대 수의학과 졸업, 67년 건국대대학원 경제과 졸업	4·19주역으로 구속, 농어촌사회연 구소 소장, 90년 진보정당준비모임 대표, (현) 민중당 상임대표	20.21%
	구로 병	김경은	83년 보수총회신학교 중퇴	89년 서울제화공 노조위원장, 서노 협부위원장, 경실련 중앙위원, (현) 서 울지역 ILO 공대 위 상임위원장, 지구당위원장	2.90%
	영등포구 을	나덕주	한국외국어대 졸업, 서강대 대 학원 졸업	20년간 교직생활, 미주로외국어학원 대표, 서강대 공 공정책대학원 원 우회장	3.67%
	동작구 갑	장기표	66년 서울대 법대 중퇴	74년 민청학련사 건 수배, 전민련 사무처장, (현) 민 중당정책위원장	21.28%
	관악 을	류민용	66년 한양대 연극영화과 중퇴	86년 민통련 부의 장, 91년 한국노 동당 부위원장, (현) 지구당위원장	2.51%
부산	진구 을	김영수	78년 한신대 졸, 80년 서울대 대학원 입학	우리교회 목사, 87년 부산국민운 동본부 상임위원, (현) 부산기독교인 권위 총무	11.27%
	북구 을	윤도혁	64년 대륜중학교 중퇴	제일교통노조위원 장, 88년 부산택 시노동자협의회 초대회장, (현) 지 구당위원장	5.28%
	해운대구	이동환	88년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일사랑도서관 대 표, 91년 부산, 양산노동단체연합 사무국장, (현) 지 구당위원장	8.54%
	금정구	김용규	강구종합고등학교 졸업	89년 원림상사노 동조합 부위원장, (현) 지구당위원장	2.83%
대구	서구 갑	김현근	83년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	88년 진보정치연 합 대구시지부장,	3.98%

				13대 총선 출마, (현) 민중당 대구 시지부장	
	북구	서상학	86년 경북대 문과대 중퇴	91년 전국노동단 체연합 중앙집행 위원 구미 노동조 합협의회 지도위 원	3.42%
인천	중구,동구	이원주	80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인천민중교육연구 소정책실장, 전국 노운 협정 책 실 장 역임, (현) 민중당 사무차장	5.66%
	남동구	박귀현	7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87년 (주)신생공 장장, 노조결성지 원으로 해고, 89 년 통일문제연구 소 정책실장	3.54%
	북구 갑	전희식	85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대우자동차 해고 자, 91년 한국노 동당 부위원장, (현) 민중당제2노 동위원장	4.95%
	북구 을	송경평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	대우자동차 해고 자, 90년 국민연 합 인천본부 공동 대표, (현) 민중당 기조실장	14.51%
	서구	황선진	80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인천민중연합 의 장, 한국노동당위 원장 직무대행 역 임, (현) 민중당 기조실장	6.04%
광주	동구	황광우	77년 서울대 사회과학대 입학	87년 백기완선거 본부기획실장 역 임	1.52%
	서구 갑	정봉희	79년 광주농고 졸업	85년 한국노동자 광주 지역 연맹 의 장, 한국노동당부 위원장	2.29%
	서구 을	김결	50년 보성중학교 중퇴	80년 광주항쟁으 로 구속, 광주항 쟁 부상자 동지회 지도위원, (현) 민 중당당기위원장	2.89%
	광산구	조진태	80년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중퇴	80년 광주항쟁 때 계엄포고령 위반	1.82%

				구속, 91년 한국 노동당 광주시지부준비위원장	
대전	대덕구	선재규	80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중퇴	87년 통일계전 노조위원장, 89년 대전노협 의장, 91년 전노협 회계감사	2.65%
경기	수원시 권선구갑	이판돌	서라벌중학 중퇴	안산노동자의 집자문위원, 전국노련정책자문위원, (현) 민중당경기도지부장	5.26%
	성남시 중원, 분당구	임동현	83년 서강대 사학과 중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회장, (현) 성남사회발전연구소 경제정책위원	2.98%
	안양시 갑	송운학	81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74년 민청학련 관련 구속, 87년 백기완추대위 공동대표, 경기남부민연 사무국장	4.61%
	부천시 중구 갑	신철영	78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서울노운협사무국장, 전국노운협 공동대표역임, (현)민중당대외협력위원장	8.99%
	부천시 중구 을	임동섭	73년 인천제물포고등학교 중퇴	87년 (주) 원방노조위원장, 전노협 조직국장 역임, (현) 지구당위원장	5.07%
	광명시	유인렬	84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현) 민중당 정치연수원장, 광명교육문화센터이사장, 연극연출가	8.46%
	안산시 용진군	전성	85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80년 반전두환시위로 구속, 92년 한국노동당사무총장, (현) 지구당위원장	3.49%
	시흥시 군포시	박재영	83년 중앙대 영문학과 중퇴	86년 안양노동상담소실장, (현)세계외 구간요금철폐공대위 공동의장	2.02%
	오산시 화성군	박용준	82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90년 수원노동교육연구소 소장,	2.81%

				91년 전국노동단체연합 노조사업위원장	
	미금시, 남양주군	전광표	82년 춘천 경한고등학교 졸업	90년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 (현) 원진레이온 노조 지도위원	6.38%
	이천시	장흥석	80년 이천농고 졸업	(현) 주식회사 금강 노조위원장, 지구당위원장	2.63%
충북	청주시 을	이효식	74년 남산공고졸업	(현) 속리택시노조 위원장, 지구당위원장	5.0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최형재			2.71%
	이리시	손인범	85년 전북대 졸업	90년 전민련 중앙위원, 92년 이리, 익산 쌀 수입저지 공동대책위 위원장	1.65%
	군산시	김종철	82년 원광대학교 중퇴	84년 녹두서점 대표, (현)한겨레신문 군산지국장, 진나루연구소 소장	1.70%
전남	고흥군	김범태	84년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86년 조선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80년 광주민중항쟁 시민협상대표, 89년 고흥 핵추방 운동연합의장, 고흥 환경공해연구소장,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1.73%
경남	마산시 회원구	임수태	서울대학교 졸업	전국농민협의회 감사, 민중의 당 대표위원 역임, (현) 민중당 농민위원장	7.75%
경북	안동시	김성현	독학	86년 사회민주당 안동시위원장, (현) 안동지역 댐 피해 대책위원장	2.48%
경북	구미시	윤상규	79년 김천고 졸업	87년 오리온전기 노조위원장, (현) 민중당 경북도지부 사무처장	26.72%
	영양군,	권영일	재산중학교 졸업	90년 봉화군농민	1.59%

	봉화군			회 부의장	
	청송군, 영덕군	이무호	84년 경북대 독일어교육과 중퇴	90년 청송군농민회 교육선전부장, (현)지구당위원장	2.50%
경남	장승포시 거제군	장대현	79년 대구상업고 중퇴	89년 대우조선 노동조합 사무국장 구속, 91년 장승포시의회 선거출마	12.75%
	남해군, 하동군	박종선	57년 일본 동경대 법정대학원 졸업	57년부터 일본에서 사업활동, 57년 박건물관리주식회사 대표	0.87%
강원	춘천시	최운	80년 강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중퇴	85년 강원민통련 상임위원장, 13대 총선출마, (현)민중당강원도지부장	8.97%
	원주시	이정구	80년 원주농업고 중퇴	(현)북원교통 노조 위원장, 지구당위원장	3.03%
	정선군	정운환	85년 강원대학교 수학과 졸업	86년 삼척탄좌 입사, 광산노동운동으로 3차례 투옥, (현)지구당위원장	8.60%
	태백시	배진	78년 태백기계공고 졸업	89년 성완희 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90년 장성광업소 파업비상대책위원장, 90년 광산노동자협의회 의장.	4.36%

<민정추>, 제14대 총선에 8명 출마

1. 사건일자 19920324-19920324

2. 사 건 명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전국연합 노동자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 기자회견 「민자당의 파렴치한 부정선거와 공권력 투입 및 불법 연행·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19920327-19920327

2. 사건내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자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 상임본부장 박주철(대구 수성갑 전국연합 후보) 명의로 발행된 1992년 3월 27일자 기자회견문에는 “TK의 핵심인 박철언이 출마한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안산시·용진군 선거구에서 민자당 장경우 후보측에 의하여 자행된 폭력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는 박주철 후보측 참관인이 박철언의 지지표 2장이 함께 겹쳐져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투표부정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은 이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백골단을 투입하여 박후보측은 물론이고 민주당, 국민당 참관인들까지 전원연행한 채 여당 참관인만 참가한 가운데 개표를 강행하였는가 하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동자 후보 운동원과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제해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25일 아침 이와 같은 사태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박주철 후보와 안현수 선거사무장까지 포함하여 10명을 무차별 연행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박주철 선거대책본부 부분부장인 김찬수동지(대구 경북연합 상임집행위원장)와 조직부장인 김진구 동지를 구속하였다.” “한편 안산시에서는 3월 21일 원곡국민학교에서 있었던 2차 합동유세에서 민자당의 장경우 후보가 동원한 폭력배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노동자 후보측 운동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경찰은 이날 저녁 오남석 선거사무장의 연행에 항의하러 경찰서를 찾아간 노동자들 60여명까지도 무참히 폭행한 후 전원 연행하자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정추> 제4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총선평가와 진보이념정당의 건설 필요성 제기

1. 사건일자 19920330-19920330

2. 사건내용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중당 등록취소

1. 사건일자 19920330-19920330

2. 사건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 3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4대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공명민주당(대표 고태만)과 민중당(대표 이우재 김상기)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총선에서 공명민주당은 유효투표총수의 0.1%인 2만1천7표를, 민중당은 1.5%인 31만9천41표를 얻었다.

3. 참고자료

- □□조선일보□□ 1992년 3월 31일자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민중당 조직해체안을 다수결로 결의

1. 사건일자 19920405-19920405

2. 사건내용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1차 신입회원 교육자료집」(1993. 5. 15.)

민중당 제15차, 16차 중앙위원회 당 진로 놓고 논쟁,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로 전환 결정

1. 사건일자 19920408-19920415

2. 사건내용

- 제14대 총선결과 민주당은 51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어 노력하였으나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2% 득표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법적 등록이 취소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 민주당은 1992년 4월 8일 구로을 지구당사에서 이우재 대표 주재로 중앙당 상임집행위원과 지구당위원장들이 참여한 제15차 중앙위원회(4월 8일)를 열어 당의 해산과 진로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을 해산하고 전국연합 등 재야세력과 연대 협력하자는 의견(재야연대안)”과, “재창당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재창당안)”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중앙위원 16명 퇴장, 속개된 회의에서 42대 1로 민주당 해체보다는 새로운 정치조직체로의 전환을 주장한 전희식의 안건 가결. 전희식 안은 “민주당을 바로 다른 명의를 조직으로 전환하며, 이 조직은 모든 진보 세력과 협의 연대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진보정당을 창당하여 대통령 선거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이었다. 전희식 안의 통과가 분명해지자 이우재, 장기표 등 당 상집의 다수는 퇴장하였고 이 그룹은 향후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를 결성하였다.
- 제16차 중앙위 회의(4월 15일)에서는 현 조직을 <진보정당추진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대표에 최윤 춘천 지구당 위원장, 부대표에 전희식 인천 북구갑 위원장, 김영수 부산진을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구체적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는 “대의원 대회등을 통해 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1차 신입회원 교육 자료집」(1993. 5. 15.)
- 진보정당 추진위 광주시 본부, 「진보정당 추진위 광주시 본부 결성과정 및 조직체계」(1992. 4. 28.)
- □□한겨레□□ 1992년 4월 9일자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결성: 대표 최윤 선출

1. 사건일자 19920415-19920415

2. 사건내용

-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는 14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등록취소 되면서 민주당 제 15차, 16차 중앙위의 조직전화 결의에 따라 1992년 4월 15일 결성되었다.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 차이로 <민사협>(이우재, 이재오, 장기표 등)은 분리되었다.
- 대표 최윤(전 민주당 춘천지구당 위원장), 부대표 전희식, 김영수(전 민주당 부산진을지구당 위원장), 노동위원장 노회찬, 대변인 김현근, 정책선전위원장 권우철, 대외협력위원장 최봉근 등이 주요활동가들이다.
-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한 결의문-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더욱 힘차게 매진하자!
- 1. 오늘 우리는 민주당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진보정당 운동의 미래를 열어나갈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민중당의 조직과 그 정치적 경험을 계승할 뿐 아니라, 87년 이래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성과와 전통을 이어받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조직이다.

2. 3·24총선 결과 민중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2% 득표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등록취소되고 말았다. 민중당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진보정당 운동의 선구자로서 이번 총선에서 51명의 후보를 출마시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이후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권난무와 관권개입, 그리고 망국적인 지역분열이 선거법, 정당법 상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에 겹쳐 진보정당의 위력적인 진출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주장과 역할을 국민대중 속에 분명히 해내지 못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잘못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이것이 총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분발을 위한 새로운 각성의 계기로 삼는다. 이제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느라 국민의 진보정당에 대한 높은 기대에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부응하고자 한다.
3. 민중당은 총선에서 패배하였으나 노동자, 서민의 정당 건설 노선의 정당성은 오히려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87년, 각성된 민중의 용기있는 투쟁이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와 민중해방의 가능성은 5년이 지난 오늘날 여야를 막론한 보수세력의 발호로 뒤바뀌고 말았다. 보라! 민중의 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집권여당, 소수 운동권 명망가를 수혈받아 자신을 분칠하는 것 외에는 민중진영의 어떠한 정치적 성장도 반대하고 있는 보수야당, 보수양당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이용하여 급부상한 재벌정당, 그리고 이들이 독점하여 벌이고 있는 정치판의 모습을! 이 참담한 현실은 민중의 용기있는 투쟁들을 자신의 독자적 대안을 가진 정치운동으로 성장시켜내지 못한 민중운동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있지 아니한가! 강력한 노동자, 민중정당의 필요성은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속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되고 있는 것이다.
4. 이제 광범위한 민중운동 진영 내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 모든 민중운동 진영은 과거의 주장과 실천을 깊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민중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수정치세력과 명확히 구별되는 자신의 실천과 조직과 지도자와 주의주장을 가져야만 하며, 이를 모든 국민대중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고 뚜렷하게 부각시켜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정치적 무기를 버리는 이 사업에 모든 민중진영이 힘써 나서줄 것을 바라면서,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역시 겸허하고 헌신적인 일 주체로 이에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5.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노동자 서민정치의 모범상을 창출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보수정당들이 내놓는 주의주장의 허구성과 그 정치방침들의 계급적 본심을 폭로하여 노동자 서민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는 일과 자신의 사상과 정책을 세우고 전파하는 일을 열성적이고 대담하게 벌어나갈 것이다. 노동자 서민이 스스로 정치주체가 되어 여타 정치세력에 대한 배격과 연합과 제휴의 다양한 실천을 벌어나감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경험을 한층 두텁게 쌓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들-자신의 정치적 방침을 세우고, 실천방법을 결정하고, 조직의 틀과 지도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들-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루어낼 것이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실천적 모범을 일구어 냄으로서 조만간 건설될 강력한 노동자 민중정당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1992. 4. 15. 진보정당추진위원회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한 결의문-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더욱 힘차게 매진하자」(1992. 4. 15.)
- □□월간 길□□(1992. 9.), p.67

이우재, 이재오, 장기표 등 민중당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 민중당 해체를 선언하는 광고문 게재
(1990415-19920415)

이우재, 이재오, 장기표 등 (구)민중당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 결성

1. 사건일자 19920421-19920421

2. 사건내용

- (구)민중당의 이우재 대표는 1992년 4월 20일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원장 등과 함께 구로울 지구당에서 모임을 갖고 준정치결사체 성격의 민주개혁협의회(가칭)를 발족, 재야 및 시민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재야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연말 대통령선거에 「범민주후보」를 출마시키거나 민주연립정부를 전제로 민주당과의 적극 연대를 모색한 뒤 대선직후에 정당결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참고자료

- □□한국일보□□ 1992년 4월 21일자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대통령선거 대응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20421-19920421

2. 사건내용

- 민중회의준비위원회는 4월 21일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4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진영과 연대하여 '민중대통령후보추대위원회(가칭)'를 추동해나

가는데 앞장설 것을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 「민중회의 제2차 중앙위원회 대통령선거 대응방침」(1992.4.21)
- □□민중회의소식□□ 제13호(1992.5.1)

<민정추>, 총선평가 및 민중운동진영의 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1. 사건일자 19920422-19920422

2. 사건일자

- 동국대에서 개최. 김철수 민정추위원장은 핵심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향하는 진보적 이념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전국노련>, 「총액임금제 분쇄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선봉에서」 라는 투쟁 결의문 발표: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이 주도하여 민중정부를 수립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해방 앞당기자는 내용 (19920426-19920426)

<전국노련> 한경남 공동의장, 「민중운동진영에 드리는 제안」 발표

1. 사건일자 19920426-19920426

2. 사건내용

- <전국노련>은 1992년 4월 26일 한경남 공동의장 명의의 「민중운동진영에 드리는 제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계급적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이해를 가진 진보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바르게 제기하고 그 주위로 대중을 동원해 내는 일을 한시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중후보를 추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선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민중운동진영에서 추진될 진보정당건설문제는 당면의 정치투쟁과 민중후보 추대 및 대선투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제세력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대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안기부,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 등 조직원 39명 검거 발표
(19920429-19920429)

<민중후보 추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연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1. 사건일자 19920430-19920430

2. 사건내용

1992년 4월 30일 (가칭) <민중후보 추대와 민중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연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있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교수, 여성 등 각 부문조직 활동가 20여명이 함께한 자리였다. 그 모임 이전에 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통로로 당면 과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정치적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인사가 일을 주선하는 형식으로 4월 30일의 자리는 마련되었다. 정세전망과 각 조직의 내부의견 및 가능하고 바람직한 민중진영 대선대응책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 (가칭) 민중후보 추대와 민중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연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의 취지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 취지문은 준비모임에서 위촉된 작성소위 및 검토소위를 거쳐 200자 원고지 50장 가량의 분량으로 일단 확정되었다. 취지문의 내용은 국내외 정세를 개관하고 민중진영의 다양한 입장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한 다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진영이 총단결하여 <사퇴하지 않는 대통령후보>를 추대하고 적극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중권력 창출을 향한 민중정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준비모임의 공동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민정추> 제4차 전국대표자회의: 창당 계획 논의, <창당기획팀> 구성

1. 사건일자 19920504-19920504

2. 사건내용

- 진보이념정당의 위상과 성격 등에 대해 토의. 창당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제출되었으며 중앙에서는 이에 따라 <창당기획팀>을 구성하였다.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민정추> 제5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10월 창당 결의

1. 사건일자 19920512-19920513

2. 사건내용

- 1992년 5월 12일, <민정추> 제5차 전국대표자회의가 안양지부에서 개최됨. 향후건설될 정당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가칭)사회당'이라는 입장을 결정하고 8월 창준위 결성, 10월 창당을 결의함.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민중정당건설에 대한 결정사항

1. 사건일자 19920523-19920524

2. 사건내용

- 민중회의 준비위원회는 올바른 민중노선에 입각한 정당의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요약)
 1. 「민중연대」에 대한 사업(생략)
 2. 민중정당에 대한 결정
 - 1) 민중회의 준비위원회는 민중정당이 올바른 원칙과 노선에 입각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2) 민중회의 준비위원회의 민중정당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 (1) 민중정당건설사업은 당면 민중진영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다.
 - (2) 민중정당의 건설사업은 정치조직 상호간의 결합만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의 제 과정을 통해 건설되어야 한다.
 - (3) 민중당은 계급연합당이다.
 - (4) 민중정당은 과학적 민중노선에 철저히 서야 하며 민중권력수립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5) 민중정당은 대중(적)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민중진영의 공동정치사업을 담당하며 전략적 조직에 비해 전술적 지위를 갖는다.
 - (6) 민중정당의 체계는 계급(성)을 대표하는 부문위원회와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당의 통일적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7) 민중정당의 구체적인 추진 경로, 건설 시기는 정세의 변화와 조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판단하며 그 결정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이룬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소식□□ 제16호(1992.6.3)

<진정추>, <전노연합>, <전국노련> 3단체 정책토론회: 「대통령 선거 시기 노동운동의 통일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20608-19920608

2. 사건내용

<전국노동단체연합>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그리고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1992년 6월 8일 오후 6시 영등포 산업선교회 3층 대강당에서 ‘대통령 선거시기 노동운동의 통일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운동단체협의회 정책실장 송병춘, 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실장 이종희 그리고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선전위원장 권우철 명의의 <3단체 공동발제문>인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운동이 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라는 글에서 세 단체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노동운동의 방침이 1)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후보를 내고 이를 민중진영 전체의 조직적 결의를 모아 추진하며 2)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중주도 민주연합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민주당과의 연합을 적극 모색한다 3)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고,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진영의 전대오를 포괄하는,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 ‘민주정부 수립과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일적으로!’라는 발제문에서 비판적 지지론과 독자후보론 양자를 모두 비판하면서 민주-진보 대연합에 기초한 자신의 후보,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민운동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대선전술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노동자 민중후보의 독자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참고자료

- 「대통령선거시기 노동운동의 통일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1992. 6. 8.)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와 민중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연대 준비모임> 발족 선언, 오세철, 김진균, 김철수 등 각계인사 99명 기자회견

1. 사건일자 19920609-19920609

2. 사건내용

- 민중연대준비모임은 서린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선언하고 지역연대의 건설과 재정확보 그리고 추진위를 건설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정했으며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오세철 민중회의준비위원장을 선출했다.
- 한편 준비모임은 8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서명자대회를 갖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를 내겠다는 결의를 해으며 서명자는 오세철 민중회의 준비위원장, 김철수 민중진영단일정당추진위원장, 김진균교수 등을 비롯 노동계 22

명, 문화예술계 24명, 시민정치운동계 28명, 종교출판계 4명, 학계 21명 등이다.

3. 참고자료

- “민중연대 준비모임자료”, □□민중회의소식□□17호(1992.6.15)

<진정추>(최윤), <민정추>(김철수), <민중회의 준비위원회>(오세철), <전국노련>(한경남) 4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19920610-19920610)

<민정추>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 개최, 창당계획 논의

1. 사건일자 19920619-19920622

2. 사건내용

제1차 민정추 전국수련회를 청주 매포수양관에서 개최. 2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동시에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창당종합마스터플랜이 심의 통과되었다.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전국노련 제13차 대표자회의, 대선대응과 진보정당 건설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20623-19920623

2. 사건내용

- 제13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대선대응과 진보정당건설방침을 결정
- 내용(요약)

“...대선대응과 진보정당건설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에 전국노련은 「민중연대」를 조직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그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전국노련은 민정추, 민중회의, 전국노련, 진정추 등 조직단위 중심의 “(가칭)민중후보추대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소식□□19호(1992.7.8)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 대통령 선거와 민주정부 수립방안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20624-19920624

2. 사건내용

- <민사협>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정부 수립과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세력 내에서 대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협은 각계인사들과 함께 <대통령선거와 민주정부 수립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자 : 김상현(민주당 최고위원), 강문규(YMCA총무), 이문옥(전 감사관), 강기중(전 국연합 집행위원장), 이재오(민사협총무)

<진정추> 제1차 정기 대의원대회

1. 사건일자 19920627-19920628

2. 사건내용

1992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1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대의원 279명과 참관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진보정당의 성격과 창당과 대선방침에 대한 안건에 대해 결선투표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노동자대중정당’이라는 3가지 안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됐고, 창당과 대선방침에 대해서는 ‘창당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최윤 대표등이 제출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제1주제인 창당될 진보정당의 성격은 3가지 안이 제출되었는데 세 안이 공히 똑 같은 문제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할 따름이어서 정회를 통해 3인이 정리하여 단일한 안을 제출하였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제2주제인 당명에 관한 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제출되었는데 “창당발기인대회에서 결정하되 당명에 대한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견해로 한국노동당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는 황광우외 20인의 안이 318명중 189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시간이 넘어 10시 20분경 27일 회의를 마치고, 28일 오전 9시 15분부터 회의가 속개되어 창당과 대선방침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창당방침에 대해서는 3가지 안이 제출되었는 바, 2차에 걸친 표결에 의해 “14대 대통령 선거전에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시점을 사업을 통한 창당조건외 확보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내의 연대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최윤 대표외 10인의 상집안이 1차 투표시 103

표, 2안인 황광우 안이 143표, 3안이 조근래 안이 85표로 결선투표에 들어가 184표로 통과되었다. 이어 대선방침에 대해서도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진정추는 14대 대통령선거에 여러 민중운동 세력과 협력하여 노동자 민중을 대변할 후보를 내며 그 후보는 정당의 후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최윤 대표의 10인의 상집안이 통과되었다. 1차 투표시 1안(최윤 등 상집안) 114표, 2안(조근래안)이 76표, 3안(황광우안)이 133표로 결선투표에서 1안이 173표, 3안이 146표로 1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요한 모든 방침들이 결정되었고, 모든 과정은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안건> / 1. 어떤 진보정당을 만들 것인가 / 2. 창당과 대통령 선거 대응 / 3. 창당과 대선을 위한 사업방침 / 4. 기타안건

<진정추 제1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결의안>

제1주제 창당될 진보정당의 성격 -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
창당될 새로운 정당은 진보대연합에 기초하여 노동자계급에 깊게 뿌리내리면서도 도시빈민, 농민, 진보적 학생과 지식인 등 다양한 계급, 계층을 포괄하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창당될 진보정당은 공개성, 다양성, 민주주의의 기초위에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며, 상호설득과 공개적 경쟁을 통해 운영되는 정당이다. 새로운 정당의 이념은 강령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대적인 진보이념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제2주제 당명해 대해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결정하되, 당명에 대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창당될 진보정당의 당명으로 <한국노동당>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제3주제 창당방침에 대해 -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한다.

14대 대통령 선거전에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시점은 사업을 통한 창당조건의 확보,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내의 연대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주제 대선방침에 대해 - 민중운동세력과 협력 민중후보를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14대 대통령선거에 여러 민중운동세력과 협력하여 노동자, 민중을 대변할 후보를 내며, 그 후보는 정당의 후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주제 사업에 대한 결의 - 사회대개혁 캠페인을 벌인다.

- 조직강화를 위한 특별결의
- 대통령 선거대응을 위한 기금마련 특별 결의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 전개 결의
- 사회대개혁을 위한 캠페인 결의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시 중구지부, 「진정추소식 7호」(1992. 6. 30.)
- “지상중계: 진정추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민중회의소식□□18호(1992.7.8)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제4차 중앙위원회, <민중정당건설소위원회> 구성 결정

1. 사건일자 19920630-19920630

2. 사건내용

- 민중회의는 제4차중앙위원회에서 민중정당건설에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민중노선에 입각하여 민중정당을 건설할 것이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강령과 규약제정을 작업 목표로 삼는 <민중정당건설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소식□□19호(1992.7.8)

<진정추>, <민정추>,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전국노련> 4개 단체 대표 자회의 개최,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 결성

1. 사건일자 19920702-19920703

2. 사건내용

- 1992년 7월 3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최윤), 민중회의 준비위원회(대표 오세철), 민중진영 단일정당추진위원회(대표 김철수), 전국노동단체연합(대표 한경남)은 4개 단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그간 4개 단체 실무대표가 4회에 걸쳐 논의 및 합의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 결성 및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민중진영 단일정당추진위원회 대표자는,
 1. 연대기구의 명칭은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로 한다.
 2.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는 7월 말경 확대, 개편을 논의한다.
 3.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의 체계는 대표자회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선공동기획단,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4. <민중연대 준비모임>의 문화기획단이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산하 문화선전단을 구성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요청이 있을 때 문화계 대표 1인이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이와 같은 합의 정신에 기초한 발족성명서를 발표한다.
 6. 7월 6일 6시 운영위원회를 연다. 이하는 비공개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1) 민중연대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제도개선, 계획사업, 실무계획 2) 그 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확인된 pro 내용, 전교추 문제 등 정당건설 공청회, 대중사업 추진계획 3) 소집간사 설치문제 4) 민중연대 확대발전계획 등을 논의한다.
 7.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 발족과 관련한 실무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중연대 모임에서 준비된 만원계 등 재정사업과 관련된 사업 2)

민중연대 준비모임과 결합한 혁신계열을 중심으로 한 상층인사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3) 제도발전 문제 등을 처리할 사업방향과 계획을 갖는다.

3. 참고자료

-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자료집」(1992. 10. 5.)
- □□민중회의소식□□19호(1992.7.8)

<민중연대>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1. 사건일자 19920706-19920706

2. 사건내용

- 대선투쟁과 정당사업 추진을 위해 민중연대 산하에 대선사업단과 정당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3. 참고자료

-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자료집」(1992. 10. 5.)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민중연대)> 결성대회

1. 사건일자 19920708-19920708

2. 사건내용

- 1992년 7월 3일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민중진영단일정당 추진위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4개 단체 공동합의에 따라 1992년 7월 8일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가 결성되었다.

3. 참고자료

-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자료집」(1992. 10. 5.)

<진정추>, 강령기초소위원회 구성 (19920813-19920813)

<민중적 통일방안 마련과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개최

(19920816-19920816)

민주개혁정치모임 출범

(19920820-19920820)

<민정추> 제7차 대표자회의

(19920821-19920822)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18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1. 사건일자 19920824-19920824

2. 사건내용

1992년 8월 24일 제18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는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며 창당과 대통령선거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중앙상집은 창당일정에 대해 '지난 6월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창당을 위한 조건이 제14대 대통령선거 전에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창당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상집이 창당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은, 대의원대회에서 창당의 주요조건으로 결의한 바 있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내의 연대의 진전'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대선 전 창당에 동의할 조직은 민정추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 이념문제, 창당방침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견해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깊이 고려된 것이었다. 한편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상집은 어려운 주객관적 조건이긴 하지만 조직의 역량에 맞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선 전 창당을 유보한 상황에서 조직의 내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서울 중구지부 조직부 신입회원 자료집」

김낙중 (전)민중당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 사건일자 19920825-19920825

2 사건내용

전 민주당 대표위원이며 평화통일연구회 부회장인 김낙중(58)씨와 부인 김남기(52·은평구 교 교사)씨, 두 딸(24·22) 등 일가족 4명과 평화통일연구회 간부 등이 지난 25일 새벽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잇따라 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기부는 28일 김씨와 평화통일연구회 운영위원장 권두영(64), 사무총장 노중선(53), 김씨의 친구 심금섭(58)씨 등 4명을 연행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며 김씨와 심씨를 지난 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 강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7동 306호 노중선씨 집에 안기부 수사관이라고 밝힌 남자 2명이 들어와 노씨의 책·사진 등을 가져갔다고 노씨의 부인 송외순(41)씨가 밝혔다. 송씨는 이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씨는 베이징대학 이상문 교수를 통해 알게된 최아무개씨 등 남파간첩 2명과 국내에서 만나 공작비자로 4천만원을 받았으며, 심씨를 대표로 '청해실업'이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 국내거점으로 활용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그러나 김씨를 지난 25일 연행한 뒤 나흘이 지나도록 연행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재야단체의 소재확인 요구가 제기되자 뒤늦게 연행사실을 시인했으며, 서울형사지법은 김씨 등의 영장이 법원에 접수될 때 구속영장원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하루 뒤인 28일 오후 뒤늦게 이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김씨 부인과 두 딸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안기부가 김씨의 연행·구속사실을 숨기기 위해 격리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의 연행사실은 김낙중씨가 고문으로 있는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의장 장기표)가 지난 26일 오후 김씨의 이웃주민이라는 한 여자로부터 “김낙중씨와 부인, 두 딸 등 일가족 4명이 지난 25일 새벽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342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청년 20여명에 의해 승용차편으로 끌려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김씨집을 방문해 확인했다.

이어 지난 27일 오전에는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씨와 김씨의 친구인 심금섭씨도 집을 나간 뒤 안기부에 연행됐으며 28일 오전 7시30분께는 이 연구회 운영위원장 권두영씨가 경기 부천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연행됐다.

김낙중씨는 지난 50년대 후반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자신이 작성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임진강을 헤엄쳐 월북한 뒤 1년여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왔으며, 이 때문에 남한에서 간첩혐의로 기소됐으나 면소판결을 받았었다. 그 뒤 김씨는 고려대 강사 등을 지내면서 노동문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유신 시절 민주화운동 등으로 두 차례의 옥고를 치른 뒤 옛 민주당 대표위원을 거쳐 학술단체인 평화통일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김씨는 지난 7월 독일 연구단체의 초청으로 통일문제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최근 귀국했다.

또 권두영·노중선씨 등도 김씨와 함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권씨는 지난주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2년 8월 29일자

<민중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1. 사건일자 19920826-19920826

2. 사건내용

- <진정추>, <민정추>, <민중회의>, <전국노련>이 연대하여 결성한 <민중연대>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9월 중 지역 민중연대를 건설하고 9월 8일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이 자리에서 대통령선거 후에 창당하기로 함.

3. 참고자료

-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자료집」(1992. 10. 5.)

<전국연합> 중앙위원회 “가입단체 대통령선거 활동 금지” 결정

1. 사건일자 19920828-19920828

2. 사건내용

- 전국연합 중앙위원회에서 “산하단체는 대통령 선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서 전국노련이 민중연대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됨.

3. 참고자료

-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자료집」(1992. 10. 5.)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4차 중앙위원회 개최

1. 사건일자 19920904-19920904

2. 사건내용

1992년 9월 4일 개최된 제4차 중앙위원회는 조직 내 발생하고 있는 이견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직이 처한 내외적 조건을 고려할 때 전조직적인 논의가 가져올 혼란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직강화특위는 중앙위원회가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위위원 중 일부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 제23차 중앙상집위원회의 결정을 조직강화특위 활동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서울 중구지부 조직부 신입회원 교육 자료집」

<진정추> 제23차 상집회의에서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와 창당추진기구 구성 결의

1. 사건일자 19920916-19920916

2. 사건내용

1992년 9월 10일 진정추 중앙본부에서 제23차 상집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보고와 함께 대선과 창당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대책본부 구성, 재정확보, 후보 추대사업에 즉시 들어간다. (2) 지난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 곧바로 이에 동의하는 체세력과 함께 창당추진기구를 만든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선거대책본부 구성 직후(10월초) 까지 전회원이 1인당 3만원의 특별회비를 낸다'라고 결정했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시 중구지부, 「진정추 소식」 18호(1992. 9. 22.)

<민중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대통령 선거 준비 본격화

1. 사건일자 19920917-19920917

2. 사건내용

1992년 9월 17일 <민중연대> 회의에서 향후 정치일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어냈다. 참석자는 진정추 대외협력부장 황선진, 전국노련 대외협력부장 이준기, 민중회의 사무처장 이우성, 민정추 사무처장 김문수였다. (1) 민중연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준비에 착수한다. (2) 대통령선거의 성과를 모아 대통령선거 후 빠른 시일안에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체세력과 함께 창당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후보를 선출한 뒤 이를 대중적으로 천명한다. (3) 민중연대는 위의 1항, 2항을 지금부터 착수하고 완결되는 즉시 발전적으로 해소한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시 중구지부, 「진정추 소식」 18호(1992. 9. 22.)

<민중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대통령선거 공동기획단 구성과 창당추진기구 발족합의, 후보추대 일정 합의

1. 사건일자 19920923-19920923

2. 사건내용

- <민중연대> 대표자회의는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 및 선거대책본부 발족 일정을 합의하고 4개 단체와 청년, 학생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선거 공동기획단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민중회의 참여 4개 단체는 조직의 대표 및 공식적인 대표성을 위임받은 인사들로 진보정당 창당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자료집」(1992. 10. 5.)
- □□진보저널□□(1992.10.22)

<민중연대 대선 공동기획단> 전체회의 개최

1. 사건일자 19920925-19920925

2. 사건내용

<민중연대 대선 공동기획단>은 1992년 9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선 공동기획단의 사업을 심의하였다. 기획단은 민중연대 4개 조직의 최고 지도간부급 2인과 기획, 조정, 재정, 선전, 대외협력 등 5개 팀 책임자와 문화, 학생, 청년의 각 부문 책임자로 구성하고 기획단장(황선진 진정추 대외협력위원장)과 재정(박정구 민중회의 대변인), 선전(이우성 민중회의 사무처장), 대외협력(황광우 진정추 기초실장)등 각 팀장을 선임하였다.

<민정추> 제8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사회당 추진위로의 전화 결정

1. 사건일자 19920925-19920926

2. 사건내용

- <민중진영단일정당추진위원회(민정추)>는 1992년 9월 25일 제8차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였다. '민정추를 해소하고 사회당추진위로의 전화', '규약의 제정으로 새로운 대의체계의 결정', '대표, 고문 및 상집의 구성' 등으로 10월 3일 제1회 중앙위위회의 개최, 10월 4일 <사회당추진위> 발족식을 결정하였다.

- 「창당 및 대선에 관한 민정추 제8차 대표자회의 결의」(전문)

우리는 그동안의 대선전 진보이념정당의 창당과 진보적 민중후보를 통해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민정추는 자신을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사회당추진위언회로 전환한다.
2. 사회당추진위는 사회당 창당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진보적 민중후보를 14대 대통령 선거에 추대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3. 사회당추진위는 진보진영의 단결과 힘 있는 대통령선거투쟁을 통해 제세력과 함께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한다.
4. 사회당추진위는 대선투쟁의 성과를 모아 대선을 전후한 시기(늦어도 93년 상반기 이내) 사회당을 창당한다.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 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 □□진보저널□□ 창간호(1992.10)

민중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전국 제단체 연석회의 개최

1. 사건일자 19920930-19920930

2. 사건내용

대통령선거 공동기획단(진보정당추진위원회,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사회당 추진위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년연석회의, 민중대통령후보 추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모임, 민중대통령추대 학생선거대책본부, 민중정치 실현을 위한 교수모임) 주최로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전국의 여러 조직대표 52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전국 제 단체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5일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를 공식 발족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주최: 대통령선거공동기획단(진보정당추진위원회, 민중회의, 민중진영단일정당추진위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청년연석회의, 민중대통령추대를 위한 문화, 예술인모임, 학생선거대책본부
- 2) 주요 안건: (1) 선거대책본부 규약 및 조직체계에 관한 안-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 (2) 선거대책본부 결성을 위한 발기인 구성 안 (3) 선거대책본부 발족과 일정 계획 안 (4) 선거인단 사업 안 (5) 선거대책본부 재정 마련 안

3. 참고자료

- 「진정추 임시대의원대회 1992년 자료집」

<사회당 추진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창당과 대선방침에 대한 논의

1. 사건일자 19921003-19921003

2. 사건내용

- 민중후보 공선본에 결합하고, '대선 전 11월 창준위 결성'을 내부적 목표로 조직강화특위를 구성, 11월 창준위가 불가능 하더라도 공선본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적인 독자틀로 창당사업을 진행해갈 주체로서 위상을 결정함.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추진위 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사회당 추진위> 출범

1. 사건일자 19921004-19921004

2. 사건내용

- 1992년 10월 4일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1500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당 추진위> 출범대회가 열려 공식출범을 알렸다.

3. 참고자료

- 사회당 추진위, 「사회당 추진위 출범대회 자료집」(1992. 10. 4.)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

1. 사건일자 19921005-19921005

2. 사건내용

- 1992년 9월 30일 열렸던 「민중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전국 제 단체 연석회의」의 결정사항대로 1992년 10월 5일 여성백인회관에서 민중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3. 참고자료

-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발기인대회 및 발족식> 자료집

<사노맹>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 사형 구형
(19921006-19921006)

전국연합, 제14대 대통령선거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21010-19921010

2. 사건내용

- 1992년 10월10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연합 제1기 2차대의원대회는 그간 민중운동진영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대통령선거방침에 대해 “전국연합은 자체후보는 내지 않되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독자성 강화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범민주진영의 정치연합’을 통해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룩한다”는 내용의 제1안을 유효투표자 69%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연대와 전진□□9호(1992. 11.)
- 박장근, “노동계급의 통일단결로 야당들러리 정국을 돌파하자”, □□노동전선□□(1992. 12.)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선거대책본부> 결성대회

1. 사건일자 19921012-19921012

2. 사건내용

- 1992년 10월 12일 오후 3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6층 대강당에서 민중대통령후보 추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선거대책본부를 결성했다.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한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19921013-19921013

2. 사건내용

○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한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입장」

1. 지난 10월 10일 전국연합 대의원대회는 “전국연합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되,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독자성 강화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범민주진영의 정치연합’을 통해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룩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전국연합의 결정은 여야 보수정치세력의 전폭적인 합의하에 중립내각이 구성되는 등 보수대연합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기 민중운동진영의 과제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현시기 민중운동진영의 주요과제는 보수대연합에 대비하여 ‘정치적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후보를 내어 대통령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조를 선전하여 대중의 결집력을 강화하며,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과제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연합이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비판을 제기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이번 결정에 덧붙여진 “특정 야당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운동과 명백히 다르다”(전국연합 제1기 제2차 대의원대회 자료집 18쪽)는 제안 설명과 “독자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전국연합을 범민주진영의 단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자료집 20쪽)는 해설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해설이 단순히 ‘범민주 단일후보론’을 결정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며 선거일에 임박해서 ‘당선가능한 후보를 밀어주자’는 미명하에 김대중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운동진영 내 일부 집단이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내세웠던 ‘상대적 진보성’논리를 ‘당선가능성’논리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전국연합의 이번 결정을 김대중씨에게 대한 지지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음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전국연합은 민주당과의 정치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단체행동권 보장문제, 독점재벌 해체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국연합이 ‘범민주단일후보론’을 채택한 것이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른바 ‘뉴 DJ플랜’으로 표현되는 김대중씨의 그동안의 행적은 미제국주의와 독점재벌 그리고 군부로부터의 ‘점수를 따기’위한 것일 뿐이다. 이는 보수야당 세력이 결코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당선가능성 운운’하는 논리로 보수야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 또한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민주당이 공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대중씨의 ‘당선가능성’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매우 희박하다. 설사 실낱같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정치적 의존을 하는 것은 민주당원의 입장이지 민중운동진영의 입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1992. 10. 13. 민중대통령후보선거대책본부)

사노맹 조직국장 정명섭 무기징역, 은수미, 이은경, 김기수, 박홍순 등 중앙위원들 15년에서 12년의 중형을 구형

(19921013-19921013)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5차 중앙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 대선방침에 대한 토론

1. 사건일자 19921014-19921014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5차 중앙위원회 자료집」

<전국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1992년 대선투쟁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21016-19921016

2. 사건내용

- <전국연합> 제18차 중앙위원회에서는 1) 대의원대회 후보방침에 대한 결정 해설 2) 정치연합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결정 3) 정치협상단 구성 4) 대선방침결정에 따른 긴급투쟁 지침 결정 5) 선거대책본부 구성 결정 등이 토의, 결정되었다.

3. 참고자료

- 전국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보고」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1. 사건일자 19921025-19921025

2. 사건내용

- 1992년 10월 25일 진정추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되었고 두 개의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1안> 지난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진보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 곧바로 이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함께 창당추진기구를 만든다. <2안>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독자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 <결의안1>은 정기 대의원대회의 대통령선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대선 후로 창당을 연기한다는 기조 위에서 대선 전에 취해야 할 적극적인 창당노력을 제안한 것이었다. <결의안2>는 정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대회는 <1안>을 채택하였다. 기본노선의 폐기를 주장한 동지들은 임시대의원대회의 참가를 거부하였으며 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서울 중구지부 조직부 신입회원 교육 자료집」

<사회당 추진위>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1. 사건일자 19921028-19921028

2. 사건내용

- <사회당 추진위 10대 과제>를 사회당 강령의 지향을 밝히는 문건으로 채택. 11월 창준위 건설이 내적인 조직역량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대선에 집중하여 선분을 내용적으로 주도'하여 대선이후 사회당 건설의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여 대선 직후 1차 대의원대회에서 사회당 창당일정을 확정키로 함.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혁사노)> 건설: 1991년 5월 결성된 <노동자권력 쟁취를 위한 국제사회주의자 일동'그룹(일동그룹)>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이 가운데 현장노동자의 조직화를 중시하는 분파가 분리하여 결성

(199210DD-199210DD)

민중대통령후보 선출대회: 백기완씨 선출

1. 사건일자 19921101-19921101

2. 사건내용

- 민중대통령후보선거대책본부 주관 하에 잠실 올림픽경기장 벨로드롬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거인단과 노동자, 학생,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민중대통령후보로 백기완씨를 선출하였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1. 사건일자 19921103-19921103

2. 사건내용

- 1992년 10월 5일 개최되었던 <진정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안2>를 제출한 세력에 대해 이들의 신조를 존중하고 조직 내의 전반적인 사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대신 4개 지부를 사고지부로 판정하여 당 분란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정장추진위원회 서울 중구지부 조직부 신입회원 교육 자료집」

<민중정치실현을 실천적으로 염원하는 교수모임>, 「대통령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민중정치실현 전망을 열자」 발표

1. 사건일자 19921103-19921103

2. 사건내용

- 「대통령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민중정치실현을 전망을 열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해낸 대통령 직접선거를 이제 두 번째로 치르게 되었다. [...]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이종찬 등을 대표얼굴로 하는 보수파당 정치세력들은 결코 민중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저들이 보수대연합을 이루려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제도권 정치세력들이 범보수연합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중 어떤 정파도 독자적으로는 집권당이 될 만큼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자가 명확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판국에 이른바 민족민주 민중운동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은 저들 정상배무리 가운데 한 집단을 편들면서 그 보수 정치권 가운데 한 사람을 ‘유일한 대통령감’이라고 추켜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민주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민주당과 김대중후보에게 헌납하려는 모든 운동은 시대착오, 주체상실, 자기파괴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 [...] 민주당은 민중진영의 통일적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 [...] 민중진영은 민중 자신의 본격적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패배주의적 사고와 태도는 청산되어야 한다. [...] 만일 민중진영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는데 실패할 경우, 향후 실질민주화를 향한 우리의 운동은 또한번의 혹독한 시련과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 이런 모든 점에서 민중세력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최대한 모아내어 선거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1992. 11. 13. 민중정치실현을 실천적으로 염원하는 교수모임)

<민중대통령후보 백기완 선거운동본부>,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내각제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19921126-19921126

2. 사건내용

-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내각제 발언에 대한 입장」

1.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25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각제 추진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우리는 김대중 후보의 내각제 추진 발언은 그가 내각제를 매개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한 보수대연합구도의 완결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바이다.

2. 내각제 개헌 합의를 중심으로 90년 3당합당이 이루어졌고 이후 끊임없이 개헌논쟁이 이어져왔던 지난 정치과정과 국민당 및 소위 TK세력을 중심으로 재차 내각제개헌이 공약화되고 있는 현 정치주소를 살펴보건데, 김대중 후보의 내각제 추진의사는 그가 지난시기 정치권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보수대연합으로의 정계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호이다. 이로서 반독재민주투사를 자처해온 김대중 후보의 상대적 진보성이 소멸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3. 전국연합은 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을 이룬 것으로 김대중 후보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책연합의 핵심내용을 이루어야할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해체, 미군철수, 재벌해체 등 민중적 요구를 실현하는 근본정책이 고스란히 제외되어 있다. 더욱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처럼 정치·정책연합의 당사자인 민주당은 그 의미를 축소하고자 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국연합의 김대중 후보지지 결정은 진정한 민중적 정책연합이 아니기에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한 범민주단일후보는 백기완민중후보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1992. 11. 26. 민중대통령후보 백기완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봉태)

<사회당 추진위> 제4차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21127-19921127

2. 사건내용

- 제4차 중앙위에서 ‘정치연수원 및 대변인실을 신설’하고 ‘기관지위원회의 해소’를 결정 등 중앙체계를 개편함. 4단체와의 창당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창당의 필수적인 출발선으로 ‘당강령의 전문에 당의 이념으로써 사회주의를 명시’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연합·민주당의 합의사항 발표문」 발표

1. 사건일자 19921202-19921202

2. 사건내용

-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연합·민주당의 합의사항 발표문」

우리는 해방이후 한번도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보지 못하였다. 30년 군사독재의 결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은 왜곡되고 정체되어 왔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계층과 지역, 세대간에 갈등과 분열이 상존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오늘 우리사회에 팽배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활력있게 재창조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모든 세력들이 단합하여 민주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민주정부

의 탄생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다. 진정한 정권교체, 민주개혁을 실현할 민주정부의 수립을 모든 민주세력과 국민의 단결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정통야당의 맥을 잇고 있는 통합야당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지난 독재 통치하에서 끈끈하게 헌신해 온 민족민주운동의 총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이 같은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범민주진영과 국민들의 대단합을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민주개혁과 민주정부라는 공동목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전국연합과 민주당은 양측에서 각 8인씩의 협상대표단을 구성하여 우리사회의 절박한 개혁과제와 민주정부에 관해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사회당 추진위>, 「사회주의 합법화를 위한 선언서」 서명 작업 시작

1. 사건일자 19921206-199206

2. 사건내용

- <사회당 추진위>는 사상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21세기를 앞둔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모든 세력은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백기완 후보의 대학로유세장에서 「사회주의합법화를 위한 선언서」 발표를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음.

3. 참고자료

- 「사회주의합법화를 위한 선언서」, □□진보저널□□(1992. 12. 9.)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1216-19921216)

<백선본> 중앙선거대책위 제4차 회의: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921228-19921228

2. 사건내용

- 1992년 12월 16일 대선이 끝나고 12월 28일 백선본 중앙선거대책위 4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진정추>, <민중회의>, <사회당 추진위> 등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가 결성되었다.

<사회당 추진위> 제5차 임시 중앙위 개최

1. 사건일자 19930102-19930103

2. 사건내용

- 1993년 1월 2일-3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사회당 추진위> 제5차 임시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4차 중앙선대위의 결과를 공유하고 독자적 창당 추진의 근거와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지구당 결성 및 지부 재편방향에 대한 방침 마련안」을 통과시켰다.

3. 참고자료

- 사회당추진위, 「사회당창당을 위한 전진대회 자료집」(1993. 1. 2.)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임위원회> 활동 및 해산

1. 사건일자 19930105-19930316

2. 사건내용

1993년 1월 5일부터 3월 16일 12차 회의까지 통합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위로 끝나고 수임위원회 해산. 그 후 수임위원회에서 오세철 수임위원이 제안했던 통합안에 동의하는 단체부터 우선 통합하기로 하고 <민중회의>와 <사회당 추진위>간에 통합협상이 진행됨.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임위> 제2차 회의

1. 사건일자 19930108-19930108

2. 사건내용

오세철, 황선진, 노회찬, 박장근, 정희원, 김봉태 등이 참여하여 백선본 중앙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대선평가와 백선본 사무실 사용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선평가는 사회당추진위, 인천선본, 전국노운협, 학단협, 전국노련 대선평가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대선평가에 관해서는 수임위에서 독자적인 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는 수임위에서 하되 수임위 산하에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서 작성을 담당한다. 평가팀은 박장근, 김봉태, 정희원 씨 등으로 구성한다. 사무실 사용비 월 180만원을 3월말까지 수임위 참가 단체들이 10만원씩을 내고 나머지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조직이 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참고자료

- 출처미상, 「수임위원회 2차회의결과」

권두영 전 민주당 고문 옥중 자살

1. 사건일자 19930114-19930114

2. 사건내용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전 민주당 대표 김낙중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고문 권두영(64·평화통일연구회 운영위원장)씨가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1993년 1월 14일 오전 7시 1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기상점검을 할 때 수감 중인 8동 1층 2호 독방에 앉아 있었으나 오전 7시10분께 인원점검 때 모습이 보이지 않아 독방 안에 딸린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니 화장실 창틀에 목을 맨 채 실신해 있었다는 것이다.

권씨는 겨울내의 하의로 목을 뗐으며 발견 당시 체온이 따뜻하고 호흡이 남아 있어 발견자인 정양진(49) 교위가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동료직원들을 불러 산소호흡기를 맨 채 인근 안양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이다.

권씨는 지난해 8월말 구속돼 9월말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및 간첩방조 혐의로 기소된 뒤 그동안 두 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15일 오전 10시 3차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구치소 측은 권씨가 유서 등 자살의 이유를 추정할 만한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그러나 권씨가 목을 매기 하루 전인 13일 면회 온 가족들로부터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실업 대표 심금섭(64)씨가 지난 11일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소식을 전해 들어 이때 받은 심적 충격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의 부인 이희련(65)씨 등 유족들은 “권씨가 구속된 뒤 수형생활 이후 노후설계를 밝히는 등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있었으며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권씨는 전날 면회 온 가족들로부터 심씨의 사형구형소식을 전해 듣고 “단순한 사업목적으로 북한을 다녀온 죄밖에 없는 나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된 것이 기가 막히다. 간첩죄가 확정돼 자손들에게 대대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 겁난다”며 안타까워했으나 자살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병인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독방에서 독서·운동 등으로 소일하는 등 건실한 수형생활을 해왔다고 교도소쪽은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3부(한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권씨의 사인과 자살경위 및 서울구치소 측의 재소자관리 과정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3부는 최성창 검사를 서울구치소로 보내 현장을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권씨의 주검이 안치돼 있는 안양병원에서 김필규 검사 지휘 아래 이정빈 교수 등 서울대 의대 법의학팀의 집도로 사체부검을 실시했다. 권씨는 90년 11월5~16일에 1차로, 14대 총선 뒤인 지난해 4월28일~5월9일에 2차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2차 방북 당시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혁신정당을 만들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며 북한쪽에 50억~60억 원을 요청해 이 중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안기부에 구속됐다. 권씨는 대구상고, 고려

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51년 서울시경 미 고문관실 연락관, 59년 문공부 비서실 비서관 등을 거쳐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민사당 성동지구당 위원장, 사민당 위원장, 민중당 고문 등을 지냈다. 권씨는 89년 3월 미국에 이민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대부분 국내에 머물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3년 1월 15일자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원회> 제5차 회의: 「진보정당건설에 관련한 오세철 수입위원의 안」 토론

1. 사건일자 19930128-19930128

2. 사건내용

1993년 1월 28일 수입위 사무실에서 오세철, 황선진, 노회찬, 김철수, 김봉태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세철 수입위원의 진보정당건설에 관련한 안건을 토론했다. 오세철 위원이 제출한 안은 다음과 같다.

1. 창당추진위 건설시기 : 3월 초 경.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빠를수록 좋다.
2. 창당추진위의 강령 : 12월 28일 중선대위에서 확정된 내용을 받아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즉 백선본 강령 기조를 더욱 구체화하는 정도.
3. 창당추진위의 구성 : 1차적으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자신의 임무로 활동해온 조직이나 개인, 즉 백선본의 모든 구성원을 1차적 대상으로 한다. 단, 진정추, 사회당 추진위, 민중회의 등 3개의 조직은 해체하고 진보정당추진위로 통합한다.
4. 창당추진위의 규약: 진보정당창당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조직 등 부문조직과의 2중 회원제를 허가한다.
5. 창당추진위의 연대 관계 : 전국노련, 청년연석회의, 교육단체 협의회, 교수부문, 문화부문 등 정치적 신념이 일치하는 제 부문조직과 연대를 굳건히 한다. 즉, 진보정당창당추진위 까지 포함한 정치연합의 틀을 만들어내고, 2중회원제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실현하여 진보정당의 굳건한 연대를 이루어내어 정치사업 등을 포함한 대중사업에서의 고립성을 극복하며 상호 조직적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6. 창당추진위의 전국연합과의 관계 : 첫째로, 전국연합 내 기층대중조직(전노협, 전교조, 전농, 전빈련 등)이 정치활동을 주로 하는 여타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독립하여 계급대중조직의 연합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즉 범민주단일후보진영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조직(또는 정치연합)이 전국연합과 형식적으로 독립하게 된다면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도 전국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채 범민주진영의 정치조직과 상설 공투체를 마련하고 투쟁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두 번째의 경우, 대중조직의 연합체인 전국연합 내부에서 범민주단일후보의 정치활동부대가 계속 활동할 경우 창당추진위원회도 전국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7. 진보정당 창당일정에 대하여 : 추진위에서 창당의 일정은 1년 정도로 계획한다. 김영삼

정권 아래서 정세의 추이와 전국연합 등을 포함한 민중운동 전선의 재편 방향을 지켜보면서 창당일정을 정한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 일정 및 준비사항 점검

(19930203-19930203)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임위> 제6차 회의: 노회찬 위원이 제출한 「통합조직 건설에 관한 안」 토론

1. 사건일자 19930204-19930204

2. 사건내용

1993년 2월 4일 수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오세철, 황선진, 노회찬, 김철수, 김봉태가 참여한 가운데 제6차 수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노회찬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국의 사회주의 세력은 자신의 힘으로 독자적인 창당(사회주의 이념정당)을 건설하기 힘들며 사회주의의 공공연한 선전, 선동을 활동의 기초로 하여 당의 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따라서 진보대연합의 기치아래 노동자계급에 깊게 뿌리내리면서 도시 빈민, 농민, 진보적 학생, 지식인 등 다양한 계급 계층을 포괄하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건설을 중단기 과제로 설정한다.
2.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조직을 해체하고 (진정추 수준의) 단일한 준당적 조직으로 통합한다.
3. 통합조직은 창당의 조건을 실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등 기층 대중운동과의 결합, 지역대중 속에 활동거점의 확보, 재정자립을 위한 수단 확보 등을 주요한 활동으로 한다.
4. 통합조직은 기층대중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각급 조직, 개인들과 함께 정치연합을 결성한다.
5. 통합조직은 94년 상반기 중에 그간의 활동성과와 정세추이 등 창당조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창당일정을 마련한다.

김낙중씨 사형구형

1. 사건일자 19930211-19930211

2. 사건내용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검사)는 1993년 2월 11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내에 합법적 진위정당 건설을 기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58)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김 피고인은 진보적 지식인으로 위장해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에 입각한 합법적인 혁신정당 결성을 주도하는 등 국기를 뒤흔드는 활동에 앞장서왔다』며 『특히 김 피고인은 법정에서조차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90년 2월 북한의 연락원 등과 만났을 때 지하공작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으며 북한측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나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거나 국민에게 불안을 던져주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40여분에 걸쳐 2백30쪽 분량의 장문의 논고문을 낭독했으며 김 피고인 역시 1시간 15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김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백10만달러를 공작금으로 받아 지난 14대 총선 때 장기표씨(47·구속중) 등 민중당 국회의원후보 18명에게 7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3년 2월 12일자

<사회당 추진위> 제6차 중앙위원회: 두 개의 창당 방침 제출

1. 사건일자 19930212-19930212

2. 사건내용

<사회당 추진위> 제6차 중앙위에서 창당과 관련하여 두개의 창당 방침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결정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수입위원회> 9차 회의

1. 사건일자 19930220-19930220

2. 사건내용

- 1993년 2월 20일 열린 수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앞으로 수입위원회를 통해서 당건

설 논의를 하지말자”고 합의됨으로써 수임위원회를 통한 통합조직 건설은 일단 어려워졌다. 7차 회의에서부터 나타난 ‘당의 성격’에 대한 견해 대립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통합조직 건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수임위원회는 백선본 부채를 청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당(추)의 김철수 수임위원은 <3단체 통합에 관한 합의>(안)을 제출하였다.

○ 수임위 논의 과정

1992년 대선시기에 민중대통령 후보 백기완 선거운동 본부로 결집했던 정치세력들은 선거운동의 성과를 진보운동의 조직적 발전으로 결실 맺고자 ‘진보정당 창당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수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초기부터 수임위의 참여자격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발단은 진정추 지도부에서 중선대위의 결정을 번복한 일이었다. 표면적으로 백선본 자체가 연합조직이므로 중선대위의 결정이 각 단체에 대해 조직적 구속력이 될 수는 없으며, 수임위는 4단체의 상급이 아니라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중선대위의 정당건설에 관한 결정이 진정추의 노선과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미 중선대위의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안의 논의과정에서 진정추는 제출된 안과는 입장이 다름을 주장했고 이는 표결에서도 나타났다. 그 핵심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조로 하는 정당의 건설에 대한 반대였다. 따라서 진정추의 수임위 참여는 처음부터 백선본의 결정에 따라 창추위를 건설한다는 차원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사회당은 이에 대해 중선대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진정추가 과연 수임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진정추가 참여하는 수임위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오세철 수임위원은 진정추가 백선본의 주요세력이었으며 비록 중선대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창당 사업에서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사회당에 설득시키고 사회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수임위의 해소위기가 사라졌다.

당문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4차 회의에서 부터이다.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진정추가 창추위안과는 달리 정치연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진정추의 정치연합의 구상은 선거직후부터 진정추 내에 ‘선거결과를 통해 창당조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4단체 중심의 공식화된 창당기구보다는 노동운동내의 단체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틀을 구성하여 대중사업을 전개해나가면서 창당조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이를 판단하여 창당일정을 갖자’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에 기초한다. 특히 이는 진정추 내의 주대환 씨 계열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자통일전선론’-진정추, 노련, 노연합 등 노동3단체 통합-에 의한 반향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추의 정치연합 구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사회당의 창추위 안이건 진정추의 정치연합안-황선진씨가 제출한 것으로 무게중심은 4단체의 연합으로 두고 있다-이건 간에 만들어질 조직이 각 조직의 유지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4차, 5차회의를 거쳐가면서 이 기조는 민중회의가 일관되게 주장한 백선본 4단체의 선통합이라는 기조로 바뀌게 된다. 이는 5차회의 때 오세철 수임위원이 제출한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안’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안의 핵심은 ‘4단체 통합조직으로 창추위를 건설하고 창추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각 기층 계급 대중운동과의 폭넓은 정치연합을 구축하며 창당시기는 이 틀로 1년여의 사업을 전개한 뒤 정세추이와 전선재편 방향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회당도 진정추도 일단 그 기조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6차 회의에서 노회찬 수임위원이 <통합조직 건설에 관한 안>을 내면서부터 근본적

인 문제에 대한 이견이 나타났다. 노회찬 안은 ‘현재 남한의 사회주의세력이 독자적인 이념 정당을 건설하기 어렵고 사회주의의 공공연한 선전, 선동을 활동의 기초로 해서 당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단기적 과제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의해 대신 막바지에 창당문제를 놓고 논의하던 과정에서 진정추와 사회당 간에 근본적인 이견으로 나타났던 ‘당성격’문제가 재등장한 것이다. 사회주의적 이념 정당인가? 아니면 진보적 대중정당인가? 이 당성격의 문제는 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가 즉각적인 창당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우선 사회주의진영이 하나의 정치조직으로 모이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가칭)사회주의 정치연합’이라는 입장을 7차회의에서 제출하면서부터 ‘통합조직의 성격’이라는 문제로 치환된다. 노회찬 수임위원이 통합조직의 활동기조를 사회주의로 잡고 이를 사회주의 세력의 결집체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면서부터이다.

8차 회의는 ‘당 성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오세철 수임위원이 제출한 [통합조직 건설 합의문]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었다. 안의 합리적 핵심은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으로 ‘근본적 변혁의 지향과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계급의 관점이 관철되는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는 오세철 수임위원의 안을 둘러싸고 진정추와 사회당의 해석이 달라지는 가운데, 다시금 이견의 폭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9차회의는 통합논의에서의 최종회의였다. 김철수 위원이 제출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진보정치연합안>을 놓고 논의하였다.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은 안의 2번항-사회대개혁을 위한 진보정치연합은 남한사회주의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정추만이 아니라 민중회의 오세철 위원장과의 이견까지도 확인되고 만다. 진정추와 노련, 그리고 청년회의 등은 오세철 수임위원의 단일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반면, 사회당 측은 그 안이 당의 성격 규정에서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수임위 차원에서 더 이상 조직통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지말자는 데 대해 전체가 찬성했고, 통합에 관한 논의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민중회의」 제3호(1993. 3. 4.)

<민중회의> 제2기 1차 대의원대회

1. 사건일자 19930306-19930306

2. 사건내용

민중회의 제2기 1차 대의원대회가 3월 6일 대전 카톨릭 농민회관에서 대의원 56명중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민중회의 1년 활동평가, 14대 대선평가, 규약개정안, 예결산안, 제2기 사업계획안, 위원장 선출, 통합조직 건설에 관한 민중회의의 입장 등이 논의됐다. 대의원대회 결과 결의된 사항은 14대 대선의 성과를 계승하고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우선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만약 대통합이 결렬됐을 경우 1개월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조직의 진로를 재논의한다는 것이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민중회의」 제4호(1993. 3. 19.)

사회당 중앙위원회, 오세철 수임위원 합의(안) 지지

1. 사건일자 19930312-19930312

2. 사건내용

3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사회당(추) 중앙위원회는 오세철 민중회의 준비위원장이 수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백선본 4단체 조직통합안을 받기로 공식 결의했다. 그동안 오위원장 안이 당의 성격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던 사회당(추)은 사회주의 이념 정당 창당이 일년 이상의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또한 구 백선본 세력의 대통합이라는 과제를 사회당이 깰 수 없다는 인식을 주요한 근거로 표결을 통해 14 대 2라는 큰 표차이로 오 위원의 안을 가결시켰다.

3. 참고자료

-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민중회의」 제4호(1993. 3. 19.)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규약개정

1. 사건일자 19930314-19930314

2. 사건내용

1993년 3월 14일 개최된 진정추 제2기 정기 대의원대회는 창립 이후 1년 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조직의 당면임무를 결의하였다. “우리는 그간의 사업을 통해 창당의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성하며, 시대와 대중 및 자기를 통찰하는 과학적이고 끈기있는 자세와 장기적인 전망으로 <노동자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의 창당을 위해 계속 분투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창당에 이르는 안정된 중간단계로서 준정당적 조직으로 그 위상을 재규정한다.” 이와 함께 대회는 재정문제의 해결, 노동운동과의 결합강화, 정책개발 등을 당면과제로서 채택하였다.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는 무엇보다도 주체역량에 대한 평가, 변화된 국민의 생활 양식과 정서에 대한 대응, 재정과 정책역량 등 기본적 문제의 해결, 분명한 노선과 전망의 결여로 인한 주체역량의 감소 등에 대한 반성 위에서 있었다. 또한 이 결의는 창립 이래의 조기창당 방침의 폐기를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하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발했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일정한 시기 동안 안정적인 발전 단계를 거치는 조직으로 재규정 되었으며, 준정당적 형식은 정치의 전국성과 효과적인 정치력의 배양을 위해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회결의문> 우리는 군부, 자본가, 관료가 주도하는 한국의 보수적 정치구조를 혁신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진보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다. 지난 92년은 이를 위해 과거 민중당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적 도전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보수적 정치구조는 여전히 강력하게 국민을 사로잡고 있었고, 우리의 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제 우리는 뼈아픈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진보정당운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14대 대선을 거치면서 탄생한 김영삼 정권은 역대 군부 정권과는 다른 강화된 대중적 기반을 무기로 노동자와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89년이후 계속되어온 전체 진보진영의 침체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진보진영의 자성과 혁신이 없는 한 김영삼정권은 노동자와 민중의 희생과 고통에 근거한 새로운 지배질서를 확립할 것이고, 그것은 진보진영의 심각한 대중적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2기 대의원대회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의 교훈을 기반으로 앞으로 조직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 - 한국사회의 진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된 진보적 대중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대와 대중 및 자신을 통찰하는 과학적이고 끈기있는 자세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계속 분투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창당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전개하는 준정당적 조직으로 그 위상을 재규정한다. / -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하며 시대적 조건과 대의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제 우리는 과감한 내부 혁신과 개조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또한 진보진영 전반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겸허하고 사려깊은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새로운 힘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1933. 3. 14.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2기 대의원 일동.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서울 중구지부 조직부 신입회원 교육 자료집」

<민중회의> 제2기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통합안 승인과 민중회의 해소결의
(19930411-19930411)

<사회당 추진위> 제2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중정치연합>으로의 발전적인 해소 결의안 채택
(19930516-19930516)

<민중회의>, <사회당 추진위>: <민중정치연합>으로 통합, 출범식

1. 사건일자 19930516-19930516

2. 사건내용

- 1993년 4월 17일 두 조직은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통합조직 명칭을 <민중정치연합>으로하기로 가결정하였다.
- 1993년 5월 16일 서울시립대 강당에서 <민중정치연합>(가칭) 출범식을 갖고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해온 사회당추진위원회(대표 김철수, 노동운동가)와 민중회의(대표 오세철, 연세대 교수)가 민중정치연합으로 통합, 출범했다. 조직원 680명, 25개 지부로, 규약을 정하고 대표에 오세철, 부대표에 김철수를 선출하였다.
- 사회당추진위와 민중회의의 통합 결의문 기초
 1. 한국사회 현실에 맞는 근본적 변혁을 지향한다.
 2.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계급의 관점이 관철되는 진보적 이념의 대중정당 건설을 중단기과제로 한다.
 3. 창당의 조건을 실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기존 대중운동과의 결합, 지역 대중 속에 활동기반의 확보, 재정자립을 위한 수단 확보 등을 주요한 활동내용을 한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3년 5월 17일자
-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민중정치연합>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1. 사건일자 19930521-19930521

2. 사건내용

- <민중정치연합>은 1993년 5월 21일 서울민중연합 강당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1993년 사업목표로 (1) 노동자계급주도의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반자본주의 전선 구축 (2)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준비와 투쟁 (3) 노동자계급 대중운동을 당파적으로 강화하고 지원을 정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사무총장에 이상표, 정책실장에 김종박, 대외협력위원장에 김문수, 노동위원장에 이용근, 청년위원장에 김봉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규정을 정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민중정치연합>, 「진보진영의 진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30525-19930525

2. 사건내용

1993년 5월 25일 민중정치연합 주최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진보진영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오세철(민중정치연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1)국제정세와 남북관계 2) 한국 자본주의에 대하여 3) 정치권력(김영삼정권)에 대하여 4) 진보운동의 장기적 전망과 과제에 대해 5) 진보세력의 당면 투쟁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철수(민중정치연합 부대표), 박장근(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참여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진영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노맹 중앙위원회 재건 사건

(199306DD-199306DD)

<민중정치연합> 제2차 중앙위원회: '93년도 하반기 사업기조 확정

1. 사건일자 19930708-19930708

2. 사건내용

노동법 개정 투쟁, 고용안정 투쟁 등을 통하여 노동자를 사회대개혁 투쟁에 중심으로 세우는 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보철 투쟁과 재벌주도 경제체제를 민중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개혁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발표

1. 사건일자 19930813-19930813

2. 사건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전면적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고 있는 95% 이상의 일반 국민에게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이제까지 역대 정부가 경제에 대한 충격 운운하며 금융실명제의 실시약속을 어겨 온 것은 극소수의 가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불과하다. 특히 부정한 이권거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조성, 독점재벌의 부당한 축재 등이 비실명거래를 통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금융실명제의 전면 실시가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와 축재를 차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우리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경제개혁이 완결되었다고 보는 사회 일각의 시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체제의 해체, 부동산투기와 불로 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방위비 감축과 사회복지비 확대를 위한 재정개혁 등의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군부독재정권의 몇몇 핵심인물에 대한 사법처리수준을 뛰어넘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번 대구 동을, 춘천 보궐선거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주요한 정치관계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아울러 군부독재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1993. 8. 13.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노동관계법 연기를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발표

1. 사건일자 19930825-19930825

2. 사건내용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노동계, 경제계, 정부 부처 내의 견해의 대립”과 “경제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해칠 우려”를 들어 노동법개정을 연기하기로 한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등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잔존함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의 요구를 받아왔다. 각계에 존재하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들어 개정을 유보한 것은 ‘개혁’을 지표로 삼아 각계의 의견을 조정해야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더구나 이번 연기 결정이 경제활성화를 빌미삼아 노사관계에 전근대적인 자세를 버리고 있지 않은 자본가들의 견제와 압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개혁적 노동정책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부의 노동법 개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를 비롯한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의 독소조항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노조대표자회의를 비롯한 노동조합운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동법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지지, 지원함은 물론 현행 노동법중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1993. 8. 25.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민중정치연합> 제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1. 사건일자 19931106-19931107

2. 사건내용

<민중정치연합>은 1993년 11월 6일-7일 양일간 숙리산 관광호텔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결의와 그를 위한 4대 과제를 결의하였다. 진보정당은 1) 이념에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2) 목적은 (가) 민주주의 진전 (나) 근본변혁 실현 (다)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근로민중의 주체가 되는 권력 수립 (라) 사회대개혁 투쟁 선도 (마)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 넘어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건설로 하고, 주체는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운동의 진보적 세력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과제로 1) 계급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2) 사회주의 운동의 내용의 강화 3)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실현 4) 민중적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기를 제시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준) 대의원대회

1. 사건일자 19931113-19931114

2. 사건내용

-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년연석회의’가 11월 13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준)을 결성하였다. 1993년 7월 23일 청년연석회의 24차 대표자회의에서 “8월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두 달 정도의 준비활동,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민청 준비위로 전화, 구체적 창립대회 일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이라는 진보민청 건설 경로와 일정이 결정됐다.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는 김명옥 안민청 위원장을 선임했다. 1993년 8월 13일 진보민청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8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진보민청의규약, 강령, 사업계획 등의 마련을 위한 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준비위원은 부민노청 박재현, 사민청 홍승문, 성동지청 강성도, 안민청 변성순, 우리청년회 최혁, 중민청 허정복, 인천지역진보적청년단체 준비모임 강강용, 본부 오진석, 진광천이었다. 이를 통해 1993년 11월 13일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 창립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3. 참고자료

- “90년대 신세대운동, 청년운동”, □□진보저널□□(1993. 11. 1.)

<민중정치연합> 제1기 제4차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31203-19941203

2. 사건내용

<민중정치연합>은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상임집행위원회를 개편하였다. 사무처장에 김종박, 정책실장에 민은홍, 노동위원장에 이용근 동지가 임명받고 동의받았다. 또한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는데, (1) 진보세력의 연대강화(2) 조직정비 (3) 지방의원 선거 대책 수립 (3) 내년 상반기 노동조합운동 발전 방안 마련 (4) 전략·전술 혁신을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민중정치연합>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좌파연대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

1. 사건일자 19940302-19940302

2. 사건내용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진정한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단체 공동기자회견

1. 사건일자 19940304-19940304

2. 사건내용

1994년 3월 4일 오전 9시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황인성(전국연합집행위원장), 오세철(민정연 대표), 노회찬(진정추 대표),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 김철수(민정연 부대표), 주대화(진정추 정책선전위원장)이 참여하여 ‘진정한 정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자-민주 양당간에 합의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군부독재정권이 제정한 정치제도, 선거제도의 근본적 불평등성, 반동성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

하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노조정치활동 보장, 진보정당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법 상 취소조항과 선거법상 최소배저기준 철폐,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제한 철폐, 지정기타금제 폐지,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허용, 공직 여성할당제 도입, 여론조사결과 발표의 자유 보장, 선거공영제 전면실시 등이 제도화되어야만 진정한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참고자료

- 「진정한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단체 공동기자회견 회견문」(1994. 3. 4.)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1. 사건일자 19940403-19940403

2. 사건내용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민중정치연합>, 「94년 하반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19940624-19940624

2. 사건내용

민중정치연합은 1994년 6월 24일 영등포산업선교회 강당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민은홍(정책실장)의 발표를 바탕으로 <94년 하반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자로는 유인환(은평지구장), 김남준(여주지부장), 박정구(인천지부장)이 함께하였고, 사회자는 문중석(동대문지부장, 서울시협위원장)이 맡았다.

<진보지식인연대> 발족

1. 사건일자 19941019-19941019

2. 사건내용

서울대 김진균 교수, 김수행 교수,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교수, 의사, 재야인사 등 30명이

참여하여 <진보지식인연대>를 발족하였다. 지식인연대는 “각 부문 진보적 지식인들의 자발적, 연대적 사회운동체로 지식인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진보적 대안 제시, 노동운동, 시민운동과 연대, 진보지향적 시민운동과 연대,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공고화 등 4개항의 사업기조를 제출하였다.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진정추>와의 통합문제 논의

1. 사건일자 19950114-19950115

2. 사건내용

- 1995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속리산 파크호텔에서 <민중정치연합> 제2기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의 주된 논점은 <진정추>와의 통합에 대한 문제였다. 상집위는 「진보정당 창당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구로·마창지부에서는 「창당방침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구로·마창안의 제출자들이 자신의 안을 철회하고, 상집은 자신의 안에 대한 표결을 유보하였다. 제2기 2차 민정련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난 1월 14일, 15일 양일에 걸쳐 속리산 파크호텔에서 개최되어 격렬한 논의 끝에 ‘2안의 철회, 1안의 표결유보’-다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확정이란 결론 하에 마감되었다.

- 제안된 결의안(요약)

- 제1안: 진보정당창당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1. 민중정치연합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창당운동의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진보정치세력의 질서재편을 선도함으로써 창당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1)진보정당의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2)자본주의체제를 뛰어 넘어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의 대상과 원칙은 지난 제2기 7차 중앙위에서 결정한 진보정치세력 통합운동의 과제에 입각해서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민중정치연합은 자신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즉각 통합에 참여하기 어려운 진보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구조를 통해 사안별로 연대함으로써 상호신뢰를 높이고 진보정당운동의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민중정치연합은 제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95년 상반기 창당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창당시기를 확정하고 창당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우선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창당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창당시기를 확정하는 단계적 창당방침으로 전환한다.
4. 우리는 가능하면 96년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창당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7년 이후의 진보정당운동이 시기를 못박거나 선언을 먼저 함으로써 일정에 쫓겨 여러 창당주체와 충실히 상의하지 못했거나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못하면서 진행되었던 점을 반성하면서 선거일정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자세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진보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다.

5. 민중정치연합은 지난 시기 우리가 창당을 위한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창당의 조건을 확보하기위해 지난 제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당건설을 위한 4대과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결의한다.

- 제2안: 창당방침에 대한 결의(안)

<결의 1> 당건설을 위한 그간이 활동에 대한 평가를 조직하는 것에 관한 결의

3기정기대의원대회까지 민중정치연합 각 지부 및 전체 차원에서 그간 당건설을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조직하여 그 평가서를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결의 2>진보정당의 성격, 주체, 결성시기에 대한 재결의

민정련은 자본주의체제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진보정당은 사회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근본적 변혁의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근로민중이 주체가 되는 권력수립을 목표로 하여 사회대개혁투쟁을 선도하는 당이다. 민중정치연합은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부문운동의 진보적 세력이 주체가 되는 당을 건설한다. 민중정치연합은...95년 상반기 창당을 목표로 세웠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96년 창당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다....95년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정련 스스로의 실천과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창당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

<결의 3> 당건설을 위한 민중정치연합의 당면과제(생략)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2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 □□진보저널□□(1995.2.15)

<민중정치연합> 제3기 정기 대의원대회

1. 사건일자 19950401-19950402

2. 사건내용

- 1995년 4월 1일-2일 <민중정치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기간에 논의해왔던 <진정추>와의 통합문제를 놓고 세 가지 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1안 : ‘진보정치세력 대통합에 관한 결의’-진정추와 무조건 통합하자는 안
- 2안 : ‘창당방침에 관한 결의’-통합을 추진하되 도덕적 기풍을 확립하고 사민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탄원서 서명자 숙청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안
- 3안 :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민정련 활동방침’-진정추와의 상반기 소통합을 반대하고 좌파진영간 공동활동을 통해 하반기 대통합을 추진하자는 안
- <진정추>와의 통합에 있어서 탄원서 서명자에 대한 숙청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형성되었다. 투표 결과 1안(79표), 2안(12표), 3안(26표),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

지 못하였다.

3. 참고자료

- 「제3기 민중정치연합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1995. 4. 1.)
- 민정련의 통합안 부결에도 통합은 대세」, □□진보저널□□(1995.5.1)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창립3주년 기념식 및 제4기 대의원대회

1. 사건일자 19950402-19950402

2. 사건내용

1995년 4월 2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4기 대의원대회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정원 163명중 10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임시의장으로 김기수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선출되었으며, 대의원대회 의장은 유병기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4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조직통합에 관한 결의 1항과 2항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10월 이전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조직의 진로와 총선전략 및 창당전략에 관해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제3기 대표였던 노회찬 대의원을 제4기 대표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제3기 제1차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50412-19950412

2. 사건내용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김정추 제3기 제1차 중앙위원회가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중앙위원회에는 선출직을 제외한 27명의 중앙위원 중 16명이 참여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는 94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1994년 4월 13일자 제3기 제1차 중앙위원회 보고」

<민중정치연합> 제3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1. 사건일자 19950520-19950520

2. 사건내용

- 1995년 4월 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1안>과 <3안>의 협상을 통해 진정추와의 무조건적인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개최됨. 과반수의 대의원들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대의원대회가 진행되어, 9월 해산대회를 결정함.

3. 참고자료

- 「제3기 2차 민중정치연합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지방선거

1. 사건일자 19950627-19950627

2. 사건내용

<민중정치연합> 제3기 5차 정기 중앙위원회: 지방선거 평가

1. 사건일자 19950710-19950710

2. 사건내용

- 1) 민중정치연합 지방선거결과 집계자료: 8명 평균 득표율 20.2%

성명	출마지역	구분	순위	득표수	득표율
강원섭	서울 성동성수 2가 2동	기초의회	3/4	3182	25.78%
박육남	인천 서구 신현동	기초의회	5/5	885	7.81%
김권태	부산 연재구 학장동	기초의회	2/5	3336	23.1%
박은경	부산 연재구 연산8동	기초의회	4/4	1388	14.84%
안경옥	대구 북구1	광역의회	1/3	13068	33.30%
김인봉	경기안양 만안구	광역의회	3/3	6923	18.07%
변성순	경기안양 안양2동	기초의회	5/5	776	6.69%
김명옥	경기안양 석수3동	기초의회	3/3	1392	19.9%
김남준	경기 여주읍	기초의회	5/5	1752	13.22%
김춘식	경기 용인 이동면	기초의회	3/6	808	12.74%
박창호	포항 북구 우창동	기초의회			

- 2) 시민-민중운동진영 집계자료

민주노총(준)	35명 출마	15명 당선(전교조 2명, 민주당)
전국연합	19명	12명(민주당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22명	5명
민중정치연합	11명	2명
전철연	7명	0명
전빈협	6명	3명 (사회개혁 국민운동연합(추) 발표인용)
환경운동연합	46명	31명(1진정추 중복) 사회개혁 국민운동연합(추) 발표인용
경실련	210명	104명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추) 발표인용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3기 5차 정기 중앙위원회 자료집」

<민중정치연합> 여주·안산지부 회원 7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재건 관련 구속
(19950712-19950712)

<민중정치연합> 제3기 6차 정기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50818-19950818

2. 사건내용

- 중앙위원 선출(아래 명단)

이름	지역	비고
고현종	동대문	선출직
권오철	청주	지부준비위원장
김경주	구로	대의원대회 부의장
김정식	부산	선출직
김종박	안양	지부준비위원장
김철수	성동	대표
김혜련	구로	지부장
문종석	동대문	지부장
민병래	노원	중앙상임집행위원(노동위원장)
민은홍	인천	중앙상임집행위원(정책실장)
박영근	성동	선출직
박정구	인천	지부장
박창호	포항	지부준비위원장
박총일	대구	지부장

심우춘	광주	지부장
안경욱	대구	대의원대회 의장
우상근	대전	지부장
유병일	마창	지부장
이미연	노원	지부준비위원장
이상구	인천	선출직
이성권	안산	지부장
이용식	인천	선출직
이현수	울산	지부준비위원장 직무대행
정도원	마창	선출직
조성호	부산	지부장
최만섭	구로	선출직
최헌식	동대문	중앙상임집행위원(사무처장)

3. 참고자료

- 「민중정치연합 제3기 6차 정기 중앙위원회 회의 자료집」

<민중정치연합> 3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중정치연합 해산대회

1. 사건일자 19950923-19950923

2. 사건내용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1995년 9월 23일 오후 6시에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월 25일 진정추의 정개런 참여와 개혁신당 추진 발표
 - 1안 진영 내 동요세력 생김, 3안과 김종박의 ‘원칙있는 통합을 준비하는 모임’결성
 - 1안의 동요세력, 2안, 3안의 공동대응으로 ‘진정추가 자신의 정개런 참여가 진보정당 건설 노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음을 사과하고 철회하기 전에는 통합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특별결의안 제출
 - 참석대의원 77명중 특별결의안 찬성 31명으로 부결
- <민중정치연합> 마지막 대의원대회에 대한 평가

“[...] 이날의 대의원대회는 진정추와의 통합문제를 쟁점으로 한 민정련 내의 의견대립을 끝내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통합강행이 결정되고 한편으로는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퇴장함으로써 민정련은 해산되었다. [...] 진정추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민정련 내에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었다. 첫 번째는 진정추와의 통합 자체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한 견해였다. 이 견해의 출발점은 진보정당운동의 활성화를 이루어 창당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진정추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 두 번째는, 진보정당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진정추와의 통합을 추진하되 그 과정이 진보정당 운동의 변혁성과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동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을 주장한 견해였다. 이 견해는 과거 한

사노당 사건의 탄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숙정을 통합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진정추 주요 간부들의 정개런 가입 이후에는 개혁신당 노선을 거부하고 진보정당 노선을 견지하는 진정추 회원들과만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진정추와의 통합에 소극적인 다양한 의견의 집합체로 존재했던 견해였다. 여기에 포괄될 수 있는 동지들은 다양한 의견분포를 가지고 있었으나, 진보정당 건설 문제 및 진정추와의 통합문제에 관련한 자신의 적극적인 주장을 일관되고 통일된 형태로 견지해오지는 못했다. 민정련 내의 이러한 세가지 견해는 8월말 진정추 주요 간부들의 정개런 가입 및 개혁신당 참여 입장이 확인되면서 통합 강행과 통합 유보라는 선명한 쟁점 아래 재편되었다.”

3. 참고자료

- 울산지역 진보정당 건설추진 조직 재건을 위한 준비모임, 「민중정치연합의 마지막 대의원대회에 대한 평가」(1995. 10. 6.)

<진보정치연합> 창립대회: <민중정치연합> 내 통합파와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진보정치연합>을 출범

1. 사건일자 19950924-19950924

2. 사건내용

1995년 9월 24일 민중정치연합과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통합한 <진보정치연합> 창립대회가 서울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992년 (구)민중당 해산 이후 독자적인 진보정당 설립을 추진해온 진보정당추진위원회와 민중정치연합은 25일 두 조직을 통합해 <진보정치연합>을 발족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진보정치연합은 지난 24일 창립대회를 갖고 노동운동과 환경, 여성운동 및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노회찬, 김철수씨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3. 참고자료

- 「진보정치연합 창립대회 자료집」
- □□한겨레□□ 1995년 9월 26일자

<진보정치연합> 창립 대의원대회 (19950929-19950929)

<진보정치연합> 공동대표 노회찬, 개혁신당 준비위에 참여

(19951009-19951009)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전노운협)> 사건

1. 사건일자 19951101-19951101

2. 사건내용

- 1995. 11. 1.
 - 김영곤(의장), 문성현(전노협 사무총장), 박찬식(전 편집부장) 연행·구속
 - 전노운협의 기관지인 월간 '노동운동'에 게재한 글, 노운협의 강령, 1992년에 북한 직업총동맹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관련하여 보내온 팩스전문, 한국통신 사태 등 노사분규의 배후조종 혐의로 조사받음
- 1996. 4. 27.
 - 검찰은 전노운협 결성부분을 이적단체구성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법원(서울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 민형기)은 노운협의 결성시기가 1988년이고 19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적단체구성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3사람 모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 1997. 2. - 이용석 구속
- 1997. 5. 24. - 김윤규, 박성철(경남) 구속
- 1997. 8. - 박승호 구속
- 1998. 3. 27.
 - 1,2심에서 이용석의 이적단체구성에 대한 면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 박승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재판과정에서 이적단체구성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노운협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

3. 참고자료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19951111-19951111)

인천 노진추 준비모임 출범: 민중정치연합과 진정추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

들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활동 준비
(19951120-19951120)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재건 관련 구속

1. 사건일자 19951121-19951121

2. 사건내용

구속된 사람들은 사노맹 재건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과거 행위만이 문제가 돼 전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남.

전남경찰청은 21일 이적단체인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재건을 위해 활동해 온 혐의로 진보정치연합 광주지부부위원장 심우춘씨(30), 대우캐리어 노조위원장 김상진씨(31) 등 진보정치연합 소속 회원 13명을 긴급구속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호남위원회를 재건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구속된 진보정치연합 광주지부 부위원장 심우춘씨(30)-대우캐리어 노조위원장 김상진씨(31) 등 광주 지역 재야-노동단체 회원 13명이 23일 모두 풀려났다.

3. 참고자료

- □□조선일보□□ 1995년 11월 22일자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준비모임 지역대표자회의

1. 사건일자 19951123-19951123

2. 사건내용

- 1차 회의(1995. 11. 23.)
- 2차 회의(1995. 11. 30.)
- 3차 회의(1995. 12. 7.)
- 4차 회의(1995. 12.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해소

1. 사건일자 19951203-19951203

2. 사건내용

- 1990년 1월22일 노태우정권의 탄압을 뚫고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이라는 깃발을 들고 출범했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1995년 12월3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양규현 위원을 비롯한 대의원 256명(총 대의원 356명)이 참여하여 전노협 6년 평가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노협 해산안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6년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였다.

3. 참고자료

- 전국노동단체연합, “전노협투쟁의 역사를 마감하는 대의원대회”, □□월간자료□□(1995. 12.)

서울 노진추 준비모임 출범

1. 사건일자 19951216-19951216

2. 사건내용

-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총매진하자!

1.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2.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현실은 위기에 봉착해있다.

[...]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패배적 경험 때문이다. 민중당과 한국노동당으로 대표되었던 진보정당운동은 출범초기 많은 선진노동자들이 보냈던 지지와 열의를 제대로 대변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원칙과 대의를 내팽개침으로써 진보정당운동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시켰다. [...] 둘째, 진보정당운동의 맥을 이어왔던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와 민중정치연합(민정련)의 실패 때문이다. 진정추는 활동에 있어서의 노동자 중심성의 부재와 사상적 우경화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 건설의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잃고 있었다. 반면 민정련은 과거 민중당, 한노당의 경험에 대한 비판속에서 자기 정립을 한 세력으로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정련은 다수 회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정추의 정개련 참여 문제를 용인한 채 무조건적인 통합을 강행하여 진보정치연합(진정련)을 결성하였으며 최근 진정련은 개혁신당을 총선참여라는 전술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 운동으로부터 이탈해갔다. 개혁신당은 ‘3김청산, 지역할거주의 타파, 세대교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소부르조아 정치집단일 분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는 무관한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진정추와의 무조건적인 통합에 반대했던 민정련의 다수지부들이 진정련으로의 합류를 거부하고 조직적 분리를 한 상황이다. 결국 그나마 진보정당운동의 축을 형성했던 민정련의 활동이 막을 내린 것이다. 셋째, 한편 노동자밀집기구(구로, 인천, 마창, 울산 등)를 중심으로 한 민정련의 주요지부들은 진보정당운동을 사실상 포기하는 노선인 진정련으로의 합류를 거부하고 독자모색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진보정당운동의 현실적 희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색의 과정 역시 난관에 봉착해있다. 그것은 구민정련 내의 소위 ‘원칙있는 통합을 위한 모임(원통모)’의 종파적 활동으로 인해 진정련 불참을 선언한 민정련 잔류세력들의 진로를 둘러싼 공동모색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진정추의 정개런 참여사태가 터진 직후 민정련 내에서는 원통모라는 분파조직이 결성되었다. 김종박, 박정구, 이용근, 김혜련 4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원칙’이라는 독자신문까지 발행해가며 민정련내 분파를 형성하고 활동하였다. 이들은 진정추와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모임의 종파적 성격으로 인해 민정련의 이후 행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원통모의 운영위원 4인은 사상적 견해로부터 진정추와의 통합에 대한 입장과 활동에 이르기까지 통일되어 있지 못했다. 이렇듯 서로 다른 4인이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구)민중회의 출신이라는 인맥적 유대뿐이었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원칙을 갖고 있는 모임이 구성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진정추와의 통합을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구)민중회의의 세력확대를 통한 분리모색에 찾은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들의 종파적 활동은 당시 진정추의 정개런 참여로 인해 진정추와의 통합을 주장하던 초기 주장으로부터 후퇴하고 있던 다수의 동요분자들을 조직해내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원통모의 종파적 활동의 정점은 진정추와의 통합을 강행했던 대의원대회에서 보이콧진술을 택한 것이다. 진정추의 정개런 참여는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민정련의 진보정당운동으로부터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내기 위한 활동이 요구되었던 시점에 그들은 대의원수에서 과반수 표획득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보이콧이라는 정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택함으로써 민정련이 와해되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

3. 확고한 원칙을 갖고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운동을 추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4.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노진추)를 통하여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해나가자!

(1)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의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2) 새로운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의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노동운동 탄압분쇄, 노동악법 철폐 등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국가보안법 철폐, 5·18 학살자 처벌 등 전 민중의 정치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각종의 선거 공간을, 노동자 계급의 투쟁 목표와 정당성을 선전, 선동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을 조직하는 선거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여러 조직과 단체들에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 추진에 함께 나설 것을 적극 촉구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

(8) 사회주의 운동 등 진보운동의 심각하게 흐트러진 기풍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기풍을 형성한다!

(1995년 12월 16일 서울/인천/마창/울산 (가칭)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 준비모임 지역대표자회의)

- 참석인원 : 12명(노점쪽에서는 3-5인 참석예정이었으나 당일 가투가 있어서 불참)

- 전국, 서울노진추 경과보고와 결의문 채택 이후 서울 노진추 일정에 대한 결의

<노진추> 제6차 지역대표자 회의

1. 사건일자 19951228-19951228

2. 사건내용

지역보고와 이덕인-조수원 투쟁보고, 수련회계획점검, 다음회의는 1월 11일 하기로 결정. 1월 11일 제7차 노진추 지역대표자회의(장소 : 대전 카톨릭농민회관).

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가칭), <새로운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합동노동자 정치강좌>

1. 사건일자 19960228-19960320

2. 사건내용

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가칭)은 199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은 4가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경제>, <격변하는 세기말, 움트는 세계 노동자 정치운동>, <자본의 전략과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 그리고 특별강연으로 백기완 씨가 <96년 총선, 노동자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사건

1. 사건일자 19961007-19961008

2. 사건내용

- 1996년 10월 7일 경찰은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관련 이 단체 대표 성두현 등 24명을 구속함.

<진보정치연합> 제2기 1차 중앙위원회

1. 사건일자 19961121-19961121

2. 사건내용

진보정치연합 제2기 1차 중앙위원회가 송실대 사회봉사관 대동강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의 중앙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하였다.

- 1) 신입지부장 승인에 관한 건 - 참석 중앙위원의 만장일치로 아래의 3인을 지부장으로 승인하였다. 성남지부장(이명희), 동대문지부장(문종석), 안산지부장(김병태).
- 2) 중앙집행기구장 및 국장 인준에 관한 건 - 홍승기 정책위원장 서리를 정책위원장으로, 최영민 노동국장 서리 겸 노동위원장 권한 대행 서리를 노동국장 및 노동위원장 대행으로, 이창수 국제국장 서리를 국제국장으로 만장일치 인준함.
- 3) 제2기 사업계획(안) 심의에 관한 건 - 원안의 기초와 사업을 승인한다. 다만 참석위원들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4) 조직발전에 관한 토론 - 조직발전에 관한 토론을 1차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조직발전에 관한 정식 제안이 있으면 논의결정한다.

3. 참고자료

- 「진보정치연합 제2기 1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통보문」(1996. 11. 22.)

<전국연합> 6기 대의원대회: 1997년 대선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70222-19970222

2. 사건내용

전국연합은 6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힘을 결집시켜 민주개혁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고자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한다. 전국연합은 민주노총 등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세력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후보’방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민주노총 2기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70327-19970327

2. 사건내용

민주노총은 2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 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9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98년 지자체선거 대거 진출 → 98~99 정당건설 → 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사업을 힘차게 전개해나간다.”고 결정했다.

3. 참고자료

-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전국연합 6기 임시대의원대회, 1997년 대선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70614-19970614

2. 사건내용

“전국연합은 <反신한국당, 민주개혁>의 기치 아래 폭넓게 민주연합을 구축하고 이를 대표하는 ‘우리 후보’를 추진하되 ‘우리 후보’는 ‘국민후보’를 지향해야 한다. 전국연합은 민주노총 등 민족민주진영의 힘을 결집하여 우리후보를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함께 광범위한 민주세력을 결집하는 활동을 힘있게 벌여가야 한다. 민족민주진영은 공동의 선거기구(가칭 : 민주개혁국민연합)를 제안하고 여기에 민주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후보’를 추대한다.”

3. 참고자료

-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국민후보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 모임 구성

1. 사건일자 19970614-19970614

2. 사건내용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연합, 시민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예술운동단체, 지식인단체의 중견 간부와 학계, 법조계, 정치계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실무 모임 구성

3. 참고자료

-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민주노총, 전국연합 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 논의

1. 사건일자 19970626-19970626

2. 사건내용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진보정치연합> 2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70706-19970706

2. 사건내용

- "진보정치연합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계, 진보적인 정치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 폭넓은 민주 진보세력과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국민후보 운동을 전개한다. 국민후보는 근본적인 정치개혁, 재벌경제의 타파, 참된 사회복지의 실현, 남북 평화체제의 구축 등 양심적인 다수 국민의 희망을 대변해야 하며,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지지를 기초로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 <진보정치연합 제15대 대통령 선거 방침>(전문)

1. 진보정치연합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최대의 조직적 과제인 진보정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가한다. 선거 참여의 일차적 목표는 진보정당 건설의 물질적 기초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
2. 진보정치연합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계, 진보적인 정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폭넓은 민주진보세력과 굳건한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국민후보 운동을 전개한다.
3. 국민후보는 근본적인 정치개혁, 재벌경제의 타파, 참된 사회복지의 실현, 남북 평화체제의 구축 등 양심적인 다수 국민의 희망을 대변해야 하며,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지지를 기초로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4. 진보정치연합은 폭넓은 민주 진보세력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후보 운동을 위한 공동의 선거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1997. 7. 6.

3. 참고자료

-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결성대회 자료집」

<민주노총> 2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70724-19970724

2. 사건내용

민주노총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에 적극 나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에 적극 나선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공동선거대책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의 주요 정책과 선거 전략은 공동선거대책기구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한다. 공동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를 결정할 때에는 그 이전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결정한다.”

3. 참고자료

-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국민후보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사회 각계 원로회의: 1997년 8월 5일부터 주 1, 2회씩 진행
(19970805-199709DD)

<민주노총>, <전국연합>, 국민후보운동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사회단체 설명회
(19970807-19970807)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 발족(대표 오세철): 정치세력화를 제도권정치진출로 이해하거나 노동자민중의 조직화를 지구당 그림그리기로 인식하는 국민후보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출발지점을 노동자민중의투쟁전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
(19970816-19970816)

<국민승리21 결성과 국민후보 추천을 위한 선언자 대회>

1. 사건일자 19970818-19970818

2. 사건내용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등 재야, 시민·사회·노동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승리 21 추진위원회>는 1997년 8월 18일 하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12

월 대선에 독자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의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공동대표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추대하고 산하조직으로 국민후보추천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국민승리 21> 발기인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선언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위에 인간이 서고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세상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이 넘쳐흐르는 인간 존중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정의를 꿈꾸는 이는 모두 달려오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출발이, 장차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첫걸음으로 기록되리라는 것을 감히 선언한다” “기성 정치세력 어느 누구도 한국사회를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국민후보를 출마시켜 이번 대선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1997년 8월 18일 ‘국민승리21’ 결성과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 <출범선언문>」

<국민승리21 추진위 국민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결과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키로 결정

1. 사건일자 19970901-19970901

2. 사건내용

-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국민승리21 추진위원회의 국민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고영구)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1997년 대선을 위한 국민후보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등 재야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민후보를 추대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승리21(가칭)>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각계인사 약50인으로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위촉하기로 하고, 이 중에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후보추천 소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보추천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첫 회의를 가져 - 민주화와 사회진보에 기여한 경력, 사회운동과 대중운동에서의 대표성, 정치경제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경륜,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이후 정치세력화에 있어서의 역할 등 후보선정기준을 정했으며, 선정의 절차와 일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오후 2시 국민후보 추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후보 선정작업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소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과 절차, 일정 논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후보를 거론했으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권영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야·시민단체의 대통령 후보로 추천됐다. ‘국민승리21(가칭)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권영길)는 1일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국민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위원장을 재야·시민단체의 독자후보로 추천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따라 오는 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준비위원 5천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국민승리21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대통령 후보로 정식 추대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지난달 25일 ‘국민후보 추천소위원회’를 열어 △정치·경제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경륜 △평화통일 실현 의지 △재야·시민·노동단체 정치세력화의 역할 가능성 등을 후보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대통령 후보 선정절차와 일정을 결정한 바 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7년 9월 2일자

전국연합 중앙위원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

1. 사건일자 19970904-19970904

2. 사건내용

1997년 9월 4일 종로성당에서 1997대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민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후보 추대 결정

1. 사건일자 19970905-19970905

2. 사건내용

1997년 9월 5일 유림회관에서 권영길 위원장을 1997년 대선에서 국민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99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 출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추대

1. 사건일자 19970907-19970907

2. 사건내용

-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는 1997년 9월 7일 오후 4시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추진위원, 준비위원 등 2,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회칙과 사업계획을 심의·통과시켰다. 국민후보추천위원회 안을 만장일치 기립 박수로 통과시키고, 국민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대하였다. 또한 전·노사면 반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국민승리 21(가칭)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권영길)의 대통령후보로 추대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재야·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대선대책기구인 국민승리 21 준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발족식을 열고 권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하기로 공식 결의했다. 권 위원장은 후보수락 연설에서 “가진 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후보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며 “분단과 보수의 바람이 세차게 부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길의 밑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집권을 위해 최소한의 정의마저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는 기성 정치권의 사면 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7년 9월 8일자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대경연합) 중앙위원회 : 대경연합 대선방침을 결정

1. 사건일자 19970909-19970909

2. 사건내용

-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대선투쟁 방침과 기초
- 1) 사퇴없는 민족민주진영의 독자후보전술이어야 한다.
- 2) 당면투쟁과 결합한 선거투쟁이어야 한다.
- 3) 대경연합을 조직중심 축으로 하여 개인을 결합시키는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 4) 국민승리21(가칭)은 대통령 선거시기의 대책기구인 만큼 한시적 공동선거기구여야 한다. 합법정당건설과 관련한 공식적 논의는 대선이후 대선평가와 전국연합 조직발전 전망 논의 속에서 진행한다.
- 5) 국민승리21(가칭) 대구경북 준비위원회는 위의 내용에 기초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활동을 전개한다.

국민승리21 제1차 운영위원회: 중앙본부 인선 및 조직체계 정비 (19970919-19970919)

국민승리21 제2차 운영위원회: 조직확대방안 논의, 본조직 결성 및 선거대책본부 구성 논의

(19970929-19970929)

권영길 후보 기자회견

1. 사건일자 19970929-19970929

2. 사건내용

경제위기 해법과 북한동포돕기를 위해 대통령 만남을 제안하였고, 민심대폭발과 총파업 등을 경고하였다.

국민승리(21), 정치연대(준),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교수 모임 합의문 발표

1. 사건일자 19971009-19971009

2. 사건내용

<합의문>

1-1. 진보세력의 97년 대선대책기구 명칭은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로 한다.

1-2.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은 민중진영과 진보진영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다.

2. 위 기구의 대통령 후보는 노동자, 민중의 대의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후보이다.

3. 선거 강령에 다음을 포함시킨다.

1)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민주적, 민중적 규제 확대 강화

2)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3)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투쟁

4) 환경, 성, 보건의료, 교육 등 부문과 영역에 민중적 대안 제시와 투쟁

5) 남북한 평화군축 체제 확립과 민주적, 민중적 통일방안 제시

4.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선거투쟁을 하기 위하여 제 민중세력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

1997년 10월 9일

국민승리21(주) 대표 권영길 / 정치연대(준) 대표 오세철 /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교수 모임 대표 김상곤

<참고 > 「좌파운동,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1) 16대 대선을 앞두고 97년 좌파세력의 여러 단위들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정치연대(준)’(정치연대)를 건설했다. 이후 이 연대체에 참여한 대부분의 좌파단체들은 대통령후보전술을 전술적 차원에서—전국노련, 민의련, 진보민청 내 일부 부민노청, 서청

포, 구로 노동자정치연대(노정련)의 경우—또는 이후 국민승리21 중심의 당에 합류할 목적으로—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노진추), 노정연 인천지부,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의 경우—국민승리21운동에 결합한 반면, 사회당의 전신인 ‘청년진보당’은 ‘국민후보 운동’에의 결합 자체를 비판하고 정치연대에서 탈퇴했다. 청년진보당은 이후 ‘반자본, 반북한노동당’을 내걸고, 합법적 사회주의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사회당’을 건설한다. 16대 대선 기간 중 전북 현장연대(이윤보다 인간을)는 정치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북지역에서 ‘좋은 친구들’을 구성, 국민승리21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쟁점이 된 것은 대통령후보 및 의회진출을 위한 노력이 좌파세력의 ‘전술’인가, 아니면 ‘양보할 수 없는 전략’인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물밑 논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국민승리21 중심의 당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구분되는 다른 정치조직을 건설할 것인가 였다. 사회당 건설 이후에는 ‘반북한노동당’이라는 구호가 ‘반자본’과 동격의 전략적 구호가 될 수 있는 지 등도 문제되었다.

(2)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노동당이 결성되자 노진추, 노정연 인천지부, 서진청은 정치연대에서 탈퇴, 민노당에 합류했는데, 이들은 현재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평등연대’(노진추), ‘민노당 인천’(노정연 인천), ‘화요모임’(서진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으로 소속을 옮기지 않은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이후 ‘노동자의힘’이 건설되었다. 당시 쟁점이 된 것은 민주노동당과 구분되는 좌파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인가 아니면 대중조직의 지지를 받는 당에서의 활동인가 등이었다.

(3) 17대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의 차원에서 연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범진보진영후보전술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좌파 독자후보를 낼 것인가였다. 이 문제는 크게 보면 국민후보운동에 결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였다.

(4) 이후 좌파 정치단체들을 포괄하는 활동가정치조직의 건설 문제가 제기된다. 이 움직임은 그러나 17대 대선의 공동대응을 둘러싼 대립과 신뢰 저하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당좌파 운동과 구분되는 사회운동적 좌파운동과 평화운동 등을 중시하는 흐름들이 부상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공동투쟁의 조직화에서 신뢰성 문제, 기본노선 상의 차이에 따른 분화의 문제 등이었다. (김세균, 『진보평론 제 22호』, 「좌파운동,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국민승리21(준)집행위원회, 「정치연대(준)의 국민승리21 참여문제에 대하여」

1. 사건일자 19971013-19971013

2. 사건내용

- 「정치연대(준)의 국민승리21 참여문제에 대하여」
- 진국연합과 민주노총 등 많은 민주, 진보진영의 단체와 개인을 망라하여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운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국민승리21은 이 운동을 보다 위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참여세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연대(준) 성원들의 국민승리21 참여를 위해 양측 간의 접촉이 있어 왔으며, 지난 10월 9일 대표들 사이

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다 세부적인 합의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그간의 경과와 의미에 대한 중간보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10월 13일 국민승리21(준) 집행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그간의 경과

지난 8월 16일 출범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정치연대>(이하 정치연대, 대표 오세철)는 8월 말 경 국민승리21(준)에 “노동자-민중후보전술의 추진”, “대선공동선거대책기구의 구성”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승리21 추진위의 상임운영위원회는 일정한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선의 승리와 정치세력화의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의 대단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치연대(준)의 국민승리21에의 참여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연대(준)와 접촉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7일 국민승리21 준비위의 결성작업과 결성 이후 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인해 공식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9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1) 정치연대(준)와의 단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2) 구체적인 연대의 수준과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연대(준)와의 협의를 거쳐 차하급의결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승리21과 정치연대(준)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쟁점사항이 확인되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진행상황은 집행단위에 위임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9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 이후 집행단위에서의 몇 차례 접촉이 있었고 10월 9일 국민승리21의 권영길 대표와 정치연대(준)의 오세철 대표, (가칭)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교수모임 대표 김상곤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 민주진보세력의 대단결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 1-1. 진보세력의 97년 대선 선거대책기구 명칭은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로 한다.
- 1-2.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은 민중진영과 진보진영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다.
2. 위 기구의 대통령후보는 노동자, 민중의 대의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후보이다.
3. 선거강령에 다음을 포함시킨다.
 - 1)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민주적, 민중적 규제 확대 강화.
 - 2)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 3) 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투쟁
 - 4) 환경, 성, 보건의료, 교육 등 부문과 영역에 민중적 대안 제시와 투쟁
 - 5) 남북한 평화군축체계 확립과 민주적, 민중적 통일방안 제시
4.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선거투쟁을 하기 위하여 제 민중세력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

- ‘합의문’의 의미

이 글은 대단히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항의 경우 10월 26일 국민승리21의 정식 결성 시 규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명칭을 결정할 때 이 명칭을 안(案)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2항의 경우 자구(字句) 그대로의 포괄적인 표현이며 다른 의미로의 확대해석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3항의 경우 역시 국민승리21 결성 시 강령 채택과정에서의 안(案)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4항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이라는 선언적 의미이고, 공동투쟁본부의 구체적인 상과 구성 등은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입

니다.

- 이후의 절차

정치연대(준)는 10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국민승리21도 이 '합의'의 내용 중에 조직의 명칭, 강령의 내용 등 10월 26일로 예정된 승리21의 결성식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적인 논의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10월 22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연대(준)의 성원들의 국민승리21에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추진위원, 준비위원의 수 등 세부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1997년 10월 13일 국민승리21 집행위원회)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 「합의문과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 입장에 대한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의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19971016-19971016

2. 사건내용

- 「합의문과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 입장에 대한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의 입장」
- 정치연대(준)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해 활동하면서 97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후보운동을 전개해왔다. 대선투쟁에 대해서는 “1)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낸다. 2) 당면대선투쟁에서 노동자 민중후보 진술을 추진한다. 5가지 정강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사퇴하지 않는 후보진술, 대중투쟁에 결합하는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3) 모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대선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97 대선투쟁을 노동자 민중의 대의와 정치세력화에 입각해 전개하기 위해 모든 민중진영,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0월 9일 오세철 정치연대(준) 대표와 권영길 국민승리21(준) 대표, 김상곤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교수모임 대표가 연명한 [합의문]은 정치연대의 그러한 활동의 결실이다. 정치연대(준)에서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의문]을 추인하고 선거대책기구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는 모든 민중진영과 진보진영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선투쟁이 필요한 정세적, 대중적 요구를 받아 안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합의문]의 한 당사자인 국민승리21(준)의 집행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표가 합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민승리21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정치연대(준)의 국민승리21 참여문제에 대하여]라는 발표가 그것이다. 이는 대표의 결정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조직 간의 합의사항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중단하고 [합의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합의문]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먼저 [합의문]은 말 그대로 세 조직 대표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각 조직에서 합의문을 추인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갖고 왈가불가할 성질의 것이 아닌 대표의 합의사항이며, 조직은 그것을 추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는 각 조직 대표간의 합의내용이 “안으로 하자”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국민승리21(준) 대표의 결정사항과 타 조직과의 합의에 대한 무례이다. 둘째,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민중진영과 진보진영이 폭넓게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대선대책기구로서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세 조직, 더 넓게는 모든 민중, 진보진영이 참여하는 공동대선대책기구를 구성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는 이를 정치연대(준)이 국민승리21(준)에 참여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셋째, 공동선거대책기구의 대통령후보는 노동자 민중의 대의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후보이며,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선거투쟁을 하기 위하여 제 민중세력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의 주장처럼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후보’, ‘공동투쟁본부 구성’이라는 당면한 목표와 사업방향에 대한 합의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합의문]에 기초해 모든 민중진영 진보진영의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1997년 10월 16일 /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

국민승리21 준비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

1. 사건일자 19971022-19971022

2. 사건내용

규약, 조직체계, 10대 공약검토/ 정치연대 참여에 대한 합의문 승인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선거대책기구인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결성

1. 사건일자 19971026-19971026

2. 사건내용

○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창립선언문」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와 개별인사들이 모여 1997년 대통령선거대책본부로써 국민승리21을 결성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결정하였다.

<국민승리21> 1차 정책토론회(종로성당) / 주제 : 사회복지예산 20%확보는

이상인가-군축과 사회복지

1. 사건일자 19971030-19971030

2. 사건내용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은 1997년 10월 30일 오후 6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1차정책토론회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는 이상인가? - 군축과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민승리21> 정책자문교수단 발족식

1. 사건일자 19971031-19971031

2. 사건내용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교수단 결성대회가 1997년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승리21> 이창복 상임대표, 이영희 부분부장 지역순회 및 간담회

1. 사건일자 19971104-19971108

2. 사건내용

<국민승리21> 이창복 상임대표와 이영희 부분부장은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역순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월 4일(군산, 전주), 11월 5일(익산, 정읍), 11월 6일(광주), 11월 7일(목포와 순천), 11월 8일(대전충남)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승리21> 여성위원회 발족식

1. 사건일자 19971106-19971106

2. 사건내용

김혜경 위원장, 김지영, 김지선 부위원장, 손미희 집행위원장

<국민승리21> 10대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

1. 사건일자 19971110-19971110

2. 사건내용

국민승리21의 대통령 후보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월 10일 오전 11시 30분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 4층의 국민승리21 회의실에서 후보 추대 이후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후보는 이 자리에서 노동, 경제, 정치개혁, 사회복지, 통일, 여성, 교육, 환경, 군축, 역사 분야의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수구청산, 세력교체”를 기조로 (1) 재벌체제 해체와 국민적 대기업으로의 전환 (2) 국가보안법 철폐와 안기부 폐지 (3) 군복무기관 18개월 단축과 향토예비군 폐지 (4) 민족사 정립을 위한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특별기자회견: 「30대 재벌총수 퇴진 촉구, 일자리 지키기 범국민운동 선언」

1. 사건일자 19971202-19971202

2. 사건내용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는 12월 2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30대재벌 총수 퇴진’을 촉구하고 ‘일자리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제안하였다. 권 후보는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와 정경유착, 부패정치의 총체적 개혁없이 IMF 구제금융만으로는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최근의 금융실명제 유보 등 “보수3당의 재벌편들기는 경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권후보는 “임금삭감없는 노동단축(주40시간)을 통해 고용안정 실현”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 경쟁력 제고”하면 된다고 하며, “주4시간 단축만으로도 약 17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 (2)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3) 정리해고(구조조정) 특별법 도입 (4) 고용보험 적용대상 4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5) 실업급여 대폭 상향 조정 등을 주장했다. 또한 재벌해체는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이라며 (1) 30대 재벌총수 퇴진,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부정 축재한 재벌총수의 재산 환수 (2)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하향 조정, 상호지급보증제도 폐지, 재벌상속·증여세 강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율적 운영, “경영참여에 관한 특별법”제정, 사외이사의 사외감사제 법제화 (3) 모든 차명거래의 불법화 등 “금융실명법”제정, 관치금융 온존 한은법 개악과 금융감독기관 통폐합법 저지 (4) 이자제한법으로 현행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고 이자제한 특별위원회 설치, 임대보증금의 최고 상한선에 대한 규정 등의 “부동산 임대차 보호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토지공유제 확대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봉급생활자의 대변자로서 고용대란에 맞서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한다는 권영길 후보는 “일자리지키기 국민항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각계 양심세력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발족 계획, 12월 6일 동시다발 고용안정 쟁취 국민평화대행진, ‘1천만 국민서명운동’, 노·사·정 간 고용안정협정 체결, 대선후보들과 노·사·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

는 고용안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 및 운영등을 제안하였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교수유세단 유세

1. 사건일자 19971212-19971212

2. 사건내용

○ 1차 유세(1997. 12. 12.)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교수단이 사상 초유로 교수유세단을 조직하여 거리유세 진행.

참석자 : 김상곤, 강남훈, 강정구, 권인호, 김상조, 김성구, 김진균, 박경태, 백도명, 성숙진, 안병욱, 안현수, 조영건, 황상익 (14명)

일정 : 14:00~15:20 명동성당 앞 유세 17:00~18:00 서울역 앞 유세

○ 2차 유세(1997. 12. 18.)

참석자 : 김상곤, 강남훈, 권인호, 김상조, 김선중, 김진균, 박경태, 박상환, 백도명, 안현수, 이혜영, 이희옥, 조태영(14명)

일정 : 11:40~13:00 여의도 여의도백화점 앞 15:00~16:00 광화문 구 국제극장 자리 유세
17:30~19:20 대학로 흥사단 앞

<국민승리21> 여성 1천인 선언운동: 1,071명이 참여

1. 사건일자 199712DD-199712DD

2. 사건내용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1218-19971218)

<국민승리21> 중앙위원회, 선거대책본부 체계에서 정치조직으로 전환 결정

1. 사건일자 19980221-19980221

2. 사건내용

국민승리21은 1998년 2월 21일 오후 5시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진행하면서 1) 15대 대선에 대한 평가 2) 조직진로에 대한 건 3) 향후 사업방향 4) 규약개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앙위원회에서는 ‘제15대 대선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폭넓은 진보세력과 함께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승리21을 ‘진보정당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승리21>, 「김대중정부의 마구잡이식 연행을 규탄한다-국민승리21 간부 연행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

1. 사건일자 19980511-19980511

2. 사건내용

○ 「김대중정부의 마구잡이식 연행을 규탄한다-국민승리21 간부 연행에 대한 규탄성명」
‘국민의 정부’경찰은 어제(10일) 오전 8시 30분경 국민승리21 조직부장 박용진씨(28세)를 노동절 폭력시위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 또한 경찰은 노동절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10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있으며, 이중 20여명을 이미 연행하였다고 한다. 국민승리21 조직부장 박용진씨는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여, 실업자동맹 가입 서명을 받고 있던 중 경찰 폭력에 의해 가두시위가 시작되자 이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불확실한 채증사진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용진 국민승리21 조직부장을 구속하였고, 박용진씨의 “어떠한 폭력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비디오 확인 절차’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수사는 박용진씨의 경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익노련 산하 세진컴퓨터 조합원의 경우에는 노조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행구속되었다. 김대중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반성하고 자중자애해야 할 처지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반성은커녕, ‘경찰서당 몇 명’식으로 연행해야 할 사람을 배당하고,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을 독촉하고 있다. 국민의 인신 자유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절차와 증거를 무시한 불법행위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마구잡이식 연행을 보며,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승리21은, 그토록 민주주의를 내세우던 김대중씨가 보여주고 있는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와 시민들에게서 더 이상의 분노를 사기전에 박용진씨를 비롯한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기 바란다. 김대중정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헌신짝 취급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1998년 5월 11일 국민승리21 부대변인 김두수)

<국민승리21> 지방선거후보단 기자회견: 「주민복지 고용안정 실업극복을 위한 기자회견」 후보 56명 발표

1. 사건일자 19980518-19980518

2. 사건내용

○ 1998년 6월 4일 제4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승리21과 민주노총은 공천후보 5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단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후보단은 지방토호권력에 대한 비판, 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판, 지방자치제도를 주민복지를 위한 제도로 개혁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실업업무를 분담해달라”는 노동부의 요청을 절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거부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지방단체 차원에서 실업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주노총·국민승리21 지방선거후보 56명 발표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과 국민승리21(공동대표 권영길)은 18일 6·4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56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김창현 울산연합 지도위원(울산 동구)과 조승수 국민승리21 울산본부 집행위원장(울산 북구)이 나섰다. 또 광역의원 후보로는 김권태 진보정치연합 부산지부장(부산 사상4)과 조규대 전 현대중공업노조 회계감사(울산 동구3) 등 9명이 출마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의원 후보로 서울지역 이해삼 제화노조 지도위원(광진 노유1동) 등 8명을 비롯해 인천·경기 15명, 충북 5명, 대전 3명, 울산 8명, 경남 4명 등 모두 45명이 나서게 됐다.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은 이번 선거에서 고용안정과 실업정책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8년 5월 19일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노동자진보정당 건설 적극 지원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80520-19980520

2. 사건내용

국민승리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는 정치방침 결정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제2대 지방선거에서 추천후보 51명 중 22명 당선

1. 사건일자 19980604-19980604

2. 사건내용

○ 기초의원 40명 출마 16명 당선, 광역의원 6명 출마 2명 당선, 기초단체장 3명 출마 모

두 당선.

- 전체당선율 : 45%(22명 당선/ 49명 출마) 기초단체장 당선율 : 100%(3/3) - 울산 북구청장 조승수,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남해군수 김두관 * 광역의원 당선율 : 33.3%(2/6) - 울산 북구의원 이상범, 울산동구의원 조규대 * 기초의원 당선율 : 42.5%(17/40)

출마지역	성명	현 직	구분	개표 결과	득표율	
서울	장진 보류5동	이희상	민주노총서동본부 교육안정 및 노총계특계추진위원	기초의원	2	33.5
	성동 철수2가	김기범	국민승리21 생활경제거부사부국총, 남부대학교사	기초의원	3	10.7
	철학 동천9동	최정식	삼기공은 동천9동유동기 시민모임	기초의원	3	25.6
	철학 신림9동	유재희	삼기공은 심림9동유 동하는 사람들 모임 대표	기초의원	당선	38.3
	철학 신림7동	김해진	국민승리21 여실위원회, 관악구의원	기초의원	당선	43.1
	경서 동천3동	신단성	국민승리21 같이살던거주 설립대표본부장	기초의원	5	7.1
마포 신관여동	신승택	울스기업협동조합알파노동조합 집행위원	기초의원	3	21.2	
인천	동구 송전3동	이완순	국민승리21 유동구거주 대표	기초의원	2	33.6
경기	안산 지동	이광수	관악노당지회	기초의원	3	19.6
	안산 천곡본동	노세규	함 안산시의회	기초의원	2	26.0
	안산 천곡5동	김소환	원산노동당당소 부소장	기초의원	3	20.9
	안산 선부5동	이화연	반산노동당당소장	기초의원	당선	28.8
	군포 광장동	조원기	20C날 열여가는 경기포럼군포모임대표	기초의원	2	31.6
	군포 수리동	송재원	시립주립대학사무소 부장 시민노동당연희관 소장	기초의원	당선	26.6
	부천 역곡2동	김영진	역곡사랑동년회	기초의원	2	25.2
	과천 중앙동	최영숙	청년생태포럼	기초의원	당선	26.0
	의정부2동	목영태	국민승리21 경기도북부서무 대표, 의정부시민환경운동위원회	기초의원	4	13.2
	동두천 내동	장종규	동두천 민주시민회 사무국장	기초의원	5	12.8
	구리 교동2동	백현출	구리,남양주 푸르밀환경당소 기획위원장	기초의원	3	13.4
	고양 태석	김영수	고양시의회	기초의원	당선	32.9
	고양 팔산1	박태광	고양청년회	기초의원	3	26.5
	수원 고동동	김연희	원 수원시 지회	기초의원	당선	40.3
	수원 서문	안홍진	원 수원연합 사무국장	기초의원	3	20.5
	충북	청주 불림읍성	이강길	LG화학노조 부위원장	기초의원	4
청주 복대2동		박민순	충북시연정지연대 풍상위원, 시민경제아카데미 기획위원장	기초의원	3	25.4
충북 충원2		정윤상	충북시연정지연대지문위원	광역의원	2	18.9
제천 명서,의림		김홍길	원 명도정	기초의원	2	25.5
대전	유성 권전2동	서일배	민주노총 과학기술노조 지역사업위원장	기초의원	당선	40.0
	유성 권전동	관상호	민주노총 과학기술노조 지역사업위원회 위원	기초의원	당선	38.5
	유성 신성동	신원환	민주노총 과학기술노조지역사업위원회 위원	기초의원	당선	41.9
부산	북구 방정동	전환일	현대자동차노조 초대부위원장	기초의원	당선	66.6
	동구 양어동	김두일	현대자동차노조 303대지방부위원장	기초의원	당선	48.4
	동구 중리1동	이준일	공공개발노동조합 임시부장	기초의원	2	46.6
	동구 전학2동	이재현	현대자동차노조 3대위원장, 초대울산시의원	기초의원	당선	51.7
	북구 영포동	윤봉오	현대자동차노조 6대조직국장	기초의원	당선	55.1
	북구 송정동	김길봉	현대산업개발기술노조까지 임시연대대책위원	기초의원	2	42.0
	동구 남쪽3동	서태훈	현대중공업 노조교육위원	기초의원	2	33.5
	남구 구거1동	김진익	울산연합 남구사업위원장	기초의원	당선	34.6
	중구2선거구	전필태	울산연합중앙위원장	광역의원	2	36.4
	동구3선거구	조규대	현대중공업교육위원, 어렵게살아가는학생들기 후원위원회	광역의원	당선	35.9
북구2지구	이광일	현대자동차노조 2대위원장	광역의원	당선	58.2	
북구	조승수	원 지회, 국민승리21울산 공생위원회	기초의원	당선	42.5	
동구	김용원	원 시지회, 울산연합지도위원	기초단체장	당선	37.6	
부산	사상구	김길태	원 구의원	광역의원	2	35.8
경남	남해	김두관	남해군수	기초단체장	당선	53.7
	진주 삼평동	카봉희	삼당소 회장	기초의원	2	47.3
	거제 옥포2동	이행남	원 거제시의원, 원 태우로인수식후위원회	기초의원	당선	74.7
	거제2선거구	김용준	경서회합동위원, 태우로인 조합원	광역의원	2	27.2
전남	나주 송월동	정달연	LG화학 나주지부장	기초의원	당선	55.8

3. 참고자료

- 「국민승리21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국민승리21, 민주노총 공동후보 선거결과> 보도문」

<청년진보당(준)> 현대자동차 투쟁 관련 성명서
(19980819-19980819)

<청년진보당> 창당대회 개최

1. 사건일자 19981129-19981129

2. 사건내용

○ 창당 경과

- <청년진보당>은 1998년 3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14개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6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8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1998년 11월 29일 서울유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최혁을 당대표로 선출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청년진보당 창당을 주도했던 것은 8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초중반에 변혁적 정치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9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후보 운동에 앞장섰고, 이후 민중후보 운동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92년 대선을 마치고 좌파 정치세력들이 이 합집산을 반복할 때 노동청년운동을 통해 그 기반을 넓히고자 하였다. 93년에 결성된 '우리청년회', 95년에 결성된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96년에 결성된 '한국노동청년연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 97년 대선이 다가오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국민후보 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승리21'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이후 민주노동당으로 발전하였다. 당시에 청년진보당을 만든 주체들은 이러한 물 계급적인 국민후보 운동에 반대하여 민중후보 운동을 주창하면서 민중후보운동 청년추진위를 결성하였다. 이것이 97년 대선 이후 청년진보당의 창당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진보당은 창당되었지만, 2000년에 실시된 4.13 총선에서 전국 평균 득표 2%를 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청년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당을 하고 이후 그간의 성장을 반영하여 당의 이념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2001년 8월 26일에 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명을 사회당으로 바꾸었으며 지금은 희망사회당으로 존재하고 있다.

○ 청년진보당(이후 사회당) 강령(1998. 11. 29. 제정 / 2003. 5. 11. 전면 개정)

<전문(前文)>

자본의 시대를 넘어

자본주의가 인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지 수세기가 지나갔다. 자본주의의 찬양자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해 왔지만, '꿈의 21세기'가 도래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피폐한 삶뿐이다.

생산을 통한 이윤 창출을 소명으로 한 산업 자본주의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세계적 과잉 생산과 과잉 설비로 인한 평균 이윤율의 저하는 거대 기업의 초국적 통합화를 통해 생산 자본의 재편을 가속화시켰다. 과잉 생산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자본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중의 소비 성향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 확보를 위한 돌파구

를 찾아 왔다.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찾고 있다. 산업 자본은 자신의 이윤율 저하를 노동 유연화를 통한 구조 조정으로 만회하려 하고 있고, 금융 자본은 초국적화와 함께 투기 자본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이 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전쟁 수단까지 동원하여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개별 국가들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조차 해체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삶과 생태계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결코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과감히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극복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단계들에서는 계급 대립이 특정한 법적 관계에 표현될 수 있었고,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 새로운 관계가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허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계급 지배의 기본 관계들은 부르주아의 법률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그 관계들을 표현하는 법적 형태 역시 갖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계급 지배는 기득권이나 법률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적 관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질서의 토대를 건드리지 않은 채 법적 개혁을 통해 변혁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의회 투쟁으로 대표되는 정치 투쟁과 노동조합 투쟁으로 대표되는 경제 투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적·제도적 개혁과 경제적 처지의 개선 모두는 자본가적 착취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데 유용할 뿐 그 자체로 자본가적 착취를 폐절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현재적 국면에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에 대한 과소평가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는 부르주아 사회의 정상적인 시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쟁들을 우회하면서 새로운 대안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체와 동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는 당과 국가의 권력을 민중 스스로의 권력으로 바꿔내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장악으로 표현되는 정치 혁명은 사회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현실 사회주의는 국가 권력을 지렛대로 하여 자본주의와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으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실질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의 주체라는 선언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화 형식에 대한 실험을 요구한다. 그것은 분명히 사회주의를 특정한 국가 형태가 아니라 사회화 형태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경쟁과 자신의 사회적 토대의 한계 속에서 생산력주의와 산업주의에 굴복하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실제로 계획다운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그 계획 또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었다. 완벽한 계획이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과 계획의 대립은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것은 곧바로 시장만이 대안이라거나 시장과 계획의 조화가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는 이러한 시장과 계획의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한 대안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또 다른 국가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는 소련의 붕괴를 필두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으로 속속 편입되었다.

서유럽에서 출발한 사회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지금 사회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역사의 종착지로 인식하고,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혁일 뿐이라고 사고하는 것을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계급, 주어진 시대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집단으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국민적으로 분할된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전반적인 기획은 그들의 선조인 라살레의 국가주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 기구의 인수를 통하여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했다. 즉, 의회 진출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국가 장치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며, 사회 보장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여기서 국민 국가는 시장을 규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국민 국가에 대한 신념은 1차 세계 대전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애국주의로 변질시켰던 하나의 원인이다. 이는 또한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전후 부흥기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유럽 각 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선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노선은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전면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일부는 스스로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로의 편입을 선언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편입을 예비하고 있거나 이를 묵인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는 공교롭게도 역사적 경쟁자인 현실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몰락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기획들은 출현하고 있다.

사회당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피안에 존재하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 존재하는 반체제적 힘으로 자본주의를 영구히 변혁하고 폐절하기 위한 운동이다.

사회주의의 근본적 실천 형식은 반자본주의이다. 여기서 반자본은 자본 일반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그리고 자본 일반의 비판은 전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본 운동에 대한 보편적 비판을 뜻한다. 이는 전 지구적 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길이 국민 혹은 민족을 경계로 한 국지적 방어 전략에 있다는 민족주의 좌파 진영의 뿌리깊은 전통과의 단절을 요구한다.

자본주의가 이전의 생산 양식보다 더욱 발전한 것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생산 양식의 맹아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의 전 지구화와 이로 인해 성립되는 새로운 질서는 그 자체로 새로운 대안 사회의 맹아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중의 힘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회당은 이를 더욱 더 확산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민중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사회당은 이전까지 하나의 도그마로 고정되어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설 것이다. 또한 사회당은 자본주의를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개량을 추구하는 모든 운동을 경계할 것이다. 사회당은 초국적 자본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선 급진적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토적 차원과 특정한 권력 형태의 차원 모두에서 국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사회당의 사회주의는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평등한 연대를 추구하고,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서 추구한다.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향하여

사회당은 현재 미완의 정당이자 열려 있는 정당이다. 사회당 바깥에는 여전히 각각의 지역과 부문과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폐절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령 또한 미완의 강령이다. 그들과 하나가 될 때 이 강령은 다시 쓰일 것이다. 새로운 강령은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 사상·이론적 성과들이 만나면서 총체적인 사회주의의 기획으로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강령과 함께 사회주의 대중정당은 가장 단호한 정치 투쟁을 전개하고,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을 선도할 실력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본주의 사회 질서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계급투쟁 속으로 융합시킬 것이다.

<강령>

정치/경제/국제/평화/한반도

1. 억압적 국가 기관 혹은 법률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한다.
2. 모든 공직 대표자들을 소환·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마련한다.
3. 국민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완전 선거 공영제 실시, 만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의 정치 개혁을 이룩한다.
4. 재벌을 해체하고 소유의 사회화/일반화 방안을 마련한다.
5. 국가 기간산업과 삶에 필수적인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국/공유화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6. 고액의 상속과 증여를 금지하고, 대규모 자산가에게는 고액의 누진세를 부과하며, 투기 자본과 고리 사채 등에서 발생한 불로 소득은 점차 근절한다.
7. 모든 침략 전쟁과 테러를 반대하고 전 세계의 반전 평화 운동 진영과 긴밀하게 연대한다.
8.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은 모두 폐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 실질적인 자주권을 확보한다.
9.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며 군사적 목적에 동원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0. 남북한간의 적대적 분단 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한다.

노동/농업/여성

11.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 각종 노동 악법들을 폐지한다.
12. 생활 임금 보장하는 노동 시간 단축과 완전 고용을 실현한다.
13.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14.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고 그 권리를 확대한다.
15.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 비자를 발급하고 노동 기본권을 전면 보장한다.
16.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을 저지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17. 농가 부채를 탕감하고 생태 농업을 육성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18. 부채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의 경작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19. 호주제 폐지를 포함하여 모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해체한다.
20. 육아 노동과 가사 노동을 사회화하고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생태/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인권

21.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22.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한다.
23. 노점상과 빈민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영구 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24. 보행자 우선의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25. 환경 문제의 직접 규제를 강화하며, 생태 파괴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단한다.
26.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며, 우선적으로 핵 발전을 중단한다.
27. 인류와 생태계의 보편적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28. 정보 독점 및 상품화를 반대하고 정보 감시 제도를 폐지한다.
29. 공공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한다.
30.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인종, 국적, 장애,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신장한다.

행동 강령

1. 사회당원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벌어지는 모든 곳에서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모범적으로 투쟁한다.
2. 사회당원은 당의 행사와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3. 사회당원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를 함께 극복한다.
4. 사회당원은 당내의 비판과 이견을 항상 열린 마음과 태도로 대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5. 사회당원은 당 바깥의 진보 운동 진영과 폭넓게 연대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에 임한다.
6. 사회당원은 당의 대중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대중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사회당원은 당의 방침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토론한다.
8. 사회당원은 다양한 취미나 자질을 적극 계발하고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9. 사회당원은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가부장적 사고를 척결한다.
10. 사회당원은 동지들에 대해 예우를 갖추며 신의를 지키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진보정당 창당제안 1차 원탁회의: 각계 인사 331명 참가.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 각계각층과 국민에게 드리는 제안문 채택

1. 사건일자 19990125-19990125

2. 사건내용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와 중앙 및 지역간부들,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과 연맹·지역본부 대표자, 윤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등 농민, 양연수 전국빈민연합(준) 의장과 지역대표자, 구 혁신계(조봉암계, 여운형계)인사, 조영건 교수 등 학계인사,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1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소수의 상층인사들이 밀실에서 논의하여 위에서 아래로 창당을 선포하는 기존 보수정당들의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대중적인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원탁회의'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상당한 대중적 호응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1개월 내에 제2차 원탁회의를 소집하고, 2차 원탁회의에서는 창당추진 일정 및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심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2차 원탁회의 준비를 위해 각계 대표로 '진보정당 창당제안 2차 원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준비위원은 15명 내외로 하며, 준비위원 선정을 위한 전형위원으로 신창균, 권영길, 천영세 등 3인을 선출하였다.

3. 참고자료

- 「국민승리21,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 안건지」(1999. 4. 6.)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구로구을 재선거 출마 확정

1. 사건일자 19990211-19990211

2. 사건내용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1999년 1월 23일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서울 구로구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며 적극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후보 결정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 바, 2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구로구을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청년진보당 대표 최혁으로 결정하고,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청년진보당 보도자료: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구로구를 재선거 출마’(1999. 2. 1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 결의

1. 사건일자 19990309-19990310

2. 사건내용

“97년 대선이후 국민승리21은 다수의 세력이 국승21의 활동에 불만을 갖고 이탈하여 일부 세력의 조직으로 축소되었다. 국승21에 잔류한 세력은 98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조직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지만 이는 당초 국승21에 참여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단체, 개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98년 5월 20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민승리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건설을 위해 적극지원, 연대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국승21의 제한된 성격은 변함없었는데, 때문에 국승21이 추진하는 진보정당창당운동은 추진력을 잃게되었다. 그 결과 진보정당창당운동은 협소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9년 3월 9~10일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창당을 위해서, 이에 동의하는 모든 변혁적 진보적 정치세력과 함께 1999년 4월중에 진보정당창당을 위한 추진기구(추진위원회 등)를 구성한다. 구체적 내용은 이후 국민승리21에 참여하는 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제한적 성격의 국민승리21 운동을 극복하는 계기를 이루어냈다.”

3. 참고자료

- 노동자 정치운동 협의회, 「노동자정치신문」 호외(1999년 6월 13일자)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제2차 원탁회의: 각계 인사 250여명 참가. <진보정당 창당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및 민주진보운동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16명으로 준비위원 선임

1. 사건일자 19990314-19990314

2. 사건내용

권영길 국민승리21 공동대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윤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양연수 전빈련(준) 의장을 포함하여 1차 원탁회의 때보다 확대된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진보정당 창당 추진일정 및 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4월 중순이전에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강태운(구 혁신계), 권영길(국민승리21), 김귀식(전교조 위원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진균(서울대 교수), 박순경(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신창균(범민련 고문), 양연수(전국민민연합 준비위 의장), 윤정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이갑용(민주노총 위원장), 이수갑(민족정

기수호회 의장), 조영건(4월혁명연구소 소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13명을 선임하고 앞으로 각계를 망라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고영주(민주노총 사무총장),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강정구(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장상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등이 준비위원으로 추가되었다.

3. 참고자료

- 「국민승리21,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 안건지」(1999. 4. 6.)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

1. 사건일자 19990326-19990326

2. 사건내용

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명보성에서 1999년 3월 26일 열렸다. 이 날회의에서는 보고사항으로 1) 준비위원을 확대하는 문제와 2) 실행위 구성안을 보고하였다. 결정사항으로는 1) 실행위조직체계를 실행위원 수를 감안하여 권영길, 양연수, 이갑용, 천영세 4인에게 위임한다. 기관지 실무책임자 문제도 위임한다. 2)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을 4월 18일 오후 2시 실내에서 하고 추진위원 조직범위는 실행위 논의를 토대로 결정한다. 3) 추진위원 조직화를 위해 진보정당 창당 취지를 포함한 추진위원동의서를 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국민승리21,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 안건지」(1999. 4. 6.)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2차 회의, 국민승리21 회의실

1. 사건일자 19990401-19990401

2. 사건내용

3. 참고자료

- 「국민승리21,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 안건지」(1999. 4. 6.)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

1. 사건일자 19990403-19990403

2. 사건내용

3. 참고자료

- 「국민승리21,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 안건지」(1999. 4. 6.)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결성

1. 사건일자 19990418-19990418

2. 사건내용

- 1999년 4월 18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대중조직과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서울 용산구민회관에 모여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날 결성회의에서는 규약을 심의하여 제2조 목적조항을 ‘노동자가 앞장서는 민중중심의 진보정당 건설’로 수정하기로 하고, 공동대표를 5인 내외로 하되 우선 권영길, 이갑용, 양연수 3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집행위원장, 운영위원 선출과 사업계획 등은 2차 추진대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 당시까지 민주노총 400여명, 국민승리21 257명, 진보정치포럼 25명, 전빈련 19명 등 총 88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자료>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총 63명, 가나다순)

- 공동대표

권영길(국민승리21 공동대표) 김진균(민교협 공동의장) 양연수(전빈련 상임의장) 이갑용(민주노총 위원장)

- 집행위원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 선출직 운영위원

가재웅(전빈련 공동의장) 강승규(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김광수(민주노총 정치위원회 기획위원) 김기범(국민승리21 성동광진지부 사무국장) 김기수(국민승리21 대구지부장) 김동철(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장) 김두수(국민승리21 부대변인) 김명숙(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순애(국민승리21 인천지부 사무국장) 김승주(사무금융노련 여성국장) 김영수(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김영진(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 부산지부장) 김유미(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김은주(대학노조 조직부장) 김지선(강서양천 여성의 전화 대표) 김진선(민주노총 여성국장) 김태일(공공연맹 부위원장) 김호규(현대정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탁(사무금융노련 사무처장) 길기수(민주노총 강원본부장) 노회찬(국민승리21 정책기획위원장) 도영호(경기남부연합 상임의장)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박동민(민주관광연맹 정치위원장) 박우형(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공동의장) 박종현(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박홍순(진보정치포럼 대표) 성두현(구 노진추 대표) 소문섭(국민승리21 성남지부 재정위원장) 손석형(민주

노총 경남본부장) 송일환(전일노련 부위원장) 심상정(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양동규(금속산업연맹 경기남부 사무처장) 양희숙(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처장) 이광호(기관지편집팀) 이근원(공공연맹 조직팀장) 이상현(국민승리21 조직위원장) 이성화(국민승리21 부산지부 집행위원장) 이영남(전빈련 공동의장) 이용길(국민승리21 대전충남지부장)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이해선(공공연맹 보건사회연구원지부장) 이회수(민주노총 정책2국장) 장상환(민교협 공동대표) 정윤광(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정형주(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공동의장) 주대환(국민승리21) 최규엽(국민승리21 집행위원장) 최성진(청년추진위원모임) 황선진(국민승리21 시민위원장)

○ 부문 운영위원

김석연(변호사) 문순덕(전빈련 정책위원장) 박경렬(서울대 총학생회장) 소순관(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 의장)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양해동(전빈련 집행위원장) 윤정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조옥화(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 공동대표, 집행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자료> 진보정당추진위 3인 공동대표 한마디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

"진보정당의 깃발은 올랐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그 깃발을 움켜쥐도록 합시다. 그 깃발이 영원히 휘날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10년, 20년, 천년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진보정당을 만듭시다."

양연수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

"우리의 뜻은 정의롭고 숭고합니다. 진보정당 건설은 부정함과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함께 힘을 합쳤고, 역사변혁의 결연한 의지를 투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보정당 건설에도 힘차게 나서 진정한 변혁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갑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총력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결성은 '투쟁속의 진보정당 건설'을 국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보'란 이름으로 모든 저항세력이 결집하는 순간을 함께 하게 돼 영광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kdlpnews.org/ 「진보정치」 창간준비 1호\(1999. 5.1\)](http://www.kdlpnews.org/)

<자료> 공동대표 메시지

"민중투쟁 중심에서 진보정당 건설하자"

동지들, 우리는 지금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고통받는 이땅의 민중은 이제 현정권이 자신들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중 스스로의 투

쟁, 그 자체만이 대안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투쟁속에 건설되는 진보정당, 민중 투쟁의 정치적 중심을 자임하고 나선 진보정당의 창당 주체들이 지금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투쟁의 현장에서 민중의 염원을 담은 진보정당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정치적 진출을 위한 당건설은 역사적인 과제이며 당면의 실천 과제입니다. 그것은 수레의 두바퀴처럼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8일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제나라 민중의 고통에는 아랑곳 않고 국제적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하고 있는 현정권은 물론 내각제니 뭐니하면서 추악한 권력싸움만 일삼고 있는 보수정치권 전체를 갈아엎지 않고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거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투쟁을 하나로 묶어내고 투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현재의 투쟁 속에서 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보수정치권과 이들이 수십년 동안 민중의 열망을 억누르며 지배세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대 자본의 연합구도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민중 투쟁의 소중한 성과들은 또다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보정당 건설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투쟁 과정에서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진보정당 건설이 힘차게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중이 중심되는 강력한 정당 건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권영길 양연수 이갑용

(<http://www.kdlpnews.org/> 「진보정치」 창간준비 1호(1999. 5.1))

3. 참고자료

-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대회 자료집」
- 「진보정치」, <http://www.kdlpnews.org/>

2차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대회

1. 사건일자 19990613-19990613

2. 사건내용

김진균 사회진보연대대표를 추가로 공동대표로 추대. 천영세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 추진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발기인대회 일정을 확정하였고, 발기인 모집과 지역추진위 구성, 대중투쟁 방안, 홍보선전 작업, 기관지 창간계획 등의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하였다.

6월 13일 2차 추진위원회대회가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5백여명의 추진위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준비위 출범 시기를 이같이 확정하는 한편 학계를 대표해서 진김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를 추진위 공동대표로 추가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위(발기인대회) 발족 전까지 추진위 산하 집행부서와 각 위원회를 통할하는 임무를 갖는

추진위 집행위원장에 천영세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창당 추진위의 실질적 대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부문/선출직 운영위원 58명을 선출했다. 이날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른 시간 안에 회의를 갖고 7월말로 예정된 발기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부터 세종회관 대강당을 2시간 가까이 뜨겁게 달군 화두였던 '여성할당제' 도입과 관련 여성운영위원을 '전체 운영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각 단위도 이 기준에 따른다'(규약 7조1항3호)는 데 추진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따라 진보정당의 진면모와 여성 추진위원들의 열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추진위원 대회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총체적 개혁 착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남부지역이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지역추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 지난 5월 28일 전국 최초로 서울남부지역에서 추진위가 닷을 올린 이후 경기동부, 안산, 안양군포, 부산, 광주 등에서도 추진위가 출범했거나 예정에 있다. 이같은 지역 추진위 결정은 6월 13일 열린 2차 추진위원 전체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역의 경우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구로·금천·광명 지역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보정당 서울남부지역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이날 대회에서 최규엽 국민승리21 집행위원장을 상임대표로, 윤창식 서울남부금속노조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으며, 정치학교 개최, 지역추진위원 2배가 운동 전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6월 11일에는 성남·하남·광주·여주·이천·용인을 포괄하는 경기동부지역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1백여 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세종예식장에서 열린 결성대회에서 추진위는 배범식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승리21 중앙위원), 양태경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 의장, 이태영 경기동부연합 의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밖에 안산, 안양·군포·의왕, 부산, 광주 등에서도 7월중에 지역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예정이다. 각 지역은 이를 위해 지역 창당추진위원 모임과 간담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6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이 지역 창당추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심원계곡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양연수 추진위 공동대표와 박홍순 실행위원(지역팀장)이 함께 한 이날 수련회에서는 창당발기인 대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7월말까지 4백~5백명 규모의 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했다.

7월초까지 지역추진위원 150여명을 조직해 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인 부산에서는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권영길 공동대표가 지역 노동조합 간부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강연회를 각각 가졌다. 이어 권대표는 문순덕 실행위원과 함께 지난 6월 10일 경남 지역 창당추진위원 70여 명과 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추진위 구성단위와 결성 시기 등을 논의했다.

<자료> 2차 추진대회 해설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2차 대회를 통해 발기인 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집행위원장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를 갖추으로써 창당 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

어섰다.

이날 2차 대회는 준비 부족과 견해 차이 등으로 과행을 보였던 1차 대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것은 물론, 지난 97년 대선 이후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렇다할 성과 없이 거북이 걸음을 계속해 온 진보정당 창당 작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선, 이날 대회에서 창당 작업의 실무를 책임질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진위원회의 대의기구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창당추진위원회의 기본 골격이 갖춰졌다. 여기에다 오는 7월말 발기인 대회까지를 목표로 상정한 1만명의 발기인 모집 사업이 지역 추진위원회 건설 사업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갖추는 조직화 사업도 발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추진위원들이 이날 대회에 앞서 가진 모임에서 7월말까지 5천명의 발기인 확보하기로 결의한 대목은 다른 부문과 지역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당추진위원회의 사업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기로 함에 따라 당명 확정, 강령 및 규약 제정 사업, '투쟁 속의 당건설' 사업 등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실무를 책임질 상임집행위원회 인선 및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발기인 대회 이전까지의 실질적인 창당 준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추진위원은 "당명은 물론, 당의 정신이자 이념적 근거가 되는 강령 제정 사업은 보다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명칭 확정 사업이 일반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얼굴'을 알리는 사업인 만큼, 대중적 참여와 동의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다. 당 강령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로 공청회, 광역별 토론회 등도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 투쟁과의 연대, 사회 경제개혁 투쟁 등을 통해 '투쟁 속의 당 건설'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이념과 정책을 당원과 진보정당의 지지세력에게 전파할 기관지 창간 작업은 물론, 당의 대외 활동과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사업에도 추진된다.

이같은 추진위원회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대중적 공감을 확보하고 내실을 거두느냐가 7월말 개최 예정인 발기인 대회의 성공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영세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1만명의 발기인 조직은 물론, 당의 정당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진위원 대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통과된 운영위원회의 30% 여성 할당제의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성의 정치 활동과 사회적 지위 보장 등에 관한 진보정당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자료> 2차 추진위원대회 회의록(요약)

대회 진행: 권영길 공동대표

▲ 공동대표 인사말

이갑용(민주노총 위원장): 2차 추진위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진보정당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동지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내용 있는 결과가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 성원보고

전체 추진위원 1천39명 가운데 5백33명 참석해 성원.

▲ 회순통과

▲ 규약개정안 심의

(제 7조 ①항 운영위원 선출 관련 규약에 '운영위원회는 지역추진위원회 대표와 기타 등 10명 내외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 선출할 수 있다'는 안 전체 성원 동의로 삽입하기로 결정)

권영길: 규약개정에서 민주노총 여성 추진위원들이 긴급제안이 있었다. 제안내용 설명해 달라.

김진순(제안자·민주노총 여성국장): 7조 ①항에 여성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회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 단위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범(울산 시의원): 여성에 30%로 할당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체 추진위원 중 여성의 수가 몇 명인지 알고 싶고, 또한 30%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질문하겠다.

김진순: 저희 여성 추진위원들은 진보정당은 어느 한 성이 독점하는 기존 보수정당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안했다. 30%를 활동에 근거한, 즉 전체 추진위원 수에 비례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인구를 따지면 절반이다. 50% 배정해야 마땅하지만 30%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다. 차별을 없애고 여성에 대한 억압을 없애고 민중과 민주사회 건설하기 위해 진보정당 만드는 것이다.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달라.

이상범: 반대의견을 토론하겠다. 근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규약에 의무조항으로 넣지 않아도 여성에게 동등한 자격과 기회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여성차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 규약에 넣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이 현실 자체가 부끄러워 반대한다.

이재기(국민승리21 회원): 찬성발언이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가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현실에서 그렇게 지켜지고 있냐고 반문하고 싶다. 보장해줘야 한다.

진한결(울산 북구의원): 어느 때보다 세상을 바꾸는 데 여성의 힘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자리에 왜 여성들은 많이 오지 않았나. 앞으로 모든 일에 큰 역할을 해나갈 운영위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능률 저하를 낳는다.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30%를 선출하나.

차유미(매일노동뉴스 기자): 잠정적 우대조치임을 분명히 말한다. 여성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논지를 흐리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들이 많이 일해 왔지만, 이런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조건들이 있는 것이다.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 오라는 식이 아니라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

권: 정회 중 제안자측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것이 사실상 진보정당의 성격을 규정짓는 갈림길이라서 고민했다. 원칙적으로 안될 때는 현실적 측면 감안하자. 규약에 여성운영위원 할당 30% 제안을 받아 결정하되, 실천의 문제에서 각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는가?

전체: 예

▲ 공동대표 선출

(김진균 서울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추가로 선출. 운영위원회에 여성, 농민을 공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전원 박수 통과)

▲ 집행위원장 선출

(천영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 전원 박수 추대)

▲ 운영위원 선출

권영길: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실행위, 준비위에서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다. 운영위원 배정기준을 일단 각 단체 조직별로 할 수밖에 없다. 각 단위의 추진위원 수에 비례해서 운영위원 배분한다. 빈민, 지식인, 법조, 학생, 한국노총, 여성, 농민, 청년 등의 부문별로도 배정했다. 이의 있는가?

최규엽(국민승리21 집행위원장): 추진위원 1천44명중 각 단위 추진위원 수 비례에 따라 민주노총 25명, 국민승리21 15명, 전빈련 2명, 구노진추 2명, 경기동부연합 3명, 수원연합 1명, 진보정치포럼 1명, 청년 1명이 할당 배분됐다. 나머지는 특별 부문 처리된다.

정진수(구 노진추 회원): 진보정당 건설하는 데 있어 당 기조가 이 문제와 관련 있다. 지금은 계급연합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노동자, 빈민, 농민이 당의 골간구조 이루는 정치정당을 만들고자한다. 그런데 운영위원 구성 기준과 관련해 참 씹쓸한 기준이 나왔다. 지금 우리가 건설하려는 계급연합 정당은 계급과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계급, 계층의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에 50%를 반영해야 한다. 빈민을 대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5명이 배정되어야 한다. 농민에도 한명은 부족하다. 한명 더 배정되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근원(공공연맹 조직팀장): 운영위원 배정과 관련 민주노총에 50% 이상 배정된 것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다. 빈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있다. 그러나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기준이 가장 적절하다. 이 당의 성격이 노동자적이 되기 위해서, 빈민적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해야 한다.

권: 토론 종결한다. 기본적 입장은 정리됐다. 전빈련은 특별 부문에도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조정가능하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

권영길: 민주노총 25명, 빈민은 5명으로 한다. 빈민은 선출직 2명, 부문에 3명으로 반영됐다. 이의 있는가?

(전체 동의. 부문·선출직 운영위원 58명 선출)

▲ 창당 발기인대회 일정 심의

최규엽 : 2가지 안으로 정리됐다. 7월말 안과 9월말 안이 있다.

권영길: 곧장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자.

김윤규(경남노동자협의회 의장): 새로운 안을 내겠다. 1만명으로 발기인대회를 하자.

권영길: 재청하는가?

전체: 예.

권영길: 세안(1안: 7월, 2안: 9월, 3안: 1만명)을 갖고 토론한다.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의장): 인원수를 목표로 하자는 것은 대단히 의욕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담보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없이 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7월 말로 정해놓고 적극 추진해 나가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재기(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 부의장): 9월말 안이 왜 나왔는가? 정당 창당이 발기인 대회 하고 나서 6개월 이내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선거일정에 작위적으로 맞춘 게 아니냐는 생

각이 든다. 올바르게 창당하려면 내년 총선을 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진보 정당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명망성 있고 똘똘한 사람 선거 당선이 성공일 수만은 없다. 발기인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확산되고 동의기반이 넓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1만명 안에 찬성한다.

노회찬(국민승리21 정책기획위원장): 민주노총에서 7월말까지 5천명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다. 국민승리21 회원이 3천명이다. 전빈련 동지들의 열정이 있듯이 1천명은 가능하다. 그 외 청년, 학생도 있다. 1만명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선거에 임박해서 창당하는 것이다. 선거 두세달 전 창당하면 선거용 정당으로밖에 안 보인다. 11월 창당을 하려면 9월말 발기인대회는 대단히 위험하다. 2개월 동안 지역 조직의 준비위원회 만들고 우리의 강령을 완성시키고 세몰이가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졸속으로 흐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으로 비칠 수도 있다. 1만명이라 정할 필요 없다. 5천명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민주노총 등의 결의를 바탕으로 7월말까지 발기인대회를 하는 것이 옳바르다.

김광수(민주노총 정치위원회 기획위원): 방금 1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민주노총은 각급 조직들이 7월부터 마비상태가 되며 현재 많은 연맹들이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추진위원 조직하는 데 많은 어려움 있었다. 7월까지 5천명을 결의한 것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열의와 헌신을 가지고 임한다는 결의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당을 우려했는데, 당장 우리의 역사에서도 선거 직전에 형성된 정당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제는 노동대중, 국민대중에게 책임 있는 세력, 대안을 제시할 수 세력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조직세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총이 정치역량을 갖추어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9월말 발기인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장상환(경상대 교수): 1만명 됐을 때 창당이 중요하다. 왜소하게 창당하는 것은 위험하다. 1만명으로 출발하는 것은 높은 열의를 갖고 가는 결절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지배계급에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1만명이 되어야 한다.

채운석(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노총 추진위원들의 결의가 책임 못지는 결의 아니다. 오늘 본대회에 앞서 열린 민주노총 추진위원 사전대회에서 발기인 5천명을 조직하자는 결의는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 우리는 한다. 지난 대선에서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수평적 정권교체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여타 부문의 결의와 신뢰가 있다면 어려운 것 아니다. 7월말을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

김윤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적 토대가 형성됐지만 기초단위가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민중당의 실패요인이었다. 현재 마창의 경우 지도부가 전부 수배중이다. 우리 운동을 변혁운동의 주체형성 과정으로 본다면 대중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기를 못박고 나가서는 안된다. 대중적 결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과연 진보정당의 사상과 내용을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르르 진행해 나갈 것인가. 가능하면 힘있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최소 만명이 필요하다.

권: 토론 종결하겠다. 거수를 해도 이의없는가? 지금 현재 시점에 재석이 4백33명으로 나왔다. 아까 출석이 5백76명이었는데 난감하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족분은 기권으로 처리하자는 안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됨)

권: 지금 다른 도리가 없고 다시 추진위원 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성원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3안 소수 찬성으로 부결, 1안 찬성 2백29명, 2안 찬성 1백71명으로 1안 통과)

권: 1만명을 조직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7월말까지 1만명을 모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전체: 박수

권영길: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났습니다. 거듭 거듭 말씀 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것은 실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진보정당을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일만명 발기인을 목표로 모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가서 성과있게 발기인대회가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 추진위원 대회를 모두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자료

- 「진보정치」 창간준비 3호(1999. 6. 21.)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

1. 사건일자 19990618-19990618

2. 사건내용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위 2차대회의 결정에 따라 7월말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를 위한 1만명의 발기인 모집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령기초 당명제정 기관지창간의 3개 위원회를 운영위 직속으로 두고 총무 정책 조직위 등 6개 위원회를 상임집행위의 주요 집행 단위로 확정했으며 실업대책 IMF반대,재벌해체,경제민주화 정치개혁 지방자치 등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각 위원회와 특위의 책임자와 감사에 대한 인선은 다음 운영위에서 4인 공동대표가 제출한 안을 놓고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상임집행위의 인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위원장 책임 아래 당면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운영위원회 추가 선임과 관련 추진위 2차 대회에서 청년 부문에 1명을 배정키로 한 바 있으나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아 유보됐으며 지역의 경우엔 지역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때 충원토록 했으며 고문단 대표가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들은 또 최근 공안검찰의 파업유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 등 현안이 되고 있는 민중투쟁에 당차원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2차 대회에서 창당준비위 출범 시기 결정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론 끝에 회의록에 "2차 추진위원 대회의 발기인 대회 일정 결정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운영위 내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기관지 정기구독 확보를 위해 각 참여 단위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안양·군포·의왕 지역 추진모임,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안양·군포·의왕지역 추진위원회 결성식

1. 사건일자 19990709-19990709

2. 사건내용

공동대표로는 임동국(민주노총 안양지구협의회 의장), 이기옥(LG전선 민주노동자실천협의회 의장), 송재영(군포시의원, 시민노동인권상담소 소장), 김남준(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3. 참고자료

-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안양·군포·의왕지역 추진위원회 결성식 자료집」

진보정당창당추진위 제4차 회의: 발기인대회 8월말로 연기

1. 사건일자 19990712-19990712

2. 사건내용

창당추진위 운영위는 1999년 7월 12일 오후 서울 향린교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발기인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추진위 결정에 따른 7월말 개최안과 연기론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토론 결과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준비위 개최일자를 한달 연기하여 8월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들은 추진위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중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사과하는 뜻으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명의의 '유감의 편지'를 모든 추진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대회 연기의 배경과 원인 등에 대한 분석, 평가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3일 오전 개최된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에선 정책위원회가 발기인 대회 일정 변경과 관련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차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연대투쟁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집행위 산하 정책, 기획 등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들의 사업 계획안을 심의, 총무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안의 상근자 인건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일부 지적된 사업 계획을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보완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려던 홍보위원장은 공동대표들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강령기초위원회 기관지 창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심의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개최된 3차 운영위원회에선 강태운 준비위원 등 8명의 진보정당 창당

준비위원들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윤인섭 추진위원 등 3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또 공동대표가 추천한 집행위원회 산하 각 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을 인준했다. (각 위원장 명단은 표 참조) 공식인 대변인은 인준될 때까지 집행위원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여성위원장은 여성 운영위원들의 추천이 있을 때 자동 인준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 논의, 이선희 추진위원을 청년부문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구속·수배 중인 운영위원의 경우 본인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직이 교체·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집행위원회 각 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명단과 주요경력

지난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상임집행위원회 소속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단과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현)'은 현 직책이고 그 외는 전직이다.

▲정책위원회 - 성두현 위원장

실행위원회 정책팀장

정치연대 운영위원

노진추 대표

▲기획위원회 - 황원래 위원장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현)

보험노련 부위원장

한진그룹노조협의회 의장

▲조직위원회 - 정운광 위원장

민주노총 정치위원장(현)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 지도위원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공동의장

▲총무위원회 - 이상현 위원장

국민승리21 조직위원장

민주노총 조직국장

전노협 쟁의국장

▲재정위원회 - 최규엽 위원장

국민승리21 집행위원장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구로 노동연구소 소장

▲연대투쟁위원회 - 문순덕 위원장

전빈련 정책위원장(현)

노동자 정치활동센터 대표

슈어프로덕트 노조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노회찬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발행인(현)

국민승리21 정책기획위원장

진보정치연합 대표

▲실업대책특별위원회 - 송일환 위원장

전일노련 부위원장(현)

안산지역 실업극복운동협의회 조직위원장(현)
 안산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소장(현)
 ▲IMF반대재벌해체경제민주회특별위원회 -이선근 위원장
 경제민주모임 대표(현)
 국민승리21 재벌해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준) 대표간사
 ▲지방자치특별위원회 - 김태일 위원장
 공공연맹 정책·정치위원장(현)
 공익노련 부위원장
 한국생산성본부 노조위원장
 ▲윤인섭 감사
 진보정당 창당 울산지역 추진위원회 결성준비위 공동대표(현)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산별분과위원장(현)
 울산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현)
 ▲배범식 감사
 진보정당 창당 경기동부지역 추진위원회 공동대표(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우득중 감사
 전국노점상연합 서부지역 감사(현)
 전국노점상연합 서부지역장

3. 참고자료

- 「진보정치」 창간준비 4호

<노동자의 힘(준)> 결성

1. 사건일자 19990808-19990808

2. 사건내용

- 1999년 8월 8일, 노동현장에서 활동해온 노조간부, 현장 활동가,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약칭 정치연대)>의 진보적 사회단체, 민중운동 활동가,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여 <노동자의 힘 준비모임>을 출범시켰다. 2001년 10월 13-14일 제7차 총회에서 '준비모임'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힘>을 정식 명칭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 현재 <노동자의 힘>은 한국사회 근본적 정치·사회변혁을 목표로, 현실의 노동자 민중투쟁과 긴밀히 결합하며, 노동운동의 선진부대가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자료> 노동자의 힘 소개(<http://pwc.or.kr>)

1.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당면 목표·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현 「노동자의 힘」은 지난 1999년 8월 8일 노동현장에서 활동해온 노조간부,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약칭 정치연대)의 진보적 사회단체, 민중운동 활동가,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여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을 출범시켰으며, 2001년 10월13~14일 제 7차 총회에서 (준비모임)을 떼고 지금의 「노동자의 힘」으로 명칭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 「노동자의 힘」은 한국사회 근본적 정치·사회변혁을 목표로, 현실의 노동자 민중투쟁과 긴밀히 결합하며, 노동운동의 선진부대가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굳건히 연대하는 노동자국제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노동자계급 중심의 세계변혁을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자의 힘」은, '새로운 정치조직'으로서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당면 목표·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조직'이라 함은 한국사회를 포함한 세계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치운동의 경험과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현대의 변화된 정세와 오늘의 국내외 노동자계급이 처한 주체 역량의 상태와 조건에 걸맞는 정치활동을 새롭게 구현하려는 의미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정당」은 바로 그 '새로운 정치조직'의 활동을 담지하기 위한 조직 형태(형식)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자계급정당」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계급적 변혁운동진영 내부에서조차 급속히 번져나간 탈계급화, 탈이데올로기화 현상, 즉 '국민(대중)정당' 또는 '계급연합정당' 노선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배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노선과는 상호대립적 개념인데 비해, '(비합)전위정당' 또는 '변혁정당' 노선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는 「노동자계급정당」이 구현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들 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2.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원칙과 기초를 '혁신과 연대'에 기초한 '정치적 재조직화'로 삼고 있습니다.

-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은 사민주의적 정치전략과 민족주의적 정치전략이 아닌 변혁주의적 정치전략을 승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계급적 좌파진영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결집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계급적 좌파진영의 역량은 노동현장, 정파운동, 부문운동, 연구활동, 개별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량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민주노동당 노선과 전국연합노선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반정립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단일한 정치활동의 정형을 창출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계급적 좌파진영이 위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정세적·정치적·역사적 근거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량이 전국적으로 결집·집중하여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적 좌파진영 역시 그 동안의 과정에서 정치적 한계와 오류를 보여왔

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계급적 좌파진영은 자신에 대한 '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자신에 대한 '혁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계급적 좌파진영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혁신'과 함께 '연대' 또한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비록 아직 서로의 정치적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조건이긴 하지만 노동자 민중투쟁을 지지·엄호해야 할 필요성과 사민주의적 정치전략과 민족주의적 정치전략 노선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이 '혁신과 연대'에 기초하고, 또한 '정치적 재조직화'를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이루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재조직화'라 함은 비록 계급적 좌파진영이 큰 틀에서는 정치적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은 정치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제 조직이 수평적으로 결합 또는 통합하는 것으로는 대중적·정치적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졸속한 조직 결합 또는 통합이 가져다 준 폐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대중과 동떨어진 조직 상층 사이에서 이루어진 조직 결합 또는 통합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기존과 같이 막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오늘의 계급투쟁이 요구하고 있는 과제에 제대로 복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노동자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노동자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며, 결국에는 노동자대중이 바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힘」은 현실의 노동자대중 투쟁에 기초하고 동시에 세계 변혁운동의 전통과 경험에 기반한 「강령건설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언명과 같이 비판의 무기일 뿐인 강령은 분명 당장 현실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령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비판의 무기가 대중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실질적인 무기로 전화'하며 바로 그 곳에서 실질적으로 미래 사회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 그 자신의 투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강령은 자본주의 성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노동자계급이 부르조아 사상 및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워 온 실천을 총괄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요구되는 노동자계급의 진로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강령은 단순한 이론들의 총괄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그 자신의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역사와 세계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자본의 분할 통치에 대항하는 전세계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경험을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의식으로 재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때부터 싸워 왔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조직하면서, 미래를 향한 우리 자신의 실천을 조직화해 내야 할 것입니다. 강령 건설은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의 실천적인 의식화, 즉 실천을 통해서 획득된 노동자 계급의 주체성을 조직하는 이데올로기 투쟁과 그 투쟁을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 자신의 투쟁으로 전화시키는 정치적 실천의 이념적 프로젝트의 건설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강령은 단순한 이론들의 총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령을 '작성'이 아니라 '건설'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

입니다. 강령은 항상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 투쟁 그 자체로부터 나와야 하며, 계급 투쟁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기로 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령 건설 작업은 계급 투쟁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개입이라는 정치적 실천 그 자체로부터 시작되며,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 자신을 미래 사회의 주체로 승인함과 동시에 조직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강령 건설의 궁극적 주체는 노동자 계급 그 자신의 투쟁이라는 점을 승인하는 것을 그 출발로 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이 승인은 노동자 계급을 주체로 승인함과 동시에 주체로 조직하는 과정이라는 양자의 현실적인 모순을 승인하기 때문에, 강령 건설은 첫째, 이를 우선적으로 자각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조직된 특정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조직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둘째, 특정한 정치조직에 의한 제안·제출된 강령은 노동자 계급 그 자신의 실천적인 투쟁들과 발전에 복무하면서 그들 자신의 투쟁과 경험이 강령 건설 과정,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조직이 제출하는 강령은 어느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럴 듯한 강령이 되거나 정치조직 내부의 자족적 정치 행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획득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검증되고 교정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4. 「노동자의 힘」은 현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먼저 모든 「노동자의 힘」 성원은 조직의 가장 기초 단위인 '기본단위'에 속해 조직·정치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조직원은 반드시 조직의 한 기관에 속해야 한다는 노동자 정치조직의 원칙과 전통에 따른 것으로, 조직 성원이 곧 조직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의회주의·개량주의 정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직 성원을 조직 활동의 주체로서 훈련·성장시킴으로써 성원의 능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유권자로서 표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조직 성원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노동자의 힘」은 조직의 최소 단위인 '기본단위' 활동에 기초하고, 중앙의 대표, 조직, 노동, 정책, 연대사업, 선전위원회, 강령기초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본단위' 대표성을 갖는 '중앙위원회'를 의결과 집행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노동자의 힘」은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민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 노동자대중 투쟁을 지원·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전국민중연대(준)에 대응 및 부문활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모아 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재조직화 활동과 강령건설투쟁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월 2회 '노동자의 힘' 제호의 기관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대중집회나 대중투쟁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유인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역시 우리의 활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무형의 활동을 통해 노동자 대중투쟁을 정치적·계급적으로 진전시키고 또한 현장·선진활동가를 「노동자계급정당」의 주체로 결집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주의적·개량주의적·민족주의적 노선과의 가차없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1999년 8월 8일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으로 출범한 이래 우리는 '한라중공업 투쟁',

'대우자동차 투쟁', '비정규직 투쟁', '공공3사 동맹파업 투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노동자 대중투쟁에서 늘 조직의 역량을 집결하여 그 투쟁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민주노총의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강화 실천하기 위한 전국순회토론을 전개한 바 있으며, 매 시기 중요한 투쟁 및 주요 사안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밝히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선운동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중연대(준)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연대전선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힘」의 활동이 아직 대중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정도가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현재 우리의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지만, 특수하게는 우리의 활동 방식이 갖는 고유한 성격, 즉 노동현장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노동자대중투쟁에 늘 우리 「노동자의 힘」의 활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끝으로 본 「노동자의 힘」이 현재 수준에서 갖고 있는 정치 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민주적 권리수호 투쟁과 함께 해 나가면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 **노동자 계급정치 활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대의를 지키고 근본적 사회 변혁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 조직을 건설하여, 노동자 대중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 계급정치를 실천해 나간다.

○ **노동조합운동을 민주적·계급적으로 강화한다.**

우리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노동분할 공세와 탈계급화 정책에 맞서, 노동조합운동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여러 차이를 넘어 단결의 구심이 되도록 대중적인 계급역량을 발전시켜 나간다.

○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자본의 지배력에 맞서 투쟁한다.**

우리는 생산 영역에서의 자본에 맞선 투쟁뿐 아니라, 보다 강화되고 있는 전 사회에 걸친 자본의 지배력 강화에 맞서 교육, 환경, 교통, 주택, 의료, 여성,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제반 영역에서 투쟁한다.

○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민중 연대 전선을 공고히 구축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고통받는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계급적 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농민과 빈민, 그리고 학생과 진보적 지식인 등이 함께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수 있는 노동자·민중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 **자본의 지구화에 맞서 노동자 국제연대투쟁을 적극 조직한다.**

우리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과 적극 연대를 조직하고, 자본의 이데올로기인 애국주의와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극복하여 진정한 노동자 국제주의를 지향해 나간다.

○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통일의 전망을 열어간다.**

우리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통한 계급 탄압 도구인 국가보안법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국내외 독점자본의 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흡수통일 전략에 맞서, 노동자 계급운동의 정치적 강화·발전에 복무하는 방향 아래 통일투쟁을 전개

해 나간다

3. 참고 자료

- <노동자의 힘> 홈페이지(<http://pwc.or.kr>)
- 「노동자의 힘」(기관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결정

1. 사건일자 19990823-19990823

2. 사건 내용

- 1999년 8월 23일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부르주아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주노총은 제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정치조직과 연대·지지·지원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의 결정에 의한다”는 정치방침을 결정

3. 참고자료

- 이종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평론□□13호(2003)

진보정당 창당 발기인대회, 정당명칭 ‘민주노동당’으로 확정

1. 사건일자 19990829-19990829

2. 사건내용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1999년 8월 2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대표 등 각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당명을 <가칭 '민주노동당'>으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양연수 이갑용)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이날 발기취지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이 적극적으로 자기 실현을 해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면서 "진보정당은 재벌지배 경제체제를 해체한 후 사회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결합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결의문을 통해 #민중기본생존권 확보 및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20% 확보 #정리해고제 철폐 #재벌해체특별법 제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축 및 군사비 삭감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그린벨트 해제 저지투쟁 등을 다짐했다. 추진위는 곧 중앙위를 개최해 후속 창당준비작업을 계속해 올 연말 창당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보고-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대회
역사를 만들어낸 10시간
2천여 발기인 한목소리로 "힘찬 창당" 결의
여성·농민·지식인대표는 추후 선출키로
사무총장 서리엔 천영세 선출

8월 29일. 보수정객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서울 여의도 한복판은 모처럼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 물결로 가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진보정당 창당발기인 대회장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 모여 창당추진위 상근자들과 자원봉사자 63명이 대회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안, 빌딩 앞 도로는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민중들의 절박한 함성으로 뒤덮여가고 있었다. 1년 넘게 농성을 펼치고 있는 현대중기 노동자들, 경찰의 폭력과 강제철거 맞서 싸우고 있는 최춘마을 철거민들, 농성 1천일째를 맞은 에바다 사태 관계자들, 그리고 핵발전소 건설반대 천리길 행군에 나선 울산 시의원들. 진보정당은 그렇게 투쟁 속에 건설되고 있었다. 발기인대회 자체보다 투쟁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더 깊고, 짙은 의미로 '진보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오후 1시가 다가오자 대회장은 발디딜 틈 없이 북적대기 시작했다. 창당추진위가 마감시간인 28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발기인 수는 6천2백15명. 대회에는 1천6백2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동부추진위원회는 6백6명으로 가장 많은 발기인 수를 조직한 지역답게 대회에도 3백여 명이나 되는 발기인들이 참석했다. 소문섭 경기동부추진위 사무처장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적 조직운영의 분위기 속에서 기존 운동역량이 매끄럽게 진보정당의 틀 안에 결합해가면서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울산도 만만치 않았다. 두 번째로 많은 5백46명이 발기인 등록을 마쳤고, 대회에는 1백2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김호규 울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현대정공 수석부위원장)은 발기인 대다수가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돈도 내고 지지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대회에 선뜻 오기가 뭐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회의가 많이 길어질까 봐 피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진보정당이 현장 구석구석 깊숙이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까.

대회 시작 전부터 대회장 주변에서는 때아닌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회장 입구에서 당명제정을 위해 9개의 후보당명 중 하나를 선택하는 1차투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넌 어떤 당명이 좋냐." "글쎄..." "난 민주노동당이 좋다." "왜?" "내 자신이 노동자고... 그냥 '노동당' 하면 북한 노동당이랑 비슷해서 부담되지만 '민주'가 붙으니깐, 차별성이 있잖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표용지를 들고 어쩔 줄 몰라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정부에서 온 건설노동자 진기영(33) 씨는 '민주노동당'에 자신있게 한 표를 던졌다. '민주진보당'을 지지한 한 창당추진위 운영위원은 "가장 무난한 이름"이라며 한표를 행사했고, 성남 시의원 김미희(34) 씨는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통일"이라며 발기인들에게 '통일민주진보당'을 설득했다.

의견 차는 있었지만 발기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당원의 손으로 당명을 뽑는" 한판 축제에 벽찬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오후 2시 반. 김진균 공동대표의 개회선언과 천영세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양연수 공동대표의 발기취지문 낭독, 이갑용 공동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권영길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본대회가 시작됐다. 그전에 내빈소개가 있었는데, 이용득 한국노총 금융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간부들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본대회는 초반부터 치열한 토론으로 전개됐다. 발기인대회 의사 규정 심의과정에서 일부 발기인들이 대회 성원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울산의 한 발기인이 먼저 나섰다. "효율성보다는 민주주의적 정당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반수가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울산의 윤인섭 발기인은 이렇게 반박했다. "발기인대회는 조직 완성대회가 아니라 조직 준비 초동단계입니다. 과반수 주장은 진보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며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수차례 공방이 오갔고, 권영길 의장은 "더 많은 발기인들을 참석케 하고자 하는 울산지역 발기인들의 충정의 의견으로 생각하겠으며, 그런 노력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문제를 매듭짓고 회의에 들어가겠다"는 말로 양해를 구하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토론 과정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공세적인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발기인들의 평가도 뒤따랐다. "너무 성급하고 변칙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부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논쟁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논쟁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고 서로를 서로의 새로운 영역으로 안내하는 축제"이어야 하므로.

오후 4시 15분. 안병욱 강령기초위원회 위원장의 강령보고에 이어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안건인 진보정당 당명 결정 건에서는 2시간 가까운 토론과 4차에 걸친 표대결 끝에 결국 '민주노동당'으로 결정됐다. 결선투표 결과는 민주노동당 6백51표, 통일민주진보당 6백11표.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한판승부에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가 터졌다. 민주노동당 결정에 대해 "대중적이지 못하고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창원에서 온 노동자 최은석(44) 씨는 "당명에 주체세력을 분명히 나타내 아직 현장에서 결합이 잘 안되고 있는 노동자 대중들의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명 제정 후 잠시 동안 주어진 정회시간에 참석자들은 대회장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했다.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참석자들의 주된 '화두'는 역시 '민주노동당' 결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참석자 중에는 "난 민주노동당 같이 못한다"며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진보정당 창당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발기인대회 후 민주노동당 준비위 사무실에는 '민주노동당' 창당을 축하하고 '당원 가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적잖이 걸려왔다.

대회장 한편에서는 강서양천 지역에서 온 발기인 한정희(31) 씨가 함께 온 애인 앞에서 "말로는 정치개혁, 정치개혁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진보정당 발기인대회를 보수언론에서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내일 언론에서 어떻게 쓸까." "기껏해야 몇줄 쓰겠지..." "그래도 너무 걱정말자. 진보정당은 언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만드는 거니까." 어느새 대회장 연단 위 전광판은 '진보정당'에서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축하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6시 20분. 두 번째 안건인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 규약안' 심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도 의사규정 심의 때처럼 발기인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10여개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가장 치열한 토론이 진행된 조항은 지도체계 선출·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었다. 인천의 양승호(35) 씨는 제 21조 2항 '상임대표가 대표단회의에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조정결정권을 갖는다'는 부분에서 '조정결정권'을 '다수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정결정권은 우리의 앞날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완전 삭제를 주장한 발기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순경(75) 고문은 "합의가 공동대표단에서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것은 분열이며 상임대표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배가 갈 수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수정 동의안은 부결됐다.

시간은 벌써 8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회의 시작 6시간째.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발기인들은 몹시 지친 모습이었다. 그냥 자리에 앉아 김밥이나 빵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습도 보였다. 대회장을 빠져나간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95세의 노구에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신창균 선생(자통협 상임고문) 같은 분이 있었기에 대회는 계속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전민중이 하나되어 진보정당 건설하자"는 대회 슬로건을 외치며 밤을 샜 각오로 대회에 임했다.

이어진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총장 선출에서는 권영길, 김진균, 양연수, 이갑용 공동대표와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지도위원, 천영세 창당추진위 집행위원장, 정병호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윤정석 전 전농 의장이 공동대표로 추천됐고, 천영세 집행위원장과 정윤광 창당추진위 조직위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추천됐다. 이에 김진균 대표, 정병호 이사장과 정윤광 위원장 등은 사의를 표했고, 결국 권영길, 양연수, 이갑용 대표가 공동대표로, 천영세 집행위원장이 사무총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민주노동당 준비위 초대 지도부가 구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준비위는 여성, 농민, 지식인을 대표하는 공동대표를 1인씩 선출하기로 결정했고, 공동대표들의 합의 추천으로 권영길 대표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한가지 문제가 생겼다. 규약에 "대표단 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돼 있어 정당법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발기인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됐고, "일단 서리체제로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면 된다"는 윤인섭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민주노동당 준비위 지도체계엔 당분간 '서리' 딱지가 붙게 됐다. 시계는 9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드디어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대회의의 막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는 ▲사회복지 예산 20% 쟁취, 정리해고제 철폐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입법추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전개 ▲호주제 폐지, 여성 고용·승진 30% 할당제 실현 등 9개 당면 정책·투쟁과제를 결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날 대회를 마쳤다.

마침내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의의 공식 출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먼 것일까. 힘차고 열띤 모습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았고 불만도 적지 않았다.

대회 후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들의 손에는 대회 자료집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결의문의 한 부분이 이날 발기인대회의의 의미를 소리없이 전하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먼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모두가 주저하던 진보정당 건설에 발벗고 나섰으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보정당 창당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현실은 땀 식힐 틈도 없을 만큼 너무도 급박하다. 더 멀고, 더 험한 길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이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9년 8월 30일자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최근의 신당 움직임과 근본적 정치개혁 토론 회」 개최

1. 사건일자 19990907-1999090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는 7일 오후 서울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최근의 신당 움직임과 근본적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계동 전 의원과 장기표 신문명연구원 원장, 최규성 국민정치연구회 사무총장, 최문순 민주노총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토론 차례로 진행됐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9년 9월 8일자

민주노동당 상임집행위원회, 당면투쟁 대응할 3개 대책팀 출범

1. 사건일자 19990908-1999090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8월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결의한 당면 정책 및 투쟁과제 가운데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재벌해체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해 국가보안법 특별대책반과 재벌해체팀을 구성했다. 또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안과 쟁점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신속히 정리, 표명할 수 있도록 언론대책팀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은 3개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가보안법 특별대책반은 최규엽 재정위원장이, 재벌해체팀은 이선근 재벌해체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각각 팀장을 맡기로 했다. 언론대책팀은 이상현 총무위원장이 팀장을 겸하기로 했다.

각 대책팀의 주요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대책반

대책반은 최근 청와대와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활발해지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준) 등의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일정을 감안, 10월 중순까지 집중적인 홍보 선전

활동과 정치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우선, 추석 연휴에 즈음한 대규모의 대국민 선전전, 중앙과 지역 준비위원회 사무실과 주요 거리에 현수막 걸기, 격문 및 국가보안법 철폐 스티커 제작 배포 등의 선전 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또 준비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10문10답 자료집과 행동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인이나 기관을 '국가보안법 5적'으로 선정해 이들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질의서 전달, 항의 방문 등의 정치공세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 서명운동과 거두 캠페인은 물론, 대중집회에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최규엽 재정위원장을 팀장으로 조직위원회 김광수 국장, 박용진 부장, 연대투쟁위원회 김문영 부장, 기획위원회 김민정 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사업 담당자도 준비하고 있다.

■ 재벌해체팀

재벌해체팀은 현 정부의 재벌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의 재벌 문제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며, 현대증권 주가조작 사건 등 시급한 경제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벌해체팀은 우선,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 검찰청 앞에서 '현대 주가조작 주범 정몽헌 구속 촉구 대회'를 갖는다. 2천억여원에 이르는 자금이 동원된 현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정주영일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

재벌해체팀은 또 오는 10월 5일 '신재벌정책 평가와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의 신재벌정책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재벌해체팀은 이선근 재벌해체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팀장으로 같은 특별위원회의 채진원 부장, 실업대책특위 조일영 부장으로 구성돼 있다.

■ 언론대책팀

언론대책팀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리기 위해 당초 대변인실의 기능을 확대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대책팀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 이상현 총무위원장을 팀장으로 대변인실 김종철 부장, 정치개혁특위 김웅 부장, 재벌해체특위 채진원 부장으로 구성돼 있다.

언론대책팀은 매일 낮 12시 연합뉴스 속보와 저녁 7시 조간신문 초판을 분석,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성명, 논평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과 산하 각 위원회의 활동 등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언론대책팀은 또 추석 전에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출입 기사를 배정한 일간지는 경향, 동아, 국민 등 11개사이다.

3. 참고자료

- 「진보정치」 창간준비 6호

민주노동당 주요간부 장기농성장 격려방문

1. 사건일자 19990916-1999091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기 농성투쟁 현장을 격려 방문했다. 민주노동당은 16일부터 18일까지 공동대표단과 천영세 사무총장서리, 상임집행위 소속 각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3백일 넘게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 유공자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협 회원들의 농성장 등을 방문, 투쟁기금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대립자동차 해고노동자, 투쟁 1천일째를 맞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영등포산업회에서 농성 중인 현대중기산업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의 횡포에 저항 자살한 노동자 이상관씨의 유지를 계승키 위해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산재 노동자 이상관 공대위' 농성장도 방문했다. 이밖에 서울 남부 추진위는 구로공단의 오토론 노조를 도봉.노원 추진위는 원자력병원 노조를 각각 격려 방문한다.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1차 중앙위원회: 2000년 1월 중으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기로 결정

1. 사건일자 19991008-19991008

2. 사건내용

16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및 재야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창당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7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12월 또는 내년 1월중 '민주노동당'을 창당키로 했다.

창당준비위는 권영길(권영길)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이갑용(이갑용) 양현수(양현수)씨 등을 공동대표로 확정하는 등 서리체제를 공식 지도부로 추인했다.

또 이달 말까지 총 111명의 중앙위원 선출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준비위는 홍보와 당세 확장을 위해 오는 28일 실시되는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창현 전 구청장의 부인 이영순(37)씨를 당 후보로 선출, 출마시키기로 했다.

3. 참고자료

- □□조선일보□□ 1999년 10월 9일자

민주노동당 창당기획단 제1차 회의

1. 사건일자 19991016-1999101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1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창당 기획단 1차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5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노회찬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창당일정 △지역조직 편제 △당원 모집 △당면 현안 기획사업 △총선기획 등 5개 항목에 대해 기초 발제한 데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우선, 창당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의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창당과 관련한 주객관적 정세의 분석, 그리고 조직, 재정 등 주요 부분의 준비 정도가 어떠한지 창당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창당 과정에 집중할 핵심 투쟁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전략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출됐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노동당과 관련한 몇몇 외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자체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3시간여 동안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18일 2차 기획단 회의에서 주객관적 정세, 총선대책, 주요사업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화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 창당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창당 기획단 1차 회의에는 권영길 상임대표, 천영세 집행위원장, 정운광 조직위원장, 최규엽 국보법 특별대책팀장, 노회찬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조진태 광주추진위 운영위원, 이성화 부산추진위 사무처장, 오종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이용길 충남추진위(준) 대표, 정용건 증권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창당 기획단에는 이밖에 김호규 울산추진위 집행위원장, 주대환 경남추진위 공동대표, 김기수 대구추진위 대표, 김태일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 이영순씨,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

1. 사건일자 19991028-19991028

2. 사건내용

- 1999년 10월 28일 치러진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선 이영순씨가 기존 보수정당 후보들을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됨에 따라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작업이 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월29일 창당준비위를 만든 뒤 기존 정치판에 내세운 첫 후보가 당선된 데 크게 고무돼 있다. 이상현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29일 "이번 선거는 보수정치와 정경유착에 신물을 느낀 국민들에게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변화의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내년 총선에서 진보세력의 약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선거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거 지원유세에 투입하는 등 당력을 총동원한 데 맞서 현대중공업 등 지역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으로 당선된 것이어서 소외계층에 기반한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후보가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구속된 남편 김창현 전 동구청장의 명예회복을 외치며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선거전략을 펼쳤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민의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민주노동당 힘찬 등장-울산 동구청장 선거 압승 의미, 노동자·민중의 커다란 승리

지난 10월 28일, 진보-보수의 한판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던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김창현 전 동구청장의 부인 이영순 민주노동당·민주노총 공동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울산추진위 내 경선을 통해 추대돼 '범민주노동후보'로 출마한 이영순 후보는 3만1천14표(45.9%)를 얻어 국회의원회 정천석(1만6천91표, 23.8%), 한나라당 변재규(2만5백13표, 30.4%) 후보를 무려 1만표 차 이상으로 따돌리고 울산을 다시금 명실상부한 '진보와 개혁의 근거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심지'임을 확인시켰다.

한마디로 보수기득권 세력만이 판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 쾌거였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부정부패와 가진자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피폐해진 우리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진보적 변화를 선택할 것이며, 그것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세력 약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월차를 써가며 선거운동을 돕던 노동자들, 투표 당일 조합원들을 열변이고 스무번이고 차로 공장에서 투표장까지 실어나르던 노조간부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중앙당까지 총력지원에 나선 국회의원회와 한나라당의 후보를 누를 수 없었을 것이다.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로 애초 이영순 후보측은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대그룹계열사들이 투표시간을 겨우 1시간만 보장해주었음에도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퇴근 직후 투표장으로 달려가 이영순 후보에 표를 던졌다. 민주노동당 울산추진위(공동대표: 이영현 윤인섭 조승수 천병태 홍정련)가 "무수한 정치탄압 속에서도 한발 한발 전진해온 노동자·서민의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이번 선거를 통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결코 한순간에 얻어낸 성과가 아니었다. 단지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정리해고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등 매년 전국을 뒤흔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꾸준히 전개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진 결과였다. 또한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인한 김창현 전 구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이후 울산연합을 비롯한 울산 진보운동진영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치열하게 펼쳐왔다. 이런 노력으로 동구에서만 김창현 전 구청장 석방 탄원서명에 주민 3만명이 참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도 1만5천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과 이영순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면화하는 선거운동을 펼쳐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되려 낮설고 어색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국회의원회측의 '사상시비' 공세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영순 새 울산 동구청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노동자·민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해서 투쟁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창당에 나선 사람들을 비롯 수많은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1999년 10월 30일자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 선포식> 서울 여의도 SK빌딩 앞에서 개최

1. 사건일자 19991119-1999111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권영길)는 19일 낮 서울 여의도 SK빌딩 앞에서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 선포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창당준비위는 "부패정치 청산을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등 정치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독소조항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선포식에 이어 민생을 외면하는 "냉동국회"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M 크기의 국회 모형 얼음조각을 부수는 행사를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수원 울산 대구 등을 돌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순회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1999년 11월 19일자

한사노총준위, 신노선 채택

1. 사건 일자 19991203-19991203

2 사건 내용

- '노동자정당건설전략에 대한 재고를 요청함'이라는 의 글을 통해 신노선을 제기
-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신노선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고 전원찬성으로 전 조직원토론을 개시할 것을 결정
- 제2차 한사노 중앙임시위원회에서 전위조직노선 폐기, 폭력혁명노선 폐기, 프롤레타리아독재노선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신노선을 채택.

3. 참고 자료

- '노동자정당건설전략에 대한 재고를 요청함'(김철순)
- '새로운 전략을 지지하면서(최윤희)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국회의원 299명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1. 사건일자 19991210-1999121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권영길) 이상현 대변인 등 당원 18명은 10일 국회가 각종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회의원 2백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4백여건이 넘는 민생법안과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국회일정 지연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1999년 12월 10일자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갖기로 결정

1. 사건일자 19991221-19991221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1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30일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기로 하는등 창당 일정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쳐 26개 법정 지구당 창당을 마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측은 현재 당원이 1만여명에 이르고 40여곳에 지역 추진 위원회가 결성돼 법정 지구당 창당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1월 8~9일 전국간부수련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 총선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여야 선거구제 협상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 될 것으로 보고 공단이 집중된 울산 창원 등 전략지역에서 30여명 안팎 의 후보를 내는 방안과 전체 선거구의 절반 정도인 1백여 곳에서 후보 를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 방침은 선거구제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확정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벤트의 하나로 내년 1월 20일께 "21세기 인류의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갖기로 하고 브라질 노동 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영국 노동당 등 각국의 진보정당 대표 와 노엄 촘스키 미 MIT대 교수 및 리영희 교수 등 진보적 석학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1999년 12월 21일자

민주노동당 서울 성북갑과 강북을 지구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수도권, 대전, 울산, 부산 등에서 21개 지구당 창당

1. 사건일자 20000116-2000012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 성북갑과 강북을지구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수도권, 대전, 울산, 부산 등에서 21개 지구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지구당 창당 일정은 #20일 종로 #21일 동대문갑 #22일 노원갑, 서대문갑, 마포갑, 강서을, 관악갑, 고양 일산 #23일 대전 2곳 #25일 안산갑.을, 울산 동, 중, 남, 북구, 성남 중원 #26일 수원 권선, 부산 연제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오는 30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전까지는 40개 이상의 지구당 창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8~9일 충남 도고 유스호스텔에서 전국간부수련회와 6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창당과 총선 방침을 논의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0년 1월 11일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4.13총선 앞두고 정치방침 결정

1. 사건일자 20000118-20000118

2. 사건내용

○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18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후보는 단위노조, 연맹, 지역본부의 승인을 전제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한다”고 결정했다.

○ 1월 26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정치위원회가 보낸 “민주노동당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노총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 2월 1일자 답변에서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민주노총 후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민주노총 각급 의결 단위에서 승인된 후보는 반드시 민주노동당의 ‘예비’ 후보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3. 참고자료

○ 이종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평론□□13호(2003)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권영길 대표 선출

1. 사건일자 20000130-2000013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당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어 권영길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대표로 선출하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민주노동당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민주노동당은 2000년을 부패와 지역주의로 얼룩진 후진적 정치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창당과 함께 여성 30% 할당제, 모든 공직후보자의 상향식 공천 등이 담긴 당헌과 노동자·민중 주체의 민주정치 실현,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평화적이고 민족화합적인 통일의 추구 등을 뼈대로 하는 강령을 채택했다.

또 권 대표와 함께 노회찬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박순보 전 전교조 부산시지부장, 양경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부대표로, 천영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0년 1월 31일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2표 도입 거리캠페인

1. 사건일자 20000207-2000020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7일 낮 국회 의사당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갖고 『여야 3당은 당리당략에 입각한 선거법 협상을 철회하고 1인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등 강도높은 정치개혁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밀실야합을 통해 현행법 대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할 경우 모든 민주단체와 함께 국민 저항운동의 하나로 「범국민 정치관계법 재개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3. 참고자료

- □□한국일보□□ 2000년 2월 8일자

민주노동당, 청와대에 <개정선거법>에 대한 거부권 촉구하는 서한 전달

1. 사건일자 20000214-20000214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국회통과 개정 선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김 대통령이 권역별 1인2투표제를 채택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 1인1표제가 유지되고 후보자의 기탁금도 2천만원으로 상향돼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이런 반개혁적 정치관계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개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0년 2월 15일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선거법 빈부불평등 조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며 단식농성 돌입

1. 사건일자 20000215-20000223

2. 사건내용

선거법 빈부불평등 조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진보세력의 원내 진출을 꿈꾸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정 선거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권 대표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선거법은 위헌적인 1인1표제를 유지하고 후보기탁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 빈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헌법에 정해진 평등.직접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1인1표제는 민주노동당 같은 신진 개혁세력의 정치권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라며 "기존 정당들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표를 나누어 먹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정 선거법은 입후보 기탁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나 올려 돈 없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봉쇄하고 시민단체의 입을 막고 발을 묶는 선거운동 규정을 존속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1인2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개악된 선거법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정치개혁의 의지가 부족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선거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단식농성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설사 이번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의 열망이 있을 때 개혁에 힘을 싣고 싶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단식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14일 청와대에 개정 선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0년 2월 16일자

민주노동당, 개정선거법 헌법소원 제출

1. 사건일자 20000216-2000021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6일 개정 선거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1인1표제가 직접.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후보자 기탁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빈부간 참정권의 불평등을 가져오며 지역구5석 또는 전국득표 5% 이상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돼 군소정당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개악 선거법 재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0년 2월 16일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단식농성 해제 및 경남 창원 출마선언

1. 사건일자 20000223-20000223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선거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벌여 온 단식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히고 16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권 대표는 회견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인1표제가 위헌임을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개정선거법을 공포한 것은 명백한 직무방기"라고 지적한 후 "'공천헌금은 받지 않지만 특별당비는 받겠다'는 해괴한 논리는 주먹질과 떡살잡이로 정치를 대신하는 과탄을 낳았다"며 여야를 동시에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내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수도권과 노동자가 밀집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총선에 나설 것이라고 권 대표는 덧붙였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0년 2월 23일자

민주노동당, 9명의 총선후보자 확정

1. 사건일자 20000228-2000022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29일 권영길(權永吉)대표를 경남 창원읍의 후보로 선출하는 등 모두 9명의 총선 출마자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권대표는 28일 저녁 창원시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 지부 당원 총회에서 당원 331명 중 323명의 찬성(97.5%)으로 창원을 후보로 선출됐다.

다음은 총선출마 후보 명단.

◇서울 ▲강북을=박용진(朴用鎭.30) 전 전국연합 정치부장 ▲노원갑=이상현(李尙炫.40) 전 민주노동당 준비위 대변인 ▲금천=최규엽(崔圭曄.47) 전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관악을=신장식(申莊植.30) 관악주민연대 정책실장 ◇부산 ▲연제=박순보(朴淳甫.55)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인천 ▲서.강화갑=김창한(金昌漢.39) 인천노동연구원 부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정형주(丁炯周.35) 성남청년회장 ◇충남 ▲천안을=이용길(李用吉.42) 민주노동당 회계감사 ◇경남 ▲창원을=권영길(59)

3. 참고자료

- □□경향신문□□ 2000년 3월 1일자

민주노동당, 16대 총선 선거대책기구 구성

1. 사건일자 20000303-20000303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3일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에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한 고려대 김윤환 교수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인 박순경(여) 전 이화여대 교수를 선임하는 등 16대 총선을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했다. 또 선거대책본부장은 천영세 사무총장, 선대위 대변인 이선희(여) 대변인, 미디어본부장은 홍 의 전 문화일보 편집부장이 각각 맡았다.

이와함께 산하기구인 부패청산운동본부 본부장에 이문옥 전 감사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에 이선근 경제민주모임 대표가 선임됐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대책기구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0년 3월 3일자

청년진보당 소속 회원들 <세계여성의 날>맞아 호주제 폐지 집회
(20000308-20000308)

민주노동당, 제16대 총선 24대 일반공약 발표

1. 사건일자 20000317-2000031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7일 정치개혁, 고용안정, 사회적 평등 실현 등 3대 핵심공약과 국가보안법 폐지,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정당명부제 도입 등 24대 일반공약을 발표했다. 3대 핵심공약은 국민소환제 실시와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통한 근본적인 정치개혁, 정리해고제 중단과 40시간 노동제 정착 통한 고용안정, 누진세율 강화와 복지예산의 2배 확충을 통한 사회적 평등 실현 등이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0년 3월 17일자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115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1. 사건일자 20000326-20000326

2. 사건내용

기존정당 출마 '386' 비판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단 115명이 26일 기성 여야 정당의 후보로 출마한 '386세대'를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필 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등 10명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전국의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11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명망가 다수가 기존 정당의 공천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명망을 기성정당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지역주의와 파벌 경쟁을 일삼는 보수정당의 정치 독점을 끝내고 신진 정치세력을 키워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0년 3월 27일자

제16대 총선: 민주노동당 출마지역 평균 13.1% 득표 / 선관위, 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 등록 취소

1. 사건일자 20000413-20000418

2. 사건내용

-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 중 득표율이 2% 미만인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 공화당(대표 허경령) 등 3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당법 38조는 총선에 참여한 정당에 대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2%를 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18%, 청년진보당은 0.66%, 공화당은 0.02%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 김용환(金龍煥)의원의 '1인정당'인 희망의 한국신당은 득표율이 0.41%로 기준에 미달했지만 지역구 1석을 획득, 당 간판을 유지했다.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은 그러나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중앙위원회의와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창당 절차를 밟아 17대 총선을 기약할 방침이다.

3. 참고자료

- □□문화일보□□ 2000년 4월 18일자

청년진보당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제16대 총선 결과에 따른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더 큰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1. 사건일자 20000419-20000419

2. 사건내용

청년진보당은 4월 19일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총선 이후의 조직진로를 논의했다. 100명의 중앙위원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앙위원들은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에 따른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동시에 민중후보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지난 1년 5개월간의 당 활동의 성과와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이 보여준 청년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한 새롭고 더 큰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당헌 제76조 2항 '당의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에 의거해 상임집행위원회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선욱 동지가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법적인 지위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치기로 했으며 최혁 동지가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이

날 제출된 안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산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표결결과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제출된 원안이 통과되었다.

3. 참고자료

- 「청년진보당」 35호(2000. 4. 24.)

민주노동당 당지도부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1. 사건일자 20000422-200005DD

2. 사건내용

4.13총선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당 지도부의 전국 순회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순회에 참가하는 지도부는 권영길 대표를 비롯, 노회찬 양경규 부대표, 천영세 사무총장 등이다.

지도부 순회 간담회는 지난 22일 서대문마포은평지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강남서초, 경기동부, 대전, 광주, 성동광진, 평택, 의정부동두천, 전북지부와 간담회를 마친 당 지도부는 앞으로 5월말까지 계속해서 각 지부를 순회하며 총선평가, 당의 진로와 전망, 6.8보궐선거, 5월 총파업투쟁, 총선 이후 지역사업 등에 대해 당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역순회 일정

5월 2일(화) 부산 19:00 지부사무실

3일(수) 구미

4일(목) 영등포 19:00 굿모닝증권노조 사무실

6일(토) 구리남양주 16:00

수원 13:00

8일(월) 진주 20:30 지부사무실

안산 19:00 지부사무실

9일(화) 울산 19:00 지부사무실

충북 19:00 지부사무실

10일(수) 강북성북 19:00 지부사무실

안양군포의왕과천(가안)

11일(목) 노원도봉(가안)

12일(금) 충남 19:00 천안문화원

강동송파 17:00 지부사무실

민주노동당 제4차 중앙위원회: ‘당의 외연확대 통한 재창당’ 기초확인, 5월 1일 ‘창당준비위 선관위등록’ 결정

1. 사건일자 20000428-2000042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5월 20일 임시 당대회 전까지 △전국집행위원 선출 △조직체계 정비 △실질적인 재창당을 추진하는 한편 또 6.8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은 지난 28일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5월 12일 5차 중앙위원회를 거쳐 20일 임시 당대회에서 당의 진로와 발전계획, 당헌개정, 여성 부대표 선출, 16대 총선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당의 외연 확대를 통한 재창당'을 기조로 당의 진로와 사업방향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총선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총선평가시안은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수안과 소수안을 모두 실어 각 지부로 발송, 토론을 거쳐 임시 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한 중앙위원들은 6.8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5차 중앙위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이날 중앙위원회를 발기인대회로 갈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5월 1일 선관위에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재등록 했다.

한편 이문옥 부대표(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보고를 통해 정기국회 전까지 독자적인 부패방지법안을 만들어 1백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에 입법청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선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을 계속 해 나가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이자제한법, 노동자소유경영참가법 등의 입법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선출 중앙위원(지역 12인, 부문 13인)과 대의원(지역 21인, 부문 52인)의 보궐선거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실시된다.

민주노동당, “총선득표 2% 미달 등록취소는 위헌”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 사건일자 20000510-2000051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0일 총선에서 2%를 득표하지 못했다며 등록취소를 통보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소장에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임에도 현 정당법은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전국 21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 평균 13.1%, 전국단위로는 1.18%의 득표율을 올렸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0년 5월 11일자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원회: 전국집행위원 12명 선출, 주요당직자 인선

1. 사건일자 20000512-20000512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5월 20일 임시당대회에 제출할 총선평가안을 확정했다. 또 당헌상 중앙위에서 뽑도록 돼 있는 전국집행위원 12명을 선출하고 주요 당직자들을 인준했으며 광주지부에서 광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된 박종현 후보(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도협의회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과 기획위원장, 대변인, 중앙연수원장, 사무부총장, 당기관지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전국집행위원으로 추가할 것 등을 담은 '당헌개정안'을 확정, 오는 임시당대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경제민주화운동본부로 전환하고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의 부문위원회와 자주통일위, 조직강화특별위, 인권위, 지방자치위 등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요당직자로 사무부총장에 정성희 전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정책위원장에 장상환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기획위원장에 박홍순 창당준비위 교육문화위원장, 중앙연수원장에 황광우 광주지부 위원장, 자주통일위원장에 최규엽 서울남부지부 상임위원장을 각각 인준했다. 대변인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추후 인준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중앙위를 재등록을 위한 창당대회로 갈음해 선관위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또 6.8지자체 보궐선거 후보 인준과 관련, 이날 이후 지역에서 선출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임시당대회에서 인준하고 임시당대회 이후에 선출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도부에게 인준을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5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 99명 가운데 73명이 참석해 사상 최고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오후 2시부터 8시 40분까지 6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에도 참석자들은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시종일관 열띤 토론을 벌이며 분위기를 달궜다.

○ '시·도협의회' 신설 등 당헌개정안 확정

이날 회의에서는 5월 20일 임시당대회에 제출될 당헌개정안과 총선평가안이 확정됐다. 우선, 당헌개정안에는 '시·도협의회'를 신설하고 2001년 정기당대회에서 지역조직개편안을 확정토록 했다.

현재 당헌상으로는 '지부'를 지역조직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부의 필요에 따라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지부가 서너 개의 선거구를 포괄하고 있어 일상적인 주민접촉사업이 어렵고, 서울지역의 경우 12개 지부가 결성돼 있지만 서울시를 상대로 한 사업을 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등 일상사업을 벌여나갈 기본단위로서의 지구당조직과 시·도 단위를 묶는 조직체계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임시당대회에서 당헌이 개정되면 곧바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광역시·도지부 구성 △현재의 지부편제를 지구당체제로 전환 △당원들의 기본조직 편제원칙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전략

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당헌개정안에는 또 전국집행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책위원장, 기획위원장, 대변인, 중앙연수원장, 사무부총장, 당기관지편집위원장 등 주요집행책임자들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전국집행위가 사업집행을 의결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체가 되기 위해 당의 주요집행책임자들을 포함시켜 집행단위와 실행단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준수 중앙위원이 "전국집행위원을 선출직으로 구성한다는 당헌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문제제기 했으나 중앙위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63명 중 32명이 찬성해 개정안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 임시당대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당대회 이후부터 전국집행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울산복구 평가 또다시 논란

4차 중앙위에 이어 이날 역시 울산복구 평가를 둘러싸고 중앙위원들 간에 논쟁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천병태 중앙위원은 울산복구 평가내용 가운데 '민주적 경선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인신공격이 표출된 것은 당의 기풍과 동지적 신뢰를 훼손하는 정치적 오류였다'(다수안)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 "일부 당원들의 인신공격이 있었을 뿐"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천 중앙위원은 또 '울산복구 선본이 사과문발표 등 당 지도부의 거듭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문을 준비했었으나 당일날 현노신쪽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장한 사기극'이란 신문을 배포했고, 이런 시점에 사과문이 나갈 경우 또다른 공방을 불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사과문을 내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므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준수 중앙위원은 "당의 책임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상조사 이후 당기위원회를 소집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현기 중앙위원은 "복구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울산지도부가 당내 조직도 아닌 곳에서 나온 유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영호 중앙위원은 "임시당대회에서 더이상 유인물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네 번이나 유인물이 배포된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미 4차 중앙위에서 토론돼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평가안이 나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로 문구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노회찬 총선평가위원장(부대표)의 지적에 따라 '인신공격'과 관련한 천 중앙위원의 발언은 소수안에 추가해 언급하는 것으로 했다. 또 '사과문'과 관련한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63명 중 16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로써 중앙위의 총선평가안은 확정됐지만 울산복구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된 만큼 임시당대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집행위원 후보들 '당의 지도·집행력 부재' 공통으로 지적

당의 최고집행기구인 전국집행위원 선출과 관련, 5월 10일까지 입후보한 18명의 후보들은 이날 "당의 지도력과 집행력의 부재"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각자의 포부를 밝혔다. 투표결과 김은주(26표), 나순자(26표), 문순덕(24표), 이은주(22표), 조은주(52표), 차준미(35표, 이상 여성할당부분), 박홍순(16표), 성두현(32표), 양병민(21표), 임혜숙(14표), 정성희(31표), 최규엽(33표) 후보 등 12명이 당선됐다. 이날 선출된 전국집행위원들은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당연직 집행위원(6인, 당헌개정될 경우), 권역별 집행위원(5인), 부문별 집행위원(4인) 등과 함께 집단지도체계를 이뤄 앞으로 당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 '당'다운 사업계획과 실천을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은 5월 투쟁계획과 남북정상회담 대응과 관련해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활동계획이 있어야 한다"(김준수 중앙위원)거나 "당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빠져 있다"(이용길 중앙위원)고 지적해 '당'다운 사업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 두 조직 모임 지역으로 확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2일 정례협의회를 갖고 5월 총파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월 총파업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총파업 참여 독려,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여론확산 등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당내에 '5월투쟁 대책팀'을 두고 지역별 캠페인, 자전거 홍보단 발족, 국회앞 퍼포먼스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선 이후 당의 발전방향과 관련 양쪽 지도부는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이란 기조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 대표가 "범민주진보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재창당을 위해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하자 단 위원장은 "비록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은 못했지만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과 민주노총간의 정례협의회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해 지부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집행위원 프로필(당 대표단 제외)

<권역별 전국집행위원>

박용진(서울)

국민승리21 조직부장

16대 총선 강북을 출마

강북성북지부 임시위원장(현)

이용대(경기인천강원)

전국연합 기관지 <민> 편집위원

경기동부지부 교육위원장(현)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편집장(현)

이용길(대전충청)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천안민주단체협의회 의장

충남지부 위원장(현)

황광우(호남제주)

백기완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장

14대 총선 광주 동구 출마(민중당)

광주지부 위원장(현)

<부문별 전국집행위원>

양연수(빈민)

전국노점상연합회 초대회장

민주노동당(준) 공동대표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현)

(노동)-추후 선출 예정

(여성)-추후 인준될 여성위원장

(청년)-5월 19일 선출 예정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집행위원>

김은주

진보정당창당추진위 여성부위원장

대학노조 여성위원장(현)

관악동작지부 공동위원장(현)

나순자

이화의료원노조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장(현)

문순덕

한국슈어프로덕츠노조 위원장

14대 총선 구로구 출마

고양지부 대의원

박홍순

민주노동당(준) 교육문화위원장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 기획부단장

진보정치포럼 대표(현)

성두현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대표

정치연대(준) 운영위원

인천지부 공동위원장(현)

양병민

민주노동당(준) 기획위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 겸 서울은행지부 위원장(현)

한국노총 중앙위원, 대의원(현)

이은주

인천민중연합 조직부장

인천지부 여성위원장(현)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사무국장(현)

임혜숙

전노협 편집부장

민주금속연맹 총무부장

금속산업연맹 여성국장(현)

정성희

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 정책기획부장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국장, 실장
안양군포의왕과천지부 운영위원(현)
조은주
서대문마포은평지부 기획위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여성위원(현)
서대문마포은평지부 정책기획국장(현)
차준미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현)
안산지역여성노동조합 위원장(현)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민주노동당(준) 정책위원장
서울남부지부 상임위원장(현)

3. 참고자료

- 「진보정치」 7호(2000년 5월 19일~25일)

민주노동당 제3차 임시당대회 성원미달로 6.11로 당대회 소집 연기

1. 사건일자 20000520-2000052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20일 시내 호텔에서 제3차 임시당대회를 열고 진보세력 의 결집과 당의 외연 확대를 통한 재창당을 결의했다.민주노동당은 이날 채택한 대국민선언문 등을 통해 "16대 총선에서 의 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출마자 평균 13.1%라는 득표율을 통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 등 주요 민중세력, 시민운동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민주진보세력과 힘을 합해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박태준(朴泰俊) 전 총리의 명의신탁 파문과 관련, 공 직사회의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3.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00년 5월 21일자

민주노동당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의

1. 사건일자 20000530-2000053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6월 11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임시당대회를 열고 당헌 개정, 여성부대표 선출, 총선평가, 총선 이후 당 진로,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당은 이에 앞서 지난 30일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전국집행위원회 운영규정안을 검토하고 당면 투쟁사업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9일 2차 회의를 열어 하반기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전국집행위에서는 집행위 운영규정안을 검토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징키로 했다. 또 5~6월 투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시간 단축 서명운동을 국회개원 전까지 완료키로 했으며, 6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대학로에서 주 5일 근무, 주5일 수업을 위한 인간띠잇기 행사를 벌이기로 하고 6월 10일 민중대회에 전당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6.8지자체 보궐선거와 관련, 재정지원을 위해 당 대표단과 중앙당 당직자, 전국집행위원이 특별당비를 내기로 결의하고 총선 때 미납된 중앙위원, 대의원 특별당비를 거둬 후보자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중진영의 한시적인 공동투쟁체인 '민중대회위원회'와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국집행위원들은 지난달 20일 임시당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당대회 성사를 위해 대의원 조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중앙당은 5월 12일 5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창당 등록을 마쳤다.

6.8 보궐선거

1. 사건일자 20000608-20000608

2. 사건내용

김웅(서울 관악·광역)

연동야학 교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지방자치포럼 운영위원

관악구청장 비서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위 정책기획부장

전국야학협의회 자문위원(현)

"당원들과 함께하는 선거, 발로 뛰는 선거, 민주노동당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

장유신(서울 마포·광역)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지부(준) 공동대표

(주)새한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중앙위원(현)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지구 부대표(현)

"민주노동당이 이 땅의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진보정당임을 확실하게 알려내겠다."

이양수(성남 중원·광역)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운동본부 집행위원

경기동부노동운동협의회 의장(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현)

민주노동당 중원구지구당 부위원장, 민생민권위원장(현)

"우리 민족의 빼앗긴 자존심과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

박우형 후보(성남 수정·광역)

경기동부청년단체연합 의장

북한수해동포돕기 쌀보내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푸른학교' 수정구 대표(현)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동부지역대책위 수정구 대표(현)

민주노동당 수정구지구당 위원장(현)

"진보진영의 힘을 강화시킬 시대적 사명을 받아 안고 진보세력 발전을 위해 당당히 나섰다."

김근래(하남·광역)

하남청년회 초대회장

하남광주연합 지부장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중앙위원(현)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지구 사무처장(현)

민주노동당 하남지구당 위원장(현)

"노동자 서민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민주노동당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서겠다."

박종현(광주 광산·광역)

대우캐리어노조 초대위원장

광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도위원(현)

민주노동당 광산구지구당 위원장(현)

"척박한 광주땅에 진보정치의 깃발을 꽂겠다. 당원동지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꿈을 이루겠다."

소문섭(성남 중원·기초)

국민승리21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현)

서울대 경영대 벤처기업동우회 회장(현)

Medi1(주) 대표(현)

"대중 속에서의 정치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당의 건재를 다시금

확인시키겠다."

주경희(용인 기흥·기초)

경기동부연합 정치위원

전국연합 정치위원

'푸른학교' 대표(현)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용인지역대책위 대표(현)

민주노동당 대의원(현)

"용인은 어느 지역보다도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당선으로써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종균(전주 덕진·기초)

금속산업연맹 전북본부 대의원

현대자동차노조합 관매본부 전북지부 교육선전부장(현)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치위원(현)

민주노동당 덕진지구당 위원장(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필코 승리해 진보진영의 초석을 세우겠다."

6.8 보궐선거 평균득표율 18.8%

민주노동당 대중적 기반 확인... "중앙당 전략 부재 아쉬워"

6.8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은 9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안타깝게 모두 낙선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평균 18.8%의 득표율을 보임으로써 당의 대중적 기반이 견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번 보궐선거의 평균투표율은 21%로 4.13총선 때의 57.2%, 98년 지방선거 때의 5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평균 18.8%의 지지율을 기록, 4.13총선 때의 13.1%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와 관련 노회찬 당 부대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인 20~30대의 투표율이 낮았는데도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것은 40~50대들에게서 얻은 표"라고 분석하고 "이는 당 활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당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마포, 전주, 광주지부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응함으로써 이후 지역활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선거의 당락을 떠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총선 직후 열린 전국지부장 연석회의와 중앙위원회에서 총선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를 잇고 지역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기조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결국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3명을 출마시키는 데 그친 것은 중앙당과 각 지부의 적극적인 준비와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총선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전 유성구와 울산 북구에서 역량 부족과 총선 후유증 등으로 지부 차원에서 '총선 불참'을 결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지부방침에 따라 김진영 당원(현대중공업 조합원)이 탈당한 뒤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구의원에 출마, 65.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울산 지부의 한 대의원은 "총선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재등록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고 결정한 것은 보궐선거에 당의 후보로 출마시키자는 것이 아니었나"며 "충분히 가능성 있었던 지역에서조차 후보를 내지 못했던 것은 중앙당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총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200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를 내다보는 당의 방침이 있는 후에 출마가능 지역과 후보군을 발굴, 조직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6·11 임시당대회

1. 사건일자 20000611-20000611

2. 사건내용

4·13총선 이후 6월 11일 열린 임시당대회에서는 “당의 유지, 강화를 위한”사업계획으로 1) 등록취소이후 당의 기본진로 결의와 2) 진보정치세력의 총화와 당의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을 결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대의원 2백46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당대회를 열고 재창당을 힘있게 결의했다.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당대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이날 다시 열린 임시당대회에서는 김혜경 관악사회복지 이사장과 최순영 부천YMCA 이사를 부대표로 추가 선출했다. 또 4.13총선평가와 관련 울산북구문제 등을 놓고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끝에 중앙위에서 제출한 평가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총선 이후 당 진로와 관련 당의 유지·강화를 위한 전 당원의 결의를 조직하고 진보진영의 총화와 외연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확정하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협의회 신설 등을 담은 당헌개정안은 성원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각계 진보세력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안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 지도부는 중간에 회의가 잠시 정회된 동안 따로 모임을 갖고 총선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재신임을 묻기로 결정했으나 회의 끝무렵 성원이 되지 않아 이 문제는 처리되지 않았다.

권대표는 "원내 진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로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대표는 이어 "의장께 이 안건을 정식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려 했으나 성원이 안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추후 지도부에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당대회 때까지 지도부가 더욱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열린 2차 전국집행위원회회의에서는 당의 하반기 핵심제도개선 투쟁에 집행위원들의 적극적인 결함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성두현 집행위원, SOFA 개정 투쟁은 최규엽 집행위원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용진 집행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해 시급한 파견노동자 대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3. 참고자료

- 「진보정치」 29호(2000년 12월 8일~12월 21일)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1. 사건일자 20000615-2000MMDD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선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해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부별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다.

임대료 인상피해나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떼인 채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벌이는 이번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마다 각 지부별로 돌아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제정당 대표 회담' 제안

1. 사건일자 20000703-20000703

2. 사건내용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정치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등 이북의 제 정당 대표와의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4면권 대표는 이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지금처럼 남북 당국자들만의 교섭으로는 결코 완수될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이 자주적 교류의 물꼬를 터 사회 모든 방면의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7.4공동성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당국자들만의 협상과 교섭으로 진행돼 결국 다방면의 민족교류는 빛도 보지 못한 채 정권 내부 관리용으로 전락했다"며 "이북의 여러 정당 대표를 만나게 될 경우,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다루지 못한 군비 축소와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문제 등 남북간 평화실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통일정국을 주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함께 고온리사격장 폐쇄,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미군기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에 당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권 대표는 덧붙였다.

당, 북한 정당대표들에게 회담 공식 제안

4일 "정상회담 쟁점과 대안" 토론회...매향리, 국보법 투쟁 적극 결합키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7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권영길 대표와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천우당 등 북쪽 제 정당 대표들과의 회담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회담 성사를 통해 북쪽 정당 대표들과 한반도 평화실현방안, 통일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남북 정당·사회단체 민족 공동회의' 및 '남북 정당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통일 정세'를 주제로 대중토론회를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21일 전국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항리 사격장 폐쇄 투쟁 등에 당이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매항리 사격장 폐쇄를 위한 전국대책위'를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22~24일 매항리 일대에서 전국연합 등과 함께 '반전 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월 22일 오후 1시 용산 미8군부대 앞에서 매항리 사격장 폐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가질 계획이다.

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관련 성두현 전국집행위원을 중심으로 대책팀을 구성, 당 차원의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연대회의'는 7월 5일 국가보안법 철폐 공청회, 7월초 3당 대표 면담, 7월 22일 대중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0년 7월 4일자

민주노동당,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통일 정세 :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1. 사건일자 20000704-20000704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2000년 7월 4일 오후 2시에 홍사단 강당에서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통일 정세 : 쟁점과 대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다.

■ 제1부 : 6·15 공동선언 분야별 평가

사회 : 장성희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발표1 : 6·15 남북공동선언 평가1 : 자주(1항), 통일방식(2항), 긴장완화와 평화-쟁점과 대안

▷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발표2 : 6·15 남북공동선언 평가2 :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신뢰구축(4항) - 쟁점과 대안

▷ 장상환(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위원) /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통일정세 : 쟁점, 과제, 대안

사회 : 장상환

발표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종합토론 :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삼성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노회찬 (민주노동당 부대표)

민주노동당, 금감위에 금융지주회사방안 문제점 질의서 전달

1. 사건일자 20000712-20000712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 이용근 금감위원장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 방안의 문제점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냈다.

민주노동당은 질의서를 통해 현재 금융불안의 난맥상의 원인인 △재벌·부실기업의 소유구조 개선 미비에 따른 부실양산 △금융기관의 수익성악화에 따른 기업대출 축소 △기업자금난에 따른 기업활동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경제관료의 정책실패를 감추고 대형부실을 양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금융권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워크아웃 방안을 전면 폐기할 것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보증으로 은행이 대출하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자사주를 인수하기 위한 우리사주 구매기금을 조성할 것 △노동자 이사·감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소유경영참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금감위가 일주일내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 '재창당 기획위원회' 구성 결정

1. 사건일자 20000721-20000721

2. 사건내용

2000년 6월 11일 임시당대회에서 총선 이후 당진로와 관련 '진보정치세력의 총화와 당의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이 결의된 이후 7월 21일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는 '재창당기획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위원장에 천영세 당 사무총장, 부위원장에 박홍순 당 기획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각 부문과 지역에서 초보적 기획과 활동이 가능한 주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14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양경규, 양병민, 박우영, 정성희, 이영남, 이선희, 조현연, 황선진, 성두현, 최기영, 오재영, 이상현, 황광우, 장문식.

3. 참고자료

- 「진보정치」 29호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 정책위 산하 통일방안 작성 소위 확대 보장

1. 사건일자 20000915-2000091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의를 갖고 정책위원회에서 제출한 통일방안 초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통일방안이 과거 진보진영의 통일방안에 비해 총체성과 구체성 등에서 진전된 측면은 인정되나 4단계 구분의 적절성 여부, 단계별 이행 방안의 지나친 세부적 서술, '자주'에 대한 시각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제출됐다.

또 이같은 통일방안 내용에 대한 토론과 함께 방안 작성 주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일부 집행위원이 기존의 정책위 대신 전국집행위 직속으로 통일방안 작성 소위를 새로 만들 것을 주장해 논의가 됐으나 표결 결과 이 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방안 작성은 정책위가 주관이 돼 계속 진행하되 기존 정책위 산하 통일방안 작성소위를 확대 보장해 운영키로 했다. 확대 보장된 통일방안 작성소위에서 마련된 초안은 전국집행위의 검토를 거친 뒤 차기 중앙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결성

1. 사건일자 20000926-2000092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소비자문제연구하는시민의모임과 함께 지난 26일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 등)를 정식 발족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당이 총선시기부터 추진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MF를 전후하여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이나 보증금을 떼이는 등 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법 제정과 상가임차인 보호운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10월 10일)과 공청회(26일)를 여는 것

을 비롯해 서명운동 및 캠페인, 대정부·대국회 입법로비 활동 등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상가임차인 피해상담센터 개설, 대단위 상가의 피해사례에 대한 집단소송, 피해 백서 발간, 12월 전국 상인대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참고자료

- 「진보정치」(2000년 10월 6일~12일 당원판)

청년위, 운영위원 전원 사퇴

1. 사건일자 20000927-20000927

2. 사건내용

청년당원대회의 연이은 무산 등으로 일상활동이 정지됐던 청년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 7명 전원이 총사퇴함으로써 청년부문 조직 재건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호 등 청년위 운영위원 7인은 지난달 27일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린 총사퇴 결의서를 통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의 청년당원대회가 무산됨으로써 당내 부문위원회로서의 청년위원회 건설 계획이 실패하였으며, 모든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운영위원들은 청년당원대회 무산 이후 2개월여에 걸쳐 청년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

1. 사건일자 20001010-2000101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지난 10일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했다. 여야의원 8명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이 법안은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됐다.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여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제정 동의서명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상가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상담과 서명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북측의 노동당 창당 55돌 기념행사 초청에 응하기로 하고 권영길

대표 등 6명의대표단 방북신청서 통일부에 제출

1. 사건일자 20001005-2000100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북측의 노동당 창당 55돌 기념행사 초청에 응하기로 하고, 권영길(權永吉) 대표 등 6명의 대표단 방북 신청서를 5일 통일부에 제출했다.또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민가협,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6개 단체도 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7개 정당·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의 초청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방북 불허 방침을 비난했다.

3. 참고자료

- □□한국일보□□ 2000년 10월 6일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정례협의회, 전농 등 4단체 간담회 갖기로 결정

1. 사건일자 20001117-20001117

2. 사건내용

권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17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정례협의회를 갖고 재창당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재창당과 관련 양 조직 지도부는 "재창당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주노총에서 각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3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4조직 지도부가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전국연합과 전농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당에서 좀더 공세적인 정치활동을 떠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권영길 대표는 "전국순회연설회 등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청회

1. 사건일자 20001120-20001120

2. 사건내용

영세 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 지난달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대표 권영길 외 4인)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검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 발제자로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는 상가임차인들이 호소하는 주요 피해사례와 심각성을 들고 운동본부가 청원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했다.

15대 국회에서 각각 점포임대차보호법안, 업무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이재오(한나라당), 천정배(새천년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운동본부의 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토론시간에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밝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청회가 끝나자 상인들은 민주노동당 당사로 자리를 옮겨 '세입자권리찾기상인모임' 2차 회의에 참석, 오는 12월 5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열리는 제1차 상인대회 실무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국순회간담회: 지역조직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1. 사건일자 20001128-2000112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노회찬 부대표)는 내년 정기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당면한 조직현실과 조직강화 방향과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강특위는 지난달 28일 경기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12월 7일), 부산(8일), 호남(12일 광주), 인천(13일), 경남(15일 창원) 등 연말까지 모든 권역을 순회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간담회에서는 현재의 '지부-분회'체계를 '광역시도지부-지구당-분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역조직체계 개편안 및 분회편제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광역시도지부 건설을 위한 지역지부연석회의 추진 등에 대해 토론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첫 공식회의

1. 사건일자 20001203-20001203

2. 사건내용

2000년 12월 3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4단체 지도부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통일연대조직 건설, 진보정당 문제 등 주요 관심사를 놓고 장시간 의견을 교환했다. 4단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함께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정광훈 전농 의장을 비롯한 각 단체 지도부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시기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과 '진보정당운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4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4단체는 또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전선운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전선운동체와 진보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시켜 나가기로 했다. 4단체 지도부는 앞으로 비정기적인 간담회를 계속 갖기로 했으며, 각 단체 집행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광훈 전농 의장은 지난 3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4단체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이미 '민중대회위원회'를 통해 연대투쟁을 벌여온 바 있는 이들은 상설적 공동투쟁체, 통일운동연대기구, 진보정당운동 등 진보진영내 주요 화두를 놓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를 '의미있는' 만남으로 평가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단체 지도부들은 "민중운동진영의 비상설적 공동투쟁체인 민중대회위원회를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과 "민주노동당을 확대, 발전시켜 진보정당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장기적으로 전선운동체로서의 전망을 갖는 '상설적 공동투쟁체'와 민중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진보정당' 건설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민중들에게 진보진영이 대안세력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4단체가 정치조직, 전선조직, 대중조직이라는 각기 다른 위상과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그간 민중대회위원회를 비롯한 사안별 연대기구의 활동이 형식적 연대투쟁에 그친 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건설될 상설적 공동투쟁체가 진보운동진영의 투쟁의 '참모부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실천적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들 4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전농과 같은 대중조직의 진보정당운동의 조직적 참여 여부는 민주노동당의 재창당 추진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향후 이들 4단체의 정치적, 조직적 공조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경제정책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

1. 사건일자 20001207-2000120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7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제안한 뒤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총론과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농산물개방 외환자유화 등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국민투표를 관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 회의를 구

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0년 12월 8일자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정기 당대회 2월 24-25일 개최하기로 결정

1. 사건일자 20010108-2001010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오는 2월 24일과 25일 정기당대회와 창당 1주년 기념대회를 잇따라 열어 총선 이후 당의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당원들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2002년 대 격변기에 대비한 전당적인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8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대회 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기당대회에서는 2000년 사업평가, 결산보고, 당대회 의장단 선출, 정세보고, 2001년 사업계획 및 예산, 당헌개정, 조직강화방안, 재창당추진방안, 2002년 양대선거 기본방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창당 1주년 기념대회에서는 모범활동을 벌인 지부와 당원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정기당대회를 앞두고 각 지부에서는 '전당원 만나기운동'과 '당원가족 만나기 운동'을 전개, 전 당원 여론조사와 당 대표 편지와 당원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지부 순회간담회를 통해 정기당대회 의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당에서는 또 정기당대회가 일방적 구조조정의 강행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전개될 긴박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것을 고려하여 2월 12일부터 22일까지를 '대국민 실천주간'으로 정해 대국민 연설회와 기관지 특보 배포 등의 집중선전전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당대회 대의원 선출과 관련, 당대회 7일전까지 대의원 선출을 마치는 것으로 당규를 개정했으나 경과규정을 뒤 올해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당대회 20일전까지 대의원 선출을 마치도록 했다. 또 "지역분회를 기본으로 편재한다"는 내용의 분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위원회 규정,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정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또 이문옥 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8일까지 지역 및 부문별 대의원과 중앙위원 선출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당대회 의안 심의와 관련, 5일 열린 전국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획위원회와 조직강화특위에서 제출한 초안을 중앙위원들에게 토론자료로 배포만 하고 오는 17~18일 전국 집행위원 및 부서장 합동수련회와 지부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위원들은 또 지난 5차 전국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당원수 대비 30% 기관지 정기독자화 사업을 3월말까지 1차 연장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국고보조금 지급취소 행정소송

1. 사건일자 20010129-2001012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9일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1항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15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다시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장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지급기준이 정당이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에 지나치게 편중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권리, 선거비용을 지급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에게 30억여원, 새천년민주당에게 28억여원, 자유민주연합에게 5억7천여만원, 민주국민당에게 2억여원을 지급한 각 국고보조금지급처분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설 "운영자금 보조 헌법적 권리와 평등권 침해"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약 1.2%의 득표를 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반면 약 0.4%를 득표하고 국회의원 한 명을 당선시킨 한국신당은 총선 이후 지난 2001년 9월까지 약 1억4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민주노동당에게는 한석의 국회의원이 당의 재정 면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나치게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성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여 의석수의 기준에 의한 대정당 보호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도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5%)과, 그렇지 못한 정당 중 의석없이 득표율 2% 이상이거나 의석을 얻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2%)의 편차를 2.5배나 두어 의석수 기준의 국고보조금 배분 정도를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원칙'에 반하며, 민주노동당과 같은 신생정당의 '선거비용을 지급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한편 최근의 각종 게이트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보수정권의 음성 정치자금 수수는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또한 정치자금을 쥐고 있는 보스에 의한 공천권 전횡 등의 정치풍토가 정당정치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한 수입·지출 관행의 정착과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관리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출발지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당비내는 당원이 거의 없는 보수정당의 보스정치, 밀실정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혁과제로 △당원의 당비 또는 후원금의 당 재정

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의 도입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의 사용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에 국한 등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최근 언론과 정치학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약 1만5천명의 당원이 내는 당비로 당 재정의 90%이상을 조달하고, 그 당원들에 의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등 정당민주화를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국내 유일한 정당으로 평가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민주노동당은 정당정치와 정당민주화를 실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임이 분명하다.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서울대에서 '3일간의 토론광장'

1. 사건일자 20010208-20010210

2. 사건내용

2001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에서 주최한 '3일간의 토론광장'이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번 '3일간의 토론광장'은 한국 사회 운동의 주요한 쟁점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3일 동안 아홉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는데 주제들은 '진보정당, 여성차별, 미국의 한반도정책, 노동운동, 미국경제, 동성애, 한국경제, 환경, 학생운동'이었다.

토론광장 3일 동안 8백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했고 그 가운데 4백명 정도는 각 주제와 민주노동당에 관심있는 비당원들이었다. 특히 아직 입학식도 치르지 않은 01학번과 고등학생 여러 명이 토론광장에 참가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동국대 1학년 한 참가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도 박수를 치며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개방적이라고 느꼈다"고 참가소감을 이야기했다. 연세대 한 학생은 "나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보수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3일 동안 토론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기회들이 나처럼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진다면 운동이 더욱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3일간의 토론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강의는 얼마전에 커밍아웃을 한 홍석천씨 강연이었다. 4백50석인 강의실이 좁아서 서로 어깨를 기대고 바닥에 앉아서 들어야 했다. 홍석천씨는 "내가 연예인이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덕분에 동성애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다. 동성애자를 그냥 다른 이성애자들처럼 똑같이 바라봐주기 바란다. 동성애자라고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더욱 편하다"고 말문을 열고 특유의 끼와 재담으로 강연 내내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둘째 날 강연을 했던 로버트 브레너 교수(캘리포니아대학 역사학과)는 "현 미국경제의 호황은 증시호황에 바탕을 둔 거품일 뿐"이라며 "제조업부문의 이윤율 저하로 올 하반기에 미국경제가 공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3일간의 토론광장은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에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토론을 하고 운동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인하대

00학번 한 당원의 말. "3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3일간의 토론광장'은 나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민주노동당 창당1주년 기념대회

1. 사건일자 20010225-2001022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현행 권영길 대표 체제로 내년 2월 당대회까지 독자적인 생존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민노당은 25일 오후 경희대에서 당 지도부와 각계 인사,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1주년 기념대회를 열어 권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모두 유임시키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노당은 특히 대선의 경우 내년 2월 당대회까지 독자후보를 가시화시켜 현재 양당구도로 짜여진 정치권 구도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를 결집한다는 '대선플랜'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또 이날 김태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새로운 당 부대표로 선출하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다른 진보진영과 힘을 합치는 등 당세 확장과 당원배가 운동을 통해 재창당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민노당은 창당 1돌을 맞아 펴낸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민주적 진보정당의 전형을 창출했고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특히 당 재정의 95% 이상을 당원들이 달마다 5천~1만원씩 내는 당비로 충당하면서 기성정당과 차별화한 점과, 지난해 4.13 총선에서 21명의 후보를 모두 지부 당원의 투표로 선출해 선거에서 평균 13.1% 득표율을 기록한 점을 가시적인 성과로 꼽았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1년 2월 28일자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당원들, 서울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에서 “미국은 전쟁무기 강매말라” 기자회견

1. 사건일자 20010306-2001030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당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5게이트) 앞에서 ‘전쟁무기 강매하는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천총장은 “슈워츠 사령관은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미 상원 본드 의원과 조성태 국방장관의 면담을 적극 주선했다”면서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최고책임자의 이런 행태는 월권행위이자 명백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미군측에 전달했다.
민주노동당의 관계자들은 "기존 보수정당들이 말로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당이야말로 할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했다

3. 참고자료

- □□국민일보□□ 2001년 3월 8일자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 상가임대차 이어 이자제한법 제정운동 본격화

1. 사건일자 20010308-2001030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이 영세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서민생계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추진운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고리채 근절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이자제한법 추진팀을 가동하고 추진위원장에 신장식 관악동작지부 사무처장을 선임한 데 이어 13일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에 질의서를 보내 유사금융기관, 카드사, 악덕사채업자들의 고금리 횡포에 대한 대책을 묻고 "고리대차 관행의 근본적인 해결과 도시서민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제한법 추진팀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인터넷 고리채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대국민홍보를 위해 유인물 3만5천부를 제작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송영길(민주당), 이인기(한나라당)의원 등과 함께 참여연대, YMCA,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신장식 위원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에서 더 나아가 서민금융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리채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노점상들이 많아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피해사례모집 등 공동대응을 제안해오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신용불량자가 2백50만명이나 된다"며 고리채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당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 22일 여의도 전철역 앞에서 '이자제한법 추진과 고리채 근절운동 발대식'을 가진 민주노동당은 오는 27일 이자제한법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면연대 등 10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 제출

1. 사건일자 20010327-2001032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27일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 10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은 금전, 물품에 대해 연리 기준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 상한선을 정하도록 해 고금리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청원서 제출 후 국회와 여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하는 의원과 재정경제부 관료 등을 비난하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과 진념(陳稔) 재경부총리 등의 문책을 주장했다. 금전에 한해 상한선 40%로 62년 제정된 옛 이자제한법은 98년 고금리 정책 등의 요구에 밀리면서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폐지됐으나, 최근 신용불량자가 240만을 헤아리는 등 고리채 피해가 급증하면서 부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01년 3월 27일자

민주노동당 제2차 중앙위원회: 재창당추진위원장 박순보 부대표, 기관지 위원장 조영건 고문 만장일치 선출

1. 사건일자 20010417-2001041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4월 17일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창당추진위원장에 박순보 부대표(부산지부 위원장), 기관지위원장에 조영건 당 고문(경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전국집행위원 선거에 총 10명이 출마, 이중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한 김미희, 김혜련, 심재옥, 오주옥, 정인숙, 최현숙(이상 여성), 노세극, 양병민, 이선근 등 9명이 선출됐다. 여성부문 전국집행위원으로는 이선희 여성위원장이 인준됐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2002년 지방선거 및 각종 보궐선거와 관련 △2002년 지방선거에 30% 이상의 여성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당 내외에서 여성후보의 추천과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 대중조직의 구성원들이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대거 출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

△정당공천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국회의원)에서 당원은 당헌 당규에 따른 후보선출 절차를 거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야 하며(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

음), 각종 선거연합의 공동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도 당헌 당규에 따른 후보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주노동당의 후보임을 명기할 것

△기초의원 후보 역시 당헌 당규에 따른 후보선출 절차를 거칠 것 △당 지역조직이 해당 지역의 선거연합에 참여하거나 시민후보 등 무소속후보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표명할 경우 중앙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지역 당원들의 총의를 따를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후보선출 방침을 확정했다.

중앙위원들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거제시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제시지구당(추)에서 선출된 김해연 당원을 정식 인준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2000년 결산 및 감사보고와 2001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회계규정을 통과시켰다. 또 중앙당과 광역시도지부, 지구당의 당비교부 비율을 4:2:4로 조정하고 조직체계 개편이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1. 사건일자 20010418-20010418

2. 사건내용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박은정),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대표 김재욱) 등 15개 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 김재욱 등 이하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제도권금융 역시 사채폭력 못지 않은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들의 금융생활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자제한법 부활추진모임을 상설기구화하며 확대개편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의 발족은 서민경제영역에서 그 동안 진보운동진영이 단발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에서 탈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둘러싼 보수정권과 진보진영의 입장차이를 확연히 드러내 궁극적으로는 운동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당이 서민의 경제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0일 뒤늦게 서민의 금융생활을 위한다는 취지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당이 마련한 반박자료에 나와 있듯이 근본적인 고리채의 폭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소액대출(5백만원이하)에 한해서만 이자를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고액대출을 선호,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리채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운동본부 김남근 정책위원장(변호사)도 "정부가 정말 서민금융생활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측안을 비판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법안은 운동본부가 서민들의 금융생활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운동본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이자제한법 제정을 위한 활동은 당이 그동안 펼쳐 온 사업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자제한법은 서민들에게 고리채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외에 왜곡된 화폐시장을 바로 잡아 투기적 화폐자본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억제된 투기적 화폐자본이 기업으로 유입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당이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시행한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이 필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이 이뤄져야만 기업에게 유입된 자본이 투기적인 부동산투자에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미 초안이 마련된 노동자경영참가법제정 운동을 통해 기업에 흘러간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노동자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운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이자제한법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운동본부의 활동은 당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준비중인 노동자경영참가법제정 운동과 맞물리면서 서민을 위한 당의 정책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추진위원회 결성, 추진위원장에 최규엽 남부지부위원장

1. 사건일자 20010419-2001041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서울지역 12개 지부 대표자들은 지난 19일 오후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서울지역대표자연석회의에서 서울시지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추진위원장에 최규엽 서울남부지부 위원장(중앙당 자주통일위원장)을 선출했다.

각 지부별로 1표씩 부여한 선거에서 6표를 얻은 최규엽 위원장이 4표를 얻은 노회찬 부대표를 누르고 추진위원장에 당선됐다. 지부 대표자들은 추진위원회의 집행책임자에 김준수 강북성북지부장 직무대행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각 지부장 및 지구당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6월 말~7월초에 서울시지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각 지부별 정치실천단 책임자를 선임하고 2001년 노동절대회에 총력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 1차 회의: 추진위원 14명 명단 확정

1. 사건일자 20010511-20010511

2. 사건내용

지난 2월 정기당대회 결정에 따라 당내에 설치된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위원장 박순보 부대표)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재창당추진위는 청년진보당, 노동자의힘 등 정치단체를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연합, 전농, 한총련 등 사회단체, 시민단체, 전현직 지방의원 및 단체장과 예비후보, 각계 진보인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갖고 지역별, 부분별 재창당추진위 구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창당추진위는 17일 한총련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추진위원회' 건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각 지부와 지구당 차원의 재창당추진위 구성을 중앙당 지침으로 전달하고 지역별로 지방선거 대응을 포함한 재창당 논의를 제 단체들과 벌여나가기로 했으며 6월 8일 '6월 항쟁과 진보정당'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재창당 논의를 공론화시키기로 했다.

추진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박순보 부대표, 박홍순 기획위원장, 김창희 노동위원장, 이상현 대변인, 정성희 사무부총장, 최규엽 서울시지부 추진위원장(이상 상임위원), 이용대 경기도 지부준비위원장, 이용길 충남지부 위원장, 김창현 울산시지부 위원장, 황광우 광주시지부 위원장, 김태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양병민 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 윤정석 전 전농 의장, 정인숙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 14명.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준) 결성: 준비위원장 이용대 중앙연수원부원장

1. 사건일자 20010512-20010512

2. 사건내용

경기도지역 민주노동당 당대회 대의원들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농업기술진흥관에서 경기도지부(준) 결성식을 갖고 이용대 중앙연수원 부원장(경기동부지부 운영위원)를 준비위원장에 선출했다.

대의원들은 지부(준) 규약안을 심의, 의결하고 사무처장에 이정우 경기동부지부 사무처장을, 회계감사에 김활신(안산시흥지부), 정재택(의정부동두천지부) 당원을 선출했다.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개원

1. 사건일자 20010519-2001051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이 지난 19일 권영길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당원과 내빈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전국에서 모인 당원과 지역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은 테이프 절단식, 현판식에 이어 당과 민주노총 지도부, 각 지부 간부와 당원들이 연수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순서로 진행됐다.

개원식에 앞서 국기계양대에 민주노동당의 깃발이 오르자 감격한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간략하게 진행된 개원식을 마친 당원들은 연수원 내부의 강의실과 침실, 휴게실, 도서실 등을 둘러보며 시골초등학교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연수원의 정취를 만끽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막걸리와 고사음식을 나눠마시며 연수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황광우 중앙연수원장은 "연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라며 "1만8천 당원대오가 모두 이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지부당원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일 민주노총 부위원장(당 부대표)이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연수원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언하자 당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연수원 개원에 맞춰 전국 각지의 당원들로부터 연수원에 기증하는 물품들이 쇄도했다. 창원지부 우만용 당원이 이불 20여채를, 군산지구당 김복숙 당원이 베개 20여개를, 대전시지부와 강북을지구당에서 컴퓨터를 기증한 것을 비롯해 책, 비디오테이프 등의 물품이 연수원에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 강력한 정치투쟁으로 민주노총 엄호기로 결정

1. 사건일자 20010525-20010525

2. 사건내용

지난 4월 중앙위원회에서 전국집행위원들이 선출된 이후 지난 25일 처음으로 열린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에서는 최근 노동운동탄압과 민주노총 2차 총력투쟁과 관련,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에 당이 총력결합하고 노동운동 탄압과 김대중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규탄하는 당의 독자적인 선전 집회를 적극 개최하는 등의 대응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전국집행위원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엄호할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권의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2차 총력투쟁 기간에 열리는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에 총력결합(6.30 시국대회, 7.5파업, 7.7총력투쟁대회 등) △당 독자적인 거점 집회 △주요 파업사업장 지지방문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총체적 실정을 폭로하는 대국민 선전전 △각 지부의 언론전 △사이버공간에서의 선전전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기획단이 제출한 2002년 양대선거 종합계획서 시안을 검토하고 차기 중앙위에서 세부내용을 토론하기로 했다. 차기 중앙위는 7월 20일쯤 열리며 하반기 사업계획안, 2002년 양대선거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동대문을 재선거 후보인준, 현 정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은 특별결의문 채택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참가

1. 사건일자 20010614-20010616

2. 사건내용

지난 14~16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천영세 사무총장,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최창준 성동광진지부장, 이승헌 통일국장, 윤재철 <진보정치> 기자 등 5명이 참가해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등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세 사무총장은 토론회 이후 진행된 부문별 간담회에서 북측의 정당 인사들에게 '남북정당 연석회의' 개최와 독도문제,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의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8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준공식에 민주노동당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북측 정당에 민주노동당 기념품과 시계, 배지, 소개자료집 등을 전달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공식출범, 초대지부장에 노회찬

1. 사건일자 20010707-20010707

2. 사건내용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초대 지부장에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서울시지부)는 이날 동국대학교 학림관 소강당에서 창립대회(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부장에 노회찬(부대표, 강서을 지구당 위원장), 사무처장에 김준수(성북갑 지구당 위원장) 후보를 각각 선출하고 서울시지부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날 선거에서 참석 대의원 1백23명 가운데 무효 5표를 제외하고 72표를 획득, 46표를 얻은 최규엽(자주통일위원장, 금천지구당 위원장)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지부 초대 지부장에 당선됐으며, 사무처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준수 후보는 역시 대의원 1백 23명 가운데 찬성 102표, 반대 18표, 무효 3표를 얻어 당선됐다.

신임 노회찬 서울시 지부장은 지난 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을 시작으로 92년 백기완 선거대책본부 조직위원장을 지낸 뒤 93~95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대표와 95~97년 진보정치연합 대표, 97~98년 국민승리21 기획위원장, 정책기획홍보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노동당 부대표와 2002년 선거기획단 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시지부는 창립선언문에서 민주노동당이 "수도서울을 평등과 연대,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행복의 도시로 만드는 길에 힘차게 전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총칙, 당원, 의결기관, 집행기관, 회계감사, 지역조직, 기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규약을 심의, 확정하고 규약에 따라 김동철 대의원을 회계감사로 추천했으며, 서울시지부 사업 심의는 창립대회 이후 1차 운영위원회로 위임했다. 민주노총 등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특별 결의문과 지방선거, 동대문(을) 재선거 총력대응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동당 3차중앙위원회, 김대중정권 범국민저항운동 조직

1. 사건일자 20010725-2001072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200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 동안 김대중 정권에 대한 범국민저항운동을 통해 당의 정치적 지도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선거법 투쟁을 통해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5일 여의도 기계회관 회의실에서 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정권에 대한 범국민 저항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 진행되었던 민생살리기 전국순회연설회를 하반기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순회연설회를 마감하면서 '10대 민심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키로 했으며 면담에 불응할 시에는 청와대앞 대규모 항의시위 등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김대중정권의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하반기 구조조정에 강력 대응해 나가고 반김대중·반미 투쟁을 통해 형성된 폭넓은 연대를 당의 확대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지난 21일 동대문중랑지구 당원총회에서 선출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동대문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당 국회의원 후보로 인준하고 10.25 재보궐선거를 김대중정권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총궐기의 장으로 삼아 당 후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민주진보진영의 반김대중 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1인 1표제 위헌판결과 관련 중앙당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 2표 정당명부제 관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호로 발행되었던 당 정책이론지 <이론과 실천>을 당 기관지로 정식 창간하기로 결정하고 편집위원들을 인준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 등 16명 김포공항에서 연행

1. 사건일자 20010821-20010821

2. 사건내용

지난 21일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린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고 돌아오던 천영세 당 사무총장과 최규엽 자통위원장 등 16명이 김포공항에서 연행됐다.

사법당국의 이번 연행은 '8.15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한 일부 남측 방문단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참석과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발언이 계기가 됐다.

당초 예정보다 3시간 늦은 오후 1시경 평양을 출발한 방북단이 공항에 도착하자 관계기관원과 경찰은 천총장을 비롯한 16명의 인사를 연행했다. 천총장과 최위원장은 구로경찰서와 장안동 대공분실, 강정구 교수는 국정원으로 각각 연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측 대표단 중 일부 인사들이 방북 이전에 북측의 지령을 받고 간 것으로

보여 방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협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로 통일운동진영과 정부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당은 이날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방북단에 대해 귀환과 동시에 연행조치를, 그것도 적법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 다루듯 연행작태를 벌인 정부당국의 태도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통일을 원하는 모든 단체, 국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격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연행자 명단

강정구(동국대 교수),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임동규(범민련 남측본부 부위원장), 김규철(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박종화(범민련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김영제(민주노동당 통일국장),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문재룡(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지역 부의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현(비전향장기수 송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세창(범민련 조직위원),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천승훈(학생), 최지웅(학생), 양승미(학생)

민주노동당, '종업원 경영참가법' 입법청원

1. 사건일자 20010829-2001082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22일부터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진행해온 "이건희 삼성차 빚 독촉 1인 시위"와 더불어 29일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정당사상 최초로 입법청원 한다.

경영참가법의 필요성은 민주노동당 강령 중 '민주적 참여기업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우중의 불법경영으로 고통받는 대우차 노동자와 이건희 빚 독촉 1인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건희 총수는 불과 0.24%에 불과한 지분으로 다른 임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삼성자동차를 설립했다가 부실경영으로 실패했음에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책임과 부채상환마저 2년이 지나도록 안 지키고 있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만 나오면 재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경영참가 불가론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이같은 경영참가불가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입증됐다. 불과 총수지분이 1.2%로 소유지분 만큼 권리를 행사한다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어기고 황제권력으로 사기적 경영과 불법경영을 해온 사기꾼들이 재벌총수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영참가법안은 지난 6월 중순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민주노동당 한국노동 정책담당자 워크샵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안의 핵심은 △종업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보장 △종업원이사 1인 및 종업원감사 1인 추천권 보장 등이다.

당은 입법청원 후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사회적 화두로 만들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캠페인, 공청회, 의원입법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업원 경영참가법 입법청원/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29일 종업원을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영참가법

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지금의 국회의석 구조로 볼 때 당장 법제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노동자의 경영 참가 방법이 구체적인 법안형태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영의 민주화 없이는 재벌경영의 폐해와 적대적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며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독일·스웨덴의 관련법 등을 참고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종업원평의회 설치, 노사공동위원회 도입, 종업원의 이사·감사 추천권 등이다. 법안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노사 의사소통 창구로서 노동자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전임은 아니지만 종업원평의회 대표와 임원은 주 20시간 이내에서 평의회 업무를 할 수 있게 보장했다.

또 현행 근참법의 노사협의회를 노사공동위원회로 바꾸고, 사실상 합의가 필요한데도 협의사항으로 묶여 노사 갈등을 부추겼던 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 고용조정 등의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강화했다. 종업원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경영민주화를 위해서는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관권과 이사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종업원평의회가 1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실장은 "정치권이 조기입법에 나서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1년 8월 30일자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출범

1. 사건일자 20011006-2001100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준비위 소속 당대회 대의원들은 지난 6일 수원체육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단독출마한 이용대 경기도지부준비위원장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부지부장에는 목영대 의정부지구당 위원장과 박미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분부장이, 회계감사에는 곽장영 일산갑지구당 위원장과 김활신 안산을지구당 당원이, 사무처장에는 편재승 분당을 지구당 당원이 각각 선출됐다.

경기도지부의 창당으로 민주노동당의 광역시도지부는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6개로 늘어났다

민주노동당 선거기탁금 헌법소원 제출

1. 사건일자 20011005-20011005

2. 사건내용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2천만원과 20%인 반환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여야가 선거기탁금을 1천5백만원으로, 반환요건을 15%로 야합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정권을 가로막는 위헌적 행위"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제출했다.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정종권(구로을), 장화식(동대문을) 두 후보는 이날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만약 이번에도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야합에 참여한 민주당, 한나라당 등은 국민의 참정권을 두번이나 막으려했던 주범으로서 정당해산이든, 국회해산이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일 선관위 후보등록에 앞서 정종권, 장화식 선거대책본부는 선거기탁금 야합에 항의해 '돈국회'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1만원권 1천5백장을 한줄로 길게 이은 2백미터 띠를 들고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의 힘> 제7차 총회에서 '준비모임'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힘'을 공식 명칭으로 하여 새롭게 출범
(20011013-20011013)

민주노동당, 중소기업청장 선거법위반 고발

1. 사건일자 20011023-20011023

2. 사건내용

민주당과 중소기업청이 10.25 재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22일 당정회의를 통해 2차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1천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23일 고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이 허인회 후보측의 공약을 '소상공인 1천억원 지원발표'로 보증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최 청장을 선거법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운동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허인회 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2차 합동유세에서 "동대문지역의 소상공인 지원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의 정책지원자금을 조성하겠으니 지지해 달라"고 공약했으며, 바로 이튿날인 22일 최동규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한 당정회의에서는 2차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1천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과 공동토론회

1. 사건일자 20011114-20011114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당과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진보세력을 결집해 재창당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14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양대 선거를 위해 모든 진보세력이 하나로 결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재창당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또 “지금은 3김정치 청산 등 한국 정치 세력의 대재편기”라며 “보수와 진보 구도가 구축돼야 정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3. 참고자료

- □□동아일보□□ 2001년 11월 16일자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여성위원회 공식 출범

1. 사건일자 20011209-20011209

2. 사건내용

서울시지부 여성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최현숙)는 오는 12월 9일 3시부터 연세대 푸른샘에서 서울시지부 여성당원대회를 열고 서울시지부 여성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여성위원회는 또 이 자리에서 여성위원회의 결성 경과와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세계 여성인권의 날을 맞아 특별결의문을 채택한다.

서울시지부 여성당원들의 송년행사를 겸하는 이번 당원대회는 또 호주제 철폐를 위한 서울 지역 당원들의 실질적인 실천을 모으는 자리로 여성당원뿐 아니라 남성당원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등부부 선언식과 호주제 폐지 관련 영상물 상영, 금천지역의 탁아방 '함께 크는 아이들' 노래공연, 성평등 지수측정 퀴즈대회, 공동체 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보육간사와 남성당원들로 구성된 탁아방도 가동할 계획이다.

최현숙 여성위원장은 "당원의 날을 통해 모성친화적인 당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여성당원들이 참석해 마음껏 함께 하는 자리로 만들자"는 바람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내년부터는 당원대회를 일년에 세 번씩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헌법소원

1. 사건일자 20011210-2001122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노회찬 부대표)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18세 선거권 쟁취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만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정치개혁특위는 "현행 선거법하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중 1학년은 약 100%, 2학년은 약 75%가 통상 4월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선거권을 만 19세부터 부여한다 해도 1학년의 약 75%는 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병역법에는 만18세부터 병역의무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권리 없는 곳에 의무 없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만18세부터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만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등 84개국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원회: 사회당과 통합추진, 예비경선제 실시, 정기당대회 일자 결정

1. 사건일자 20011212-20011212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민주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정치단체·사회단체·진보적 인사를 포괄하는 재창당에 실질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해 사회당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공동대응을 조직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진당적으로 재창당 사업에 박차를 가한 후 내년 1월말에 재창당 시점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를 내고자 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제 단체와 공동명목의 사용, 공동정책, 후보조정 등 다양한 선거연합전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조직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성사를 위해 필요한 주체, 방법, 시기는 중앙당과 협의하여 해당 지부가 결정한다 △후보를 내는 민주진보진영의 제 단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사회 대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동한다"는 공동대응 방안이 확정됐다.

대선과 관련해서도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한 대표성을 갖는 후보전술을 위해 대선 후보 예비경선제를 실시하고 재창당, 예비선거제 등의 추진상황을 보가며 기확정된 대선후보 선출시기의 변경여부 등을 내년 첫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재창당 추진과 예비경선제 실시 방침을 14일 오전 11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선거인명부(대의원) 확정시기, 대표단 후보 선거운동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정기당대회를 3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회 14일전까지 대의원 선출을 마치는 것으로 당규가 개정됨에 따라 각 지구당 및 지구당준비위에서는 늦어도 3월 2일 이전에 조직별로 배정된 수의 당대회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들은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제 폐지, 국방예산 및 국방조직 개편운동 등을 펼칠 평화군축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김석준 부산광역시장 후보, 이재구 창원시장 후보, 김창남, 여월태, 정동화, 이재용(이상 창원시의원 후보), 홍진웅, 최재춘(이상 군산시의원 후보) 등 지부·지구당 별로 선출된 지방선거 후보자를 인준했다.

민주노동당 당상무집행위: 김우중 체포, 단병호 등 석방, 쌀값보장, 미군용산기지 철거를 위한 광역시도부지부장 동시 천막농성 결정

1. 사건일자 20020111-20020111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광역시도지부장들의 동시 천막농성 투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열린 당상무집행위는 올해 전개할 대중적 정치 투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김우중 체포·단병호 석방·쌀값 보장·미군 용산기지 철거 등을 촉구하는 지부장과 지구당 위원장의 순차적 전국 동시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투쟁이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2년의 정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투쟁임을 공유하고 당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우중 체포 투쟁의 경우 대선 국면에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김우중 문제'를 당이 먼저 사회적 이슈화한다는 의미와 함께 단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노동자 석방 투쟁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요구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쌀값 투쟁은 노농 연대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이며 용산 미군기지 철수는 반미 투쟁의 대중화를 위한 주요 고리이며 서울시장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유효한 구호라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2일 전국집행을 열어 △재창당 사업의 구체화 △2002년 1차 중앙위 개최 일정 확정 △대의원 대회 준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책임자 전국회의 개최

'2002년 선거책임자 전국회의'가 오는 25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대선을 중심으로 한 양대 선거의 일관된 기획 △선거 전략의 전국적 실행방침 논의 △전국적 선대본 구성 방안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지부별 언론대책 강화 방안 및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실무 교육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대선 선대본 발족까지의 한시적인 전국단위 대선기획회의의 위상을 가지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지부 선거기획 책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전국회의'는 오는 9-10월 발족 예정인 '대통령 선거대책본부'가 출범되기 전까지 활동한다.

신입당원교양 책자 발행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원장 황광우)은 지난 15일 신입당원용 교양 소책자 <자랑스런 당원의 길>을 발간했다.

인터넷에 파일로만 있었던 자료를 수정·보완해 발간한 2백쪽 분량의 <자랑스런...>에는 △ 왜 민주노동당인가 △ 민주노동당은 어떤 당인가 △ 당원의 의무와 권리 △ 당원의 당 생활 △ 여성과 민주노동당 △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교훈 △ 사진으로 보는 민주노동당 등 신입당원의 당 이해와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실렸으며 민주노동당의 강령, 당헌, 연혁과 전국 지부·지구당 연락처가 부록으로 실려있다.

중앙연수원은 이후 후속판 발간을 위해 지부·지구당에 대량 배포시 일정 금액을 책값으로 받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2002년 지방선거 정치방침 결정

1. 사건일자 20020115-20020115

2. 사건내용

- 2002년 1월 15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논란 끝에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추인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고 결정하였다.

3. 참고자료

- 이종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평론□□13호(2003)

<노동자의 힘>, 민주노총에게 98년 정치방침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

1. 사건일자 200201DD-200201DD

2. 사건내용

- 노동자의 힘은 민주노총중앙위원회가 200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한 정치방침에 대해 첫째로, 대중조직 고유의 정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 둘째, 정치조직과의 관계를 현재와 같이 특정 정당과의 관계만을 일방적·배타적으로 맺는 것에서 탈피하여 노동자계급에 기반해 정치활동을 펴고 있는 제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열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발표.
- 전문(全文) 내용: 「민주노총 정치 방침, 99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일반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위, 또 다시 잘못된 정치 방침을 의결

지난 1월15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정치 방침에 대한 논의 끝에, 공공연맹에서 제출한 수정 제안 등을 부결하고 원안을 의결하였다. 아직은 1월3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정치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2002년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날 의결된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이 재창당을 앞두고 '진보진영대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6개 단체 수련회의 '공동 메시지' 발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맞물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의결된 정치 방침 역시 그 동안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통해 현재의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맺어온 것과 같은 맥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실 민주노총은 지난 97년 대선 참여를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줄곧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결정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결과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명백히 왜곡·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87년 이후 노동자대중이 투쟁을 통해 획득해온 계급적·정치적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선거 대응과 의회 진출이라는 지극히 협소한 틀로 제약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이 1월30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전면 바로 잡는 일대 조직적 단안을 내릴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 방향은 99년 8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일반 방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첫째로, 대중조직 고유의 정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 둘째로는, 정치조직과의 관계를 현재와 같이 특정 정당과의 관계만을 일방적·배타적으로 맺는 것에서 탈피하여 노동자계급에 기반해 정치활동을 펴고 있는 제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002년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이 지닌 문제점

우리가 '2002년도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역사적으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 줄곧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명백히 왜곡·약화시켜왔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의미에서 대중조직, 즉 노동조합의 올바른 정치 방침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이다. 물론 절대적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정치 방침은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이나 준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경제주의 또는 부문주의로 제약하는 방침을 갖거나 노동자계급 내부의 특정 성과를 배타적으로 지지·옹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노동조합은 경제투쟁, 정치조직(정당)은 정치투쟁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 고유의 역동성과 독자성을 스스로 침해받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사상과 이념을 둘러싼 정치토론과 정치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우리 운동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96~97 정치총과업 투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 등은 노동조합이 대중투쟁(동력)에 기반한 정치투쟁을 정치조직(정당)을 경유하거나 매개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훌륭히 입증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투쟁을 단지 생존권 사수 투쟁이라는 협소한 틀로만 인식함으로써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의 정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지 못하거나 그러한 동력으로 타계급·계층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의 연속선상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진보정당건설이라는 조직 형식에 치우쳐 바라보는 것은 물론 특히 국민승리21 이후 현재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재창당을 일방적으로 지지·옹호하는 방침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기는커녕 현장활동가 사이의 반목과 분열을 낳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방침이나 당원 확보 등의 의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자 중심성을 말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은 심하게 표현하면 ‘중이 당원’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실천 또한 대중정치역량 또는 대중정치전선 강화를 통한 주체 형성 전략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상층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위주의 사업을 우선함으로써 민주노총 조합원을 사실상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수준에서 대중조직, 즉 민주노총이 견지해야 할 정치 방침에서의 원칙은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대중조직의 입장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핵심적 방침과 관련된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과의, 또는 노동자와 지배계급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형성되는 제 대중투쟁의 계기를 대중정치역량 또는 대중정치전선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끊임없이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대중조직과 정치조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내의 특정 경향(세력)만을 배타적으로 지지·옹호하는 방침을 거두고 노동자계급 내에 서로 다른 입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제 정치 세력과 사안에 따른 연대·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즉 2002년 정세 조건에서 ‘2002년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자. ‘2002년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은 크게 포괄적 수준에서의 정치 방침과 구체적 차원에서의 지방선거 방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상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둘을 잇는 핵심은 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강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먼저, 포괄적 수준에서의 정치방침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정치 방침에서 말하고 있는 구상과 계획 가운데 예컨대 “보수수구와 진보의 대립전선 구축”, “권력 재편기에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가는 과정”, “전반적인 정치개혁, 사회개혁 투쟁을 벌여나간다”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2년 민주노총 전체 투쟁계획이나 사업계획이 그에 걸맞게 제출되고 그에 따른 실천방안이 나와 줘야 한다. 그러나 2002년 민주노총 전체 투쟁계획과 정치 방침은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정치 방침은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다음으로, 따라서 정치 방침의 알맹이는 “민주노동당 재창당 사업에 적극 결합”, “민주노동

당의 강화를 위한 당원확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속선상에서 지방선거 방침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강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대중정치투쟁 또는 대중정치전선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대중정치전선은 현 시기 자본과 부르주아 정파에 맞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투쟁을 통하여 형성되며, 그러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제 세력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제 정치 세력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끝으로 이와 같이 가장 일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노동계급 내부의 단결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적극적인 지역사업을 통해 실천적인 연대사업을 강화”한다거나 “민주진보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자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 중심성을 폐기하고 중간계급이나 시민운동진영과의 연대를 우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난 97년 이후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오류와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 차원에서의 지방선거 방침의 경우는 그 폐해가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97년 이후 민주노총 정치 방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민주노동당 노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론·사상적 측면이나 실천·조직화의 측면에 대한 논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보다 역동적이고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매 선거 시기마다 제출된 선거 방침이었다. 여기서 선거 방침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 지점은 두 갈래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또는 노동자 정치운동을 선거 방침을 둘러싼 논의로 후퇴시켜 이를 선거 대응 또는 의회 전술로 왜곡·협소화시켰다는 사실이다. 즉 선거 대응이나 의회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제 정치적 계기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고 당면한 선거 참여만을 중심으로 한 협소한 실천만이 강제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또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한 구성 부분인 선거 대응이나 의회 전술이 거꾸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또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전부 내지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정치 방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고, 문제를 안고 있는 차원에서나마 그래도 선거 방침보다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정치 방침을 사실상 공문구화·사문화시키고 말았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거에 후보로 나설 경우 반드시 민주노동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한 사실이다. 이러한 결정 자체는 사실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을 밀어붙인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의 현실적 파급 효과는 당연히 어이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것은 먼저 현장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열시키는 작용을 할 뿐 이를 통한 노동대중의 정치 의식 강화나 정치 활동의 활성화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중조직, 즉 노동조합의 성격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결과 투쟁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즉 선거 시기가 아니라면 충분히 단결할 수 있는 사안조차 오히려 그 때문에 단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참고 자료

- 노동자의 힘, 민주노총 정치 방침, 99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일반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2002.01.)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 「반조선노동당 노선에 대한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의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20020222-20020222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른바 반조선로동당 노선에 대한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의 입장'(이하 입장) 초안을 마련하면서 당 안팎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입장'에 대해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 전문가인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상무집행위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와 정권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한쪽 지역을 담당하는 권력적 실체에 대한 내정간섭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도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볼 때 한 쪽을 배타 시하는 태도는 위험하므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보다는 북한과 함께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동의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양당) 통합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조선로동당이라는 명시적인 언급보다는 북한일반 이름으로 몇 가지 추가로 사회당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수용하는 유연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문제점 제기시 조선로동당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오늘의 분단과 민족적 비극을 가져온 데 이북정권의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설사 출발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90년대 들어서 이북 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반조선로동당 노선을 천명하는 것은 산적한 현재의 과제에 비추어 시급한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보수구도에 편승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단지 국내의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반조선로동당 노선을 내걸기보다는 강령수준에서 이북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언급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국제관계)는 "물론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정권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정치현실 인정해야 하고 북한 집권세력이 통일, 평화공존, 화해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반조선로동당 주장이 잘못하면 상당히 왜곡되고 화해와 상호공존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2002년 양대선거 승리 위한 범국민추진기구” 건설하기로 결정

1. 사건일자 20020304-20020304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의원 비례대표 명부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명부순위 1, 3, 5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민주노동당의 첫번째 의원은 여성이 될 전망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해당 광역시도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일 기계회관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또 민주진보진영의 총단결을 통해 지방선거를 지원하고 대통령선거를 공동 대응하는 민주진보진영의 범국민운동기구로서 '민주진보진영의 2002년 양대선거 승리를 위한 범국민추진기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부문별로 구성될 이 추진기구는 양대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자격을 갖게 되는 10만명의 범국민추진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민주진보후보를 지지하는 1백만 서명운동, 정치사회개혁투쟁 등을 벌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8월 8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서울 금천구) 후보로 최규엽 금천지구당 위원장을 인준했다. 또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김창한 인천시지부장을 인준하고 기초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안호국 부산 남구지구당 위원장(부산 남구청장 후보), 목영대 의정부지구당 위원장(의정부시장 후보), 백현종 구리시지구당 위원장(구리시장 후보), 한상욱 부평갑지구당 위원장(인천 부평구청장 후보)을 비롯 광역의원 후보 19명, 기초의원 후보 25명을 일괄 인준했다.

중앙위원들은 또 당현상 5인 내외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표의 수를 이번 정기당대회에서는 8명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정기당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진구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이어 17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창당 2주년 기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 출범: 위원장에 임수태 당선

1. 사건일자 20020307-20020307

2. 사건내용

2002년 3월 7일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열린 경남도지부 창립대회에서 임수태(50·마산합포지구당) 경남도지부준비위원장이 21표를 얻은 주대환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을 6표차로 누르고 지부장에 당선됐다.

부지부장에는 김현 진주시지구당 공동대표가, 사무처장에는 박동신 한양공영노조 전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으며 옥세진, 김택선 대의원이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식출범

1. 사건일자 20020311-20020311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덕우)가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당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은 심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당은 진정한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민중을 배제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민중을 감시하고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중적 억압 구조, 제도를 청산할 것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에 맞서 민중의 정당한 사회권을 확립하고 지켜냄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들을 도입할 것 △소수자가 고통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과거의 인권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하는 것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당 인권위는 당원들의 공권력에 의해 연행될 경우 적극적인 접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인권위에는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김석연 변호사를 인권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노동당 2002년도 정기 당대회 개최: 권영길 대표, 노회찬 사무총장 선출

1. 사건일자 20020316-2002031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2기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 인선 등을 포함한 중앙당 조직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3월말쯤 회의를 열어 상임집행위원들에 대한 인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또 상임집행위, 전국집행위 등 각급 당 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노회찬 신임 사무총장은 당대회 직후 중앙당 당직자들과 수련회를 가진 데 이어 개별 면담을 통해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 부서 통폐합과 신설 등 전반적인 중앙당 조직정비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16일 열린 정기당대회에서는 2기 대표단 선거 결과 권영길 후보가 2백94표를 얻어 정윤광 후보를 1백63표차로 제치고 당 대표로 재선됐다. 부대표에는 최순영(4백3표), 김태일·김혜경(3백79표), 천영세(3백60표) 후보가 당선됐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노회찬 전 부대표가 단독출마해 찬성 2백96표를 얻어 당선됐다.

권영길 대표는 "정윤광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 동지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대의원들은 또 신임 당대회 의장에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부의장에 김은주 대학노조 여성위원장과 양병민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공직선거 후보선출과 관련,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후보 선출시에만 예외적으로 당원이외의 참여

를 허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민주진보진영의 2002년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한 범국민추진기구건설' 등을 포함한 중앙위원회의 선거방침을 확인하고 대선 후보 선출의 구체적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개최되는 첫 중앙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2002년 양대 선거를 진보정치의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계기로 삼고 당의 지속적인 혁신과 강화를 위해 △양대 선거 △당 강화사업 △투쟁사업 강화 △재창당 사업 등을 뼈대로 한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17일 열린 창당 2주년 기념행사에는 당원들과 가족 등 1천여명이 모여 창당 2주년을 자축했으며 이에 앞서 오전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발전소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모범당원, 모범지구당, 모범분회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김창한 인천시장 후보와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와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씨

민주노동당은 16일 정기전당대회를 열고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경선을 실시, 권영길(權永吉) 후보를 제2기대표로 선출했다.총 대의원 600명 중 450명이 참여한 이날 경선에서 권 후보는 294표를 얻어 131표를 얻은 정윤광 후보를 제쳤다.

3. 참고자료

- □□서울신문□□ 2002년 3월 18일자

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

1. 사건일자 20020428-20020428

2. 사건내용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노동당 이문옥, 민주당 김민석,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문옥 본부장의 서울시장 출마로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 부산 등 영남권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광역단체장 출마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민주노동당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 원용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시킨 사회당에 지방선거 공동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상임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5월 8일 열 것을 제안한 상태여서 그 결과도 주목된다.

이문옥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나라는 여전히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우리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대장정에 나서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동기를 밝혔다.

이문옥 본부장은 "감사원에서 서울시 전담 부서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서울시 전반에 걸친

업무를 깊이 검토해본 일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진정한 서울시 행정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하고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문옥 본부장은 감사원 시절부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 양심선언 이후 91년에 쓴 책 <그래도 못다 한 이야기>에서 “공무원들이여, 우리의 손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움켜잡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문옥 본부장은 이외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 상시 특별검사제 도입,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광태영 상임대표가 배석했다.

민주노동당, 사회당과의 상집연석회의 무산

1. 사건일자 20020507-20020507

2. 사건내용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상임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공동대응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월 8일 양당 상집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사회당이 7일 “연석회의 개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오므로써 무산됐다.

사회당은 이에 앞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보수정당 개혁분파의 성공에 영합하려는 일부 진보진영의 무원칙한 후보선출과 선거방침에 반대한다”는 특별결의를 한 바 있다.

양당 상집 연석회의는 지난 2월 양당 대표 회담 이후 사회당이 2월 26일 반조선노동당 문체에 대한 상호 토론 등을 의제로 한 양당 상집 연석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처음 제기됐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3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양당 통합과 후보조정 등 양대선거의 공동대응 과제를 연석회의 주 의제로 다룰 것을 다시 제안, 사회당이 3월 18일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상집 인선이 늦어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상집 인선 후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임수태 지부장 확정

1. 사건일자 20020509-2002050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지부장 임수태)가 제3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를 출마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부산을 포함 7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출마시키게 됐다.

경남도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임수태 경남도지부장을 만장일치로 후보로 추천했다. 또 경남 비례대표 광역의원 1번에 이경숙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장을 선출했다.

임수태 지부장은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현 경남 도정은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존을 외면하고 소수 가진자를 위한 행정, 경마장 경륜장 등 도박에 물든 행정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하고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행정을 펼쳐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남도지부는 경남도지사과 비례대표 2, 3번 후보 선출을 위해 15, 16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받아 17일부터 창원, 진주, 마산, 거제 등 지구당별로 당원총회를 개최, 23일 선출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제3대 지방선거 공동공약 초안 마련

1. 사건일자 20020517-20020517

2. 사건내용

2002년 5월 17일 민주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는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김준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지방선거정책 워크숍을 가졌다.

<제3회 동시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공동공약>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공약은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대국민 공약이자, 당 소속 후보들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구체적인 공약 개발에 참조할 수 있는 모본이다. ‘공동공약’이 타당의 공약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참여와 평등’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점이다.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보수정당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중앙권력에 대항하는 지역분권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 참여의 장으로 인식한다. 즉, 중앙집중이나 지역분권이냐 하는 통치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운명을 통치자에게 위탁하느냐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삶을 꾸려 나갈 것이냐는 측면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공약이 바로 참여예산제·주민소환제·지역경제고용위원회·비영리 사회기업·행정정보 의무 공개·공무원노조 지원·여성 승진할당제·장애인 의무고용 등이다.

‘참여’라는 가치가 그 자체로 자족하고자 함이 아님은 물론이다. 참여의 목적은 노동자와 시민이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동·복지·환경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여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자 방법이다. 즉, 사회 다수집단의 참여를 통해 다수집단의 이익에 실현하는 자치를 펴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증액·주민건강센터 설립·공공보육 확대·학교급식 지원·공공주택 확대·비정규직의 정규직화·생계형노점상 보호 등이 평등 정신에 입각한 공약이다.

한편, 현행의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해 놓아 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절실한 것은 절대빈곤이랄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다. 돈이 있어야 지방을 살릴 수 있을텐데, 세금의

80%를 중앙정부가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가 나름의 노력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려 해도, 중앙정부가 나서 불법이니 뭐니 하며, 방해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 재원 확충 등 국가적 개혁 과제를 ‘공동공약’에 포함시켰다.

23개 ‘공동공약’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01. 자치

주민 삶과는 아무 관련 없는 개발 위주의 예산 배정을 막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체 예산을 직접 짜는 참여예산제 도입. 비리 전횡 등을 저지른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뜻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02. 지방재정

20%에 그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추진. 부자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 사이의 세원 불균형을 조정하는 배분·조정제도.

03. 경제 고용

단체장과 건설업자의 결탁에 의한 지역경제를 넘어, 노동·학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 형편에 맞는 지역경제전략을 짜는 지역경제고용위원회.

04. 사회 고용

비영리사회기업과 공익사회단체의 설립을 촉진하여, 새로운 고용 창출.

05. 경제 지방공기업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을 일신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주적 참여경영제 실시.

06. 행정 부패

혈세를 ping ping 쓰는 일을 막자. 판공비 등 각종 행정정보 공개 의무화. 모두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다.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보호.

07. 행정 공무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해야 주민이 편해진다.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 서는 공무원노조 활동 지원.

08. 사회복지

제3세계와 동유럽보다도 적은 우리 나라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을 20%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여, 빈곤층·노동·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모든 주민에게 사회복지 혜택 확대.

09. 보건 의료

인구 5만 명당 1개소 주민건강센터 설립, 값싸고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빈곤층과 노인 등에게 무료의료서비스 실시.

10. 보육

아이 걱정엔 일 못하거나, 일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공보육시설 대폭 확대, 공동육아운동 지원.

11. 교육 급식

‘21세기 선진조국’에 굶는 어린이라니! 학교급식 재정을 지원하여, 서민의 급식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급식 제공.

12. 교육

국민의 71%가 평생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 평생교육 지원기금’ 마

런, 지역 평생교육 주민회의 구성, 지역 주민 평생교육기회 보장.

13. 주거

폭등하는 전월세값에 서민 허리가 휘고 있다. 과도한 전월세값 강력 시정권고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여, 서민 경제와 주거의 안정 실현.

14. 개발 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개발업자의 배를 불릴 뿐인 무절제한 개발사업 억제, 지방환경 세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

15. 개발 미군기지

미군부대 때문에 지역 발전이 가로막히고, 범죄가 만연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주민 삶 위협하는 미군기지 철수 추진. 철수 전 미군부대에 대한 공과금 징수와 환경오염 단속.

16. 교통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 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통합 공영화(시영, 도영 등).

17. 식품 안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구잡이로 살포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통을 금지시켜, 주민들의 건강 수호.

18. 문화

지역문화 중심으로서 공공도서관 확충,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19. 노동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서럽다. 쥐꼬리 월급에 하루살이 목숨. 30%에 이르는 자치단체·지방공기업·위탁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규직 고용 민간기업 우대 정책 실시.

20. 농업

논 갈아 엮고 농약 마셔 자살하는 농민은 없어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 농가소득특별지원재정 확충, 무이자 쌀 구매자금 지원.

21. 노점상

먹고 살 길 없어 리어카 끌고 나온 노점상 폭력 단속 중지, 생계형 영세노점상 생존권 보장.

22.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남성의 1/20. 여성 30% 고용승진 할당제 강력 실시, 여성 고용승진 할당제 실시 사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

23. 장애인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철저 준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감독·장려. 장애인에게도 마음껏 이동할 권리가 있다! 저상버스 도입.

시민 기본권(Civil Mininum)을 위해

‘공동공약’은 일정한 삶의 수준을 목표로 하여 연구 작성되었다. 주민(civil)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누릴 권리가 있고, 현재의 여건에서도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보장코자 한 것이 바로 ‘공동공약’이다. ‘공동공약’이 입각한 시민 기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과 건강을 지킬 권리 : 주민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저항할 권리와 그로부터 구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돈이 없어도 공공의료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권리 : 그동안 주민 개개인의 생활 조건은 전적으로 개인의 부에 의

해 좌우돼왔다. 하지만, ‘공동공약’은 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모든 주민에게 의식주, 교통 등 필수 생활재를 제공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려 하였다.

△다양한 자원의 권리 : 국가 차원의 개발확일주의가 지방자치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체도의 실상이다. ‘공동공약’은 이런 획일화를 반대하며, 다양한 참여 경로와 자율, 문화공동체를 조장코자 노력하였다.

△다음 세대가 누릴 권리 : 지금 우리에게는 자기를 고갈시키는 단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꾸는 조망이 필요하다. ‘공동공약’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생태의 개선과 보존을 통해 미래 세대의 권리와 접촉하려 하였다.

제3대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218명 출마,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1(광역비례 9인 포함) 등 총 45명 당선

1. 사건일자 20020613-20020613

2. 사건내용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투표제)에 따른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한나라당은 호남을 뺀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얻으면서 52.4%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민주당은 29.2%를 얻어 한나라당과 큰 차이로 2위에 그쳤다. 원내 의석 하나 없는 민주노동당(민노당)은 7.5%를 얻어 6.8%를 기록한 자민련을 제치고 일약 지지율 3위의 정당으로 떠올랐다.

14일 새벽 1시 현재 중앙선관위 집계를 보면, 한나라당은 서울(53%)을 비롯해 부산(72%)과 대구(77%),경남·북(75%)등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한나라당은 자민련 지지기반이었던 충청권의 대전에서도 44%를 얻어 자민련(34%)을 크게 눌렀고, 충북에서도 50%를 얻어 자민련을 26%포인트의 큰 차로 따돌렸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통적 강세지역으로 여겨왔던 서울에서 36%를 얻는데 그쳤으며, 경기도에서도 32%의 지지율에 머무는 등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에 20~30%포인트 가량 크게 뒤졌다.

민노당은 광주(12%),전북(13%),전남(15%)등 호남에서 민주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차지했으며, 울산(24%)에선 한나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민노당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비해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창당한 한국미래연합은 대구에서 8.2%의 지지율을 얻어 한나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민주노동당 2002 지방선거 당선자>

기초단체장

울산 북구청장 이상범

울산 동구청장 이갑용

광역의원

서울 비례대표 심재옥

부산 비례대표 박주미

광주 비례대표 윤난실
경기 비례대표 박미진
강원 비례대표 고수정
전북 비례대표 김민아
전남 비례대표 전종덕
경남 비례대표 이경숙
울산 비례대표 홍정련
울산 북구3 윤종오
울산 동구3 김종훈

기초의원

서울 구로구 고척2동 홍준호
경기 수원시 고등동 김현철
경기 용인시 기흥동 주경희
경기 성남시 상대원3동 김기명
경기 성남시 정자2동 김미라
경기 안산시 선부1동 이하연
경기 안산시 본오3동 이창수
경기 군포시 채궁동 김진호
대전 유성구 구척동 최용택
대전 유성구 신성동 신현관
광주 광산구 우산동 홍순희
전남 순천시 덕연동 서동욱
대구 서구 비산2,3 장태수
경북 포항 흥해읍2 박경렬
경남 거제 옥포2동 김해연
경남 창원 가음정동 이종엽
경남 창원 사파동 정동화
경남 진주 하대2동 김임섭
부산 해운대 좌동 김용일
울산 동구 화정동 황재윤
울산 동구 대송동 장세동
울산 동구 전하1동 오진현
울산 동구 남목2동 서영택
울산 동구 방어동 장두철
울산 북구 농소3동 김대영
울산 북구 송정동 김진영
울산 북구 농소2동 김재근
울산 북구 양정동 유인목
울산 북구 염포동 하인규
전북 정읍 산내면 조훈

대구 달성군 가창면 배도순
경남 창원 성주동 여월태

이상 45명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2년 6월 14일자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최우선 추진키로

1. 사건일자 20020624-20020624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6월 24일 정례협의회를 갖고 6.13지방선거의 성과를 공유하고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등 하반기 사업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당원들과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민주노총이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회찬 당 사무총장은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민주노동당 출마자 가운데 절반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며 “계급투표를 조직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조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당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집행 △장기파업장 등 현장투쟁 결합 △민생문제, 노사문제, 구속자 석방 등을 위해 제3당의 위상에 맞는 장내 정치활동 △진보진영 단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당이 노력해 줄 것 등을 민주노동당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 당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당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주노총과의 공동사업과 당 독자사업으로 나누어 하반기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당선자 연수

1. 사건일자 20020627-20020628

2. 사건내용

6.13지방선거에서 45명의 당선자를 낸 민주노동당은 6월 27, 28일 1박2일간 대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당선자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지방의정 활동론’을 주제로 김창현 울산시지부장이, ‘평등자

치의 이념과 정책'을 주제로 이재영 정책국장이 강사로 나와 강의했다. 당선자들은 또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과 하승수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으로부터 각각 예산심의와 조례제정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당선자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으며, 모든 교육을 마치고 당선자 선서를 통해 △공약 이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의정 활동 △1인 1진보적 조례제정 운동 및 예산심의 주민참여기구 설치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진보진영 대선 예비경선 가능성 타진키로

1. 사건일자 20020628-2002062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오는 대선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추진을 위해 7월 중순까지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예비경선 가능성을 적극 타진해 나가기로 했다.

진보진영 예비경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독자 후보 선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노동당은 제 단체들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6월 28~29일 대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선방침을 확정했다.

전국집행위원회에서는 '7월중 각계 간담회 추진, 9월 후보선출을 위한 총투표 실시'를 뼈대로 하는 대선방침안을 이날 중앙위에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예비경선의 현실적 가능성 등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같이 수정되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를 추진, 예비경선과 관련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8.8재보궐 선거에 '제한적'으로 출마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제3당의 위상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에서 재보궐 선거 출마가 결정돼야 하며, 인물보다는 당과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치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의 구속 등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가 확정된 곳은 13곳이며, 민주노동당은 서울 금천과 경남 마산합포 재보궐 선거에 각각 최규엽 금천지구당 위원장과 주대환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의 후보 출마를 인준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속하고자 하는 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당원규정을 개정해 지구당 입당 기준을 '주소지',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로 분명히 했다. 지구당을 이동한 당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개월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또 당대회, 중앙위원회, 전국집행위원회 등 주요회의의 회의결과 공개와 관련 의사록은 14일 이내에, 회의결과는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당규 제16호 의사록 및 회의결과 작성에 관한 규정), 당 대의기관의 회의자료는 7일 전에 공개한다(당규 제17호 정보공개 규정)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김혜경 부대표를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인준했으며 6.13지방선거 평가와 국고보조금 사용 예산편성은 토론 끝에 다음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범진보진영 원탁회의 추진

1. 사건일자 20020704-20020704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대선 공동대응을 위해 ‘범진보진영 원탁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중앙위원회 결정에 근거, 제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2002 대선 승리를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원탁회의는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중앙조직 인사들은 물론 지역 인사들을 포함해 3백여명 정도가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16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연합, 전농, 전빈련, 사회당, 녹색평화당 등 ‘주요단체의 지도부 연석회의’를 개최해 진보진영 예비경선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와 공동선대본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각 단체에 실무집행부서장 회의를 제안, 7월 둘째주부터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백기완 선생 등 민중운동의 원로들을 당 대표단이 방문해 대선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19일 열리는 민중연대 수련회에서도 원탁회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원탁회의 이후 7월 26일쯤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 후보 선출 방침 및 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차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 단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추진을 위해 7월 중순까지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예비경선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예비경선이 불가능할 경우 당 독자 후보 선출 절차를 밟아나가되 제 단체들과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추진”키로 대선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열성당원 전진대회 개최

1. 사건일자 20020713-20020714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13~14일 충북 청주 사조리호텔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성당원 전진대회’를 갖고 대선승리를 다짐했다.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이날 대회는 6.13지방선거 활동을 담은 영상물이 대형스크린에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어 최기영 중앙당 기획국장이 나와 민주노동당 득표율 분석 결과를 발표, 향후 당의 정치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선방침 토론에서는 노회찬 사무총장(대선기획단장)의 발제에 이어 정윤광 노원을지구당 위원장, 김창현 울산시지부장, 장상환 정책위원장, 이덕우 인권위원장, 이근원 공공연맹 교 육선전실장이 패널로 나와 범진보진영 예비경선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밤 12시부터 시작된 ‘당원전진의 밤’ 행사에서는 학생당원들의 율동, 박성환 당원과 그룹 젠 노래공연, 경기도지부 당원들의 카드섹션 등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행사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광역지부별로 모여 자체 수련회를 갖고 대선준비 계획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날 오전 참가자들은 광역별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모범당원상 시상을 가진 뒤 △당을 중심으로 민주진보세력을 총결집시켜 민중진영 단일 대선투쟁을 전개 △전면적인 대선체제로 전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등 노동투쟁과 반미투쟁에 당력을 집중 △9월초순경 전당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선출정식을 갖는다는 내용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민주노동당 8·8재보선 출마 후보 3명 ‘5대 공동공약’ 발표

1. 사건일자 20020724-20020724

2. 사건내용

8·8 재보선에 출마하는 최규엽(서울 금천), 양연수(서울 종로), 주대환(경남 마산합포)씨 등 민주노동당 후보 3명은 24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와 한미행정협정의 근본적 재개정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규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 △이자제한법 제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2년 7월 25일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대선 출마 선언

1. 사건일자 20020809-2002080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9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은 한국정치사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진보정당 운동의 향배를 가름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각 대선주자 간의 지지율 변화가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권 대표의 대선 참가가 12월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노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8%의 정당지지율을 얻어 이미 ‘잠재적’ 능력은 인정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민노당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주요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민노당의 자체 분석이다.

실제로 재야와 노동계 연합체인 '국민승리 21'의 후원 아래 1997년 대선에 출마한 권 대표는 30만6026표(1.2%)를 얻어,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표차(39만557표)에 근접했었다. 이 때문에 민노당 내부에서는 각 정치세력과의 정책연합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표를 몰아주는 들러리가 아닌 연립정부 차원의 파트너라면 고민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권 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지도부는 "후보 중도사퇴나 비판적 지지는 절대로 없다"며 진보정당의 첫 대선 참가를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이 얻은 8%의 정당지지율은 기성정치를 불신하는 '침묵하는 부동표'가 폭넓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를 토대로 대중적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은 민노당의 몫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노당 후보들이 3~6%대의 지지율에 그친 것도 '인물과 정책'으로 표심을 이끌지 못한 진보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민노당이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2년 8월 10일자

<2002년 대선승리와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 구성 실패

1. 사건일자 20020830-20020830

2. 사건내용

2002년 대선에서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추진되던 '2002년 대선승리와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범추)가 각 조직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3개 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범추는 간담회 참가조직의 내부사정과 참가를 권유하기로 한 조직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구성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그러나 "주요단체 지도부 간담회에서 합의한 기본정신을 존중하기로 하고 향후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경우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혀 범추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주요단체 지도부에서 합의했던 시한인 8월말 현재 각 조직의 상황 등의 이유로 범추가 구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하고 "지난 7월 간담회에 참여했던 조직과 참여를 권유받은 각 조직들이 현재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각 조직들의 입장이 정리되면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10개 주요단체 지도부들은 지난 7월 16일 간

담회를 통해 △8월말까지 범추 구성 △범진보진영의 예비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 △대선 승리를 위한 대중적인 공동투쟁 전개 △범추 구성을 위한 공동기획단 구성 △사회당, 녹색평화당 및 제 단체에 범추 구성과 단일후보 경선 참여 권유 등 7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명운동 들입

1. 사건일자 20020902-200211DD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1백만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쟁점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전 지구당, 양대 노총, 사회당, 전국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진행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된 비정규 노동의 폐해와 실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명을 통해 지역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상담을 통해 조직화의 단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6월말 열린 정례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의 사업을 모색키로 한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내부적으로 3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반기 공식사업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7월 민주노동당에 1백만 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당의 경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정치적 분열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민주노총이 포괄하지 못하는 각종 비정규직 사업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당의 정책과 대안을 알리기 위해 전 지구당 조직을 가동하는 1백만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후 사회당, 한국노총을 비롯해 전국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노동센터 등에 이 사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오는 9월 4일 중앙서명운동본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번 서명은 지구당별로 주 1회, 지역별 서명운동본부별로 월 1회 지역 내 주요 장소에서 벌이는 가두서명, 비정규 사업장 방문서명, 당원할당 서명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전국에 분포한 각 지구당이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9월에 두차례 지구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비정규·미조직 노동실태 및 대안, 노동상담요령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명운동의 결과는 오는 11월 10일 열릴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된다.

권영길 대표 대선후보로 선출

1. 사건일자 20020908-20020908

2. 사건내용

권영길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제16대 대통령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순영)는 지난 8일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선출대회'에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실시된 당원총투표 결과, 대통령 후보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권영길 대표가 민주노동당 제16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총당권자 1만2천8백77명 가운데 8천32명(투표율 62.8%)이 참가한 이번 투표에서 권영길 대표는 7천2백97표(90.8%)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권영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대선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권 대표는 이날 선출대회에 모인 1천여 당원들에게 “평등과 통일의 세상을 만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를 민족과 역사 앞에서 엄숙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평등사회를 만드는 대통령, 서민복지를 구현하는 대통령,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 신기술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유세 신설 △비정규직 철폐 △무상교육 실현 △공공의료 확립 △공교육 강화 △평화협정 체결 △모병제 실시 △민족통일추진기구 구성 등을 약속했다. 권영길 대표는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 노(No)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로서 부시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권 대표는 또 “남북간의 평화체제구축과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통일추진기구 구성 등의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며 방북의사를 밝히고 “북한당국은 저의 방북의사를 받아들여 초청하고, 남한당국은 초청이 있을 경우 방북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당대회는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 20분경 개회됐으나 첫번째 안건인 대선기본방침을 다루다 성원부족으로 유회됐다. 대선기본방침과 재정계획, 선거대책위 구성 등을 다룰 계획이던 당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상임집행위원회와 전국집행위원회를 통해 당대회 재소집 여부와 선대위 구성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발족

1. 사건일시 20020912-20090912

2. 사건내용

- 지난 9월 12일 발족한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공동대표 김영대 김호선 박태주 심일선 장운, 이하 노동연대)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외곽조직을 자임하며 노동계 '노무현 지지'를 조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월 17일 열린 개혁적국민정당 추진위원회 발족식. 이날 '정당개혁 국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은 '폭탄' 선언을 했다. 이 행사에는 김영대씨를 비롯해 김호선 전 공공연맹 위원장, 심일선 전 민주금융 위원장 등 노동계 출신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었다. 노동연대에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한국노총의 단위노조 간부 등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은 지난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노무

현 후보가 당선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들 가운데 국민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18만명에 육박했었다"면서, "앞으로 대선에서 노조의 지지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연대에 누가 참여하나

노동연대에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5명은 모두 연맹 위원장 출신들. 김영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은 청계피복노조 출신으로 민주노총 초기부터 활동을 해왔다. 이 밖에 김호선씨는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공공연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전문기술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한국은행노조 위원장을 지낸 심일선씨는 민주금융 위원장 출신이고, 장운씨는 대학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85년 대우자동차노조 투쟁을 주도했던 홍영표씨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밖으로 드러난 인물 이외에도 민주노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과 사무, 공공, 제조부분 노조 위원장 출신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노동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임원들 조직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현 시기 우리 노동자의 선택이라는 점을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결의해 왔다"며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이 보수 야당의 후보에 불과한 노무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으로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공연맹에서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는 성명이 발표되자 노무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는 공공연맹 노항래 연대사업국장은 연맹 홈페이지(<http://public.nodong.org>) 자유게시판에 '노무현 어찌고 한, 연맹 성명서를 보고 - 웬 자다가 봉창'이라는 글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고 연맹의 조합원을 향해서 민주노총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히 낙인찍고 규정해놓고 규탄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는 견해를 올렸다. 이 글이 올라가자 게시판에는 '노무현 지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공공연맹은 연맹 성명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기한 노항래 국장에 대해 9월 25일 중집회의에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가 14명 참석자 중 7명만 징계에 찬성해 징계 안건이 부결됐다. 공공연맹은 노항래 국장에 대해 보직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항래 국장 징계논의에 대해 연맹 게시판에는 "이번 문제가 노동자진영의 대선방침논쟁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여러 건 제시돼 여전히 논란이 남겨진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민주노동당 탈당과 노무현 지지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민주노총 내에서 소외 받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노동계 내부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태주(47)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노동특보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며, 얼마 전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했다. 박태주 연구위원은 "노동계에서 노무현 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노동자를 정치에서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

3. 참고자료

- 「오마이뉴스」 2002년 9월 27일

2002년 하반기 전국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2002 대선 공동선거대책본부(공선본) 건설을 위한 논의

1. 사건일자 20020914-20021023

2. 사건내용

- 노동자의 힘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진보진영)이 대선 시기(하반기)에 노동자 민중투쟁과 대선 대응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결성을 추동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투쟁과 선거 대응이 올바르게 결합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전국공동투쟁본부와 2002년 대선을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구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10월19일,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기획조정회의 총괄간사), 노동자의 힘(고민택 정책위원장, 이훈구 연대사업위원장), 전국연합(정대연 정책위원장, 한충련 연대사업위원장), 자통협(유 흥 정책실장), 사회진보연대(송유나 사무처장, 홍석만 노동국장) 등이 참여한 5차 예비회의에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명칭-'민중연대투쟁 강화와 2002 대선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약칭, 2002 대선공투본)

(2) 위상과 역할

-2002 대선공투본은 민중연대(준)와 상호협조를 통해 대선시기 동안 노동자,농민 등 민중운동진영의 대중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이자, 2002 대선공투본 후보 선출을 위한 민중경선 및 선거운동을 관장하는 공동선거대책기구이다.

-2002 대선공투본은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대중투쟁을 중심에 놓고 선거투쟁을 결합시킨 대중행동과 투쟁전술을 구사한다.

-2002 대선공투본은 공동의 대중투쟁 과제와 선거강령을 통해 보수정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투쟁하며, 이 속에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 나가고, 특히 경선 후보 및 2002 대선공투본 후보는 이의 관철과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3) 공동투쟁 과제

- 노동법 개악저지·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주5일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시도와 철도 및 가스의 사유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간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권력 침탈에 맞선 노조탄압규탄 투쟁 및 비정규직 노동권, 공무원·교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 쌀개방 저지·WTO반대 투쟁

쌀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기도 등 신자유주의적 농업말살정책에 맞선 농민투쟁에 위력적으로 결합하고, WTO 도하라운드 양허안과 관련하여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개방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WTO 반대투쟁을 확산시킨다. 또한,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저지투쟁을 통해 WTO 세계화 반대투쟁을 전면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 반미·반전 및 615공동선언 관철 투쟁

미국의 이라크 침공위협 속에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정권 반대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해 규탄 및 미군기지 반환과 주한미군철수투쟁, 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등 미국반대투쟁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권·생활권 등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기초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실업, 장애, 빈민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 독소조항 폐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점상·빈민생존권과 주거권, 장애인동권, 이주노동자 합법성 등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산, 장시간 노동의 확대, 근골격계 질환의 확산 등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노동권 쟁취투쟁을 확산시켜 나간다.

-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석방 등 민주주의 쟁취 투쟁

범민련, 한총련, 한청 등 이적규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최근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안정국 조성기도를 분쇄하고,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투쟁 및 선거법 개악, 통신검열 및 민중감시 체제 분쇄 등 민주주의 쟁취투쟁을 확대한다. 나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지배세력들을 규탄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의 금융적 팽창에 기생하고 있는 지배세력들을 적극 폭로한다.

(4) 범위와 체계

- 공투본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로 한다.

- 공투본 체계는 전체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 공동선거기구, 투쟁실천단으로 한다.

- 공투본 집행위는 민중연대 집행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선거대책기구

- 공투본 후보선출 및 추대방식, 선거강령,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한다.

(6) 대선후보 선출방안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기존의 정치방침이 대선공투본 경선 시 조합원들의 자유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며, 대선공투본 후보로 민중진영의 정치적 단결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기존의 방침을 대선공투본(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한다.

-대선공투본 후보의 선출 일정에 대하여는 이후 다시 논의하며, 단 경선일 경우 10월 28일 이전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져 경선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선거인단 구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기로 함)

-후보 선출방식

후보가 복수일 경우에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며(후보 단일화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후보가 단일한 경우에는 공투본의 후보로 추대한다.

-선거강령 : 이후 논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대선후보등록방식에 관한 문

제였는데, 각각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공투본 대선후보 등록방식에 대한 각 조직의 입장>

◦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의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되 그 방식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 노동자의 힘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무소속 또는 페이퍼 정당(이후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전제하지 않는)의 후보로 한다.(어떤 경우에도 민주노동당 등 기존 조직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민주노총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현재 의결단위에서 확인된 입장은 무소속 후보여서는 안된다는 점 확인.

◦ 사회진보연대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등록과 관련한 공투본 내 대중적 논의와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 전국연합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후보의 등록방식 문제가 공투본 결성의 장애로 되어서는 안된다.

◦ 자통협 본부

민중경선과 그 방식에 관한 공투본 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민중경선을 통해후보를 결정한다. 민중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공투본의 선거강령과 실천에 의거한 명실상부한 범진보진영의 후보로 세워낸다.

결국 10월23일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기획조정회의 총괄간사),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노동자의 힘(고민택 정책위원장),사회진보연대(송유나 사무처장, 홍석만 노동국장), 전국연합(정대연 정책위원장, 한청 김근래 정책위원장, 한총련 연대사업위원장), 자통협(유홍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 6차 예비회의에서 공투본 후보의 법적 등록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동자의 힘이 이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노동자의 힘 입장>

- 노동자의 힘은 지난 9월 17일 대외적으로 제안한 공투본(공선본 포함) 구성에 대하여 6차례에 걸친 예비모임을 진행한 결과,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퇴색했다는 판단아래 불가피하게 제안을 철회한다.

-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했다함은, 첫째 민중경선의 의미와 목적이 논의과정에서 축소, 조정되었으며, 둘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변경 역시 최소 수준에서만 진전되었고,셋째 마지막 쟁점이 되었던 공투본 후보의 법적 등록 자격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못했음을 이른다.

- 노동자의 힘은 공투본 논의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전체 노동자와 민중운동 진영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을 기대한 현장 활동가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 노동자의 힘은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계급적 단결과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진보연대 입장>

- 기존 조직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모두가 '합의'한 바 있는 '공투본 후보이어야 한다'는 점의 실 내용을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것이 공투본 출발의 전제라기보다는 공투본 건설 후 대중적 논의 과정, 경선의 과정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 후보 등록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민중경선을 통한 후보의 자격, 역할, 등록문제 등(공투본 후보의 실내용)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한다.

- 따라서 공투본 논의의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사회진보연대는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을 통해 공투본 건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반신자유주의연대전선의 형성과 신자유주의의 반동적 권력재편 분쇄를 위해 투쟁해 나가고자 한다.

3. 참고자료

- o <http://pwc.or.kr>

민주노동당 중앙선대위 발족, 한국사회 총체적 개혁 위한 4대 개혁 선언

1. 사건일자 20021007-2002100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이 지난 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중앙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확실한 대안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전 당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대위 발족에 맞춰 민주노동당은 “평등사회, 복지국가, 평화시대, 통일조국을 건설할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갈수록 비중이 커져가는 미디어 선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디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을 조직하기 위해 ‘진보사랑 10만인 후원단’ 조직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거대책위 산하 몇몇 부서를 제외한 주요부서의 인선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천영세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대책위 산하에 민생보호단, 비정규직권리찾기운동본부, 공무원노조지원본부, 미군기지없는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4대 특별기구를 구성해 주요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우리 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대 계기로 만들자”며 이회창, 정몽준, 노무현 후보에게 권영길 후

보를 포함한 ‘4자 정치회동’을 제안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4자 정치회동의 의제로 △국민공정선거감시단 구성 및 선거감시 방안 △대선자금 모금 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 △선거공영제 실시를 위한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4자 합동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본인과 직계가족의 국적, 병역관계, 탈세 등 5대 사안에 대한 실상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전국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5차 예비회의 개최: 참여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전국연합,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20021019-20021019)

전국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6차 예비회의 개최: 참여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전국연합,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사실상 공투본 구성 결렬
(20021023-20021023)

울산 중구 보궐선거 천병태 위원장 출마

1. 사건일자 20021030-20021031

2. 사건내용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 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천병태 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한다. 울산중구지구당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 총 선거권자 1백49명 가운데 1백27명이 투표에 참여해 85%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천위원장은 찬성 1백24표를 얻어 9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후보로 선출됐다.

천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민주노동당의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울산 노동자의 투쟁을 정치 쟁점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인 울산중구지구당 사무국장은 “북구, 동구와는 달리 한나라당 텃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보수층이 한나라당과 국민통합21로 분열될 경우 해볼 만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집권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힘차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광역비례의원, 노동관련 3대법안 철회 공동성명 발표

1. 사건일자 20021031-20021031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소속 광역비례대표의원 9명은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 등 노동관련 3개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들 법안의 철회를 위해 노동자투쟁에 연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상정한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법안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더욱 불안정한 노동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며,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조합법은 시대착오적 부조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제특구법과 관련해서도 “외국자본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제한하는 노예특구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욱 서울시의회 의원은 “노동자 정치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동자들의 삶을 옹호하는 3대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성명을 시작으로 지역별 집회에 결합하는 등 노동법 개악안 철폐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때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 투표제를 통해 9개 지역에서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60여 주요 민중사회단체에 공동선거운동본부 제안

1. 사건일자 20021107-2002110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중앙선거대책위(위원장 천영세)는 지난 7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60여 주요 민중사회단체에 ‘2002 대선 공동선거운동본부’(약칭 공선본) 결성과 대선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공선본 제안 공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범진보진영의 단결 실현과 보수정치 심판의 일대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공선본 결성을 제안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 쌀 개방 저지 등 민중진영 5대 공동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범진보진영의 대선공동대응을 실현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공선본 제안은 ‘범추’와 ‘공투본’ 논의의 연장선에서 제안됐다. 범추 추진 결렬 이후 제안된 공투본은 제안단체인 노동자의힘과 사회진보연대의 불참 이후 지난 8차 모임에서 전농의 참가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를 판단키로 했으나 전농이 13일 투쟁 때문에 공투본 건설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확인된 이후 더이상 공투본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상황에서 범진보진영의 대선 공동대응이라는 범추와 공투본의 정신을 살려 민중투쟁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대선 공동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공선본을 제안한 것이다. 13일 상경투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농은 21일 중앙위원회에서 공선본 참가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중조직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공동선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8%(98만명) 획득

1. 사건일자 20021219-20021219

2. 사건내용

제16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당초 투표일 바로 전날 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 선언과 낮은 투표율로 인해 불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깨고 약 57만여 표차, 2.3%차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20일 새벽 최종 개표 결과 노 후보는 12,012,945표 48.9%를 득표하여 11,441,116표 46.6% 득표에 그친 이회창 후보를 2.3%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노 후보는 접전지역으로 분류됐던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 후보를 비교적 큰 표차로 앞서면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고, 호남과 제주에서도 우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부산·대구 등 영남권과 강원에서 노 후보를 앞섰다.

노 후보는 서울에서 51.30% 대 44.96%, 인천 49.86% 대 44.52%, 경기 50.65% 대 44.19%로 수도권에서 모두 앞섰으며, 대전 55.09% 대 39.82%, 충북 50.42% 대 42.89%, 충남 52.16% 대 41.23%로 충청권에서도 상당한 격차로 이겼다.

보수층이 두터운 강원에서 41.51%를 얻어 나름대로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접경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어 대북 관계에 민감한 지역에서 노 후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북 관계 진전 공약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는 호남권에선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획득한 반면, 영남권에선 당초 기대보다는 미흡한 표가 나왔다.

이 후보는 대구에서 77.75%(1,002,164표), 부산에서 66.75%(1,314,274표)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예상대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노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의 패배를 만회하지 못했다. 노 후보는 부산에서 587,946표(29.86%)를 얻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개표 종료 결과 957,056표로 3.90%를 얻어 5% 정도 나올 것으로 보았던 여론조사 결과보다 부진한 득표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 대표의 지지 철회 선언으로 권 후보 지지자 중 일부가 노 후보 지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투표율은 24,760,14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0.8%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1997년의 15대 대통령선거 때 투표율 80.7%보다 9.9% 낮아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당초 낮은 투표율은 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노 후보의 지지가 높은 지역, 특히 호남의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결집했고,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는 기반이 되었다.

결국 두꺼워진 부동층의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함으로써 투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연두기자회견: 민주노동당을 보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2004년에는 원내진출 목표

1. 사건일자 20030109-2003010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을 보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민적인 운동에 착수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가입 국민캠페인을 통해 현재의 3만5천 당원을 연말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발전"시키고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각계 각층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쟁취 국민연대'를 결성해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러한 정치개혁 투쟁을 전개하면서 오는 3월 1일 당대회 이후 당을 사실상의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2004년 총선에서는 원내에 대거 진출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며 부유세, 소과개정, 개인과산자 보호, 경영참가 등 '10대 정책 제도화'를 약속하고 "각종 민생현안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당과 전국의 1백여개 지구당에 '민생보호단'을 설치해 민생문제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북핵문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남한, 북한, 미국 3국이 참가하는 '한반도 비핵·평화회담' 개최와 이를 통한 남한, 북한, 미국 간 포괄적 합의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남한의 비수기에 남아도는 전력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의를 위해 노무현 당선자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고 이미 초청장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자신의 방북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

권대표는 방북계획과 관련, "대선 전에 방북의사를 밝힌 바 있고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장을 받아 공식적으로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접수했으나 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방북을 하면 여러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해 대선 이후로 잠시 접어두고 있었다"며 "새해들어 북핵문제가 떠오르면서 북한을 직접 방문,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다시 정부당국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 2003년도 정기 당대회 3월 1일 개최 결정

1. 사건일자 20030118-2003011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창원대 사립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정기당대회 일자를 확정하고 중앙위원과 당대회대의원 선출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최순영 부대표를 선임했다.

당대회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각 지구당은 2월 4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5일부터 26일까지 지구당별로 배정된 수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당헌에 따라 당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해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당비를 미납한 당원과 해당 지구당의 총회 혹은 총투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입당원에게는 당규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2003년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여성 등 12개 부문별 중앙위원, 당대회 대의원 부문별 산정기준을 노동은 30%, 농민·빈민·학생은 3%, 나머지는 각 1%로 확정했다.

이날 중앙위에서 구성된 정기당대회 준비위(위원장 노회찬 사무총장)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정기당대회 안전초안을 검토하고 안전에 대한 당원토론회 개최일정을 결정한다. 현재 의안소위에 올라온 안건은 2002년 사업보고, 대선평가, 당헌개정, 2003년 사업기조, 예결산 등이다. 당대회준비위는 지난 21일 중앙당 홈페이지(www.kdnp.org)에 '2003 정기당대회 안전제안 및 토론게시판'을 개설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경북도지부, 서울 마포을, 부산 금정구, 경기 이천시, 하남시, 울산 울주군, 전남 목포시지구당 등 지역조직이 인준됐으며 창준위 건설과정에 대한 상집의 조사가 진행중인 인천 남동갑지구당(준)과 남동을지구당(준)에 대해서는 대표단회의에 인준을 위임했다.

한편 6차 중앙위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대선평가와 상집위원 인선은 오는 2월 11일 대전에서 열리는 7차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고 배달호 당원 유가족 돕기 성금 1천만원을 모금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중앙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두산중공업을 방문, 고 배달호 당원 분향소에서 합동 분향을 하고 마산 삼각지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정기대의원대회: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 당원소환제, 국회의원 비례 후보 당원 직선, 여성할당 50% 이상 등의 당헌 개정

1. 사건일자 20030301-20030301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1일 정기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할당 비율을 종전의 '3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 여성의 활발한 정치적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명부의 50%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

과 명부순위 1, 3, 5번을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당규에 명시한 것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 실시될 전망이다인 1인2표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경우도 여성에 50%이상을 할당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 시도 비례대표 후보 명부순위 1번을 모두 여성에 할당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당선돼 현재 시도의회에서 활동중이다.

민주노동당의 여성당원 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22%. 당원 중 여성당원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입된 비례대표 후보 여성 50%이상 할당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2000년 창당 당시 당헌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제7조)고 못박은 바 있다. 이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당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중앙, 광역시도지부, 지구당의 선출직과 임명직에는 여성당원 30%이상 할당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지구당별로 실시된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에서도 각 지구당은 지구당에 배정된 중앙위원, 대의원 수의 30%이상을 여성에 할당해 선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1999년 6월 진보정당창당추진위 2차대회에서 여성운영위원을 전체 운영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를 만장일치로 도입하고 같은해 8월 창당발기인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8조에 대의기관, 집행기관 등에 30% 이상 할당할 것을 규정했다. 진보진영 내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실시하는 곳은 민주노동당이 최초이며 이번 당대회 결정으로 민주노동당은 당헌에 비례대표 여성할당 50%이상을 명문화한 최초의 정당이 됐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에서 북한 사민당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만남

1. 사건일자 20030302-20030302

2. 사건내용

남북이 함께 연 첫 삼일절 기념행사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이틀째인 2일 참가자들은 공동 종교행사와 함께 웨라톤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여성과 노동, 농민, 청년, 문예, 학술, 통일연대, 민화협 등 부문·단체별 상봉모임을 별도로 열어 민간 부문간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부문별 교류 모임에서 눈길을 끈 것은 권영길 대표 등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문병록 부위원장 등 북쪽 조선사회민주당 대표단의 만남이었다. 남북 정당 파트너인 두 당 인사들은 통일연대의 일원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공동 상봉 행사에 참여한 뒤, 식사를 함께하며 환담했다.

민주노동당 권 대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위원장 명의의 방북 초청을 받았으나, 두차례 다 정부의 불허조치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은 "한번은 대선 직전이라는 이유로, 또 한번은 북한 핵문제로 미묘한 시기라는 이유로 각각 불허됐다"며 "이번 기회를 빌려 올 4월 방북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했다"고 밝

했다. 권 대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관련해 문병록 부위원장은 “(면담을 원하는 남쪽의) 생각을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고위 관계자는 “북쪽에서 권 대표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예 부문 모임에는 남북 문학·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문예 교류 방안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과 작사가 조재형씨 등 남쪽 참가자들은 ‘남북 문화예술인 대회’를 이룬 시일 안에 열자고 북쪽에 제안했다. 또 남북 문화교류의 원칙으로 ‘자주, 창작, 사람, 민족, 평화 중심의 5원칙’을 제시했다. 북쪽 장혜명 통일문학 편집국장은 “여러분이 제기하신 것을 또박또박 받아적었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하자”고 말한 뒤,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선창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북쪽 최창만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참여한 노동 부문 만남에선 오는 10~15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노동대표자회의’에 관한 세부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이날 저녁 8시부터는 남북 대표단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커히 호텔 제이드가든에서 ‘평화통일 기원의 밤’ 행사가 열려 남북간 우의를 다졌다. 이 행사는 국수호 무용단의 큰북 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직녀에게> 등 대중가요 공연과 5개 종단 연합합창단 공연, 북쪽 예술인들의 무용과 독창, 중창 공연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며 3월의 뜻깊은 만남을 축하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3년 3월 3일

민주노동당, 파병동의안 위헌 소송

1. 사건일자 20030322-20030322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22일 국무회의(의장 노무현 대통령)가 의결한 ‘대이라크 파병동의안’에 대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한 헌법 5조1항을 위반한 위헌 의결”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파병결정은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 대해 2004년 4월 29일 "통치행위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는 일단 파병 자체에 대해 위.합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통치행위 사법처리 불가론'을 받아들인 셈이어서 사법판단의 범위를 두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파병은 군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등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파병 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병 결정이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

쟁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자료만 갖고 있다"며 "헌재의 판단이 더 옳거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헌재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고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평가와 심판을 받으면 된다"며 정치적 결정은 정치적 평가를 통해 심판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 등 4인의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청구인은 이라크에 파병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파병으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피력했다.

일반시민인 이명훈씨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라크에 국군 자이툰부대를 파병키로한 결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위배되고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사병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 파병을 동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민변과 일반시민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리없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권성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각하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낸 바 있어 이날 헌재 결정이 예고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국무회의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은 위헌'이라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3. 참고자료

- □□조선일보□□ 2003년 3월 23일
- □□프레시안□□ 2004년 4월 29일

민주노동당 4대 민생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1. 사건일자 20030418-2003041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이 입법 청원한 4대 민생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된다. 당이 단독으로 입법 청원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고금리제한법은 최근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와 경기도 지역 지구당에서 불법 대부업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 이슈가 된 바 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80% 이상의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과 행정당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보호법,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가법의 경우 현행법의 세입자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장기간의 법시행 유예기간을 둬으로써 임대료 폭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고, 집합건물관리법의 경우도 대형상가의 관리회사들의 부당한 착복 행위를 현행법이 제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주택법의 경우도 빈번한 재계약과 임대료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4대 민생법안은 서민경제 불안을 방치하고 있는 현행 민생법안의 제·개정의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민생보호정당으로써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당의 실질적인 민원 상담을 촉진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은 "국회 상임위의 우리당의 민생법안이 상정된다는 것 자체가 당의 영향력 확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4대 민생법안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적 역량을 모아 실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권리 완전쟁취 추진단> 결성

1. 사건일자 20030507-20030507

2. 사건내용

민주노총이 지난 5월 7일 총연맹 정치위원장(김형탁 민주노동당 부대표), 정치국장, 공공?전교조?공무원 등 각 연맹 정치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자 정치권리 완전쟁취 추진단'을 결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노동자 투표시간 확보 △비정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해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승희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노동자들은 그간 투표시간 제약으로 인한 참정권 박탈 등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선거 시기 말고는 큰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총연맹과 산하 연맹이 함께 좀더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추진단 결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추진단은 △각 연맹별로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 및 사례수집 △해당 연맹 조합원의 내년 총선준비 지원활동 전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투표시간 확보를 위한 단위노조별 협약체결 노력 △정치개혁 범국민협의회를 통한 민주노총 개정요구안 관철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 시작

1. 사건일자 20030522-20030522

2. 사건내용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인천지역의 투쟁이 시작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시작한 만큼 올 7월 1일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인천시지부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정치적·정책적 역할로서 당 활동과 함께 인천대책위 차원의 다양한 실천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는 우선 6월 8일까지 전 분회 교육 및 토론을 통해 분회별 실천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어떤 폐해를 가져 오는지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 지역분회는 지역구에서, 직장분회는 현장에서 독자 선전전 등을 통해 꾸준히 반대 여론을 형성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총력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각 지구당별로 노조와 함께 출근 선전전 및 교육·선전 사업 지원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민연대 등 4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2일 출범한 인천대책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부평역에서 열리는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노조 교육 및 조직화, 대책위 내부 교육 강화 △주요역을 중심으로 시민선전전 및 거리 농성 △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1천인 선언운동 조직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관련 추진내용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송도신도시에 투자키로 한 미국 게일사와 인천시 사이에 체결된 이면계약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한편, 정부와 인천시에 동북아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사회적 재논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1. 사건일자 20030603-20030603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의 '환경위원회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이 지난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청주, 광주, 부천 등 각 지역에서 올라온 20여명의 당원들은 이날 '환경위원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최상일 당원은 "민주노동당의 환경위 건설은 풀뿌리 민중운동과 지역공동체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장인 동시에, 자본과 개발 중심의 우리 사회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중심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전망하고, "당의 정강과 정책의 환경성을 평가하면서, 녹색마인드를 심화시키는 활동이 무엇인가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문재현 당원도 성미산을 살리기 위한 마포구 시민의 운동을 예로 들면서, "민주노동당의 분회, 지구당 등의 조직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살려나가자"고 제안했다.

해외에서 유학중이며, 민주노동당의 환경위 건설에 대한 관심을 당홈페이지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해온 아이디 'red21green'씨는 인터넷을 통해 발제문을 보내왔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생산력, 기술 발전 성과물의 평등한 분배에만 집중한다면, 노동자/민중에게 생태, 환경 파괴에 보다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는 것이며, 그 피해를 보다 평등하게 떠 안도록 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며 "생산력, 기술의 활용만이 아니라, 생산조건 즉 생태계에 대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영역으로의 분배적 정의 확대, 노동자 민중의 참여 등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통한 분배적 환경정의 실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한 당원들은 환경위를 통한 당 정책과 기조의 친환경적인 변화의 필요성, 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환경위 논의 확대, 환경위 건설 시기 및 위상 등에 대해 토론을 벌여나갔다. 또 실행위원을 돕으로써 '준비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발전된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게 했다. 다음 '준비모임'은 7월 9일 수요일에 열린다.

민주노동당,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위한 신용회복법 입법청원

1. 사건일자 20030605-2003060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서민금융보호SOS운동'의 일환으로 신용대란 속에서 서민들을 고리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개인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됐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개인채무 회생안이 통합되어 금융기간, 기업,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심의가 지연되는 점 △정부 법안이 장래에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주부, 실업자, 대학생 등을 배제한 점 △개인회생제도의 상환기간인 5년이 개인워크아웃제의 8년보다 짧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정부안이 주부, 학생층을 배제한 것을 규탄하고, 개인회생제의 보호대상을 장래에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및 주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빚 연체, 카드 돌려막기, 신용불량자, 사채시장 유입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빚 수령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고금리제한법과 신용회복법을 중심으로 서민금융보호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청원식에는 지난 대학 축제기간 동안 신용회복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주점을 마련한 외국어대 법대 소학회 광장회원들도 참여해 민주노동당의 '신용회복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위원회(가칭) 건설준비모임> 개최

1. 사건일자 20030620-20030620

2. 사건내용

지난 20일 오후7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는 '장애차별철폐위원회를 위한 준비모임(가)'이 열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당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당내 '장애차별철폐위원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도경 부천 원미갑지구당 당원의 발제에 이어 청주 상당구지구당이 자체 조사한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날 참석한 당원들은 "그동안 당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인단체의 연대 수준에서만 머무를 뿐, 전체적인 정책과 계획,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당내에서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 차별 철폐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사조차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출입문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넓히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점자로 된 명함도 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 '준비모임'은 다음달 16일 에서 열리며,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 현황과 위원회 건설을 위한 교육 및 조직사업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용구 군산지구당 당원(전신마비 장애)은 지난 13일 당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을 통해 "장애인의 입과 눈과 몸뚱이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장애인위원회' 건설을 제안했다. 김당원의 제안에 의해 당원들 사이에서 하나, 둘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해 '준비모임'을 이어졌다. 김당원은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회의결과를 보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 돌입

1. 사건일자 20030620-2003062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이 한국여성마비장애인연합(한녀연)과 함께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과 한녀연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연금법 제정 2백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주노동당은 전 지구당 조직을 가동해 내년 총선 전까지 1차로 1백만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낼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오던 한녀연이 지난 3월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할 것을 민주노동당에 제안함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준비돼왔다. 최명신 한녀연 사무국장은 "장애인 연금 도입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찾던 중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유세를 검토하게 됐다"며 "장애인연금 도입이 소수 약자를 위해 일하는 민주노동당의 뜻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에 결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여성정치학교

1. 사건일자 20030726-2003072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원연수원에서 '2003년 여성정치학교'를 개최한다. 최현숙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여성당원으로써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내 활동이 저조한 여성당원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정치학교에서는 현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해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처장이,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인 오유석 성공회대 연구교수와 조현옥 배재대학교 교수가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또 여성당원들과 민주노동당의 여성의원들이 함께 지방의회 정치의 경험과 여성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특별히 자녀를 동반한 당원을 위해 놀이방과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부당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에 이문옥 본부장 등 평양방문

1. 사건일자 20030814-20030817

2. 사건내용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는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가 각각 3백여명의 규모로 참가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문옥 부패추방운동 본부장과 최창준 서울 자주통일위원장이 중앙 대표단의 일원으로, 김은진 부산시지부 여성위원장, 이용대 경기도지부장, 이용길 충남도지부장, 이재구 창원을지구당위원장 등이 지역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이본부장은 지난 99년 감사원 시절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쪽 눈과 한쪽 날개만 있어 혼자 힘으로는 날 수 없는 상상의 새 비익조처럼 육로로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비행기가 아닌 육로로 자유롭게 서로 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본부장은 평양에서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대표를 만나는 등 북측 인사들과의 교류협력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주노동당 강태운 고문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 발표

1. 사건일자 20030818-2003081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강태운 고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계자에게 당 관련 정보를 제

공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당의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열린 제21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난 15일 구속된 강태운 고문 사건과 관련, 대표단 논의를 통해 북측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권영길 대표는 이날 상집에서 "현수준에서 민주노동당이 제1의 피해자다. 더이상 당이 피해자가 돼선 안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무집행위원들은 △강 고문이 당의 일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다는 점 △북한 당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민주노동당 활동에 개입하려고 한 점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는 점 △강 고문이 당원으로 가입만 했을 뿐 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만간 발표할 당의 입장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발표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은 대표단에 위임했다.

이날 상집에서는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지난 17일 "강 고문의 활동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고문직 해촉과 당적 박탈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성명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었다", "국가보안법 철폐 당론이 강조됐어야 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강태운 고문은 지난 1999년부터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총련 및 북한측 인사와 만나 민주노동당 성명, 논평, 회의자료 등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001년 금강산에서 열린 6·15 행사, 평양에서 열린 8·15 행사시 당내 인사의 방북 알선을 지시 받고 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됐다.

<자료>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논평: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 선생 구속사건>을 보고

17일 서울지검 공안1부와 국가정보원은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님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 8조 '회합, 통신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표되자 수구 우익에서는 '드디어 간첩을 잡았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1. 국정원과 검찰은 '반국가단체와 내통한 사건'으로 거창한 발표를 했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사건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 돈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돈을 주었다는 박모씨와 돈을 받았다는 강태운님은 인척사이이고 보면 돈을 준 사람이 국가보안법 상 '주적'인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돈을 수수해서 강태운님에게 다시 수수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조차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만다.

▶ 국정원과 경찰이 '반국가단체'에 일종의 '국가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정보제공 혐의를 말하

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명서, 논평, 회의자료 등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고 전혀 비밀이 아닌 내용이다. 북한당국이 인터넷을 통해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논리는 김영삼 정권 때 황석영 선생한테 적용한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문민독재에서 통하던 논리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를 적용하려한다면 엄청난 법혼란을 피할 수 없고 남북관계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 또한 자신의 조카 안모씨(박모씨의 부인)가 강운태님에게 '6.15공동선언 1주년 통일대축전에 민주노동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메모 내용을 문제삼는 것도 공색하기 짝이 없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교류를 활성화는 입장이어서 김대중 정부도 민주노동당 등의 방북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당시 분위기는 강운태님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민주노동당은 방북을 하게 되어있는 분위기였고 6.15공동선언 실현은 국민들 대부분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 않은가?

1. 창구단일화 논리를 중단하고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고 국가보안법의 회합, 통신죄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국가보안법의 회합, 통신 관련 조항을 살펴보자.

『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제 2조) 민간인의 자율적인 교류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제 8조)

국가보안법의 회합, 통신 조항은 간단히 말하면 창구단일화 논리이다.

관계 당국이나 사업가들, 동아일보 기자 등 힘센 언론인이 조총련 또는 북측과 접촉하면 범죄가 아니고 민간이 자유롭게 교류하면 범죄가 되는 법현실의 모순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는 당국의 허가없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는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 상 회합, 통신죄'는 민간교류의 정당성과 남북 화해현실에 비치어볼 때 즉시 폐지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정몽헌 회장의 죽음에서 보듯이 남북관계는 계속 왜곡될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회합통신죄 같은 시대착오적인 범죄 아닌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2003. 8. 1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http://www.antikukbo.net>))

민주노동당, 학교급식운동 본격화

1. 사건일자 20030903-20030903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이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학교급식제도 개선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3일 '민주노동당 학교급식개혁 추진단'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법 전면개정과 조례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특보와 당원 교육용 비디오, 대중 선전용 비디오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도 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발의운동에 당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서울시지부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생협 연합회 등과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1차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8일에는 실무회의를 통해 오는 29일 서울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합의했다. 김준수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역조직을 갖고 있는 당이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당이 먼저 제출하고 당이 주도하는 정치투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별로 만들어지는 운동본부에도 지구당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관악갑·을지구당은 이미 구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관악주민연대, 전교조 관악동작지부, 도림추진시민모임, 한살림 등과 함께 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1월말까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역단체와 함께 '학교급식 금천연대'를 구성한 금천지구당을 비롯해 노원갑, 강북을, 성북갑, 구로을지구당을 비롯해 14개 구에서 당이 운동본부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20여개 사회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제정 경기도 운동본부' 준비위를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지부는 2일 도지부 운영위에서 '사업추진단' 구성을 논의한다. 이미 두달 여 전부터 자체 서명운동을 하며 '올바른 급식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구리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학부모 모임'을 구성한 구리시지구당은 도지부 사업추진단의 서명운동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잠시 보류했다.

인천시지부도 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교급식인천시민모임'을 구성, 조례안을 작성하고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위한 '대표자 교부증'이 발급되는 대로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의 각 지구당도 사업 담당자를 정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만나고 있다. 대구시지부는 지난 7월 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운동을 핵심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16일 우리쌀 지키기 대구시민연대와 전교조, 대구학교운영협의회 등과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대구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박충일 정책기획국장은 "시민단체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조례운동을 펼치고 학교급식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운동을 펼칠 것을 원하고 있

나 당은 내년 총선에 맞춰 일정을 조속하게 잡고 있어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지부는 최근 37개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를 구성하고도 교육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청구한 상태. 창원을지구당은 지난달 25일 지구당 위원장인 권영길 대표가 주민발의 대표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진주시지구당도 주민발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북도지부도 최근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파병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 주장

1. 사건일자 20030917-2003091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길 당대표는 지난 17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쟁병의 추가파병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이라크 추가 파병건을 "국회의 결의가 아닌 국민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 '불법전쟁'이며 "한국 정부에게 이라크전 전투병을 추가로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이성과 도덕을 상실한 패권국의 주권유린"이라고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지난 1차 파병 때 국회가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안에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국회에게 추가 파병건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파병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권영길 대표, 김혜경 부대표들 비롯한 대표단과 윤영상 평화군축본부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며 상무집행위원 전원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총 민주연대 참여연대 여성운동연합 등 3백61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행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지난 23일 '비상시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국민투표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국민투표 실시 촉구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ox 네티즌 63% 국민투표 찬성

네티즌의 60% 이상이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한겨레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이라크에 한국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을 국회결의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주장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응한 5천2백88명 가운데 62.5%(3303명)가 '찬성'을, '반대' 의견은 37.5%(198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전농 정치협상 합의문」 체결(2003년 4차 중앙위원회 통과)

20031015-20031015

민주노동당 제4차 중앙위원회: 지도체제 전면개편 및 당헌 개정안 마련

1. 사건일자 20031023-20031023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17대 총선에서 '평등과 자주'를 선거기조로 삼아 보수 정치와의 차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진보 대 보수의 선거 구도를 이뤄내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치적 기초 확보 △전국정당 실현 △정당득표 15% 이상 △의석 총 10석 이상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재의 당 지도집행체제를 전면 개편해 당원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9명의 최고위원들과 의원단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당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대전 근로자총합복지회관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종합계획안과 당헌개정안을 오는 11월 1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임시당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총선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대중투쟁을 매개로 한 '계급투표전략'과 '표적집단투표전략'을 득표전략으로 삼고 각 지구당별로 1인 이상, 전국적으로 1백50명 이상의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이다. 또한 12월부터 중앙당, 광역시도지부, 지구당을 '국회의원총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재편, 전당적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3월부터는 총력선거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중앙위에서 다룰 계획이었던 당발전안은 당발전특위가 올린 보고서 가운데 당헌개정안만 심의되고 총괄보고서인 '민주노동당 발전방향'은 논란 끝에 당대회 안건 상정이 유보됐다. 당 발전방향은 2004년 총선 이후에 설치될 (가칭)'당발전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헌개정안은 전국집행위원회-사무집행위원회-대표단회의로 3원화된 옥상옥의 지도집행구조를 '최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의원단 대표를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을 당원직선으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고위원과 광역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되는 확대간부회의를 뒤, 전국적 당무집행의 통일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극복과 당원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의 주요정책과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전농과의 정치협상 합의문은 이날 중앙위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준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 3월 29일까지 입당한 전농 소속 회원 농민들에게 입당 후 1개월 경과시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규개정안도 통과됐다. 전농과의 합의문은 당대회에서 최종 인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재신임 정국과 관련,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을 계기로 당이 적극적인 불신임 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이와 함께 서울 구로갑, 부산 사하구, 경기 용인갑, 전북 전주완산 등 4개 지구당과 전북 완주임실, 전남 광양구례, 경기 부천소사, 안양만안 등 4개 지구당준비위를 지역조직으로 인준했다. 또 각 지구당별로 선출된 이성우(부산 진갑), 김은진(부산 남구), 노세극(경기 안산단원), 신용욱(경기 용인갑), 정형주(경기 성남중원), 염경석(전북 전주덕진), 이금희(전북 전주완산) 후보를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인준했다. 중앙위원들은 또 내년 총선에서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내년 2월에 열리도록 돼 있는 2004년 정기당대회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이번 임시당대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오후 3시경에 시작돼 14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튿날 새벽 5시 10분에 끝났다.

2003년 민주노동당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전농 합의문 인준, 지도집행체제 개편

1. 사건일자 20031101-20031101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치활동 방향을 정하고 당 지도집행체제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17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진출을 이뤄내기 위한 총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농과의 합의를 최종 인준해 농민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을 통한 전국정당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 당 발전방향 설정

임시당대회에서 당발전특위가 제출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 5년간 민주노동당의 활동좌표가 확정됐다. 당 정치활동 발전방향의 첫번째 항목인 "당 활동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알맹이 없는 구호와 주문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당 강령이 밝히는 이념적 지향을 당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을 비롯해 당면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 내부 교육 등에서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령에 근거한 기본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자주 평화 실현'으로 제시됐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사회복지 영역을 비롯해 교육, 주택, 보육, 여가 등 사회서비스, 기간산업, 자연(환경, 농업) 등 공적 영역을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공공성 강화)과 함께,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고 미국의 패권 강화를 저지하는 것(자주 평화

실현)이 당의 양대 기본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활동 발전방향으로는 △노동계급 중심성을 강화하고 노동계급 형성에 복무 △농민의 당 결합 강화 △이념과 원칙에 입각한 진보대연합 추진 △원의 대중정치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의원단 활동 실현 △중앙당부터 분회까지 집중성과 능동성 고양 △여성·생태·문화정당, 청년과 소수자의 당으로 장기 혁신 추진 △세계 진보정치세력과 교류 확대, 국제 진보블럭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당 조직 쇄신

당헌개정으로 창당 이후 3년간의 당 건설기를 마감하고 당 조직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제도가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도집행체제의 일대혁신.

민주노동당은 당헌상 '최고집행기구'이면서도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전국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최고위원회를 신설했다. 13인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일상 시기 당무를 결정, 집행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의 최고 지도부로 의원단 대표를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은 당원직선으로 선출된다.

임기 2년의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9명의 최고위원(4명은 여성으로 선출)을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당원소환제, 당원발의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의 당원직선제 도입에 이어 당내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민주당 쇄신을 주장하다 뛰쳐나온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당원 직선에 의한 지도부 구성이 불투명해진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당의 주요정책과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당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발전 특위는 중앙위 결정에 힘을 신기 위해 지부장, 지구당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할 것을 제시했지만 '의결과 집행의 분리'가 강조되면서 현행대로 중앙위원을 지구당에서 당원수를 기준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현재 21개 부서가 혼재돼 있는 중앙당 집행기구는 최대한 간소화해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중앙연수원 등 4개 기본부서로 통폐합하고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 부서별로 지역에 각각의 사업지침을 내리는 폐단을 없앴다.

■전농과의 합의 인준

민주노동당은 이날 임시당대회에서 전농과의 합의문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준했다. 전농과의 합의는 "신자유주의 희생의 한축인 농민들을 민주노동당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겠다는 의미"(권영길 대표)와 함께 "당이 현실적인 대안세력, 집권세력으로 확고한 토대를 만들게 된다는 의미"(천영세 부대표)를 지니고 있다는 데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공감한 결과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4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전농의 조직적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지역조직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과 공단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 편중돼 있는 민주노동당은 명실상부한 전국정당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농의 민주노동당 참여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지구당 건설과 후보 출마로 이어져 당의 득표율 제고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종합계획 확정

민주노동당의 2004년 총선대응 기조는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평등과 자주'로 설정됐다. 이는 '평등과 자주'가 "민중의 당면 요구를 집약하고 있고 '진보 대 보수'라는 선거구도에 있어서도 기존 보수정치와의 차별을 분명히 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2004년 총선 목표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치적 기초 확보 △전국정당 실현 △15% 이상의 정당득표 △총 10석 이상 의석 확보로 설정됐다.

당헌에 따라 직선으로 뽑는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법이 개정되는대로 1개월 안에 선출될 예정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후보로서의 당'을 위한 선거운동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선을 통해 형성된 민생정당·정책정당 이미지를 보다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나가는 방안이 강조됐다.

총선거획단은 내년 총선에 들어갈 비용을 65~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지역구 선거재정은 해당 선거를 책임지는 지구당이 모금·집행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선거재정은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명부와 관계없이 중앙당이 책임지고 모금·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당비를 걷는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재정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해설 | 임시당대회 주요 안건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당대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미리 살펴본다.

■ 당헌 개정안

이번 임시당대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당헌개정의 대략적인 윤곽은 당발전특위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고 지난 23일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됐다. 당헌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집행위원회를 대신하는 최고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의원단 대표와 당원 직선으로 선출되는 9명의 최고위원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전국집행위원회는 당헌상 '최고집행기관'이었으나 당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론이 결정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일상적인 당의 업무는 주 1회 소집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상무집행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은 당헌상 공식 기구도 아닌 대표단회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월 1회 소집되는 전국집행위원회는 당의 업무추진기관, 중앙위 안전상정기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에 당발전특위는 당의 총체적인 지도집행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위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 당무의 최고결정기관이자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며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로서의 위상을 갖는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기본으로, 사안 발생시 상시 소집될 수 있도록 했다.

당원 직선으로 선출되는 9명의 최고위원 중 노동과 농민 부문에 각 1인씩 할당되며 여성 30% 이상 할당 정선에 입각해 이 중 3명 이상은 여성이 선출돼야 한다. 또 이들 최고위원들 중에서 홍보위원장, 중앙연수원장, 민중운동담당, 여성담당 등 4인의 최고위원을 최고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당직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전국집행위와 달리 최고위원회에는 광역시도지부장이 포함돼있지 않은데 당헌개정안은 당무집행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최고위원과 광역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간부회의는 당론형성을 위한 의사 수렴과 전국적 사업

집행 점검과 결의를 통해 전당적으로 통일성있는 집행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요구로 신설됐다.

이번 당헌개정안은 지도집행체제 혁신과 함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의원단 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원단 대표를 제외한 12명의 최고위원(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9인의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기존에 대표, 사무총장은 당대회에서 선출되고 정책위원장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에서 인준됐지만 당의 최고집행기관의 구성원을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해 당원 직접민주주의와 최고위원회의 권위와 책임을 강화했다.

당원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 총투표제도 도입된다. 당대회,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당대회는 당의 주요진로, 당의 핵심 정책을 총투표에 회부, 당원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앙당 집행기구는 5개 기본부서(사무처, 정책위, 기획위, 대변인, 연수원)와 15개 특위·본부, 5개 부문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부서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류와 성격, 운영원리가 다른 집행부서가 동일한 위상으로 혼재돼 있는 것이다. 이에 당헌개정안은 중앙당 운영의 집중성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기구를 사무총국, 정책위, 홍보위, 중앙연수원으로 통폐합하고 중앙위 의결로 부문·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기획위원회 대신 사무총국 내에 기획실을 뒤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홍보사업과 대언론사업을 총괄하는 홍보위원회를 설치해 홍보업무의 강화를 꾀했다. 정책위원회는 당내 정책역량을 통폐합해 새롭게 구성된다.

당헌개정안은 또 중앙위원회의 결정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위원과 광역시도지부장, 지구당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했다.

■총선종합계획안

총선거획단 논의를 거쳐 중앙위에서 통과된 총선종합계획안은 총선거도를 '진보 대 보수'로 설정하고 지역주의 대결구도를 이념대결 구도로 대체시키기 위해 정책, 후보, 정치적 쟁점, 홍보 등 선거운동 전반에 걸쳐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총선의 기조는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평등과 자주'로 설정됐다. '평등과 자주'가 "민중의 당면 요구를 집약하고 있고 '진보 대 보수'라는 선거구도에 있어서도 기존 보수정치와의 차별을 분명히 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종합계획안은 2004년 총선 목표를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치적 기초 확보 △전국정당 실현 △15% 이상의 정당득표 △총 10석 이상 의석 확보로 설정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 진출을 통해 제3당의 위상을 확보하고, 민중투쟁의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기층 민중세력 결집 △전 지역 당 조직 건설, 동별 분회 조직 △5만 당원 확보와 당원 5배수 지지층 조직 △1백만 연고자 확보를 통해 전국정당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득표전략으로는 '대중투쟁을 매개로 한 계급투표전략과 표적집단 투표전략'이 제시됐다. 계급투표전략은 양대노총 조합원을 기본으로, 노동자·농민 출신 후보를 발굴하는 한편,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핵심표적집단, 주요표적집단, 부표적집단별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표적집단 투표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법 개정 후 1개월 안에 선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관리, 선출방식 등 세부사항을 당규로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에 의해 결정될 명부작성단위(전국, 권역별 등)와 선출단위, 여성후보 순위, 노동·농민 등 부문 할당 등의 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총선 재정 계획과 관련, 지역구 선거재정은 해당 선거를 책임지는 지구당이 모금·집행하고 비례대표 선거재정은 전국 또는 권역 명부에 상관없이 중앙당이 모금·집행하도록 했다. 또 정책위 주관 하에 총선공약개발단을 구성해 공약을 개발토록 하고 인터넷위원회 주관 하에 시도지부 및 당내 인터넷 활동가가 결합한 'e-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농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 통한 정치세력화 결정

1. 사건일자 20031104-20031104

2. 사건내용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4일 대전 평송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농민정치세력화를 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동당과 전농의 정치협상 합의문에 대한 별도의 추인 과정 없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마련된 농민 정치세력화 방침을 안으로 채택·의결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전농 8차 상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치세력화 방침 원안이 참석 대의원 5백34명 중 찬성 3백37표, 반대 1백30표로 통과됐다.

전농은 이번에 확정된 정치방침(표 참조)을 통해 "농민의 정치세력화는 농민의 손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정권을 세우자는 것"임을 밝히고,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농은 이를 위해 "농민 정치세력화를 하는데 있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에 대해 전농 관계자는 "민주노동당과 단일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농은 또 4번 "시군농민회의 조건과 역량을 감안해 참여토록 열어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농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준비가 된 지역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회원들 간의 토론과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농 규약에 따라 정당활동을 제약받았던 중앙위원급 이상의 임원들은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과 당 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전농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위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농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확대 발전을 위한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총선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농의 정치세력화 방침 의결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3일 중앙위원회와 11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당-전농 합의문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추인한 바 있다.

<전농 대의원대회 정치세력화 방침 결정사항>

① 농민의 정치세력화는 급진전되는 정세의 변화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다. 즉 농민의 손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정권을 세우자는 것이다.

② 전농은 농업농민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우리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과 이에 따른 활동이 보수정권을 바꾸고 우리정부를 세우는 한 방편임을 결의한다.

③ 전농은 민주노동당과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의 현실로 인정하고 농민정치세력화를 하는데 있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④ 이 결정은 시군농민회의 지역현실과 조건과 역량을 감안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근본적 정치개혁 서울지역 1천인 선언

1. 사건일자 20031106-20031106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지부장 김혜경)는 지난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서울민중연대(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바라는 서울지역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자금 공개와 부패정치인 구속 등을 요구했다. 김혜경 지부장과 서울지역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해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장현 전국빈민연합 지역장 등이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선 현재와 같은 금권정치구조를 타파해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정치자금 내역 공개와 비리정치인 구속 수사, 국회 정치개혁특위 해산,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3선연임 아웃제'를 포함하는 정치개혁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1. 사건일자 20031111-20031111

2. 사건내용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선 연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3선연임 아웃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혁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1대1로 하고, 진성당원제와 소액다수당비제 전면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권 대표는 회견 뒤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정치개혁안'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3. 참고자료

- □□한겨레□□ 200년 11월 12일자

민주노동당,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20대 정치개혁안 요구

1. 사건일자 20031117-20031117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투표식 대선거구제 실시, 진성당원제와 소액다수당비제의 전면 도입, 국회의원 3선 연임 아웃제 도입 등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20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권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만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안을 전달했다.

이어 13일에는 노회찬 사무총장이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와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20대 정치개혁안은 정치개혁의 추진기구로 제정당과 제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 법제화,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국민소환제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 소수 정치엘리트의 정치 독점과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임으로 3선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3선 연임 아웃제 도입도 눈에 띈다.

선거제도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의원정수를 3백명선으로 늘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당투표식 대선거구제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안 발표에 이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지난 13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14일 한나라당이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치협상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근본적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근조만장시위 출정식을 갖고 보수정치 혁파와 근본적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만장시위에 돌입한다. 20일에는 전국의 지구당이 동시다발로 근조만장시위를 펼친다.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동당 20대 정치개혁안>

▲정치개혁의 추진 기구 및 정치인 개혁

1. 국회 정개특위의 해산과 '범국민정치개혁특위'의 법제화
2.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3. 부정부패 비리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당원소환제 실시
4. 국회의원 3선 연임 아웃제(피선거권 제한) 도입

▲고비용 선거제도 개혁

5.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정당투표식 대선거구제'실시를 통한 '정책선거' 유도
6. 의원정수 300명선, 지역구 대 비례대표비율 1:1, 선거구인구편차 1:2
7. 고액의 선거기탁금제 전면 폐지
8. 완전선거공영제의 도입

▲고비용 정당제도 개혁

9. 진성당원제와 소액다수당비제의 전면 도입을 통한 지구당의 활성화
10. 비례대표 여성 50% 이상 할당과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후보 및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당직후보 당원 직선 총투표 실시

▲고비용 정치자금제도 개혁

11.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폐지 및 정당득표율을 연계한 국고보조금제(매칭펀드제 도입)
12. 법인세액 1% 기탁금의무화 반대와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금지
13.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 지출시 수표나 카드 사용 의무화
14. 연간 1백만원 이상 1회 2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제 도입 및 수입내역 전면 공개
15. 정치자금법 위반자 처벌강화와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

▲기득권 정치 개혁

16. 현행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소속의원 5석 이상으로 축소
17. 후보자 기호추첨제 실시

▲참정권 확대 및 각종 정치활동 제한 전면 폐지

18. 교사, 공무원 정당가입 등 노동자 정치권리 완전보장
19.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운동제한의 폐지
20. 선거연령 18세 보장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 당, 중앙선거대책위 구성, 전당적 총선체제 전환

1. 사건일자 20031218-2003121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내년 2월 중앙선거운동본부 구성 전까지 총선준비사업을 진두지휘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을 총선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또 부패한 보수정치 세력과 맞서 '부패 보수4당 해체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거대책위의 사령탑을 맡을 선대위원장에는 천영세 부대표가, 선대본부장에는 노회찬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이날 선대위 구성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내년 1월초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이르기까지 전당적인 총선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앙선대위는 △각급 선대위 구축을 통한 전당적 선거체제로의 전환 △당원 배가사업 및 핵심 지지층 조직 등 당 내연과 외연 확대 △세부 전략계획 및 각 단위별 사업계획 수립과 전술 집행구조의 안착화 △대중투쟁과의 결합 및 당 지지도 제고 사업 △당 이미지 통합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현 정국과 관련, △부패정치 청산 △이라크 파병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을 중심으로 '부패 보수 4당 해체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22일 주요 단체에 '부패 보수4당 해체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하고 이날부터 27일까지 각 지구당별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지구당사 앞에서 1인 만장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이라크 파병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 보수4당 해체운동'을 선포할 계획이다. 또한 4개 정당,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패 보수4당 해체'를 촉구하는 글을 동시에 올리는 사이버 시위도 전개된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 관련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 인선은 대표단에 위임했다. 12월말까지 구성이 완료될 예정인 중앙선관위는 내년 1월에 개최될 6차 중앙위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일정과 투표방식을 결정하면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대선 특별당비 미납분 처리와 관련, 이날 중앙위에서는 미납 지구당에 대해 2004년 총선 이후 납부계획을 재조정해서 중앙위에 보고하고 내년 연말까지 완납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강태운 고문 구속과 관련해 발표된 성명문에 대해 일부 중앙위원이 대표단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 권영길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성명문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혔다면 유감"이라며 "다만 앞으로도 당내에서 북측 인사와 교류·접촉하는 데 있어 당의 공식 창구를 거쳐야 한다. 개별적인 접촉은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농 1백 여명의 집단 입당자 선언대회

1. 사건일자 20031223-20031223

2. 사건내용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결의한 이후 본격적인 정치사업에 돌입한다.

전농은 오는 23일(예정) 총연맹 및 도연맹의 전직 의장단과 시군 농민회 중 결의된 지역의 회장 및 주요간부, 출마예정지역 후보 등을 중심으로 1백명의 '집단 입당자 선언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농은 1차 지지선언 이후 내년 초 각 지역의 결의를 모아 대규모 2차 지지선언도 기획하고 있다.

또 오는 1월 6~7일에는 전농 활동가와 농민 당원들에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교를 개설해서 △정치방침에 따른 활동가 교육 △대중조직인 농민회와 정당활동의 관계정립 △정치위원회

확대 재편에 따른 사업주체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한시적 조직이었던 전농 정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도·시·군 정치위원회를 기본조직으로 민주노동당과 유기적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홍식 전농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한 이후 내년 총선사업의 힘찬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이번 중앙의 지지선언은 내년 초 전농 각 시군구 농민회의 정치방침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17대 총선을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1. 사건일자 20040105-2004010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총선 선대위 발족 - 진보적 정책·반부패 이슈화

“진보 대 보수’, ‘부패 대 반부패’의 정치대결구도로 물고가 15석 이상 당선시키겠다.”민주노동당은 5일 권영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대책위원회(위원장 천영세)를 발족시켰다. 선대본부장에는 노회찬 사무총장, 총선공약개발단장에는 정영태 인하대 교수가 임명됐다.

민노당은 올해 총선에서 ‘평등과 자주’로 요약되는 진보적 정책 및 반부패를 주요 이슈로 내걸고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투표’를 최대한 이끌어내 15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민노당은 이에따라 의료·교육·주택의 공공성 확보, 미국중심의 패권주의 탈피,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등 진보적 공약을 내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100여명의 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총선공약개발단을 선대위 산하에 설치, 핵심 정책공약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다.

5일 현재 권영길 후보(창원을)등 전국 125개 지구당에서 총 61명의 총선후보를 선출한 민노당은 최종적으로 전국 150개 이상 지역에서 후보를 낼 방침이다. 민노당은 이날 ▲경남 창원을(권영길대표) ▲서울 노원갑(이상현 대변인) ▲울산북구(조승수 전 북구청장) ▲울산 동구(김창현 전 동구청장) ▲성남중원(정형주 성남실업자대책위원장) 등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1명의 베스트후보를 발표했다.

3. 참고자료

- □□문화일보□□ 2004년 1월 5일자

전여농,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1. 사건일자 20040106-20040106

2. 사건내용

작년 전농의 민주노동당 조직적 가입에 이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도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전여농은 6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10기 2차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84명과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여, 오는 17대 총선에서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여농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논의도 치열하게 진행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외에도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개안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당면한 정세속에서 역사적 결단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에 많은 대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여농은 민주노동당의 확대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인사이드에서는 김미영 정책위원장과 여용옥 사무국장이 이임하고, 최옥주 조직교육위원장이 새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전여농은 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투쟁에 총력 집중하기로 했으며, 북녘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신년 기자회견: 교섭단체 구성, 한국사회개혁 대장정 선언

1. 사건일자 20040127-20040127

2. 사건내용

권영길 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17대 총선은 IMF 이후 고통에 빠진 국민을 뒤로하고 자기들끼리 당리당략에 치우쳐 4년을 보낸 16대 국회에 대한 엄정한 심판의 장"이라고 선언하고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 15% 득표를 통해 총 15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이 힘을 바탕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한국사회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수3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벌이고 있는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각당 대표 TV토론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TV토론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당리당략적 정개특위 논의를 중단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제안 수용 △선거자금 1억원 미만 사용운동 △모든 선거자금에 대한 시민단체의 회계감사 실시 △불법대선자금으로 밝혀진 부분만큼 국고보조금 포기 등을 제안했다.

권영길 대표는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제일의 문제는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진 빈부격차"라고 강조하고 "재벌들의 돈벌이만을 위하는 노무현 정부 식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교육은 사회진출의 공평한 기회가 아니라, 부의 세습통로로 전락했다"며 "서울대 해체, 대학 국공립화와 같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대표는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인재로 사람이 죽고, 사스 조류독감 같은 새로운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식탁의 먹거리도 믿을 수 없는 위험사회"라고 진단

하고 "민주노동당은 자유화라는 미명 하에 폐지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되살리고,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안전 관련 인력을 재증원하며, 재해예방·질병과 식품 관리를 일원화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남북미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최근 한미간 합의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4주년 기념행사

1. 사건일자 20040130-20040130

2. 사건내용

올 4월 총선에서 원내진출이 유력시 되는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30일 창당 4주년을 맞아 중앙당사에서 기념식을 갖고 “꾸준한 지지도 상승과 4만 당원의 힘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기염을 토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4주년 기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서 함께 투쟁했고 그 결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 낮은 활동비 속에서도 헌신해 온 당 상근 간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올 4월 총선과 관련 “씩어있는 물통에 새 물을 넣어도 그 물은 곧 썩기 마련”이라며 “보수정치관 전체를 바꾸고 썩지 않을 새 물통을 만드는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창당, 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자치제 선거와 대선 등을 치르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2002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는 두 명의 기초단체장과 9명의 광역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면서 제3당으로 떠올랐으며 그 해 대선에서는 권영길 대표가 3자 구도를 형성하면서 100만표에 육박하는 득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출범 당시 1만1,175명이던 당원은 지난달 2일 현재 4만80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진성당원제도, 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상향식 공천제를 안착시키면서 새로운 정당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각 지구당에서 후보선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제주시지구당이 선출대회를 갖고 당원투표에 의해 김효상 지구당 위원장을 제주시 지역구 후보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오리엔탈호텔노조 위원장이자 민간서비스연맹 정치위원장이 다

민주노동당, 정치관계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회 앞 노숙농성

(200402DD-200402DD)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농, 민주노동당 총선후보 5명 사면복권 촉구

1. 사건일자 20040215-2004021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6일 오전 청와대 근처 정부합동청사 문서보관소 앞에서 민주노동당 총선 출마자 5명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3개 단체는 “민주노동당 강병기, 김혜경, 김윤환, 박용진, 손석형 등 5명의 사면복권이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그러나 이들 5명은 다른 당 정치인들의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이나 부도덕한 범죄행위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단순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이들 5명이 출마하려는 창원갑, 진주, 서울 강북구 등은 열린우리당의 전략지역구와 겹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복권을 불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특사에 민주노동당 5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강경한 대야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전농 문경 식의장,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등 모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후 강북을지구당에서 1인 시위에 가진데 이어 17일에는 권영길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파병 찬성의원 ICC 전범 제소” 결의

1. 사건일자 20040215-20040215

2. 사건내용

국회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전원과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전원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범으로 제소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5일 “한국이 이라크의 공식적 요청 또는 유엔의 무력사용 결의안 등에 기초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이라크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에 해당된다”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을 둔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을 통해 다음달 초순께 파병동의안 찬성의원 전원과 국무위원 전원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비례대표 전환’과 ‘총선출마 예정자 5명의 사면복권’ 요구하며 국회앞 철야농성과 1인 시위

1. 사건일자 20040217-2004021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이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비례대표 전환’과 ‘총선출마 예정자 5인 사면복권’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농성단 50여명은 17일 오후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18일 오전 11시 중앙당사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함께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비례대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민주노동당 농성단 50여명은 17일 오후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은 정치개혁특위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된 19일 오전까지 진행된다. 권영길 대표도 1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은 19일 오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26석의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이 합의된 것과 관련, “여성전용선거구는 지역분할구조 온존, 위헌논란, 대규모 사표발생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진정한 여성정치세력화를 원한다면 현재 46석인 비례대표에 새로 26석을 합쳐 72석으로 늘리고 그 2/3를 여성에게 할당하라”고 촉구했다.

당은 이어 “비례대표 의석 축소, 노조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 정치관계법 개악, 출마예정자 5인에 대한 청와대 사면복권 불가 방침은 민주노동당 죽이기”라며 “당력을 집중해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전농, 민주노총과 정책협의회 개최

1. 사건일자 20040219-2004021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전농 등 주요 계급대중조직들과 잇따라 정례협의회를 갖고 총선 공동대응을 모색한다. 민주노동당 중앙선대위는 오는 19일 권영길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문경식 의장 등 전농 지도부와 첫 번째 정례협의회를 갖는 데 이어 20일에는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정례협의회를 갖는다. 지난달 새 지도부를 선출한 양대 조직과의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이번 정례협의회를 통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농 등 3조직은 각 조직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정례협의회에서는 민주노총과 전농이 총선 관련 사업현황을 설명하며 민주노동당은 당의 총선 세부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황이민 당 중앙선대본 부분부장은 "정례협의회 이후 중앙선대위 내부 논의를 거쳐 3월중 주요 대중조직과 공동선거운동본부 구성해 진보진영 총선 공동대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
(20040220-20040220)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 4.15총선 공조를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에 합의

1. 사건일자 20040220-20040220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올해 처음 정례협의회를 갖고 4.15 총선 공조를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과 민주노총은 이수호 위원장이 본부장으로 참여하는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에 대해 논의한 뒤 이후 민주노총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은 공동선거대책본부가 구성되면 이용식 정치위원장, 오동진 정치국장, 양태조 정치국장 등 3명을 당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표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부, 선관위, 정개특위를 압박해야 한다”며 “또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점에 대한 홍보와 당원으로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5~10분 단위 홍보 테이프 제작을 검토해 달라”며 “민주노총도 조직을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총선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개협 5당 대표 긴급회담’ 제의

1. 사건일자 20040225-20040225

2. 사건내용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만 14석 추가해 287석으로 늘리자는 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당 대표의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정기관계법 국회 처리가 또다시 밀실야합으로 가고 있다”며 “보수 정치권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배제한 채 비례대표를 지역구 확대의 흥정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특히 기성보수 정당은 여성전용선거구제 운운하지 말고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진출을 보장하라는 여성계 및 사회각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며 “1차 정개특위와 스스로 구성한 범개협의 정치개혁안을 뒤엎은 2차 정개특위, 그리고 원내대표회담으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보수정권이 더 이상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합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원내에서 이뤄지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시 중지하고 범개협과 5당 대표 회담을 긴급 소집할 것을 각 당 대표와 범개협에 제안한다”며 “그 틀 안에서 각 당의 입장을 제출하고 범개협은 이를 토대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수용하는 최선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 제안을 25일 오후 열린 정치개혁연대, 총선여성연대 등 944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에서 제출하고, 국회 정치관계법 처리에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등록 마감

1. 사건일자 20040227-20040301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2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4일간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일반명부 11명, 여성명부 10명 등 총 21명이 등록했다.

▲ 등록후보는 누구 = 일반명부는 천영세(62. 부대표), 노회찬(49. 당 사무총장), 정태홍(33. 반미넷 대표), 김석진(44.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병일(48.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남만진(47.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겸 정치위원장), 이문옥(66. 당 고문 겸 부패추방운동본부장), 이선근(51. 당 민생보호단장), 장봉주(45. 전노련 부의장), 강기갑(52. 전 농 부의장), 단병호(56. 전 민주노총 위원장)(기호순) 등이다.

여성명부는 김수정(35. 변호사. 당 인권위원), 현애자(4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회장), 김미경(33.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총청지회 교육선전부장), 심상정(46. 당 중앙위원, 전 금속노조 사무처장), 이영순(43. 울산지부 여성위원장), 송경아(35. 소설가), 이주희(26.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4학년), 최순영(52. 당 부대표), 석윤수경(37. 당 중앙위원), 이정미(39. 당 소파개정운동본부장)(기호순) 등이다.

▲ 선거운동 열기 = 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전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2일 현재 각 후보자들은 여의도 당사를 방문, 당원에게 선보일 3분 동영상을 찍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또 후보자들은 각각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민주노동당 선거 사이트(www.pangari.net)에 각자의 이력과 출사표를 던지며 적극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후보자들은 노동계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 법조계, 학생, 시민사회단체, 당직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각 부문별로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 등을 각각 기조로 내세우며 적극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우선 부문별 불균형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는 상태다. 사회의 소외세력인 장애인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못한 데다, 환경, 학계 등에서도 후보를 내지 못하는 등 부문별 후보를 골고루 내지 못한 것. 이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태다.

▲ 이후 일정 = 현재 민주노동당은 이번 비례대표 선거를 국민들에게 적극 선전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당원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로드쇼 방식을 활용해 호남권·광주(6일), 충청·대전권(7일), 대구(8일), 부산(9일), 울산(10일), 인천(11일), 서울(14일) 등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 정책기행, 지역별 유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는 당원이 직접 지구당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며, 인터넷 투표 비율이 60~70% 가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지역별로 개표, 최종 인터넷 투표 결과를 합산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원은 5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나, 투표권을 가진 당원(최근 3개월 연속 당비를 낸 당원)은 2만3,000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발표

1. 사건일자 20040303-20040303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이 △조세혁명, 복지혁명, 완전고용 실현 △자주화,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 삶의 실현을 목표로 한 17대 총선 핵심공약을 확정했다. 중앙선대위 산하 총선공약개발단(단장 정영태 인하대 교수)은 지난 3일 총괄조정팀 회의를 갖고 각 분야별로 제시된 총선공약 가운데 핵심공약 30개를 선정하고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조세혁명, 복지혁명, 완전고용 실현

민주노동당은 부유세·주식양도소득세 도입 및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세금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사회복지에 투자해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고용 사회 실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 투자 확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복지·환경 분야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보수정당들처럼 "일자리 몇만개 만들기"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로를 명시하며 고용정책에 있어 뚜렷한 차별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확충'과 '복지분야 신규고용 확대'를 연결시켜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의 선순환 고리를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재분배 정책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개별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힘든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R&D센터'를 주요 산업지역에 설치, 중소기업의 핵심 부품소재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4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채무변제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노동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의 임금차별을 없애는 것과 △1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자동 전환 △과건법 철폐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가압류 금지 등이 제시됐다.

자주화,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남북한의 주도성을 강조한 민주노동당의 기본입장은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강조됐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미간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닦고,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부대를 즉각 귀환시키고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불체포특권 등 정치인들의 특권 제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교사, 공무원, 농수축협,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이 제시됐다.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핵심공약에서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아토피, 천식,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활환경안전법을 제정하고 산업단지 및 대도시지역 주민들이 겪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와 공공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도 약속했다.

17대 총선 핵심공약에는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28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차별금지특별법 제정 △연 3일의 '문화휴가' 제도 도입 △유급 출산휴가 1백일로 확대 △서울대 해체와 국공립대 통합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및 지문날인제 폐지 등이 담겼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청문회

1. 사건일자 20040308-2004030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이 9~14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8~9일 이틀간 비례대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출마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서 당을 대표하는 후보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의원 후보로서 기본적인 정책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선 8일 오후 5시부터 일반명부 후보 11명, 이튿날인 9일 오후 6시부터 여성명부 9명을 대상으로 패널리 각각 한 후보당 20여분씩 질문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모두 인터넷 생중계 된다.

사회는 김윤철 민주노동당 정책상임위원이 보며, 패널은 △통일외교 - 정세진 중앙대 교수(정치학) △정치 -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정치학), 정상호 한양대 교수(정치학) △노동 -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사회학부) △사회,인권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문광명 변호사 △환경,농업 - 우석훈 녹색정치준비모임 운영

위원 △여성 -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정치학) △교육 -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문화·예술 - 안성배 민예총 정책팀장 등이다.

한편 여성명부 중 김수정 후보에 이어 최근 석윤수경 후보도 사퇴해 여성후보는 모두 9명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후보 11명 가운데 9명만이 순위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민주노동당 38개 핵심 선거공약 발표

1. 사건일자 20040311-20040311

2. 사건내용

지난 9일 한나라당-민주당 공조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휩쓸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7대 총선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11일 핵심공약 발표 배경에 대해 “탄핵정국으로 어느 정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파탄난 민생을 외면하는 지금,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등-자주-평화 철학 바탕한 38개 민생공약

민주노동당은 평등-자주-평화의 창당 정신에 맞춰 오는 17대 총선 공약을 마련하면서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수호-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등을 핵심 3대 목표로 정했다.

천영세 부대표는 공약 발표에 앞서 “민노당의 17대 공약은 기성정당들의 ‘권력놀이’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은 ‘위험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공약의 성격을 밝혔다.

첫번째 목표인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투자확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복지-환경-문화 분야에서의 신규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정책 실현을 위해 직접세 강화, 부유세 도입 등 획기적인 세제개혁(5개년 계획)과 연 50조원이나 드는 신무기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을 통해 연 1백7조1천9백87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진 법률지원단장은 지나친 세수확대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OECD 30개 국가중 사회-복지 관련 조세부담률은 29위에 불과하다. 서구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설 때도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남북미평화협정체결”, “친환경대안에너지체제로 변환”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2012년 원내 제1당을 목표로 하여,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완전철수시킬 방침이다. 파병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침략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함에도, 허구적 국익논리를 주장하며 위헌적인 파병을 주도한 정치인들을 전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남북정책과 관련해서, “노무현식 ‘신상호주의’를 배경, 남북미평화협정체결, 남북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남북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식량주권 수호-환경친화적 삶’ 실현을 위해서,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농가부채 탕감, 9대 직접지불제 즉각 도입, 핵발전소 건설 중단, 대안에너지 체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3. 참고자료

- □□머니투데이□□ 2004년 3월 11일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확정

1. 사건일자 20040315-2004031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5일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비례대표 후보 18명을 확정, 발표했다. 민노당은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동안 당원직접투표를 통해 이날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했다. 투표결과 홀수기호가 배정된 여성부문에서는 심상정 전 금속연맹 사무처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기호 1번을 배정받았으며 단 전 위원장은 2번으로 확정됐다. 3번은 이영순 전 울산 동구청장, 4번은 천영세 당 부대표, 5번은 최순영 당 부대표, 6번은 강기갑 전농 부의장, 7번 현애자 남제주 농민회장, 8번 노회찬 당 사무총장, 9번 이주희 서울대 4학년생, 10번 이문옥 당 고문이 각각 배정받았다.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1인2표제의 정당투표를 통해 최소 10석의 비례대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참고자료

- □□서울경제□□ 2004년 3월 15일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법소원 청구

1. 사건일자 20040318-20040318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은 18일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비례대표후보 선거운동 금지 △예비후보자와 현역국회의원의 차별 △25세 피선거권 규정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인터넷실명제 △선거운동원 3인 이상의 인사 금지 등 불합리한 선거운동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은 “1인 2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후보의 독자적 선거운동이 필요한데도, 비례대표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금지, 선거공보 불허용, 길거리유세 금지 등이 결정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기간이 14일에 불과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후원회의 경우도 선거일 전 180일 이전부터 설치가 가능한 반면, 국회의원은 매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은 평등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선거운동원이 3명 이상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도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빈련, 전농, 민주노동당 <공동선거운동본부> 발족식

1. 사건일자 20040330-20040330

2. 사건내용

2004년 3월 30일, 민주노총, 전농-전여농, 전빈련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노동당 공동선거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어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 문경식 전농의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등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 전농-전여농, 전빈련은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빈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기 때문에 공동선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을 세워야 할 때”라며, “각 단체가 포괄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유권자들로부터 4백만에 이르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이끌어 내어 민주노동당이 최소 15석 이상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총선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것을 두고 보수세력이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곳곳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이제 농민이 농촌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주체가 되겠다고 결의하고 민주노동당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결의한 작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언급하며, “농촌지역에서 후보도 내고, 정당투표등에 대한 선거전술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투표전략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금순 전여농 의장은 “가장 소외된 일하는 농촌의 여성이, 여성농민의 정치세력화,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인지를 민주노동당과 함께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노총 250만명, 전농-전여농 100만명, 빈민 50만명 등 총 400만명을 목표로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민중의 소리)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지지 공식선언

1. 사건일자 20040330-20040330

2. 사건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총선연대 낙선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연대투쟁과 정치후원금모금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낙선운동을 벌인 전례가 없는 데다 개정 선거법이 노조를 포함한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과문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구체적 투표 방침과 관련해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서한 대상 발송 △당선 가능한 민노당 후보 중심 지지 운동 전개 △ 개혁 진보 성향 후보의 지역단위별 지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 엄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이날 4.15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글에 대해 교육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온 것과 관련, 사실상 '선거법위반 결정'을 내렸다.

3.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04년 3월 30일자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1. 사건일자 20040401-20040401

2. 사건내용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이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도 공개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진보야당 지지'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국대, 광운대, 항공대, 서울시립대 등 서울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4월 1일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총련 의장 이경수(단국대 총학생회장)씨는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2일에 맞춰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은 지역주의나 정경유착,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우며", "부유세 도입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가능케 하는 사회개혁, 이라크 파병을 철회시켜 미국에 자주적인 나라 만들기 등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통해 "대학문제, 교육문제를 의제화하고 학우들과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특히, 서총련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 총 집중하여 대학 내 민주노동당 지지율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총련은 이와 더불어 학교별 실정에 맞게 각 지역구 선거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3. 참고자료

- 민중의 소리

법조인 89명, 민주노동당지지 선언

1. 사건일자 20040407-20040407

2. 사건내용

법조인 89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이덕우(당 인권위원회),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고재환(금속산업연맹), 김수정 등 변호사 89명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천영세 선대위원장은 "변호사 여러분의 믿음대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올곧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총선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천영세 선대위원장은 89명의 변호사를 대표해 김수정 변호사에게 총선홍보대사 임명장을 줬다. 김 변호사는 현역병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병역을 거부했던 강철민씨를 변호하기도 한 인권변호사다.

변호사들은 지지선언후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재환 변호사는 "정부는 공무원 노조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처럼 매도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위치추적을 하는 등 간첩작전을 방불케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위원장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일뿐이며, 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공무원들이 노동자인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건 정당하고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7일 오전 11시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이 사회의 진보와 인권보장에 헌신할 것임을 믿는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정당한 임금을 못받는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서고 빈부격차로 단전조치된 가구가 60만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국민의 아픔은 정치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파업현장에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되고 대책없는 FTA 강행으로 농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인 226명,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1. 사건일자 20040407-20040407

2. 사건내용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과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 영화배우 오지혜씨 등 영화인 226명이 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처럼 영화계 현안이 아닌 문제로, 100명이 넘는 영화인들이 모여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선언에서 유세지원까지

김광수 청년필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박찬욱 등 두 감독과 '별이 날다'의 민병훈 감독과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 김영덕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 '마리 이야기'의 이성강 감독, 영화배우 오지혜씨 등 20여명의 영화인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노회찬 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1번인 심상정, 2번인 단병호 후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올 예정이었던 배우 문소리, 정찬씨와 '낮은 목소리' 변영주 감독은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열린우리당이지만 지금의 지지율은 온전히 그들의 몫은 아니다"라며 "더이상 국회가 국민위에 존재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국회의원도 없고,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한 장면을 들어 용공·좌익을 미화했다고 떠들어대는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이 이어지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다 나은 삶의 환경, 남녀의 존엄이 똑같이 존중되는 사회를 가능케할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는 "10여일 전부터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전화 연락을 돌렸는데, 명단에서 빠졌다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 보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바라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은 "97년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뒤부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왔다"면서 "존경하던 분들의 원내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욱 감독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 서명에 참여하게 됐다"며 "오랜 충무로 생활을 통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줄을 서기로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영화배우 오지혜씨는 "3달 전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새내기 당원"이라면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괴물처럼 큰 수구세력에게 자꾸만 양보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건강하고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당원이 된 이유를 밝혔다.

또 "인터넷으로 조용히 입당했는데 영화배우라는 이유로 주목받으니 쑥스럽다"며 "4살짜리

아기를 키우는 생활인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노회찬 선거대책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줘서 고맙고, 우리 영화인들의 예술철학을 확인한 자리여서 자랑스럽다"며 "1년에 한번씩 만나는 견우직녀가 아니라 1년 열두달 만나는 연관성 높은 관계가 되자"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운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영화는 사치였지만 지금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낮에 올드보이를 보러갈 정도로 영화가 진보의 큰 울타리 안에서 빠질 수 없게 됐다"며 "동지들이 극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민주노동당도 정치에서 확실히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말했다.

단병호 후보는 "영화인들의 지지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수구세력이 이제는 대안 정치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 정당비례대표 15% 득표, 15석 획득의 목표는 무난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후 박찬욱감독은 226명의 영화인을 대표해서 노회찬 본부장으로 부터 '총선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지지를 밝힌 영화인중 일부는 자원해서 민주노동당 유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기민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협의해 창원, 거제와 울산 두 곳 등 상징적인 네 곳의 선거구에 대해 유세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우에서 감독, 제작사 관계자까지 참여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는 이외에도 배우 추상미·오윤홍씨, 평론가 정성일·김소영·이명인씨, '번지점프를 하다' 김대승 감독, '해적 디스코왕이 되다' 김동원 감독, '여고괴담두번째이야기' 김태용 감독, '와니와 준하' 김용균 감독, '인어공주' 박홍식 감독, '버스정류장' 이미연 감독, '품행제로' 조근식 감독, '정글주소' 조민호 감독, '킬리만자로' 오승욱 감독 등이 서명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의 신다영 제작실장과 시티극장 심희장 기획실장, 명필름 양동명 배급실장과 여성영화인모임 양정화 사무차장, 동숭아트센터 김난숙 영상사업팀장과 전국시네마테크협의회 김노경 사무국장, 한국독립영화협회 이마리오 운영위원장, 한국독립영화협회 황철민 이사장,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최영재 사무차장, 서울독립영화제 조영각 집행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영화인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문

4월 15일, 17대 총선은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특별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탄핵정국의 후폭풍으로 야기된 수구세력의 몰락이라는 예측 가능한 결과와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의 집단적인 원내진출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우리는 이전까지의 선거에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87년 이후의 모든 선거는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으며, 따라서 비판적 지지라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 땅의 민중이 수구세력과의 지난한 싸움 속에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번번히 소위 민주세력, 개혁세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며, 기회주의적일 뿐입니다. 들끓는 국내외 여론을 외면한 채 앞장서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수구세력과의 대립이 격렬해질 때만 그들 민주, 개혁세력은 민주적이며 개혁적입니다. 이제

는 지리멸렬해진 민주당 조차도 수구세력과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3월12일,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던 국회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우던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분명 민주적이며 개혁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수 십 년간 나라를 망쳐 놓고도 한치의 기득권 조차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거대한 수구세력에 맞서다 개 끌리듯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오는 처참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뱃지를 집어던지며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은 짓밟힌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였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 후 역풍이 불고 지지도가 급상승하자 그들은 그나마의 민주적, 개혁적인 측면 마저 집어던졌습니다. 자신들 조차 주저하던 반 개혁적이고 반 민주적인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천의 원칙도 사라졌습니다. 의원직 총 사퇴서도 슬며시 철회했습니다. 불과 얼마전 자신들이 이야기한 원칙을 모조리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더 이상 격렬하게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워 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물리는 지지율은 온전히 그들의 몫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스스로 일궈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구에서 합리적 보수세력까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은 이 땅에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은 국회가 국민 위에 존재한다고 방송카메라에 대고 당당히 말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면 합니다. 탄핵을 이해 못하는 국민은 이해할 필요 없다고, 그런 국민이 한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풍토가 이제는 제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한 장면을 들어 용공, 좌익을 미화했다고 자기 집도 아니고 국회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이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원칙을 뒤집지 않고 시종일관 개혁적이며, 철저히 민주적인 정당을 원합니다.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이룩할 수 있는 정당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을 원합니다. 남녀 모든 인간의 존엄이 똑같이 존중되는 사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정당이 민주노동당 뿐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도입된 1인 2표 정당명부제는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가능케 할 마법입니다. 정당명부제로 인해 비로서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수구 정당들의 지지율 폭락은 더 이상 이런 저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설렘과 기대를 갖고 4월15일 선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과가 이 땅의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2004년 4월 7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영화인 일동)

여성노동자 3,500여명,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1. 사건일자 20040408-20040408

2. 사건내용

장애인, 통일운동원로, 문학인, 법조인, 영화인, 보건의료인에 이어 8일 오전 사무·제조·의료·공공·서비스·비정규 여성노동자들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했다. 이 지지선언에는 각 분야의 여성노동자 3,47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으로써 차별받고,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당하며,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의 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으며, 정치에서도 남편을 따라 투표하거나, 돈선거에만 쫓아다니는 ‘아줌마 부대’로 천대를 당해왔”지만, 이제 “여성노동자들이 진보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뜻에서 “▲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 채용, 임금, 승진에서 성차별 없는 사회를, ▲ 도급계약 없애고 직접고용을, ▲ 노동자·서민에게 공공의료 확대를, ▲ 비정규여성노동자 차별철폐를, ▲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를, ▲임신, 출산으로 해고없는 사회를, ▲ 영유아 교육·보육은 사회가 책임을”이라는 8대요구를 내걸고, 이를 실현시킬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1인 2투표라는 정당명부 비례투표를 주변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옆집 앞집 아줌마, 아이 친구 엄마들, 언니, 동생들에게도 적극 알려, 노동자, 서민, 빈민,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당, 여성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구별 선거지원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알리기에 마지막 남은 선거기간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각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해 자신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 경희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주연 씨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는 젊은 부모들을 보면서 전 국민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 마이크로(필기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여성노동자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당은 민주노동당 뿐입니다.”

▲ 서울지하철 차량지부에서 근무하시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이덕순 씨

“저도 지하철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10년을 일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도급계약제도 개선, 근로자과건법 폐지, 비정규직 4대보험 실시,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꼭 실현시켜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물론, 저희들이 지하철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한성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캐디) 박문희 씨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하면서 받는 제도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경기보조원입니다.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고용안정과 재해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정당, 경기보조원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라 확신합니다”

▲ 곧모닝 신한증권에서 근무하는 백은순 씨

“증권회사에도 여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정당이, 노동자가 직접 만든 민주노동당 외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냐구요? 저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지지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인 심상정 후보와 최순영 후보가 참석했고, 여성노동자들은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차별철폐’가 적힌 몸벽보를 전달했다.

교수 323인 학생대표자 314인,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1. 사건일자 20040409-20040409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에 대한 각계의 지지선언이 매일같이 발표되는 가운데, 9일에는 대학가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오전에는 교수 323인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고, ‘교수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0년에 걸친 한국정치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은 진보정당만이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참신하고 양심적인 진보세력이 정치를 주도할 때 비로소 재벌 체제와 반민주적 악행과 폐습을 척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바로 “민주노동당이 우리 국민대중이 한결같이 희망해 온,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정당이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어두운 정치를 척결하고 주권국민의 의사와 권익을 존중하고 민족의 자존과 자주성을 살리는 시대적 개혁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뒷날 우리 역사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로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이끌어낸 진보의 새로운 기원으로 기록하도록 하자”고 결의하고, “우리 교수들은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힘있게 진출하여, 진보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이화영 (서일대 중국어과) 교수들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수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하고, 정책개발과 향후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련 의장 등 대학생 대표자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한편, 오후에는 대학생들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했다.

백중호 한총련 의장(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윤이서운 경희대 총학생회장, 윤민섭 강총련 의장(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과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전진하는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 새정치 실현의 ‘희망의 씨앗’이자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책임질 ‘현실성 있는 미래의 대안’이다”고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전국의 대학생 대표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실현과 4·15 총선승리를 위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대학생후보 이주희 학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온 국민과 대학생들을 향해 1인 2표 정당 명부제를 알리고 12번 민주노동당에 자신 있게 자신의 한 표를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며, 지역구에서도 민주노동

당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실천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지선언에는 서울지역 22개 학교 105명, 인천·경기지역 15개 학교 52명, 강원지역 3개 학교 7명, 대전·충청지역 5개 학교 9명, 대구·경북지역 6개 학교 28명, 부산·울산·경남지역 12개 학교 63명, 광주·전남지역 6개 학교 32명, 전북지역 2개 학교 2명, 기타 물갈이대학생 연대,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등 2개 단체에서 8명 등 총 73개 학교와 단체에서 314명의 대학생 대표자들이 동참했다.

윤이서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선언에 동참한 대표자 중 대다수가 단식, 삭발, 점거 등 학내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어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라며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황이민 선대본부장은 "최초로 대학생 의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실업, 등록금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성적소수자들,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1. 사건일자 20040412-20040412

2. 사건내용

동성애자인권연대, 붉은이반 등 동성애자 관련 단체나 카페의 회원들은 12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적 소수자 모임을 갖고 있고,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당 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들의 지지선언문 전문

2004년 4월 15일!

이날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모든 정치적 소수자의 정당 민주노동당 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날에 즈음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한명으로서 함께하고자 이 선언을 준비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적소수자 인권보호를 당 강령으로 명시한 진보야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총선공약에는 법률상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 동성애자 파트너쉽제도 인정, HIV양성·AIDS환자 인권보호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에서 성소수자 모임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보수정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민주노동당이 걸어온 길, 나아갈 방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이 차별받는 소수자들과 함께 어깨걸고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정당입니다. 저절로 극복되지 않을 차별을 철폐해 나갈 진실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침묵은 죽음이고, 행동만이 삶이다" (Silence is death, Action is life)라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오래된 슬로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면 행복한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 기호는 12번입니다.

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 소수자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친구. 우리 삶의 희망.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도 될 세상을 위해 정당투표 12번 민주노동당을 키웁시다. 또한 전국 120여곳에 출마한 모든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줍시다.

2004년 4월 12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 소수자들 올림.

<지지선언자중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은 괄호 안에 본명이, 아니신 분들은 닉네임만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명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가슴 깊이 희망합니다.>

*하이텔 "또 하나의 사랑": 홍기훈, 노경식.

*g440: 대표시삽(공수).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율, 고승우, 강형진, 김정숙, 최이연, 신이, 녹색정원, 유결, 류이찌, 타래, 동시신호, 유키, 마리지, 비의아이. →타래냥←.

*이반씨터: 멀더요원, 비오는날.

*친구사이: 최준원(대표), 전재우, 박기호, 천정남, 이송희일, 신윤동욱, 박철민, 차돌바위, 핑크로봇, 영로, 박진희, 공두경 등 회원 일동.

*서울퀴어영화제사무국: 서동진 등 사무국 일동.

*붉은이반: 여기동, 허인준, 김민, 우기, 배홍현, 유병진, 게으를 권리, 이상인, 배성용(유귀), 흐르는 물, 세상, 녹색의비밀, 동강, 구스타브, 전진, 버섯돌이, 시간의과수꾼, 신명, 가끔은, 산맥처럼, J-NumKy, 난세의 효웅, 왼손잡이, 메롱마녀, 마고할미, 찰우찰우, 서울우유, 이량, 비내리는 오후, 사는이야기, 구름, 골뱅, Rosa, 좋은형용사, 어설픈자화상, Neweast, 뷰렛반응, 로또, 꽃다지.

*기타: 민영이, 김종민, 김홍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노동당 13.1% 득표(비례후보 8명, 지역구 2명 당선)

1. 사건일자 20040415-20040415

2. 사건내용

민주노동당의 '제3당'으로의 도약은 지금까지의 당의 '기록'이 줄줄이 깨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4월 19일 현재 당원은 5만4천7백44명. 지난 1월 '4만 당원'을 선언한 이래, 불과 3개월 여만에 1만여명의 당원이 늘어 창당 이래 최고의 당원증가율을 보였다.

당원증가는 지난 해 12월 대비 1월에 3.6%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월에는 전월대비 6.9%, 3월에는 12%의 증가율을 나타내 매월 2배 이상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같은 높은 당원 증가율에 힘입어 지난해 1년 동안 증가폭인 1만5백86명을 불과 3개월만에 따라잡은 것(3월말까지 1만2명 증가)으로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4월 현재 하루 평균 2~3백여명의 당원이 가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오히려 당원 가입이 늘어난 것은 민

주노동당의 지지층이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결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당우와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것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등 경기도노조에 속한 비정규직 조합원이 대거 입당한 것, 3월 현재 전농 소속 당원이 전달에 비해 25%이상 상승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후원금도 폭주했다. 지난 3월초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1백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록했으나 3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후원금은 3~4백만원 대로 훌쩍 뛰어올랐다. 각종 방송토론회와 언론매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터넷 뱅킹과 핸드폰을 통한 '소액다수' 후원금이 늘어났다.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민주노동당의 후원금은 1억원에 이르렀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중앙당 후원회를 열 수 없어 선거비용 마련에 고심하던 중앙선대본은 늘어난 후원금으로 인해 애초 '외상'으로 처리하려 했던 각종 신문 및 방송 광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 '즐거운 사태'를 맞이했다.

언론노출 건수도 늘어났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의 방송토론회 참여 배제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정도였으나,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중앙당사는 기자들이 기사실 공간 확충을 요구할 정도로 복세통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은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역일간지를 제외한 중앙일간지,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민주노동당의 보도 건수는 약 3백여건. 그리고 방송에서는 단신을 포함해 1백20여건이 보도됐다. 지난해를 통틀어 KBS에 단신으로 7건, 심야토론 두 번 참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수치다.

‘후보 개인’보다 정당 선전 주력한 곳도 높은 득표

노동자·농민 ‘계급투표’ 확인

역시 울산이었다. 울산은 21.9%를 얻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유일하게 20%대를 넘겼고, 지역구 당선자(조승수)를 낸 울산북구는 35.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울산 북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밀집지역이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곳들은 예외 없이 정당 득표율이 높았다. 권영길 대표가 당선된 창원(26.6%)을 비롯해 거제(26.2%), 울산동구(25.2%), 창원갑(22%), 울산남구(20.8%)이 모두 20%대를 넘겼고, 평택(17.8%), 인천부평(17.7%), 군포(16.9%), 광주광산(16.6%), 전남여수(16.5%), 청주흥덕(16.4%), 마산(16.4%), 인천서구강화갑(16.3%), 인천부평갑(16%), 인천남동(16%)도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청주흥덕갑(15.9%), 인천연수구(15.9%), 구미갑(15.8%), 포항남울릉(15.8%), 인천계양(15.6%), 천안(15.5%), 아산(15.3%)도 전국 평균(13%)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노동자 '계급투표' 바람이 민주노동당 원내 10석 진출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15.3%로 광역시도 중 3위를 기록한 인천시지부의 문성진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시선대위와 긴밀히 결합해 조합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당투표 선전을 펼쳐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농민회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인 지역들의 성과도 만만치 않았다. 농민후보가 출마한 진주(17.5%), 아산(15.3%)을 비롯, 함안(15%), 사천(14.7%), 의령(14.6%), 제주(14.1%), 완주(13.6%) 등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함안, 사천, 의령은 당 후보자가 출마도 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 외에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다름 아닌 부안이다. 부안은 민주노동당 후보자가 없었음에도 무려 17.3%를 기록, 전국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을 토했다. 박병언 전북도지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선거 막판 반핵대책위의 핵심이었던

부안군 농민회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핵폐기장 건설 반대투쟁에 당이 꾸준하고 힘차게 연대한 데 대해 주민들이 신뢰를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관악을(16.2%)과 성남중원(16%)의 경우 신장식, 정형주 두 후보자의 높은 인지도와 오랜 지역사업의 성과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2000년 총선에도 출마해 높은 지역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후보 개인'보다는 '정당 득표'에 더 초점을 둔 선거운동으로 좋은 성과를 낸 지역도 적지 않다. 수원장안(16.4%)·수원권선(14.5%)·수원영통(16.1%), 강원원주(15.2%), 서울마포을(15.1%)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지역에서 높은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수원의 경우 당 수원시협의회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 역량상 수원지역 4개 선거구 중 1곳 정도만 출마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정당득표-의회진출과 이후 지역 내 당조직 강화를 위해 수원시협은 '무리를 해가며' 장안(안동섭), 권선(유덕화), 영통(한동근) 3곳에 출마를 결정했다. 이후 수원시협은 공동 선대본을 꾸려 모든 후보와 당원이 함께 하는 '협동플레이'를 펼쳐내면서, 후보자 개인이나 지역공약 강조보다는 철저하게 당 정책·공약·이미지 선전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벌였다. 선거홍보물도 지면의 3분의 2 이상을 정당득표를 위한 내용으로 채웠다. 김현철 수원시 공동선대본부장은 "원내진출에 대한 의지, 전체를 아우르는 조율과 집중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정당득표율을 보인 원주지역도 지역개발 공약을 철저히 배제하고 당을 '무기'로 싸웠다. 김광호 후보는 "지역구 당선이 안되는 거 뻔히 아는데 괜히 지역공약, 후보 개인에 신경쓰기 시작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도 죽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서울마포을(정경섭)의 김동원 선대본부장은 "후보 개인을 강조할 것인가 당을 강조할 것인가 내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공탁금 회수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당이 되도록 많이 의회진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후보 개인, 당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없었다면 15.1% 득표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정당득표를 위해 뛰었던 지역구 후보자와 당원들, 그들이 바로 이번 총선의 진정한 '1등 공신'들이다.